

예로부터 영토와 그 안에 살고 있는 호구(戶口)를 헤아리는 일은 국가경영의 근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호구조사 역사도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조선시대의 3년 간격 호구기록은 차치하고, 근세에 들어와 1925년에 시작된 인구센서스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에 제16차 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이제 75년의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와 주택을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인구 및 주택의 규모, 구조, 분포와 경제·사회적인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국가 제일의 기본통계입니다. 국가정책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초자료, 연구 및 교육자료, 벤치마킹 통계자료 등 실로 그 쓰임새와 중요성은 일일이 나열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75년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걸어 온 변화와 성장의 발자취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 귀중한 국가 유산을 사료(史料)로서만 보전하기보다는 이를 거울삼아 미래의 발전 모습을 담아내고자, 지난 2년간 사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한국의 인구(1, 2)」 및 「한국의 주택」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책자가 대학, 연구소는 물론 각계에서 요긴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번거로운 일임에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김두섭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12월

통계청장 오종남

# 여백

인구조사의 역사는 서력 기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독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민수기(民數記, The Numbers)」는 모세 오경(五經)의 하나로서 3천여 년 전에 나온 것이며, 동아시아에서도 2천여 년 전 한(漢) 제국 시기에 이미 비교적 자세한 인구자료가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도 근세 조선시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매 3년에 한번씩 인구를 조사해 놓은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당시 인구 중 일부 성이나 연령층이 제외되어 있거나 일정 계급을 배제한 기록들이며, 조사의 준거기간 또는 시점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현대적 의미의 인구센서스라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현대적 기준에 맞는 전국적 규모의 인구센서스로는 스웨덴(1749년)과 미국(1790년)에서 실시된 것을 들 수 있으며,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에서도 18세기에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 점령시기인 1925년에 최초로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현대적 의미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인구센서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인구센서스 자료는 그 정확성과 완전성에 있어 일부 선진국들의 자료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한 나라의 발전수준을 헤아리는 국제적인 지표로서 국민소득이나 취학을, 평균 수명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약 10여 년 전부터는 여러 지표들을 조합하여 인간개발지수 또는 국가발전지수 등을 작성하고, 이 지표들을 통해 국가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이 모든 지표들은 인구센서스나 표본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므로 그 나라의 통계작성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 인구센서스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본조사 자료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요즘 모든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취업률, 실업률, 물가지수, 문맹률, 범죄율, 이혼율 등 모든 지수나 척도들은 해당 국가나 사회의 인구구조에 관한 기초자료의 완전성에 따라 그 정확성이 좌우된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체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구조적 특성의 규명, 변화의 해석, 나아가 장래를 예측하고 업무상의 결정을 함에 있어 인구센서스 자료는 기초자료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구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는 1960년대 초반이래 세계가 놀라워하고 주목할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출산력 수준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낮은 출산력 수준은 고령화라는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전개되면서 가족구조, 노동시장과 산업구조가 변하고 사회복지체제의 긴장이 야기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 등 정치·사회적인 분야까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모든 부문에 걸쳐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인구현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가 바로 인구센서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인구센서스의 원자료는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매우 복잡한 작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쓸만한 형태가 되어 나온다. 또한 센서스 자료의 분석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인구 자체의 구조와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들 상호간의 관계, 즉 인구변수와 인구 외적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자료 자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야 된다. 이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인문·사회·자연과학에서 요구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인구분석 사업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 당시 인구학이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유한 사람은 손꼽을 정도에 불과 했으나, 현재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의 수가 수백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책의 집필진은 그들 중에서도 각자 자신이 집필한 주제에 대하여 다년간 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온 것으로 널리 인정받거나 장래가 촉망되는 19명의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1925년 최초의 인구센서스 이후 2000년 센서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인구와 가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계획되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나라의 인구상황과 인구관련 정책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닌다. 요즘 각급 학교와 인력 훈련기관에서는 인구현상과 이에 관련되는 용어 및 부호에 익숙하도록 많은 지식을 전수하고 훈련을 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개인들이 각자 평가하고 해석하여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은 한국의 인구변화 및 구조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인구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인구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참고문헌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는 교양도서로, 전문가 집단에게는 한국 인구에 대한 개론적 전문도서로,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이 우선 일반인들에게 지난 20세기 초반 이래 한국 사회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학 및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한국사회의 변동을 인구현상과 연관지어 바라 보게 하고, 그들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1년 7월 학계와 통계청을 대표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연구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 구성원의 명단은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사업은 통계청의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 한국인구학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관점이나 주장은 각 장을 집필한 필자들의 의견이지 정부나 한국인구학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이 연구사업에는 통계청의 전문가도 집필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계청 실무진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되어 왔다. 학계의 전문가들과 통계청의 실무진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공동연구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앞으로 인구센서스를 기획, 집행하고 분석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 책은 19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자료, 인구변천, 인구성장의

구성요소, 인구구조 및 분포, 인구정책 등 인구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1925년 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16번의 센서스에서 집계된 기본적인 인구자료와 장래(2000~2050년) 추계 인구, 그리고 생명표(1999년) 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원고의 대부분은 2002년 9월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쳤음을 밝힌다.

우리는 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각 장 체제의 균형을 맞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문용어를 통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기존의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연구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의욕에 비해, 이 책의 체제나 내용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눈에 많이 띈다. 하지만 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집필진들이 한결같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므로, 앞으로 보다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할 기회가 다시 있을 것으로 믿고 그간의 편집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이 책에 수록된 연구물들이 학계의 동료와 후학, 정책입안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극이나 도움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 책의 편집을 마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주위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좋은 원고를 써주신 각 장의 집필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모두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둘러 집필과 수정작업을 마쳐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김정석 교수는 이 연구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갖가지 귀중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환 교수와 선주대 국장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그 동안 이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오종담 청장, 윤영대 전 청장, 윤형백 소장, 권오술 과장, 김형석 사무관을 비롯한 통계청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작업을 도와준 대학원생 박효준 군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2002년 12월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발간사 .....	1
머리말 .....	3
차례 .....	7

## 제1장 인구센서스의 발전과 특징 ..... 21

- I. 머리말 / 21
- II. 인구센서스의 특징과 다른 인구자료원과의 관계 / 21
- III. 인구센서스의 발전 / 25
  1. 개관 / 25
  2. 제도적 측면 / 29
    - 1) 조직 / 29
    - 2) 법령 / 30
  3. 조사방법론적 측면 / 31
    - 1) 조사단위 개념 / 31
    - 2) 자료수집 방법 / 33
    - 3) 표본조사 / 34
  4. 조사 내용적 측면 / 35
    - 1) 조사항목의 변천 / 35
    - 2) 주요 조사내용의 변천 / 39
- IV. 향후의 발전 방향 / 45

## 제2장 인구의 성장과 변천 ..... 49

- I. 머리말 / 49
- II. 한국의 인구변천 / 50
  1. 전통적 성장기 / 50
  2. 초기변천기 / 53

- 3. 혼란기 / 55
- 4. 후기변천기 / 57
- 5. 재안정기 / 59
- Ⅲ. 인구변천의 인과구조 / 62
  - 1. 출산력 저하의 결정요인 / 62
  - 2. 사망력과 출산력의 관계 / 67
  - 3. 인구가동과 출산력의 관계 / 68
- Ⅳ. 세계 속의 한국인구 / 72
- Ⅴ. 맺는 말 / 78

### 제3장 출산력 ..... 81

- I. 머리말 / 81
- II. 출산력 변천의 단계 / 83
  - 1. 출산력 변천의 준비기간 / 83
  - 2.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 / 84
  - 3. 제2단계 출산력 변천의 시대 / 87
- III. 출산력 변천의 메카니즘 / 89
  - 1. 출산력 변천의 중간변수 / 89
  - 2. 중간변수의 검토 / 91
    - 1) 유배우율의 변화 / 91
    - 2)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 93
- IV.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차별출산력 / 95
  - 1. 출생성비의 불균형 / 95
  - 2. 차별출산력 / 97
    - 1) 거주지와 출산율 / 97
    - 2) 교육과 출산율 / 100
- V. 장래 출산력의 예측 / 103
- VI. 종합 및 결론 / 111

### 제4장 사망력 ..... 115

- I. 머리말 / 115

## II. 연구 방법 / 116

1. 연구 자료 / 116
2. 연구 범위 / 117
3. 분석방법 / 118

## III. 사망력의 변화 / 118

1. 사망력 변천 / 118
2. 조사망률 / 120
3. 성·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 121
4. 성·연령별 기대여명 / 123

## IV. 사망유형 / 124

1. 성·연령별 사망유형 / 124
2. 한국의 사망유형과 모형 생명표 / 126

## V. 차별사망력 / 127

1. 분석방법 / 128
  - 1) 이용자료 / 128
  - 2) 특성별 인구의 사망수준 비교 / 129
  - 3)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망수준의 변화과정 추정 / 130
2. 교육정도별 차별사망력 / 130
3. 혼인상태별 차별사망력 / 133
4.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 / 136

## VI. 사망원인별 사망력 / 138

1. 사망원인의 유형과 변화 / 138
2. 성·연령별 사망원인 / 142
3.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기대여명 / 146

## VII. 맺는 말 / 149

# 제5장 국제이동과 해외 한인사회 ..... 153

## I. 머리말 / 153

## II. 국제 이동의 개관 / 154

1. 디아스포라의 시작 / 154

2. 식민지 시대의 대 탈출 / 156
3. 해방과 귀환이동 / 159
4.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동 / 162
- Ⅲ. 중국 조선족 사회 / 165
  1. 공동체의 성격 / 165
  2. 인구 추세와 공동체의 위기 / 167
  3.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 / 168
- Ⅳ. 재일 동포 사회 / 171
  1. 사회적 위치와 차별 / 171
  2. 인구의 추세 / 174
  3. 정체성의 분화 / 177
- Ⅴ. 미국의 한인 사회 / 179
  1. 인구규모 / 179
  2. 한인 사회의 특성 / 181
  3. 세대와 정체성 / 185
- Ⅵ. 맺는 말 / 186

## 제6장 성과 연령구조

189

- I. 머리말 / 189
- II. 자료 / 190
- III. 기존 연구 검토 / 191
- IV. 분석결과 / 193
  1. 성·연령별 구조 / 193
    - 1) 성·연령별 인구규모의 변화 추이 / 193
    - 2) 인구성장의 요인 / 195
    - 3) 성·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추이 / 196
    - 4) 인구 피라미드 / 202
    - 5) 지역(도시·농촌)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 204

2. 성비 불균형의 변화 추이 / 205
  - 1) 출생성비 불균형의 변화 추이 / 205
  - 2) 노인 성비 불균형의 변화 추이 / 207
  - 3) 지역별 성비 불균형 / 209
3. 성·연령 구조 변화의 사회적 의미 및 정책적 함의 / 211
  - 1) 유소년 인구 감소 및 교육 문제 / 211
  - 2) 여성 및 노인 인력의 활용 활성화 / 212
  - 3)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복지대책 / 213
  - 4) 출생시 성비 불균형 대책 / 214

#### V. 요약 및 결론 / 215

### 제7장 혼인상태 ..... 219

- I. 머리말 / 219
- II. 연구자료 및 개념정의 / 221
  1. 연구자료 / 221
  2. 개념 정의 / 221
- III. 기존 연구 검토 / 222
- IV. 분석 결과 / 224
  1. 혼인상태의 변화 / 224
    - 1)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 224
    - 2) 성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 227
  2. 미혼 / 228
  3. 혼인 / 233
    - 1) 초혼 및 재혼 특성의 변화 / 233
    - 2) 부부 상호간 결혼 특성의 변화 / 237
  4. 이혼 / 239
    - 1) 이혼율 및 평균 이혼연령의 변화 / 239
    - 2) 평균 동거기간 및 교육수준별 이혼사유 / 241
- V. 결론 및 정책제언 / 243

## 제8장 가족과 가구 ..... 247

- I. 머리말 / 247
- II. 가구변화의 전반적 추세와 쟁점 / 249
- III. 일반가구원의 가구형태 변화 / 254
  1. 전체가구원의 가구구성 비율 / 255
  2. 15세 이상 무배우자들의 1인가구 형성비율 / 259
  3. 15세 이상 유배우자들의 부부가구 형성비율 / 262
- IV. 특정 연령층의 거주형태 / 263
  1. 아동들의 거주형태 / 263
  2. 노인들의 거주형태 / 267
- V. 성별 가구주 비율과 특성 / 273
  1. 성별 가구주 비율 / 274
  2. 가구주의 성에 따른 특성 / 276
- VI. 맺는 말 / 277

## 제9장 교육수준 ..... 283

- I. 머리말 / 283
- II. 교육수준의 변화 / 284
  1. 교육수준에 따른 학생수의 변화: 1945~2000 / 284
  2. 학력구성의 변화: 1980~2000 / 285
- III. 교육수준과 인구 / 293
  1. 교육과 국제화 / 293
  2. 교육과 소득 / 296
  3. 교육과 출산 / 303
- IV. 정책적 함의 / 307
  1. 정부 교육예산의 증가 / 307
  2. 한국인의 전통적 교육관 / 308
  3. 사회변화와 교육 / 309
- V. 맺는 말 / 311

<b>제10장 경제활동: 직업 및 산업</b> .....	<b>315</b>
I. 머리말 / 315	
II. 기존연구 검토 / 317	
III. 직업구조의 변화: 1955~2000 / 318	
1. 경제활동과 직업구성의 추이 / 318	
2. 성별 직업분포의 변화 / 320	
3. 연령별 직업분포의 변화 / 325	
4. 교육수준별 직업구성의 변화 / 330	
5. 종사상의 지위구성의 변화 / 333	
IV.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0 / 337	
V. 맺는 말 / 346	
<b>참고문헌</b> .....	<b>349</b>

## 2

## CONTENTS

<b>제11장 노동력</b> .....	<b>393</b>
I. 노동력의 개념과 측정 / 394	
II. 노동력의 추이 / 397	
1.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397	
2.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401	
3. 남녀 노동력의 연령구성 / 403	
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 405	

5.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 406
  6. 거주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 407
  7. 노동력 생명표 / 414
- Ⅲ. 여성의 경제활동 / 416
1. 가족에서의 위치와 여성의 경제활동 / 416
  2. 자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 419
    - 1) 총출생아 수 및 동거자녀(아동) 수와 여성의 경제활동 / 419
    - 2) 여성의 경제활동과 아동보육상태 / 420
- Ⅳ. 비공식부문 / 422
- Ⅴ. 토론 및 정책적 제언 / 423

## 제12장 고령화와 노인인구

429

- I. 머리말 / 429
- II. 노인연구의 기존 동향 / 431
- III. 노인인구의 변화 / 435
- IV.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 438
  1. 노인 가구 특성의 변화 / 438
  2.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특성 / 440
  3. 1인 단독가구 노인의 증가 요인 / 443
- V. 경제생활 / 447
  1. 노년기의 소득원과 소득수준 / 447
  2. 노동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연령분리 / 448
- VI. 거주지 분포와 이동 / 454
  1. 고령화의 지역화 / 454
  2. 노년기의 거주지 이동 / 456
- VII. 맺는 말 / 457

## 제13장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 461

- I. 머리말 / 461
- II. 자료 / 462
  - 1. 인구센서스 자료 / 462
  - 2. 주민등록자료 / 463
  - 3. 표본조사자료 / 464
- III. 한국의 인구이동 연구 / 464
- IV. 지역간 인구분포 / 466
  - 1. 시·도 인구분포 추이 / 466
  - 2. 수도권외 인구집중 / 470
- V. 국내 인구이동 / 473
  - 1. 인구이동 추이 / 473
  - 2. 시·도간 인구이동 / 474
  - 3. 인구이동 유형 / 478
    - 1) 이동유형 분석의 의의 / 478
    - 2) 이동의 유형구분 / 479
    - 3) 이동유형별 이동자의 특성 / 481
  - 4. 인구이동의 이유 / 483
- VI. 수도권의 인구이동 / 484
  - 1. 수도권 인구이동 추이 / 484
  - 2.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 487
  - 3.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 / 490
- VII. 요약과 결론: 정책적 함의 / 492

## 제14장 도시화 ..... 495

- I. 머리말 / 495
- II. 도시화에 대한 연구 동향 / 496
- III. 20세기 한국의 도시화 / 500
  - 1. 유예된 도시화: 식민지 시대의 도시화 / 501
  - 2. 과잉도시화: 식민지 해방과 전쟁, 그리고 도시화 / 503

3. 압축적 도시화: 산업화와 도시화의 병진 / 505
4. 성숙된 도시화로 이행: 1990년대 이후의 도시화 / 507

#### IV. 도시간 인구 성장의 분석 / 510

1. 급속한 도시화와 도·농 관계의 변화 / 510
2. 도시 인구의 성장 요인: 이농과 도시화 / 514
3. 수도권 집중과 도시간 관계의 변화 / 516

#### V. 맺는 말: 요약 및 분석의 함의 / 520

### 제15장 통근·통학 및 주간인구 ..... 525

#### I. 연구목적과 대상 / 525

1. 연구목적 / 525
2. 연구대상 / 526

#### II. 기존 연구 검토 / 527

#### III. 전국 통근·통학인구 / 528

1. 통근·통학인구 및 주간인구 / 528
2. 통근·통학인구의 특성 / 532

#### IV. 수도권 통근·통학인구 / 536

1. 수도권 통근·통학 형태 / 536
2. 수도권 주간인구의 변화 / 540
3.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 544
  - 1) 통근·통학 유입, 유출지 / 544
  - 2) 통근·통학 소요시간 / 549
  - 3) 서울 밖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특성 / 551

#### V. 맺는 말 / 553

### 제16장 종교 ..... 557

#### I. 머리말 / 557

#### II. 자료 및 분석대상 / 558

#### III. 한국의 종교구성: 개인적 수준 / 560

1. 성별 종교구성 / 561
  2. 연령별 종교구성 / 562
  3. 종교별 교육수준 / 566
  4. 지역별 종교구성 / 568
- IV. 한국의 종교구성: 가구 수준 / 572
1. 부부의 종교 일치와 불일치 / 573
  2. 가구 내의 종교 일치 및 불일치 / 575
  3. 지역별 부부 및 가족 내 종교의 일치와 불일치 / 577
    - 1) 지역별 부부의 종교 일치와 불일치 / 577
    - 2) 지역별 가구 내 종교 일치와 불일치 / 580
    - 3) 지역별 종교불일치의 형태 / 581
- V. 결론 / 585

## 제17장 정보화 ..... 587

- I. 머리말 / 587
- II. 자료 및 분석 / 589
- III. 분석 결과 / 593
  1. 정보화의 접근수준 / 593
  2.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차들 / 597
  3. 인구 특성에 따른 정보화 격차 / 605
- IV. 요약 및 결론 / 611

## 제18장 인구추계 ..... 615

- I. 머리말 / 615
- II. 인구추계 / 616
  1. 인구추계 방법 / 616
  2. 우리 나라의 인구추계 역사 / 618
  3. 2000~2050년 장래인구 추계 / 619
    - 1) 추계방법 / 619
    - 2) 기준인구의 작성 / 619

- 3) 인구 변동요인의 가정 / 622
- 4) 인구추계의 결과 / 624
- Ⅲ. 가구추계 / 627
  - 1. 정의 및 연구범위 / 627
  - 2. 가구추계 기법의 종류 / 628
  - 3. 2000~2020년 장래가구 추계 / 630
    - 1) 추계방법 / 630
    - 2) 가구추계의 결과 / 632
- Ⅳ. 결론 및 토론 / 641

## 제19장 인구정책 ..... 645

- I. 서론 / 645
- II. 인구정책과 인구사상 / 646
  - 1. 인구정책의 정의와 범위 / 646
  - 2. 현대 이전 인구사상에서의 낙관적 전통과 비관적 전통 / 646
  - 3. 정책적 함의 / 647
- III. 출산력에 대한 인구정책 / 649
  - 1. 저출산 - 새로운 사회문제 / 649
  - 2. 세계적인 출산력 붕괴현상과 정책적 선회 / 650
  - 3. 정책적 함의 / 651
- IV. 사망률 저하를 포함한 보건정책 / 653
- V. 인구분포 / 654
  - 1. 인구재배치정책의 일반적 유형 / 654
    - 1) 이동민의 농촌귀환 / 655
    - 2) 농촌개발 / 655
    - 3) 산업시설의 분산 / 656
    - 4) 신도시 건설 / 656
    - 5) 성장거점도시 개발 / 657
  - 2.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대비되는 관점 / 657
  - 3. 수도권 개발과 국가발전 / 658
- VI. 연령구조와 고령화 / 659
  - 1. 연령구조의 인구학적 의미 / 659
  - 2. 고령인구 증가의 사회경제적 의미 / 661

- 3. 우리 나라의 고령화 / 662
- 4. 정책적 함의 / 662
  - 1) 고령인구 집단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시정 / 663
  - 2) 가족의 역할 / 663    3) 국가차원의 역할 / 664

VII. 성구조와 성평등 / 664

VIII. 국제이민 / 666

- 1. 우리 나라 노동이민의 현황 / 666
- 2. 외국인력에 대한 최근의 정책 / 668

IX. 맺는 말 / 669

참고문헌 ..... 675

부록 ..... 699

# 여 백

## 제1장 인구센서스의 발전과 특징

김민경

### I. 머리말

한 국가에서 사회경제정책 및 각종 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구관련 통계는 정태통계와 동태통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구정태통계는 부단히 변모하는 인구를 일정 시점이라는 정지 상태에서 파악하는 반면, 인구동태통계는 일정기간의 변동을 파악한다. 우리 나라에서 인구정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원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인구센서스로 표기), 주민등록부, 그리고 인구추계가 있으며, 인구동태통계의 자료원으로 인구동태신고제도와 주민등록부가 있다. 이러한 인구통계의 종류나 자료원과 관계없이 인구센서스는 모든 인구통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물론 다른 자료원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인구센서스의 기본적인 특징과 다른 인구 자료원과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는 인구센서스의 발전내용을 제도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 II. 인구센서스의 특징과 다른 인구자료원과의 관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구센서스는 개별성(individual

enumeration), 보편성(universality), 동시성(simultaneity) 및 주기성(periodicity)의 기본원칙 하에서 실시된다(UN, 1998). 개별성이라 함은 조사단위 즉, 인구나 가구를 각각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집합적 조사와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구나 가구의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보편성은 인구센서스가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을 조사하기보다 한 국가나 광역적인 지역의 인구 모두를 조사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전체 인구에 관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다. 동시성은 인구센서스를 일시에 실시함으로써 조사결과가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주기성은 인구센서스를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점간의 인구관련 속성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인구센서스는 이러한 기본원칙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실시될 때에 그 결과가 정확해지며 동시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인구센서스는 일종의 벤치마킹(bench-marking)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비단 인구변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자료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인구센서스 결과는 실시연도의 인구 상황을 나타내며 이후 시점의 인구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인구센서스의 결과는 각종 표본조사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인구센서스의 결과는 다른 인구자료 즉, 인구동태통계와 인구이동통계 그리고 인구추계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두 시점 사이에 인구의 변화는 인구동태통계와 인구이동통계로서 설명된다. 그리고 인구추계는 인구센서스결과를 기준으로 향후 인구의 규모 및 구조의 변동에 대해 추정하는 것이다.

인구센서스와 다른 인구자료와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다른 인구자료원의 기본적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인구동태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학적인 사상(事象, event)을 측정된 결과로서 이들 사상의 발생빈도와 발생률(동태율)로 대표된다. 우리 나라에서 인구동태통계는 1910년 조선총독부가 호적신고서를 집계하여 작성한 것이 그 시초이다. 초창기에는 발생지나 상주지가 아

닌 본적지주의에 의거하여 신고자료를 집계하였고 누락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구동태통계가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은 1937년 「조선인구동태조사규칙」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인구동태통계는 『조선인구동태통계』로 매년 발간되었으며,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43~1945년의 3년간은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전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그리고 1945~1948년의 기간에는 해외동포의 귀국, 정치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구동태통계자료의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石南國, 1972).

정부수립 후 1949년 12월에 정부(공보처 통계국)는 「인구조사법」(1949년 1월 제정)에 의거하여 「인구동태조사령」(대통령령 제 252호)을 제정하고 호적신고서와 별도로 인구동태조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민신고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인구동태통계를 본적지 대신에 신고지 또는 발생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인구동태통계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통계청의 전신)으로 이관된 이듬해인 1962년에 경제기획원은 통계법에 의거 인구동태통계를 지정통계 제3호로 지정하였고, 또한 조사방법, 신고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한 「인구동태조사규칙」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인구동태통계의 기반이 마련된 것은 1970년에 호적신고와 별도로 신고하게 하던 인구동태신고를 호적신고서와 동일용지(하단)에 기재하도록 일원화시키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면서이다. 그 동안 신고제도의 개선 및 각종 사회제도(예를 들어, 건강보험 등)의 발전에 따라 인구동태의 신고율이 아주 높아졌고, 그 결과 인구동태통계자료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아울러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던 인구동태통계 중 혼인과 이혼은 신고시점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인구센서스는 이러한 인구동태통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상적으로 두 시점에 실시된 인구센서스의 결과와 그 사이 인구동태의 변동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자료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며, 그 원인은 두 자료 중 한 자료 또는 두 자료 모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센서스 자료의 정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인구센서스 자료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구센서스와 인구동태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하나의 인구자료원으로 시·도가 작성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주민등록부를 집계하여 매년 인구통계(성별 및 연령별 인구, 세대수)를 행정구역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1962년에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근거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은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신고사항 중 호적 관련 사항은 반드시 호적법을 따르도록 하고, 미신고 전출자 및 전입자에 대한 강제등록을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의 공신력을 높여왔다.

인구센서스 자료가 5년 단위로 작성되고 있는데 반해,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년 행정구역의 최하단위인 읍·면·동별로 작성된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연도별 인구자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각종 행정(예를 들어, 병무, 취학, 선거 등)에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부(전입신고)는 월·분기·연도별 지역간의 인구 이동통계를 생산하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부는 인구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항목과 가구에 관한 항목을 많이 포괄하고 있으나, 최초 기재 이후 거의 갱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자녀의 학군배정, 부양가족 혜택, 취업, 투표권 등의 사유로 위장전입이 있고, 해외유학이나 해외취업으로 신고의 지연 또는 누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실제 거주인구 및 가구와 주민등록부상의 인구 및 세대(가구)간에 괴리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1-1>은 센서스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인구센서스 자료는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하여 인구의 이동흐름과 소지역별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끝으로 중요한 인구자료원으로 인구추계를 들 수 있다. 인구추계는 인구센서스

〈표 1-1〉 센서스인구, 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비교

(단위: 천명, %)

	총조사인구 (각 연도 11.1. 현재)	추계인구 (A) <sup>1)</sup> (각 연도 12. 31. 현재)	주민등록인구 (B) (각 연도 12.31. 현재)	B/A (%)
1995	44,609	45,308	45,982	1.5
2000	46,136	47,175	47,977	1.7

주: 1) 센서스인구에 누락률을 감안하여 추정한 인구.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자료 즉, 인구동태통계 및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시된다. 우리 나라에서 센서스 결과를 이용한 최초의 공식적인 인구추계는 내무부가 1961년에 1955년 센서스인구를 기준인구로 하여 1955~1975년 인구를 조성법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내무부, 1961). 인구센서스 등 인구통계작성 업무가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된 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1962년에 1955년 센서스인구를 기준인구로 하여 1960~1980년 기간의 추계인구를 작성하였다(경제기획원, 1962). 이 후 인구추계는 인구센서스와 연계하여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전국 인구 이외에 시·도별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공식통계로 발표한 것은 1995년 센서스 결과부터이다. 인구추계에서는 기준인구(base population)가 되는 센서스 연도의 인구를 포함한 과거 5개년의 인구를 소급, 확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2000~2050년까지의 전국인구와 2000~2030년까지의 시·도별 인구를 추계한 바 있다. 추계인구는 장래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추계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실제인구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Ⅲ. 인구센서스의 발전

#### 1. 개관

최초의 인구센서스는 일제하인 1925년에 「간이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일본은 1920년 제1회 국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도 실시하기 위해 1918년에 「국세조사평의회 규정」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활발해지자 한반도 내에서의 1920년 국세조사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은 1922년에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1902년 제정)을 개정하여 5년 간격으로 대규모조사와 간이조사를 교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1925년에 제2회 국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한반도에 대한 제1회 국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국세조사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에

관한 건」(1925년 5월 제정, 총독부령 제66호)에 의거하여 동년 10월 1일 오전 0시 현재로 조선 내에 현주(現住)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제 하에는 전시동원을 위한 인적자원 파악을 위해 「자원조사법」에 의거하여 정례 국세조사 1년 전인 1944년 5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한 1944년 인구조사에 이르기까지, 1925년부터 1944년까지 매 5년마다 국세조사 또는 간이국세조사(단, 1944년은 인구조사)의 명칭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다. 이들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식민지인 조선에서 노동력 착취와 경제수탈을 위한 것으로 특히 1940년과 1944년 조사결과는 엄격히 비밀로 처리되어 일반 국민은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고응린 외, 1974).

정부수립 직후 각종 정책수립을 위해 그 기본이 되는 인구통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1949년 5월 1일을 기하여 정부수립 후의 첫 번째 인구센서스인 「제1회 총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공보처 통계국에 국세조사과를 설치하고 법률적 기반으로 「인구조사법」(1949. 1. 27. 공포, 법률 제18호)과 「제1회 총인구조사 지방사무처리규칙」(1949. 2. 15. 공포, 총리령 제6호)을 제정하였다. 조사결과는 이듬해 6·25동란으로 각 특성별로 집계되지 못하고 단지 총인구의 파악에 그쳤으며, 속보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조사자료가 소실 또는 분실되었다.

정부수립 후의 두 번째 인구센서스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경제의 부흥을 위한 국가부흥건설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파악을 위해 1955년 9월 1일을 기하여 「간이총인구조사」의 명칭으로, 내무부 산하의 지방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실시되었다. 당시 6·25사변 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인구유동으로 인하여 조사의 실시계획 및 운영관리 면에서 결함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통하여 전국인구를 처음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면모를 갖추어 실시된 1960년 센서스는 유엔의 '세계 센서스 계획'에 따라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센서스와 농업센서스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 센서스를 위해 유엔통계고문단이 내한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하였으며, 「국세조사위원회」(1959. 2. 10. 규정 공포, 대통령령 제1449호)를 설치하고 「국세

〈표 1-2〉 한국의 인구센서스의 역사

기준일	명칭	특징
1925. 10. 1.	간이국세조사	최초의 인구센서스
1930. 10. 1.	국세조사	최초로 직업항목 조사
1935. 10. 1.	국세조사	
1940. 10. 1.	국세조사	
1944. 5. 1.	인구조사	
1949. 5. 1.	총인구조사	최초로 인구가동 항목조사
1955. 9. 1.	간이 총인구조사	
1960. 12. 1.	인구주택 국세조사	최초로 주택부문조사, 노동력 개념 적용, 경제활동 및 출산력 사항에 대해 20% 표본집계
1966. 10. 1.	인구센서스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항목)
1970. 10. 1.	총인구 및 주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가동, 일부 주택항목)
1975. 10. 1.	총인구 및 주택조사	5%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가동, 일부 주택항목)
1980. 11.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15% 표본조사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가동, 통근통학항목)
1985. 11.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성씨·본관조사, 전 항목 진수조사
1990. 11. 1.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가동, 일부 주택항목), OMR 입력방식 도입
1995. 11. 1.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인구가동, 통근통학, 일부 주택항목), 빈집조사표사용, 래스터 지도사용
2000. 11. 1.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인구가동, 통근통학, 정보화 및 노령화 관련, 일부 주택항목), 수치지도사용, PC 지방(12개) 분산 입력 및 에디팅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조사령」(1960. 11. 3. 공포, 국무원령 제19호)을 제정하여 1960년 12월 1일에 인구주택국세조사를, 1961년 2월 1일에 농업국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장윤석, 1961a, 1961b). 이 1960년 센서스는 우리 나라의 진정한 근대적인 인구센서스를 시작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종전의 센서스에서 현주(現住)인구를 조사하였던 것과 달리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던 상주(常住)인구를 조사하

였고, 처음으로 주택부문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센서스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사후조사(post enumeration survey, PES)를 실시하였으며, 집계단계에 20% 표본집계방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의 기획에서 자료처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센서스의 면모를 갖추 오늘날 센서스의 발전을 가져오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연령을 세는 나이로 조사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투자재원확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당초 1965년에 실시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여 196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한 1966년 센서스는 인구부문만을 조사하면서 자료수집에 확률표본기법을 도입하였다. 또 센서스자료의 처리를 위해 컴퓨터(IBM 1401)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조사결과를 집계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구센서스 발전사 뿐만아니라 컴퓨터 발전사에도 커다란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부문은 1970년 센서스에서부터 다시 조사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센서스의 기준일자는 1980년 센서스에서부터 종전의 10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처음으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1985년 센서스는 모든 항목을 전국의 모든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는 다시 자료수집에 표본기법(10% 조사구)을 도입하여 이후 센서스에 계속되고 있다.

조사표 입력방식은 과거에는 키엔트리(key entry) 방식이었으나 1990년 센서스에서 광학판독기(optical mark reader, OMR) 입력방법으로 전환하여 입력기간을 단축하고 입력오차를 극소화하였다. 광학판독입력방법은 1995년 센서스에도 적용되었다.

지난 1995년 센서스에서는 증가하는 빈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빈집조사표를 사용한 바 있다. 그리고 조사구 설정을 위하여 과거의 청사진지도 대신에 래스터지도(raster map)를 사용함으로써 전산지도 사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0년 센서스에서는 조사표의 입력과 내용검토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12개 지역에서 개인용 컴퓨터(PC)로 입력하고 에디팅 함으로써 자료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아울러 조사구의 설정에 전산수치지도

(digital map)를 사용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이용에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2. 제도적 측면

### 1) 조직

인구센서스는 전국에 걸쳐 모든 인구와 가구를 일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실시 조직과 인력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구센서스를 수행하는 조직은 본부와 하부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부는 통계청으로서 인구센서스의 기획, 자료처리, 분석, 공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sup>1)</sup> 하부기관(일반조사지역)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조사원 모집, 실지 조사의 지도 및 감독, 조사자료의 송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최하위 조직으로서 조사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발하며, 이들은 훈련 후 조사기간 동안 각 가구를 방문하여 실지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인구센서스의 성패는 현장조사에 달려 있으며, 그 만큼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이 계속 축소되어 인구센서스의 효율적인 실시가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시·도의 통계업무 전담 부서인 통계담당관실의 인구통계계에서 인구센서스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통계업무와 전산업무가 통합되어 통계전산담당관실, 그리고 1997년부터는 기획관실(또는 정보화담당관실)의 통계계에서 인구센서스를 포함한 모든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계인력 역시 축소되었다. 더구나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의 기능 전환으로 읍·면·동의 통계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었고, 대부분 시·군·구의 통계조직은 통계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일제시대의 인구센서스는 조선총독부가 실시하였고, 정부수립 후 1949년 센서스는 공보처 통계국, 1955년과 1960년 센서스는 내무부 통계국, 1966~1990년 센서스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그리고 1995년과 2000년 센서스는 통계청이 실시하였다.

## 2) 법령

인구센서스는 국민의 개인적인 사항을 조사하므로, 조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응답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같이 인구센서스 실시를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구센서스에 관한 법령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통계조사에 관한 일반적 법령을 인구센서스에 적용하는 경우, 인구센서스와 직접 연관된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일률적인 인구센서스 법령 이외에 인구센서스마다 규칙 등을 제정하는 경우, 그리고 센서스마다 특별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등이다.

일제 하에 실시된 1925년에서 1940년까지의 네 차례 센서스는 일본의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1902년 12월 공포, 일본법률 제49호)과 매회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선총독부령(「1925년 간이국세조사에 관한 건」, 「1930년 조선국세조사시행규칙」, 「1935년 국세조사시행령」 등)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44년 센서스는 전시 동원을 위한 「자원조사법」(1929년 12월 공포, 일본법률 제327호)에 의거한 「1944년 인구조사규칙」(1944년 2월 공포)에 의해 실시되었다.

정부수립 후 1949년에는 인구센서스의 법률적 기반으로 「인구조사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아울러 매 센서스마다 조사일자,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1949년 센서스를 위한 「제1회 인구조사시행령」, 1955년 센서스를 위한 「간이총인구조사시행령」, 1960년 센서스를 위한 「국세조사령」)이 제정되었다. 「인구조사법」은 1962년 통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1966년 센서스를 위해서 「인구센서스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1990년 센서스까지 적용되었으나, 이 또한 1993년에 통계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1995년 센서스는 통계법 상 지정통계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를 보다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관련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00년 센서스에 앞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 3. 조사방법론적 측면

#### 1) 조사단위 개념

##### (1) 인구

일반적으로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대상으로 인구를 정하는 방법은 현주(現住) 개념(de facto)과 상주(常住)개념(de jure)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인구를 조사 당시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하여 그 지역의 인구로 파악하는 반면, 후자는 인구를 조사당시 머무르고 있는 장소와 관계없이 상주지에서 조사하여 그 지역의 인구로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25년부터 1955년 센서스까지는 현주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55년 센서스의 경우 현역군인들을 그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에 포함시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별 인구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종 정책 및 행정에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여 인구의 이동 및 경제활동상태 분포를 파악하는 등 조사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1960년 센서스부터는 상주개념을 채택하였다.

##### (2) 가구

일반적으로 인구센서스의 조사단위는 가구(household)이다. 가구는 가사단위 개념(housekeeping unit concept) 또는 주거단위개념(household-dwelling concept)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UN, 1998). 우리 나라는 가사단위개념을 채택하여 가구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의 분류와 명칭은 센서스마다 다르며, 가구관련 조사결과는 1960년 센서스부터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센서스인 1925~1955년 센서스에서는 가구를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고, 준가구에 군부대, 형무소, 유치장, 학교 또는 공장기숙사, 합숙소, 여관, 하숙집, 병원, 양로원, 감화원, 선박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1960년 센서스에서는 가구를 개인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하였다. 개인가구는 혈연가구(4인 이하 비혈연 동거인가구 포함)와 1인 가구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집단가구는 집단시

〈표 1-3〉 인구센서스의 가구구분, 1960~2000

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2000
구분	- 개인가구 · 혈연가구 <sup>1)</sup> · 1인가구	- 보통가구 · 혈연가구 · 1인가구 (독립된 부엌시설 있음)	- 보통가구 · 혈연가구 · 1인가구	- 일반가구 · 혈연가구 · 비혈연 5인 이하 · 1인가구
	- 집단가구 · 집단시설 · 비혈연 5인 이상	- 준가구 · 1인가구 (독립된 부엌시설 없음) · 기타 준가구	- 준가구 · 집단시설가구 · 비혈연가구	-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 · 비혈연 6인 이상

주: 1) 비혈연 동거인은 4인까지는 주인집의 동거가구원으로 조사.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설가구와 5인 이상의 비혈연자가구(집단생활공동체)로 구분하였다. 인구만을 조사한 1966년 센서스에서는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였으며, 보통가구는 혈연가구와 취사를 별도로 하는 1인 가구(독립된 부엌시설이 있음)로, 준가구는 취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1인 가구(독립된 부엌시설이 없음)와 기타 준가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970년과 1975년 센서스에서는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여 보통가구에는 혈연가구와 1인 가구를, 준가구에는 집단시설가구와 비혈연가구를 포함하였다. 가구분류가 고정된 1980년 센서스부터는 가구를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분류하고, 일반가구에는 혈연가구, 5인 이하 비혈연자가구, 1인 가구를, 그리고 집단가구에는 집단시설가구와 6인 이상의 비혈연자가구를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1975년 센서스까지는 매 센서스에서 가구에 대해 서로 다른 분류(용어와 개념)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회현상으로서 가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구분화 등 가구형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 1980년 센서스부터는 조사단위로서 가구의 분류도 고정되었다.

물론 향후에도 가구 내지 가족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적절한 가구의 개념과 분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분석을 위해 과거 센서스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구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정의 및 분류의 차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2) 자료수집 방법

일반적으로 통계조사 방법은 조사원면접방법과 자기기입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 방법은 조사수단에 따라 방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센서스에서도 조사원면접조사방법(타계식)과 자기기입방법(자계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실시된 센서스에서는 가구주 또는 조사원이 지정한 가구원이 소속 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배부된 신고서(조사표)에 기재하는 일종의 자기기입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원은 신고서(조사표)의 배부, 수집, 검사, 정리, 제출을 담당하였으며 공무원, 공공단체직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 정부수립 직후에 실시된 1949년 센서스와 1955년 센서스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자기기입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조사원(주로 지방 일선행정기관 공무원)이 신고서(조사표)를 대신 작성할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성명 아래에 대서(代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공보처, 1949). 이와 같이 자기기입방법을 채택한 주요 이유로는 조사표를 신고서라고 한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센서스를 국민의 신고의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 1960년 센서스부터는 원칙적으로 조사원면접 조사방법을 채택하고, 경우에 따라 자기기입방법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등에 따라 주간 부재가구가 증가하고,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에 따른 면접조사 기피 등으로 인해 자기기입방법을 점차 확대하였으며, 이 때 조사원은 조사표 배부와 수집 및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들어 1인 가구의 증가, 사생활 보호의식의 확산 등은 조사의 완전도와 정확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표 1-4〉 인구센서스에서 전수 및 표본조사 실시연도

항목조사방법	센서스 연도
전 항목 전수조사	1925, 1930, 1935, 1940, 1944, 1949, 1955, 1960, 1985 (총9회)
표본조사 병행	
· 5% 조사구	1975 (총 1회)
· 10% 조사구	1966, 1970, 1990, 1995, 2000 (총 5회)
· 15% 조사구	1980 (총 1회)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 3) 표본조사

인구센서스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많은 항목을 조사하게 되나,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응답자와 조사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와 정확성과 시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 항목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항목은 일부 가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센서스에 이러한 표본기법의 적용은 조사시간과 비용의 절감, 응답자와 조사원 부담의 경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소지역 또는 세부계층별로 통계 작성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센서스에 표본기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미국의 1940년 센서스이며, 우리나라는 1966년 센서스이다. 우리나라가 1966년 센서스에서 표본기법을 도입한 것은 정부예산의 부족이 주요 이유였다. 이후 2000년 센서스까지 표본기법을 도입하였는데, 표본규모는 1975년은 전체 조사구의 5%, 1980년은 15%이었으며, 나머지 연도는 10%이었다. 예외적으로 1985년 센서스에서는 전 항목을 전수조사 하였다. 한편, 1960년 센서스에서도 전 항목을 전수조사 하였으나 자료 집계과정에 표본기법을 도입하여 경제활동과 출산력 항목에 대해 20%의 인구를 추출하여 집계하였다.

## 4. 조사 내용적 측면

유엔(UN, 1998)은 인구센서스의 조사항목을 선정할 때에 i)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필요성; ii) 국제 비교성; iii) 응답 가능성 및 적절성; iv) 실지조사 및 자료처리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필요한 국가 재원의 가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센서스 항목은 조사가가능성, 조사결과와의 유용성, 국민의 응답부담, 결과 이용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항목을 적절한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외 과거 센서스의 조사항목과 가급적 일치시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1) 조사항목의 변천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5년 5개에 불과하던 항목 수가 꾸준히 늘어 왔는데 이는 조사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분야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1회 인구센서스인 1925년 센서스에서는 당시 주요 관심이 인구의 총 규모와 이들의 연령 분포였던 관계로 성명, 성별, 생년월(1930년 센서스 이후에는 생년월일 조사), 배우관계, 민적 또는 국적 등 5개 항목만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제2회 센서스인 1930년 센서스에서는 가구에 관한 통계 작성 이외 직업 및 문맹률 파악을 위해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 출생지, 읽고 쓰는 능력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9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1935년 센서스에서는 1925년 항목에 상주지 만을 추가한 6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 수는 1940년 센서스에서 다시 늘어나 11개 항목을 조사하였는데, 병역과 지정기능(지정직업과 지정학력)을 처음으로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특히, 1930년 센서스와 달리 직업 외에 산업과 종사상 지위(사업주여부, 가족종사자여부)를 포함시키면서 조사시점 현재와 3년 전(1937년 7월 1일 현재)의 산업과 직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제 하의 마지막 센서스인 1944년 센서스는 일제가 전시 인력동원을 위한 자료수집이 주목적이었던 관계로 직업항목에 특수기능을 추가하고 지정기능 대신 학력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

〈표 1-5〉 인구센서스의 조사항목 수

연도	계			전수			표본		
	계	인구	가구·주택	계	인구	가구·주택	계	인구	가구·주택
1925	5	5	-	5	5	-	-	-	-
1930	9	9	-	9	9	-	-	-	-
1935	6	6	-	6	6	-	-	-	-
1940	11	11	-	11	11	-	-	-	-
1944	10	10	-	10	10	-	-	-	-
1949	11	11	-	11	11	-	-	-	-
1955	12	10	2	12	10	2	-	-	-
1960	35	17	18	35	17	18	-	-	-
1966	14	14	-	7	7	-	7	7	-
1970	31	17	14	14	7	7	17	10	7
1975	28	19	9	11	6	5	17	13	4
1980	40	25	15	22	7	15	18	18	-
1985	28	16	12	18	16	12	-	-	-
1990	45	21	24	33	11	22	12	10	2
1995	28	16	12	17	7	10	11	9	2
2000	50	29	21	20	8	12	30	21	9

주: 1) 교육정도가 1960~1980년은 2개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1개 항목으로 간주하였음.

2) 출생아수 항목이 1966년과 1970년은 생존아수와 총출생아수가 1개 항목으로 되어있으나,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2개 항목으로 간주하였음.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정부수립 직후에 실시된 1949년 센서스에서는 출생 연월일, 성별, 배우관계, 학력, 본적지 등 기본적 항목에 직업 및 특수기능, 해방 당시(1945년 8월 15일 현재)의 거주지, 군사경험(군의 소속 국가 이름, 최고계급, 병과), 징용경험(징용 개월 수) 등 11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해방 당시의 거주지는 인구이동에 관한 최초의 항목으로서 일제시대 해외이주자의 8·15 해방 이후 국내귀환 실태와 국내에서의 인구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사경험과 징용경험은 일제의 강압으로 학병 또는 징병으로 끌려간 청·장년 중 살아서 귀국한 숫자를 파악하여 후에 이를 토대로 대일 배상계획을 수립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정부수립 후 제2회 센서스인 1955년 센서스에서는 인구의 기본적인 항목이 외에 인구항목으로 장애상태와 전입시기 및 전 거주지를, 가구에 관한 항목으로 주거집유형태, 농가·비농가 구분 등을 포함하여 12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주택부문을 처음으로 조사함에 따라 조사항목이 크게 늘어난 1960년 센서스는 35개 항목(인구 17, 가구·주택 18)을 조사하였다. 인구부문만을 보면, 처음으로 출산력에 관한 항목인 총출생아수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를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인구부문만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표본기법을 도입한 1966년 센서스는 인구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7개 항목은 전수조사 하였고, 출산력과 경제활동에 관한 7개 항목은 전체 조사구의 10%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하였다.

다시 주택부문을 포함한 1970년 센서스에서는 총 31개 항목(인구 17, 가구·주택 14)을 조사하였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구이동 항목으로 5년 전 거주지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불완전 취업자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1975년 센서스에서는 경제활동상태,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산업·직업 항목 이외에 취업사업장 형태, 취업시간, 추가취업희망 여부, 개인소득을 추가하였고, 또한 초혼연령을 처음으로 포함하여 31개 항목(인구 22, 가구·주택 9)을 조사하였다.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1980년 센서스에서는 교통실태파악을 위해 통근, 통학에 관한 조사항목을 처음으로 표본항목에 포함하여 40개 항목(인구 25, 가구·주택 15)을 조사하였다. 처음으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항목에 포함한 1985년 센서스는 28개 전 항목(인구 16, 가구·주택 12)을 전수조사 하였다.

광역 교통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90년 센서스에서는 통근, 통학에 관한 항목을 전수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가구소득을 처음으로 조사하였으나 부실한 조사로 그 결과를 집계할 수는 없었다. 가장 최근 센서스인 2000년 센서스는 고령인구 및 정보화에 관한 항목, 성씨, 본관을 포함하여 역대 센서스에서 가장 많은 50개 항목(인구 29, 가구·주택 21)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표형태도 종전과 달리 책자 형태의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표 1-6〉 인구센서스의 인구관련 조사항목, 1960~2000

조사항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 성명	○	○	○	○	○	○	○	○	○
· 본관						○			○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	○	○
· 성별	○	○	○	○	○	○	○	○	○
· 생년월일(연령)	○	○	○	○	○	○	○	○	○
· 교육정도(학력)	○	○	○	○	○	○	○	○	○
- 수학연수	○								
- 전공학과(전공분야)					●				●
- 문맹여부	○	○	○			○			
· 혼인상태	○	○	○	○	○	○	○	○	○
· 국적	○								
· 종교						○		○	
· 출생지	○		●		●	○	○	●	○
· 1년 전 거주지					●	○	●		●
· 5년 전 거주지			●	●	●	○	●	●	●
· 통근학 여부, 통근학 장소					●		○	●	●
· 출발, 도착시각(통근학소요시간)							○	●	●
· 이용교통수단					●		○	●	●
· 초혼연령				●	●		●		
· 총출생자녀수	○	●	●	●	●	○	●		●
- 생존자녀수, 사망자녀수		●	●	●	●	○	●		
· 지난 1년간 출생아수		●							
· 경제활동상태	○	●	●	●	●	○	●	●	●
· 취업여부	○		●	●	●				
- 취업형태				●	●				
- 취업시간				●					
- 지난 1년간 취업개월수			●						
- 현직업 근무연수									●
- 추가 취업희망				●					
· 구직활동	○			●	●				●
·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	●	●	●	●	○	●	●	●
· 개인소득				●					
· 장애상태					○				
· 노인의 자녀거주장소, 생계 수단, 주부양자, 거동불편여부									●
· 아동보육상태									●
· 컴퓨터활용상태, 인터넷활용 상태,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

주: ○는 전수조사 항목, ●는 표본조사 항목임.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표 1-7〉 초기 인구센서스의 조사항목, 1925~1955

조사항목	1925	1930	1935	1940	1944	1949	1955
성명	○	○	○	○	○	○	○
가구에서의 지위		○		○		○	○
성별	○	○	○	○	○	○	○
출생 연월일	○	○	○	○	○	○	○
배우관계	○	○	○	○	○	○	○
민적/국적	○	○	○	○	○		○
본적지				○	○	○	
출생지		○		○			
상주지			○				
읽고 쓰는 능력		○					
학력					○	○	○
직업		○		○	○	○	○
종사상 지위					○		
지정기능				○ <sup>1)</sup>			
불구상태							○
전입시기 · 전 거주지							○
병역관계				○	○		
1945. 8. 15. 현재 거주지						○	
군사경험						○	
징용경험						○	
주거상황							○
농가 · 비농가 구분							○

주: 1) 지정직업, 지정학력을 조사.  
 자료: 김민경(2000: 115).

## 2) 주요 조사내용의 변천

### (1) 인구이동에 관한 항목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항목은 출생지, 직전 거주지,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특정 연도 이전의 거주지 등이 있다. 초기의 1930년과 1940년 센서스에서는 출생지, 1949년 센서스에서는 해방 당시 거주지, 그리고 1955년 센서스에서는 전입시기 및 전 거주지를 각각 조사하였다.

그러나 1960년 센서스부터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및 1년 전 거주지를 주로 조사하였다. 출생지의 경우에는 1966년과 1975년 센서스를 제외한 매 센서스에서 조사하였으며, 1970년, 1980년, 1995년 센서스에서는 표본으로 조사

하였다. 출생지의 행정단위는 1960년 센서스에서 시·도 단위 그리고 1970년 센서스부터는 시·군·구 단위까지 조사하였다. 한편, 5년 전 거주지는 1970년 센서스부터, 그리고 1년 전 거주지는 1980년 센서스부터 표본조사하였다(단, 1985년 센서스에서는 전수조사). 이들 항목의 이동단위로는 시·군·구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는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통합시, 광역시 등 대규모 행정구역 변경은 시부·군부간 인구이동통계의 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교통량의 증가가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통근과 통학항목을 인구센서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센서스부터 만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통근과 통학항목을 조사하여 왔다(단, 1985년 센서스는 제외). 조사항목은 통근 및 통학 여부, 통근 및 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 및 통학 소요시간 등의 4개 항목이다. 통근과 통학은 집 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기적으로 직장 또는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로 보았고, 통근과 통학의 장소는 읍·면·동까지 조사하였다. 이용교통수단은 제시된 교통수단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980년은 주된 교통수단 1개, 1990년은 이용교통수단 모두, 그리고 1995년과 2000년은 주된 교통수단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통근과 통학의 소요시간도 센서스마다 다소 달리 조사하였는데 1980년 센서스에서는 이 항목을 조사하지 않았고, 1990년은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을 조사하였으나, 1995년은 소요시간대를 제시된 유형에서 선택하도록 하였고, 2000년은 출발시각과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이들 항목은 1990년 센서스에서 전수조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본조사에 포함되었다.

## (2) 출산력에 관한 항목

인구센서스에서는 인구의 출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총출생아수, 지난 1년간 출생아수 등 출산력에 관한 항목을 표본조사하고 있다. 인구센서스에서 출산력 조사결과는 특히 인구동태통계가 부실한 경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지난 1년 간 출생아수를 조사한 센서스로는 1966년 센서스가 유일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동태통계의 부실로 인해 우리 나라 출산력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총출생아수는 1960년 센서스부터 표본조사(단, 1960년과 1985년은 전수조사)하였으며, 특히, 영아 및 유아사망률의 간접추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66년 센서스부터 1990년 센서스까지는 생존자녀수와 사망자녀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1975년 센서스 이후에는 출생아수를 성별로 조사하였다.

예외적으로 1995년 센서스에서는 출산력 항목을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로는 인구동태통계의 질적 수준이 아주 높아진데다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센서스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적어진 한편, 항목수의 축소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역별,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등 센서스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출산지표 작성의 필요성, 저출산 경향과 다른 사회경제적 항목과의 연관분석, 그리고 보육 등 다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2000년 센서스에서는 총출생아수를 다시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김태헌, 1997b).

### (3) 경제활동에 관한 항목

경제활동항목은 인구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며 특히, 인구센서스에서는 다른 인구속성과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센서스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현재상태접근법(current status approach)은 1주일 또는 1일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경제활동상태를 질문하여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노동력접근법(labor force approach)이라고도 한다.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은 1년과 같이 긴 기간 동안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외 조사기준 기간이 없이 직업이나 사업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업자접근법(gainful worker approach)이 있으며, 이는 노동력접근법이 등장하기 전에 흔히 사용했던 개념이다.<sup>2)</sup>

2) 미국 등에서 1930년대까지는 유업자접근법을 사용하였으나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를 측정할 수 없는 동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는 노동력접근법이 고안되었다. 노동력접근법은 미국의 1940년 인구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표 1-8〉 인구센서스에서 종사상 지위의 구분, 1960~2000

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90	1995, 2000
구분	1.유급고용자	1.자영업주	1.단독자영업주	1.고용주	1.고용원을 둔 사업주	1.임금·봉급 근로자
	2.자영업자	2.가사협조	2.고용주	2.영세 자영업주	2.고용원없는 자영업자	2.고용원없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 종사자	3.상용고	3.가족종사자	3.무급가족 종사자	3.무급가족 종사자	3.고용원을 둔 사업주
		4.임시고	4.상용고	4.상용고	4.임금·봉급 근로자	4.무급가족 종사자
		5.일고	5.임시고	5.임시고		
			6.일고	6.일고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초기 센서스 즉, 1955년까지의 센서스에서는 주로 유업자접근법을 채택하여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조사 없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과 산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센서스에서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여 조사기준 기간(센서스 기준일자 직전의 1주간)의 주된 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 이는 활동상태에 따라 조사대상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자로 파악된 사람에 대해서 직업, 산업과 종사상의 지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1985년, 1990년, 그리고 1995년 센서스에서는 조사기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평상시 또는 1개월 등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 이는 1983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 고용구조통계조사가 표본의 크기를 늘려서 지역별 고용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주로 직업과 산업만을 파악하여 다른 인구 속성과 연관하여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거 센서스 자료와의 시계열 분석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인구센서스가 월별 표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노동력접근법을 채택)의 벤치마킹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김민경, 1996). 따라서 2000년 센서스에서는 일정한 기간(1주간)의 경제활동상태와 구직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만약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가를 조사하는 등 완전한 노동력접근법을 적용

〈표 1-9〉 인구센서스의 경제활동관련 조사항목

연도	접근방법	조사기준기간	항목수	세부조사항목
1930	유업자 접근법	-	1	직업
1940	유업자 접근법	-	1	직업(산업, 종사상 지위 포함)
1944	유업자 접근법	-	2	직업(산업, 특수기능 포함), 종사상 지위
1949	유업자 접근법	-	1	직업(특수기능 포함)
1955	유업자 접근법	-	1	직업(산업, 종사상 지위 포함)
1960	노동력 접근법	11. 24.~11. 30.	7	활동상태(4), 취업여부, 구직여부, 비구직 사유,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1966	노동력 접근법	9. 22.~ 9. 28.	4	활동상태(7),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1970	노동력 접근법	9. 21.~ 9. 27.	6	활동상태(4), 취업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취업개월수
1975	노동력 접근법	9. 22.~ 9. 28.	9	활동상태(8), 취업여부, 구직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취업사업장 형태, 취업시간, 추가취업 희망여부
1980	노동력 접근법	10. 25.~10. 31.	6	활동상태(5), 취업여부, 구직활동, 산업, 종사상 지위, 직업
1985	-	-	3	활동상태(8), 산업, 직업
1990	-	(1년)	4	활동상태(10), 산업, 종사상 지위, 직업
1995	-	10. 1.~10. 31.	4	활동상태(9),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2000	노동력 접근법	10. 22.~10. 28.	5	활동상태(7),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주: 활동상태( )내의 숫자는 응답 내용수임.

자료: 김민경(2000: 138).

하였다.<sup>3)</sup>

취업자에 대해 산업, 직업과 종사상 지위 모두를 조사한 것은 1960년 센서스 이후(단, 1985년은 산업과 직업만 조사)이다. 산업과 직업은 취업자가 종사한 사업장과 종사한 일의 종류를 개방식 질문형태로 조사한 후 자료처리과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단, 1960년은 국세조사용 산업분류와 직업분

3) 노동력접근법에서 취업자는 조사기준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실업자는 조사기준기간 중 i)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ii)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iii) 만약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류)에 의거하여 산업과 직업을 분류하고 부호를 기입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각각 1964년과 1963년에 제정된 후 2000년 센서스까지 산업분류는 8회, 직업분류는 5회 개정되었다. 따라서 산업과 직업자료의 시계열분석 시에는 관련 분류내용의 변경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종사상 지위는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금·봉급 근로자(피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의 4개 유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1980년 센서스 이후(단, 1985년은 제외)에는 일관되게 적용하였으나, 1975년 이전에는 다소 달리 구분하였다. 즉 1975년과 1970년은 임금·봉급근로자에 대해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상용고(1년 이상), 임시고(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고(1개월 미만)로 세분하여 6개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966년은 고용원을 둔 사업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합한 자영업주, 가사협조(무급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일고의 5개 유형으로, 그리고 1960년에는 자영업자, 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의 3개 유형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크게 자영업자, 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면 각 유형의 명칭과 배열순서는 센서스마다 다소 다르긴 하나, 분류상으로는 시계열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자료 이용 시에는 적용된 경제활동인구 접근방법과 조사 기준기간,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변화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농업취업자의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 농번기에 따라 농업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에 변동폭이 컸다. 더구나 농업취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많다. 따라서 센서스에 적용된 접근방법 외에도 조사기준 기간에 따라 취업자 수의 규모와 구조가 영향을 받게 된다.

조사항목 수를 제한하였던 1966년 센서스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상태 항목 이외에도 취업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확인항목으로 취업 여부(조금이라도 수입을 위하여 일한 적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특히, 1960년, 1975년, 1980년, 2000년 센서스에서는 정확한 실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구직활동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경제활동상태는 전 항목을 전수조사한 1960년과 1985년을 제외하고는 표본조사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하한연령은 1980년 센서스까지는 만 14세, 그리고 1985년 센서스부터는 만 15세로 정하였다.

## IV. 향후의 발전 방향

인구센서스는 한 국가의 간접자본으로서 유·무형의 형태로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인구센서스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방법론적 및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한 변화는 당 시에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시대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특히, 인구센서스를 둘러싼 조사환경의 변화는 향후 인구센서스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그 동안의 인구센서스의 발전 양상과 주요 특징을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측면이다. 향후 인구센서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조직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더욱 증가하여 맞벌이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가구의 분화로 인해 노인독거가구 및 자녀독립가구 등의 1인 가구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여가중심의 생활로 인해 일시적인 거주지 이탈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의식은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며, 방문판매원이나 각종 광고물을 기피하는 경향도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조사방법을 채택할지라도 조사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에게 조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조사실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향후 인구센서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법제화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조직에서는 조사기획, 관련 예산 확보 등 기초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이외 대부분 집행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별로 필요한 항목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표 등 필요 물자의 준비를 해당 지자체 관내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자료처리과정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분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센서스 홍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홍보물 제작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방법론적 측면이다. 여기에는 조사기법, 조사수단, 그리고 조사대체 수단 등이 포함된다. 우선 조사기법을 생각해 보면, 조사환경과 기술발전 등을 종합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응답자인 국민이 신뢰하고 용이하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인구센서스를 혁신적으로 실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를 하면서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자료공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새로운 기술 등을 차기 센서스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이미 착수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0년 센서스를 마지막으로 2010년 센서스부터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만 실시하며, 표본조사항목은 매년 대규모 표본조사인 ‘미국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를 통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조사 누락, 응답부담의 문제 외에도 10년 주기의 조사결과로는 변화하는 인구사회 현상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없어 정책 반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표본조사를 위해 1990년대 초부터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6년에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며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다.

조사수단으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많은 국가에서 센서스 실시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을 센서스에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캐나다의 경우 2006년 센서스에 인터넷조사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장기적으로는 센서스 비용과 응답자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자료수집과정은 응답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 여건으로 볼 때 조사표의 배부는 조사원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가구에서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야 하는데, 종래의 방법에 추가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응답방법이다. 이 경우 가구에서 인터넷 응답을 선택하는 과정을 어떻게 조사실시기관이 자동적으로 인지하며, 미응답

가구 및 응답내용의 오류를 어떻게 확인하고 추적할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인터넷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아파트거주가가 전체가구의 반을 넘고 있고 인터넷 사용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간부채가구의 증가, 개인의 사생활보호의식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면접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 응답은 조사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조사대체수단에 관한 것이다. 등록제도가 발달한 유럽국은 전통적인 인구센서스를 등록센서스로 전환하였거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주민등록의 전산화에 이어 호적 전산화, 토지대장 전산화,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등 행정자료시스템 수록 자료의 질을 높이고 이들을 연계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 국가의 전반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통계청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되, 등록센서스를 처음 실시한 덴마크의 예처럼 통계청이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전통적인 인구센서스의 실시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항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이 추가하거나 소멸될 수도 있다. 인구센서스에서는 항목 수와 조사부담(정확도 등)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 항목선정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안은 기본항목을 필수항목으로 하여 매 센서스마다 고정시키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택적으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때 표본항목 또는 전수항목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항목별로 조사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도 필요하다. 한편, 센서스에서 조사가 어려운 항목이나 다른 표본조사로 작성하여도 결과 이용에 큰 문제가 없는 항목 등은 신규 항목 선정 시 배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개념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계열 비교의 가능성을 전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자료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료입력과 조사오류수정(에디팅)의 자동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키엔트리 입력방식에서 1990년과 1995년은 광학판독기(optical mark reader, OMR) 입력을 하였으나 2000년은 지방 12개 장소에서 PC 입력과 조사표 에디팅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센서스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광학문자판독기법인 OCR(optical character reader) 입력방식을 도입하였다. OCR 입력은 조사표를 그대로 스캐닝(scanning)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산업·직업분류의 자동코딩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가 있다. 우리 나라 2000년 센서스의 경우에는 장비도입에 따른 예산 등 경제성과 당시의 고실업 등 사회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나 자료처리기간을 종전보다 크게 단축시킨 결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다음 센서스에서 지방분산의 PC 입력이 효율적인지, 또한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보완되어야 할 부문은 무엇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OCR방법을 도입한다면 숫자와 문자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테스트 등의 기술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향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충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속적이고 일관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센서스 관련 정부 및 민간전문가를 배양하여, 일종의 인력 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정부사업의 예산에 비해 인구센서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결코 많지 않으며, 외국의 센서스 실시비용과 비교하여 보아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만을 투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센서스 실시를 위해서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인구센서스 전반에 걸친 업무에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센서스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2장 인구의 성장과 변천

김 두 섭

### I. 머리말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우리 나라의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불과 70~80년 동안에 인구변천을 거의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된 근대화 과정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동태들이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근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출생률의 저하가 인구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는 적어도 202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빠른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안정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01c).

그 동안 한국의 인구증가와 출산력의 저하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인구변천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변천의 본질과 이론적 근거를 규명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인구변천의 인과관계구조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그리고 인구성장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보다 세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이동의 수준과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인구변천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인구변천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과 그 인과관계구조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인구의 성장은 그 사회의 총체적 변동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이 장의 주목적은 한국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구변천을 겪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장은 인구변천과정에서 인구성장의 3대 구성요소, 즉 출산력과 사망력, 그리고 인구이동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인구변천이론의 보완과 정교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한국인구가 지닌 주요 특징들을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II. 한국의 인구변천

우리 사회가 지난 100여 년 간 겪어 온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및 인구증가의 수준과 주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인구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전통적 성장기 (1910년 이전)
- ② 초기변천기 (1910~1945년)
- ③ 혼란기 (1945~1960년)
- ④ 후기변천기 (1960~1985년)
- ⑤ 재안정기 (1985년 이후)

그러면 이 구분에 따라 한국 인구변천의 역사를 개괄하여 보기로 하자.

### 1. 전통적 성장기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진 1925년 이전의 인구자료는 완전도가 매우 낮다. 조선시대에도 태조 4년(1395년) 이후 호구조사자료가 발견되나 대부분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을 지닌다. 조선조의 인구증가속도를 비교적 그럴듯하게 추정할 수 있는 기간은 매 3년마다 호구조사가 실시되었고,

비교적 자료의 질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1678~1789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한된다. 더구나 당시의 호구조사에서 호구의 개념은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호구조사의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한 심한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戶口總數」에는 正祖 13년(1789년)의 전국인구가 740.4만 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권태환과 신용하(1977)는 1789년의 인구를 1,829.6만 명으로, 그리고 김두섭(1990)은 1,720.2만 명으로 추정하는 바 있다. 만약 이들의 추정인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시기의 호구조사자료의 완전성은 40~43%에 불과한 셈이다. 결국, 조선시대의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추세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추정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인구변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높은 출산력과 사망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통적 성장기에 해당된다. 조선 말기까지 우리 나라는 대체적으로 정체되고 전형적인 농업사회였으며, 인구의 증가는 매우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었다. 조출생률(CBR; 1,000명당)은 35~45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으며, 조사망률(CDR; 1,000명당)도 30~35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며 비교적 빠른 인구증가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전염병, 기근, 전쟁(난)등의 경제적 곤란이나 사회적 혼란이 있으면 일정 기간동안 사망률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즉 조선시대의 인구는 소위 ‘멜서스(Malthus)적인 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인구의 국제이동이 매우 미미한 폐쇄된 상태를 줄곧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구의 증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조선시대 500년 간 인구는 연평균 2% 정도의 완만한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권태환·김두섭, 2002: 247). <표 2-1>과 <그림 2-1>에 제시된 것처럼, 전통적 성장기의 마지막 해인 191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1,742.7만 명으로 추정된다.

〈표 2-1〉 한국의 인구성장, 1910~2000

연도(월일)	인구 (1,000명)	연평균 증가율 (%)		
		자연증가	국제이동	총증가
분단 이전				
1910 (10. 1)	17,427*			
1915 (10. 1)	17,656*	4.0	-1.4	2.6
1920 (10. 1)	18,072*	7.0	-2.3	4.7
1925 (10. 1)	19,020	12.0	-1.8	10.2
1930 (10. 1)	20,438	18.7	-4.3	14.4
1935 (10. 1)	22,208	20.2	-3.6	16.6
1940 (10. 1)	23,547	20.6	-8.9	11.7
1944 ( 5. 1)	25,120	20.2	-2.2	18.0
한국 (남한)				
1945 ( 9. 1)	16,136*			
1949 ( 5. 1)	20,167	18.9	41.9	60.8
	19,904**			
1955 ( 9. 1)	21,502	7.0	5.3	12.3
1960 (12. 1)	24,989	28.7	-0.1	28.6
1966 (10. 1)	29,160	26.6	-0.1	26.5
1970 (10. 1)	31,435	19.0	-0.2	18.8
1975 (10. 1)	34,679	20.2	-0.6	19.6
1980 (11. 1)	37,407	15.9	-1.0	14.9
1985 (11. 1)	40,420	16.4	-0.9	15.5
1980 (11. 1)	43,390	14.9	-0.7	14.2
1995 (11. 1)	44,554	10.7	-5.2	5.3
2000 (11. 1)	45,985	9.0	-2.7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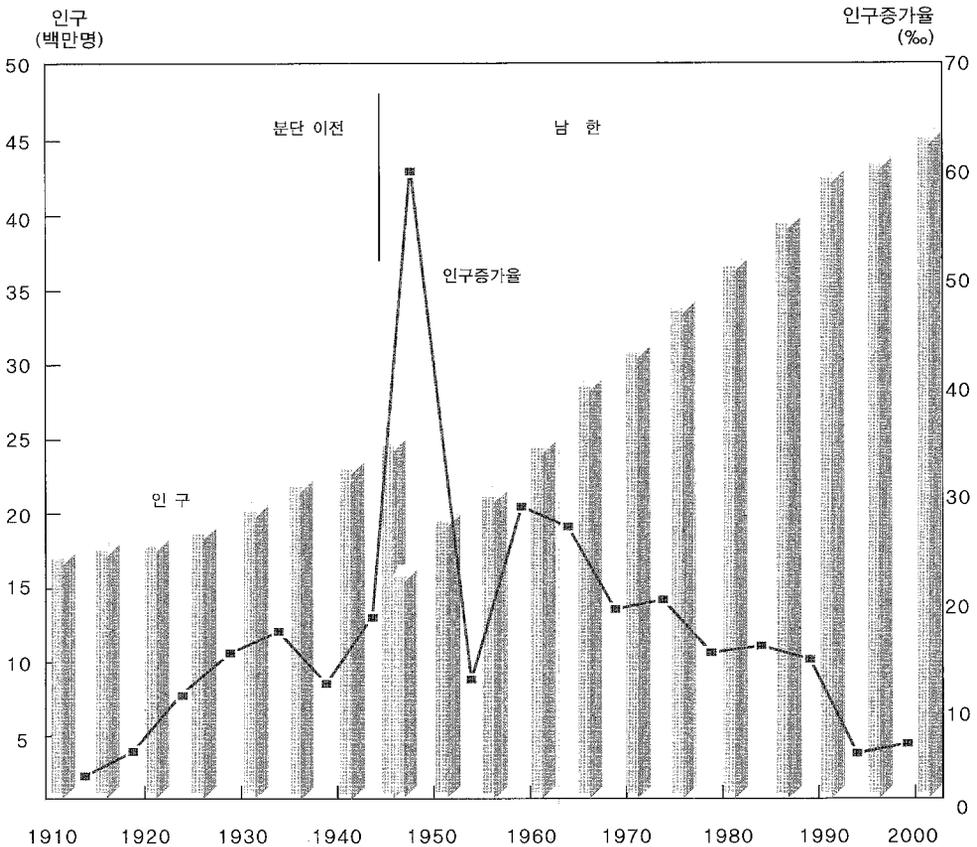
주: 1)\* 추정인구; 2)\*\* 1955년 경계 추정인구; 3) 이 표에서 외국인은 제외되었음; 4) 이 표에 제시된 인구는 해당 연도의 인구센서스 결과로 얻어진 것이며, 각 인구센서스의 완전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연평균 증가율의 계산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를 초래할 수 있음.

자료: Kwon et al.(1975: 7); 김두섭(1993); D.S.Kim(1994); 통계청(1997a, 2002a).

## 2. 초기변천기

우리 나라의 인구는 1910년의 한일합방을 전환점으로 하여 초기변천기(1910~1945년)에 돌입하게 된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의 보건제도와 의학, 의약품이 한일합방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로 1920년경부터는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1910~1915년의 기간동안 34 정도이던 조사망률이 일제말기인 1940~1945년에는 23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출산력은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보건개혁과 서양의학의 확산으로 인하여 조출생률은 1920년대 초반까지 오히려 약

〈그림 2-1〉 한국의 인구성장 및 인구증가율의 추세, 1910~2000



간 상승하는 경향마저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1910~1945년의 기간동안 조출생률은 38에서 42~45 정도로 상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초기변천기에 인구증가의 속도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전통적 성장기에 2~3 정도에 불과하던 인구의 자연증가는 그 속도가 계속 빨라져서 1930년 이후에는 연평균 20%를 상회하게 된다. <표 2-1>에 제시된 것처럼, 일제 말기인 1944년에 이루어진 인구센서스 결과는 전국인구를 2,512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1910년에 비해 44.1%가 증가한 수준이다.

초기변천기에 사망력 저하에 따른 인구의 빠른 자연증가는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경제정책에 따라 농촌의 경제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대규모의 이농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의 대부분 도시들은 산업화의 수준이 낮았으며, 주변지역으로부터 이농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농촌을 떠난 농민들의 이동 목적지는 주로 만주와 일본이었다. 초기에는 함경도 지방의 농민들이 새로운 농토를 찾아 만주로 이동하였고, 1920년 이후에는 일본으로의 노동이민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1930년대 이후 만주로의 이동은 남쪽의 이농민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해외이동은 1935~1940년 사이에 가장 심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기간 중 만주로의 순인구유출규모는 51만 명, 그리고 연평균 순국제이동률(1,000명당)은 -8.9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두섭, 1999). 한편, 194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해외이동은 주로 징병 및 징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 2-1>과 <그림 2-2>에서 당시의 대규모 해외이동은 사망력의 저하와 함께 인구증가의 수준과 추세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이농현상은 또한 국내적으로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농민 중 해외로 이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도시가 커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전진기지인 항구도시들이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일제 말기에는 공업도시들이 발달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인구이동은 혼인연령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농촌을 떠나 이동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하게 되었고, 이동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3. 혼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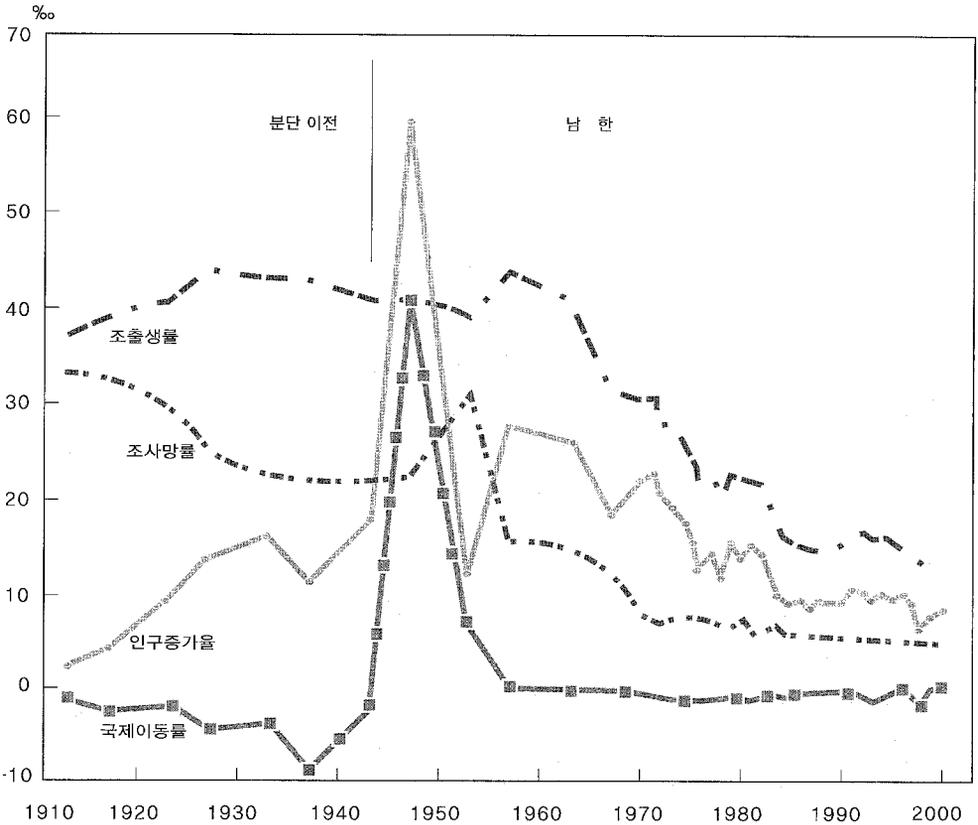
광복이 이루어진 1945년부터 약 15년 동안은 우리 나라의 인구변천사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함께 이루어진 남북한의 분단, 그리고 뒤이은 한국전쟁은 정치, 사회, 경제분야뿐만이 아니라 인구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분단이후 북한의 인구자료는 매우 제한되고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1945년부터는 인구변천을 남한에 국한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의 경계선이 위도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변화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광복 당시 남한의 인구는 1,613.6만 명으로 추정된다. 광복 후 및 전쟁기간 중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기(1945~1960년)에 남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우선 광복 후 만주와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귀환이동과 전쟁기간 동안 북한으로부터의 피난민 유입에 기인하는 것이다. 광복 후 1945~1949년 사이 일본, 만주 및 이북으로부터의 귀환이동자 총수는 추정방법에 따라 약 210~250만에 달하며, 이는 1949년 당시 인구의 10~1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전쟁기간(1950~1953년)에 북한으로 납치된 인구가 30만,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피난민이 65만으로, 결국 남한의 순인구유입규모는 약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권태환·김두섭, 2002: 254-255).

광복 후의 귀환이동자들은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었지만, 귀국하여 농촌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출신지역의 도시에 정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 전쟁기간 동안의 피난민들은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및 강원지역의 도시에 정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정착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과 중부지역 도시들이 급격한 인구성장을 경험하며 도시화의 기틀이 다져졌다.

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1945~1950년의 기간에 60.8%로 역사상 최고

〈그림 2-2〉 한국의 인구증가율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추세, 1910~2000



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베이비 붐’ 현상으로 1950년대 후반에 다시 급상승하여 28.7%(1955~1960년)에 달하게 된다. 이는 남한의 인구변천사에서 국제이동을 배제한 자연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D.S. Kim, 1992).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전쟁의 기간에 사망률은 매우 높아진다. 전쟁으로 인한 추가사망은 165만 명에 이르며, 조사사망률은 1950~1955년의 기간에 32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쟁기간 중 항생제를 비롯한 새로운 의약품의 대량 반입과 전쟁 후 이들의 전국적인 확산은 1950년대 중반부터 사망률, 특히 영아 및 유아사망률을 급속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사사망률은 1955~1960년의 기간에 16.1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50~1955년에 비해 51.2%가

감소한 수준이다.

출산력은 1945~1960년 사이의 혼란기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전쟁동안 부부의 별거, 결혼의 연기, 그리고 사별자의 급증으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은 <그림 2-2>에 나타난 것처럼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는다. 조출생률은 1945~1950년과 1950~1955년의 기간에 각각 42와 40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력은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전쟁후의 '베이비 붐' 현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전쟁동안 별거 하던 부부들이 재결합하고 미루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기간중의 출산력 수준은 초기변천기(1910~1945년) 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약간 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D.S. Kim, 1992).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영국의 인구변천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관찰된다는 사실이다.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기에 출산력이 변천(본격적 저하)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망력의 저하로 인하여 결혼가족이 적어지고 결혼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약 30년 동안 출산력이 상당히 상승하였다(Weeks, 1989). 이 같은 현상은 영국인들의 재생산행위가 저사망력의 새로운 상황에 채 적응하기 이전에 출산율이 올라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인구압력이 일정 분계수준(threshold level) 이상으로 높아지기까지는 출산력의 본격적인 저하가 동기화 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 4. 후기변천기

지난 1960년대 초반은 우리 나라 인구변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점으로 기록될 만 하다. 우리 사회는 근대화, 도시화 및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인구의 안정상태를 지향하는 후기변천기(1960~1985년)에 접어들게 된다.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출산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사망력도 계속하여 다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출생률의 저하 속도가 사망률보다 훨씬 빨라서 인구증가율도 빠른 감소를 보인다.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1980~1985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은 15.5%로 추산되며, 이는 1960~

1966년 기간보다 11 이나 감소한 수준이다(〈표 2-1〉 참조).

후기변천기의 인구현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구의 증가추세가 정부의 인구 정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선 1960년대 초에 이르면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한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하는 사망률로 인하여 인구압력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대규모의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은 도시 지역에서의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곤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고 자녀부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녀수를 억제하고자하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다(D.S. Kim, 1987). 이에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억제정책이 수립되고, 1962년부터는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었다. 가족 계획사업은 정부의 주도 하에 매우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출산력의 저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은 1960~1965년의 기간에 각각 41.7과 6.0을 기록하였으나 1985년에는 16.2와 1.67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01k; 권태환·김두섭, 2002: 264).

후기변천기에는 사망력도 상당한 감소를 보인다. 그러나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그 속도는 1970년대 후반부터 둔화되기 시작한다. 남녀의 평균기대 수명은 1960~1965년에 각각 48.5세와 55.9세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65.9세와 72.7세로 증가하였다. 영아사망도 1960~1965년에 1,000명당 87명의 수준이던 것이 1985년에는 23.7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권태환·김두섭, 2002: 267). 이 시기의 사망력 감소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 및 의료 시설이 확장된 결과로 보아야할 것이다. 의료보험과 같은 보건제도의 도입도 사망수준의 저하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족계획사업의 실시 역시 직접, 간접으로 여성사망률의 저하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략 1955년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 인구의 국제이동은 매우 미미해진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 북미주 이주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민의 최대규모는 연간 3~4만 명의 수준이었다. 〈표 2-1〉에서 후기변천기의 연 국제이동률은 -1.0을 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1985년까지 23년 간 이민총수는 63만 명으로 추산된다(권태환·김두섭, 1990: 317). 결과적으로 후기변천기에는 인구의 크

기와 증가추세가 국제이동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폐쇄인구(closed population)로 보아도 무방하다.

## 5. 재안정기

우리 나라 인구는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재안정기에 돌입하였다.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치고 선진국형의 안정상태에 접근하였으며, 현재의 출산력 수준과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에서 1995~2000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6.3%이며 이는 1955~1960년보다 78.0%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인구는 2000년 센서스 결과 4,598.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절대수에 있어서는 지난 45년간 113.9% 증가한 셈이 된다.

통계청(2001c)은 우리 나라의 인구가 2013년에 5,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3년에 5,068.3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433.7만 명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력 저하추세로 볼 때, 인구의 감소세 전환시점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에서는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감소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2024년부터는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보다 많아지며, 2050년에는 성비가 96.3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5년이래 우리 나라의 출산력 수준은 모든 사람의 예측을 벗어난 매우 괄목할 만한 감소를 보인다. 이는 남녀의 차별의식이나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소가족가치와 규범을 널리 전파시켜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권태환, 1990).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 가치관 및 태도가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정착되는 현상은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통계청(2001c, 2001k)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의 조출생률은

〈표 2-2〉 한국의 장래 추계인구, 2000~2050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남자인구	여자인구	성비	연평균 인구증가율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101.4	-
2010	49,594,482	24,932,771	24,661,711	101.1	5.4
2020	50,650,260	25,377,186	25,273,074	100.4	2.1
2030	50,296,133	25,046,468	25,249,665	99.2	-0.7
2040	48,204,474	23,836,935	24,367,539	97.8	-4.2
2050	44,336,997	21,751,590	22,585,407	96.3	-8.4

자료: 통계청(2001c).

13.4, 그리고 합계출산율은 1.47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는 각각 11.6과 1.30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02d). 이러한 출산력은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오면 그 동안의 출산억제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진다. 가족계획사업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제도가 사장되었고, 1994년에는 소득세 인적공제 범위에서 자녀제한제도가 철폐되었다. 정부는 1996년 인구성장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인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출산력 저하와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른 국력약화를 막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2〉에서 사망률은 그 속도는 느리지만 1980년대 후반기에도 계속 떨어져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망률 저하속도의 둔화는 부분적으로는 인구의 연령구조가 바뀌어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이다. 조사사망률은 1985~2000년의 기간에 6.0에서 5.2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남녀의 기대수명은 2000년 현재 각각 72.1세와 79.5세로 추정되어 사망률 역시 선진국형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1c). 앞으로 의

〈표 2-3〉 한국 인구변천의 단계별 특성

단계	기간	인구증가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전통적 성장기	~1910	매우 낮은 상태로 안정됨	높음	높음 그러나 소폭변동	거의 없음	전형적 농업사회/ 기아, 질병, 전쟁에 의한 사망률 상승
초기 변천기	1910~1945	급격히 상승	높음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	일본과 만주로의 대량이동	일본의 식민지화/ 식민지 경제정책, 보건, 의료시설 도입
혼란기	1945~1960	급격한 증가 그러나 1949~1955 기간은 정체	높음	중간 수준 그러나 1949~1955 기간은 높음	일본과 만주에서 대량귀환/북한에서 피난민 유입	광복, 남북한 분단, 한국전쟁, 사회적 혼란, 극심한 경제적 곤란
후기 변천기	1960~1985	증가를 계속 떨어짐	급격히 떨어짐	계속 떨어짐	1970년 이후 이민 약간 증가	근대화, 경제발전, 도시화, 인구정책의 실시
재안정기	1985~	계속 떨어짐/ 이론적 감소 상태 돌입	재생산수준 이하로 떨어짐	더욱 떨어짐	낮은 수준유지	지속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교육팽창,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보험 실시

자료: 권태환·김두섭(2002: 260); 김두섭(1991, 1993); D.S. Kim(1992).

료보험과 의료시설의 혜택이 보다 널리 확산됨에 따라 사망력은 보다 더 감소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인구의 국제이동은 재안정기에 들어와서 1970년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이동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인구규모나 추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이민으로 인한 인구의 손실은 1.0만 명이다. 한가지 특징은 이들의 절대다수(95.0%)가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다(외교통상부, 2001).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우리 나라는 금세기에 들어와 인구변천을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출산력과 사망력이 이미 선진국의 수준으로 낮아졌고 인구의 안정기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구유럽국가들에서 인구변천에 150~200년이 걸린 데 비해 아주 짧은 기간에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친 셈이다. 우리 나라 인구변천의 각 단계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 Ⅲ. 인구변천의 인과구조

#### 1. 출산력 저하의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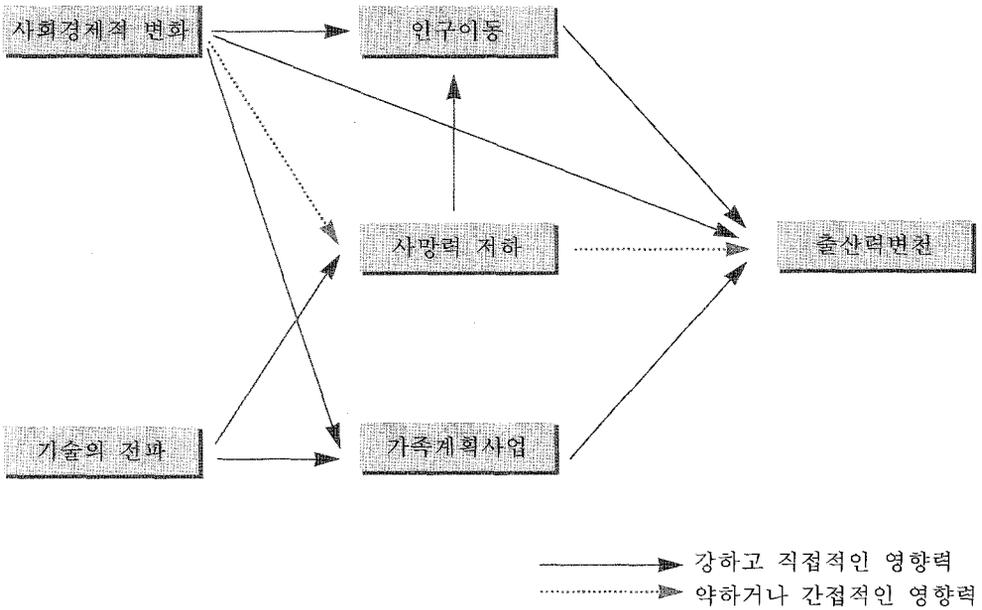
인구변천이론이 인구의 성장과정을 일반화시켜 기술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인구변천이론의 설명력과 예측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구변천이론은 논리적으로 일관된 이론의 체계라고는 볼 수 없으며, 미래의 인구과정의 방향을 논리연역적으로 도출해 내거나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도 아니다(UN, 1973a: 60). 인구변천이론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분석틀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출산력변천의 설명 특히 출산력이 어떻게 저하하기 시작하느냐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출산력변천의 인과모델은 분계점 가설(threshold hypothesis)과 Davis의 인구변화와 반응이론(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에 기초하고 있다. 즉 출산력의 저하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관된 조건들이 분계점에 도달하고, 사람들이 인구압력을 느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림 2-3>에는 우리 나라의 출산력변천을 설명하는 주요 인자로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이동, 사망력 저하, 기술의 전파,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출산력변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가치관, 규범 및 사회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Srikantan, 1982: 267). 유럽의 출산력변천에 관한 많은 문헌에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비록 필요조건은 아니더라도 충분조건으로 기술되고 있다. 인구변천이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Notestein(1953)도 산업화, 그리고 이와 함께 수반되는 도시화 현상을 출산력변천의 전제조건으로 취급하였다(Caldwell, 1982).

인구이동과 사망력의 저하는 출산력변천의 결정요소로 흔히 강조된다. 인구이동이 이 연구의 인과모델에 포함된 이유는 인구의 압력이 심한 사회에서 흔히 국외 또는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동이 혼인출산력의 통제보다 선호되며,

(그림 2-3) 한국 인구변천의 인과구조



따라서 출산력의 저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Friedlander, 1969; Mosher, 1980a). 또한 사망력 저하도 출산력변천의 주요 결정요소로 간주된다. 물론, 사망력과 출산력간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구학자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사망력의 하향 추세를 출산력변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간의 인과관계는 경험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널리 입증되어 왔다.

〈그림 2-3〉의 인과모델에는 기술의 전파와 가족계획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사망력의 저하는 서구로부터 수입된 기술에 기인하는 바 크다. 사회경제적인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수입된 기술로 인하여 질병의 치료와 통제, 그리고 보건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수십 년 간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국제기구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아 다양한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력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림 2-3〉에 제시된 인과모델은 한국의 초기변천기에서 후기변천기까지 출생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화의 초기단계(1910~1945년)에서 사망률은 저하한 반면 출생률은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급격한 자연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증가는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서 도시가 팽창하고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 인구증가에 대한 농촌지역에서의 주된 반응은 팽창하는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 도시화의 속도는 급격해진다. 예를 들어, 1935~1940년의 기간동안 도시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무려 129.4%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표 2-4〉 참조).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또한 인구의 국제이동을 유발시켰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압력이 높아지자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이 만주와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초기변천기에는 인구압력에 대한 주요 반응이 전출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성이나 모성역할에 대한 관념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혼인출산력의 통제보다는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국외로의 전출을 선호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 기간동안 조혼경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출산력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Kwon et al., 1975; 김두섭, 1987).

혼란기(1945~1960년)에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였다. 〈그림 2-2〉에서 조출생률은 1950년대 초까지 약간의 하향추세를 보이지만, 이 추세는 전후 ‘베이비 붐’으로 반전되었다. 한국에서 출산력변천의 시작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된 1960년대 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혼인출산력은 사망률이 저하하기 시작한지 약 반세기가 지난 후인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저하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출산력’에서 ‘통제출산력’ 체제로의 전환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첫째로, 출산행위가 부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둘째로, 자녀를 적게 가지는 것이 유익하게 인식되고; 그리고 세째로, 피임의 효과적인 방법들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다(Coale, 1974; Jones, 1990).

결국 한국 출산력 저하의 시작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성숙과 가족계획사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에 이미 영아사망률이 비교적 낮았고, 교육도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또한 소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 모든 발전의 지표들이 출산력변천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도 우연의 일치로는 볼 수 없다.

Davis(1963)는 출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기아나 절대빈곤의 위협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생활수준의 향상이 남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된다는 공포감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시켜 출산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에의 인구집중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대적인 산업환경에 노출되고, 자녀의 양육비가 높아짐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 가치관 및 태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출산력과 연관된 태도와 행위를 조속히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행정적 압력도 높아졌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인구증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국외이주가 더 이상 가용치 않게 되었다. 또한 독신주의는 문화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초에 이르러 한국인에게 유일하게 남은 대안은 출산력의 통제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피임의 관념을 수용하고 또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출범되기 이전에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인공유산이 산아제한의 방법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으며, 여자의 초혼연령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권태환·김두섭, 2002: 262, 306).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은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피임방법과 도구는 성공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 출범 초기에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을 사업의 주대상으로 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도시주민도 포함되었고, 1980년부터는 특정집단에 대한 선별 접근을 시도하였다(김두섭, 1989). 그 동안 홍보 슬로건도 1960년대의 3자녀 갖기 운동에서 1970년대에는 2자녀 갖기 운동, 그리고 1980년에 들어오면서 1자녀 갖기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법적, 제도적 장치와 지원시책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그간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출산력의 저하를 경험하였다.

우리 나라 출산력변천의 3대 구성요소로 피임도구의 보급, 초혼연령의 상승, 그리고 인공유산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피임방법과 도구는 1960년대 초부터 가족계획사업을 통하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엽에 이르기까지 피임은 주로 충분한 수의 자녀(특히 아들)를 이미 낳았거나 가임기 후반에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실천되었다(Kwon, 1981: 28-29). 따라서 1960년대 전 반부에는 피임의 보급이 출산력의 저하에 미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5년 이후 피임은 출산력 수준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인공유산의 증가는 1960년대 초반 출산력 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자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1966년 인구센서스 자료로부터 구해진 여자의 평균초혼연령은 22.9세로 추산되는데, 이는 1925년보다 무려 6.3세나 높아진 것이다(김두섭, 1987). 초혼연령과 인공유산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상대적인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초혼연령의 상승이 출산력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외에도 급속한 도시화<sup>1)</sup>와 확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전환 역시 이 기간의 출산력 저하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가족 속의 여성은 대가족과 남아선호 경향이 강한 노인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어 가족계획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D.S. Kim, 1986). 아울러, 비록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혼인구성의 변화, 즉 사별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와 같은 혼인구성의 변화 역시 출산력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임연령여성의 구성비율의 변화도 조출생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의 연령 및 성 구성의 변화는 1970년까지 조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으나, 1970~1975년의 기간에는 오히려 조출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1) 도시화와 출산력 저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뒤의 절에서 이루어진다.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출생률을 높이는 연령구조의 영향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출산행위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1980년대 말까지 더욱 강화되어 왔다(김두섭, 1991; D.S. Kim, 1992).

지금까지 우리 나라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와 결정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인구변천이론을 보완하고 정교화 시키기 위해서는 출산력과 인구성장의 다른 구성요소, 즉 사망력, 인구이동과의 상호연관관계를 보다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2. 사망력과 출산력의 관계

서구유럽 국가들에서 사망력의 저하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긴밀한 연관하에 이루어져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화가 출산력과 인구이동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으나, 사망력의 변화에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Kwon et al., 1975: 24). 식민통치시대나 한국전쟁 이후의 사망력 저하는 경제발전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하의 산업발전은 한국 노동력의 착취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망력의 저하에 크게 공헌하지 못하였다.

전쟁 후의 경제상황 역시 사망력의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 전쟁기간 동안 전 국토가 파괴되었고 경제복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는 새로운 의약품과 보건 및 의료체계의 보급, 확산이 우리 나라의 사망력 저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구변천이론에 대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는 사망력의 저하가 과연 출산력의 저하에 선행하는가의 여부와, 이들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는 것이다. 인구변천이론은 균형모델에 근거하여 사망력이 먼저 떨어지고 난 후 출산력의 저하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에서 사망력의 저하가 출산력의 저하보다 항상 선행하는 것은 아님이 밝혀져 왔다(Coale, 1974; Ware, 1972; Goldscheider, 1971).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서구 기

술의 도입으로 이루어진 사망력의 급격한 저하가 과연 출산력의 저하를 촉진시켰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사망력이 출산력의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경험적인 자료로 거시적인 수준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사망력과 출산력이 저하의 폭이나 속도에서 정적인 연관(positive association)을 맺고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망률이나 영아사망률이 떨어지면서 부부들이 출산을 억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그림 2-2〉에서 조사망률은 분명히 조출생률보다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10~1925년의 기간에 보건수준의 향상에 따라 조출생률은 상승한 반면, 조사망률은 감소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1950년대 후반에도 발견된다.

이러한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Ware(1972)는 사망력이 어떤 분계 수준(threshold level)에 이르기까지는 출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망력과 출산력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인과관계라 하더라도 영향력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D.S. Kim, 1992).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인구변천과정에서 사망력과 출산력은 매우 미약한 관계나 또는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ship)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사망력은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들 양자간에 연관성이 있다면 이는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

### 3. 인구이동과 출산력의 관계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인구변천과정에서 농촌-도시 이동과 국제이동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원래의 인구변천이론에는 인구이동이 인구변화과정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출산력과 사망력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변천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인구이동은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취급되고 있다(Goldscheider, 1981).

Davis(1963)는 그의 인구변화와 반응이론에 인구이동을 인구변천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포함시켰다. 그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인구압력을 받게되면 가용한 모든 인구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거나, 또는 최소한 생활수준이나 기대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반응은 독신주의, 결혼의 지연, 피임, 인공유산, 국내 및 국외 이동 등이다. 이중에서도 이동은 가장 효율적이고 민첩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은 다른 인구학적 반응의 대응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동은 단기적으로 인구압력을 완화시키고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안전판의 구실을 한다(Goldscheider, 1981). Friedlander(1969)는 영국(1800~1940년)과 스웨덴(1750~186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변천과정에서의 인구이동과 출산력 변화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출산력 저하의 시기와 정도는 이동의 기회와 반비례함이 밝혀졌다. Mosher(1980a, 1980b)도 푸에르토리코와 스웨덴 자료를 분석하여 같은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1925~1955년의 기간동안 인구의 국제이동이 인구의 성장추세를 좌우하였다. 특히 일제의 통치 하에서 농민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대량으로 이주해 나감으로서 인구압력을 줄이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력변천의 시작을 많이 지연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주해나갈 출구가 없었다면 한국인구는 혼인의 지연, 인공유산, 또는 혼인출산력의 조절을 통하여 자연증가를 억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이래 국제이동의 규모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 왔고, 한국인구의 성장은 다시 출산력과 사망력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다.

인구의 국내이동 또한 출산력변천을 시작하는 시기 및 속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던 기간에는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주뿐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 2-4>에서 보는 것처럼, 1925~1944년의 기간동안 전국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일본인과 외국인 제외)의 구성비율이 3.2%에서 11.7%로 급상승하였고, 도시의 수도 12개에서

〈표 2-4〉 한국 도시인구의 성장, 1910~2000

연도(월일)	총인구 (1,000명)	도시의 수	도시인구 (1,000명)	도시인구 비율 (%)	도시인구 증가율 (%)
분단 이전					
1910 (10. 1)	17,427 *	-	-	-	-
1915 (10. 1)	17,656 *	-	-	-	-
1920 (10. 1)	18,072 *	-	-	-	-
1925 (10. 1)	19,020	12	608	3.2	-
1930 (10. 1)	20,438	14	889	4.4	76.0
1935 (10. 1)	22,208	17	1,245	5.6	67.3
1940 (10. 1)	23,547	20	2,377	10.1	129.4
1944 ( 5. 1)	25,120	21	2,933	11.7	68.4
한국 (남한)					
1945 ( 9. 1)	16,136 *	15	2,081	12.9	-
1949 ( 5. 1)	20,167	19	3,458	17.1	135.4
1955 ( 9. 1)	21,502	25	5,263	24.5	66.3
1960 (12. 1)	24,989	27	6,997	28.0	54.2
1966 (10. 1)	29,160	32	9,780	33.5	57.4
1970 (10. 1)	31,435	32	12,929	41.1	69.8
1975 (10. 1)	34,679	35	16,770	48.4	52.0
1980 (11. 1)	37,407	40	21,409	57.2	48.0
1985 (11. 1)	40,420	50	26,418	65.4	42.0
1990 (11. 1)	43,390	73	32,290	74.4	40.1
1995 (11. 1)	44,554	73	34,992	78.5	16.1
2000 (11. 1)	45,985	79	36,642	79.7	9.2

주: 1)\* 추정인구; 2) 이 표에서 외국인인은 제외되었음.

자료: <표 2-1>: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보고서).

21개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인구학자들은 도시로 이동해온 자와 도시 원래 거주자의 출산력 수준의 차이에 대하여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뒤에 남는 사람들보다 출산력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Goldstein and Tirasawat, 1977). 일제하의 농촌-도시 인구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농촌지역의 인구를 대규모로 전출시킴으로서 인구압력을 상당수준 완화시키고 출산력 저하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4〉는 도시인구와 도시 수의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도시화의 빠른 진행이 출산력변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입증되었다(Kwon et al., 1975; Park, 1978; Cho et al., 1982). 한국전쟁이 끝난 후 약 20여 년 간, 인구증가율과 도시인구증가율은 역의 관계(negative relationship)를 보여왔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전후의 '베이비 붐' 기간동안 도시화율이 둔화되었다는 사실이다(D.S. Kim, 1987; Kwon, 1990). 이는 농촌 인구가 전통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도시로 이주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출산력을 낮추게 된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인구이동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시키거나 조장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 이동자들은 변화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이동과정에서 저출산지향의 규범,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재정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이동과 출산력 변화를 연결하는 고리중의 하나는 친족 중심 지배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Goldscheider, 1981). 인구이동이 친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약화시키고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변화시키게 되면, 출산력 저하에 필요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인구변천에서 인구이동의 역할은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대체과정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구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반응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동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이동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 IV. 세계 속의 한국인구

세계 여러 지역의 문명발달과 공업화가 시점과 형태를 달리하면서 이루어져 온 바와 같이, 인구의 성장과 구조도 지역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선진사회와 후진사회는 인구변천과정, 현재의 성장속도, 앞으로 기대되는 인구문제의 성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또한 후진지역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인구과정이 관찰된다. 따라서 한국인구가 지닌 주요 특징들을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한국인구의 성장과 변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 2-5>에는 한국인구의 규모, 구조와 성장에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이 세계 및 선진국, 후진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제시되어 있다.

지구상의 인구분포는 극심한 편중현상을 나타낸다. 현재 세계인구의 60%가 11개국에 속해있다. 인구 1억이 넘는 나라는 2001년 현재 모두 11개국으로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나이지리아, 멕시코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독일, 베트남, 필리핀, 이란, 이집트, 터키, 이디오피아, 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콩고로

<표 2-5> 세계 속의 한국인구, 2000

인구지표	세계	선진국	후진국	한국
인구(백만명)	6,057	1,191	4,865	47
인구밀도(명/km <sup>2</sup> )	45	23	59	472
도시인구비율(%)	47.0	76.0	39.9	81.9
중위연령	26.5	37.4	24.3	31.8
부양인구비	58.4	48.3	61.1	38.7
고령화지수	23.1	78.2	15.5	35.0
1995~2000 인구증가율(%)	13.5	3.0	16.2	7.8
1995~2000 합계출산율	2.82	1.57	3.10	1.51
1995~2000 평균수명	65.0	74.9	62.9	74.3

주: 1) 부양인구비 =  $\frac{[(0\sim 14\text{세 인구}) + (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2) 고령화지수 =  $\frac{(65\text{세 이상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자료: UN(2001).

구성되어 있다(UN, 2001).

한국의 총인구규모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4,700.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93개 국가 중에서 26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30개 OECD국가 중에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 터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아홉 번째로 인구가 많다(통계청, 2001c). <표 2-5>를 보면, 2000년 현재 한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0.77%, 그리고 후진국인구의 0.96%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인구밀도는 2000년 현재 1km<sup>2</sup>당 45명으로 집계되었다. 후진국의 평균 인구밀도는 1km<sup>2</sup>당 5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선진국의 2.5배 수준에 해당된다.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지역은 유럽(러시아 제외)과 아시아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1km<sup>2</sup>당 인구가 거의 100명에 가깝게 밀집되어 살고 있다. 반면 대양주에서는 1km<sup>2</sup>당 인구수는 2명 정도에 불과하다. 기타 지역에서는 1km<sup>2</sup>당 10~2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권태환·김두섭, 2002: 214).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인구가 가장 조밀하게 거주하는 지역이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2000년 현재 472명/km<sup>2</sup>으로, 도시국가와 소규모 섬국가를 제외하고는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 2-5>를 보면, 세계 도시인구의 비율은 2000년 현재 47.0%로 높아졌으며, 선진국과 후진국의 도시인구비율은 각각 76.0%와 39.9%로 집계되었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 도시인구비율의 절대적인 차이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지역적인 차이도 여전하다. 북미, 중남미, 유럽, 대양주가 70~77% 사이의 높은 도시인구비율을 보이는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아직도 60%가 넘는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권태환·김두섭, 2002: 232-233). 한마디로 현재 세계적으로 도시화의 정도는 지역의 발전 정도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크게 이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래 급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2000년에는 도시인구의 구성비율이 81.9%에 이르렀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 도시인구비율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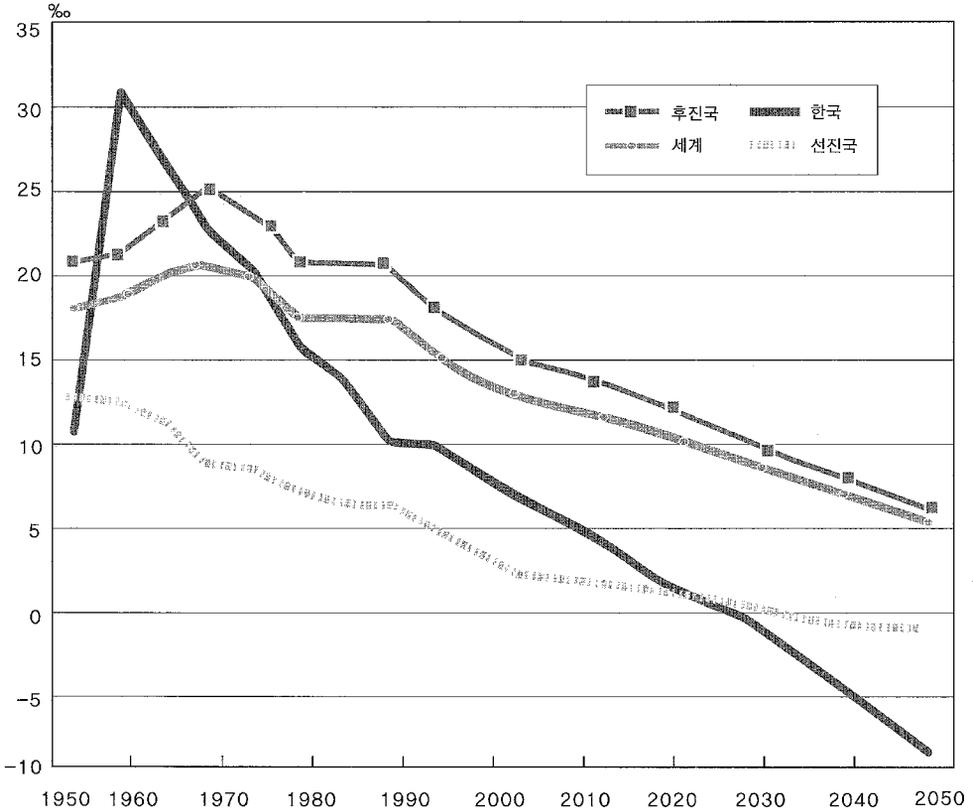
중위연령은 주어진 사회의 근대화의 정도, 인구변천의 단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도구로 흔히 활용된다. 일반적

으로 중위연령이 25세 이하인 인구를 '어린 인구', 그리고 30세 이상의 인구를 '나이 든 인구' 라고 부른다. 대체로 어린 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사회에서, 그리고 나이 든 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사회에서 주로 발견된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는 2000년 현재 약 13.1세의 중위연령의 차이가 관찰된다. 한국인구의 중위연령은 31.8세로 후진국의 평균값보다는 7.5세 높으나,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는 5.6세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양인구비는 실제 경제활동에의 참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구의 연령구성상 노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한 연령의 피부양인구를 노동가능연령 인구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표 2-5>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의 부양인구비는 48.3으로 후진국의 61.1보다 월등히 낮다. 한국의 부양인구비는 2000년 현재 38.7로 선진국의 그것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대체로 소년피부양인구와 전체 피부양인구의 구성비율은 선진국에서 낮은 반면, 후진국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노년피부양인구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한국 등 일부 신흥공업국의 경우에는 출산력 및 사망력의 급속한 저하로 인하여 과도기적으로 소년 및 노년피부양인구의 구성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이르러 선진국형 인구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현재 고령화된 사회는 북유럽, 일본,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 선진사회가 주를 이룬다.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 북유럽과 일본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5~19%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인구의 연령구조가 젊은 지역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경제적으로 후진사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1960년대이래 출생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결과, 인구피라미드가 고령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포탄형의 연령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은 1999년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한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불과 7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

〈그림 2-4〉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추세, 1950~2050



주: 2000~2050년 기간 한국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였고, 나머지 인구증가율들은 UN의 추정값임.  
 자료: UN(2001); 통계청(2001c).

인구의 구성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1c). 그러나 <표 2-5>에 제시된 고령화지수로 판단할 때, 한국인구의 연령 구조는 2000년 현재 아직도 후진국형에 가까우며, 약 2020년이 되어야 선진국형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에는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추세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은 1950년대 후반의 '베이비 붐'으로 기록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경험하였으나, 1960년대 초반부터 인구증가율의 매우 급격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모든 지역에서 1970년 이후 인구증가의 속도가 감소하지만 그 감소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표 2-5>에서 세계인구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95~2000년의 기간에 13.5%로 추산되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 인구증가속도의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후진국에서의 전반적인 인구성장률은 1970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그 후 이들 사회에서 피임법이 널리 보급되고 인구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점진적인 감소를 보인다. 그러나 1995~2000년 기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6.2%로 선진국의 5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7.8%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후진국 인구증가율의 절반에도 미달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림 2-4>를 보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앞으로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여 202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세계인구의 추세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출산력의 변동과 그 추세이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2000년 사이의 세계인구의 합계출산율은 2.82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다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하면 합계출산율은 각각 1.57과 3.10으로 계산된다. 선진사회에서는 1960~1975년 사이에 출생수준의 현저한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체수준을 밑돌게 된다. 반면 후진사회의 경우 출산률의 저하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저하를 보이는 곳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2000년에는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95~2000년의 기간에 1.51로 집계되어, 선진국의 평균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출생시 기대여명)은 195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에 46.5세에서 65.0세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후진국에서의 빠른 사망수준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사망률은 아직 평균수명 12세에 해당하는 큰 차이가 난다. <표 2-5>에 제시된 것처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평균수명은 1995~2000년의 기간에 각각 74.9세와 62.9세로 추정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급격한 사망수준의 저하를 보이는 곳은 동아시아 지역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의 평균수명이 거의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95~2000년 기간에 74.3세로 추정되어 선진국의 그것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록 그 저하속도는 점점 떨어지지만,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망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최근 동구권에서는 사망률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진지역에 비해 후진지역의 출산력 수준과 인구증가율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선진지역의 인구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의 낮은 출산력 수준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많은 선진국에서 절대 인구 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표 2-6>에서 선진국 인구의 구성비율은 1950년에 32.3%이었으나, 2000년에는 19.7%로 낮아졌으며, 2050년에는 12.7%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세기 중엽에 이르면 93억 세계인구의 거의 9할에 해당하는 81억 명의 인구가 후진지역에서 살게되는 셈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인구는 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2020년대 초중반부터 절대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2050년에 4,433.7만

〈표 2-6〉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추세, 1950~2050

(단위: 백만명, %)

지역	1950	1975	2000	2025	2050
세계	2,519 (100.0)	4,066 (100.0)	6,057 (100.0)	7,937 (100.0)	9,322 (100.0)
선진국	814 (32.3)	1,048 (25.8)	1,191 (19.7)	1,219 (15.4)	1,181 (12.7)
후진국	1,706 (67.7)	3,017 (74.2)	4,865 (80.3)	6,718 (84.6)	8,141 (87.3)
한국	20.4 (0.81)	35.3 (0.87)	47.0 (0.78)	50.7 (0.64)	44.3 (0.48)

주: 2000~2050년의 한국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였고, 나머지는 UN의 인구자료임.  
자료: UN(2001); 통계청(2001c).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01c). 한국의 출산력 수준과 인구증가율이 세계의 평균수준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세계인구에서 한국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1995년에 25위이던 인구규모에 따른 순위는 2000년에 26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는 적어도 금세기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에 0.87%이던 한국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50년에는 0.4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V. 맺는 말

한국의 인구변천은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관찰된 일반화된 형태를 반복하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지난 20세기에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거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망률은 191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한국전쟁기간의 높은 사망률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저하를 이룩하였다. 한편, 한국인구가 사망률의 점진적인 저하와 함께 초기변천기(1910~1945년)로 돌입하면서 1910~1920년경에는 출산력도 전통적인 형태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지난 후이다. 즉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출산력이 매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출산력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변화는 피임의 실천과 인공유산, 그리고 혼인연령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출산력변천이 시작된 1960년대 초에 우리 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도시산업부문의 팽창은, 미시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녀의 경제적 효용성을 떨어뜨렸다. 이와 함께 가족구조가 핵가족 중심으로 전환되고 태도 및 가치관의 서구화가 진행되어, 젊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통제가 느슨해지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계획사업의 결정적인 역할로 우리 나라의 출산력은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저하를 경험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의 효과 면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거의 획일적으로 출산력이 떨어졌다. 이는 가족계획사업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시행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망력의 저하가 출산력의 저하에 선행하여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양자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 나라의 사망력 저하는 출산력 수준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망력과 출산력이 연관된다면 이는 매우 미약하고 간접적이거나 의사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이동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는 이동의 형태나 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인구학적인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초기변천기에 사망력의 저하에 따라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심화되었을 때, 해외로의 대규모 이주는 인구성장을 둔화시키고 출산력의 본격적인 저하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에 인구의 국제이동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우리 나라 인구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초기변천기(1910~1945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지역의 인구압력을 경감시키고 출산력 저하의 본격적인 시작을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후기변천기(1960~1985년)의 대규모 농촌-도시 인구이동은 출산력 저하에 필요한 여건을 성숙시키고 인구변천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적할 것은, 저출산력에 이르는 인구변천의 형태에 관한 한 일반화된 법칙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라에 따라 인구변천의 경로와 전개과정은 매우 다양하기 마련이며, 결정요인에 있어서도 유사성과 아울러 상이성이 광범하게 발견된다. 결국, 한국인들은 Davis의 인구변화와 반응이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의 성장 속도가 높아지자 우선 국내의 이동이나 결혼의 지연, 인공유산 등의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 같은 선택의 여지가 고갈되면서 비로소 혼인출산력이 급격히 저하하였다.

이 장에서는 우리 나라 인구변천의 추세와 저출산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나라의 출산력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모든 사람의 예측을 벗어나 매우 괄목할 만한 감소를 보인다.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한국 사회가 인구변천을 마치고 곧 새로운 인구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출산력은 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으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출산력이 더욱 감소할 것인가, 또는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에 관해서 전문가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는 약 20년 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력의 급속한 저하로 인한 절대인구의 감소는 사회 여러 부문에서 긴장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우선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상태가 초래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인구성장억제정책의 폐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교육비와 경쟁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출산억제를 통해 생활의 경쟁력을 유지하던 젊은 부부들이 갑자기 자녀수를 늘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 나라의 출산수준이 낮게 지속되고 이에 따라 인구가 가까운 장래에 감소추세로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 제3장 출산력

전 광 희

### I. 머리말

이 장의 목적은 한국의 출산력 변천의 추이와 전망을 개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출산력 변천을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그것에 개입하는 중간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 (2)출생성비 불균형과 차별출산력의 문제를 검토하며, (3)최근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이 21세기의 전반부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55~1960년 최고 6.3명에서 급격히 저하하여 2001년에는 1.30명으로 대체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통계청, 2002j; 권태환·김두섭, 2002). 합계출산율은 1985년 이후, 구미 선진국의 평균인 1.6명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주는 충격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곧, 현재의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총출생아수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한국과 홍콩·싱가포르의 두 도시국가는 출산력 변천을 시작하였다. 중국은 10년 후, 정부가 ‘한 가정 한 자녀 낳기’ 운동에 착수하면서 출산력 변천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1980년 중반에는 고출산에서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으로 전환하면서 출산력 변천을 완료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역의 출산력 변천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출산력 변천은

저발전 상태의 농업사회나 신흥공업국의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유교와 불교의 현실적 자녀관은 빠른 템포의 출산력 변천을 지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출산력 변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났던 경제성장이나 사회변동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경제가 농업위주의 전통사회에서 근대적 도시기반의 제조업, 서비스 사회로 이행하면서 국민 1인당 실질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기아선상의 절대빈곤은 사실상 사라졌다. 또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사회변동이 일어났다. 대중교육의 확산과 이로 인한 여성들의 문자해독과 사회 참여는 증대하였다. 어찌면, 20세기 후반 한국의 출산혁명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려지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Bloom and Williamson, 1997; Williamson, 1998).

한국의 출산력 변천에 정부의 인구정책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권태환·김두섭, 2002: 353-358). 한국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착수한 근본적 동기는 급격한 인구성장과 과다한 청소년 인구부양비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라는 생각이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해당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1990년 후반, 30여 년 만에 유명무실해진 출산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노인인구의 증가나 출생성비의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출산력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된 것은 출산율이 1995년 말 이후 구미 선진국 수준인 1.3~1.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겨나는 저출산 풍토의 부정적 영향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한국의 출산력 변천의 추이와 전망을 개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력 변천의 추이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장래 출산율을 예측하는 작업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예컨대 출산력 수준을 확인하는 작업은 기계적일 수 있지만, 1960년대 이후 출산력 변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근 대체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찾아내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출산력 변천에 개입하는 중간 변수의 기여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 장의 끝 부분에서 출산촉진요인과 출산억제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봉가르츠의 모형을 바탕으로, 제1단계의 출산력



다. 어쩌면, 자녀수를 제한하기 위한 부부들의 성활동에서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인구압력에 대한 반응은 출산억제가 아니라 농민의 대량이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더욱 부채질한 것이 일제의 농민수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농촌탈출은 도시인구 비율의 증가나 젊은 남녀의 결혼연령의 상승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부터 1960년까지의 혼란기에는 민족분단, 한국전쟁, 4·19혁명 등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에 선행하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당시 합계출산율은 6.3명으로 이 기간에 일어났던 정치혼란, 사회불안, 경제의 황폐화에도 아랑곳없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 때에 인구성장을 부채질한 것은 일본과 만주에서 송환자가 대량 유입되었던 것과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1950~1953) 기간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민이 대량 이동한 것을 들 수 있겠다. 전후 1955~1960년의 5년 동안, 한국에서는 ‘베이비 붐’이 일어나면서 출산율이 상승하고, 근대의약 특히 항생제의 신속한 보급으로 사망률의 극적 감소를 경험하면서 인구성장은 빨라지고 생활자원에 대한 인구압력은 가중되었다.

한국에서 한국전쟁 직후, 구미 선진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경험했던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이것은 당시 정상적 인구체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보다 약 10%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베이비 붐은 1959년에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전쟁 중 자녀손실을 보상하는 수준 이상의 것이 되었다. 한국의 베이비 붐은 구미 선진국과 달리, ‘위험한’ 인공유산물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근대적 출산억제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환언하면, 한국전쟁 후 베이비 붐은 자녀의 총수나 터울을 조절하는 의도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쟁 중에 흩어진 부부의 재결합이나 전후의 결혼행진 등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 (Kwon, 1977; Cho et al., 1982).

## 2.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시작하는 시기는 1960년대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합계출산율은 1960~1965년의 6.0명에서 1975년의 3.5명을 거쳐서, 1985

〈표 3-1〉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특수 출산율

출생연도	합계출산율 (TFR)	연령별 특수 출산율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25~1930	6.44	189	324	269	214	153	75	14
1930~1935	6.13	173	321	270	216	155	77	14
1935~1940	6.22	158	323	281	226	161	80	15
1940~1945	6.08	128	313	286	228	164	81	15
1945~1950	5.96	96	305	292	234	167	83	15
1950~1955	5.60	45	289	287	233	168	83	15
1955~1960	6.30	38	308	335	270	194	96	18
1960~1965	5.99	20	255	351	274	189	92	17
1965~1970	4.64	12	180	309	223	134	59	10
1970~1975	3.96	10	146	301	220	88	19	7
1975~1980	3.00	13	152	253	122	38	17	5
1980~1985	2.38	11	160	216	72	15	2	0
1985~1990	1.62	4	103	168	39	6	3	0
1990~1995	1.64	4	74	177	58	12	2	0
1995~2000	1.55	3	56	159	72	15	5	0

주: 1970년 이후의 통계청 자료의 연률의 5년 이동평균을 구하여 해당 5년 기간의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을 계산함.

자료: 권태환·김두섭(2002); Kwon and Jun(1999); 1970년 이후의 자료는 통계청(2002j).

년에는 1.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통계청, 2002j; 권태환·김두섭, 2002). 당시 사망률보다 출생률의 감소 속도가 훨씬 더 괄목할 만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인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다.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960~1975년의 15년 동안, 출산력 저하는 근대화나 산업화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 인구가 새로운 사회 경제적 여건에 적응하면서 일어났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출산력 감소와 대규모의 이농향도는 새로운 긴급 사태, 특히 사망률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과잉인구의 토지압력, 기아선상의 빈곤과 실업상태의 만연에 대한 인구학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62년 출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 가족계획사업에 착수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후반부에는

4.6명으로 낮아졌다. 1966년에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부부들이 백말띠의 해에 자녀출산을 기피하려는 경향 때문이었다. 도시에서는 '원치 않은' 출산을 피하기 위한 인공유산이 만연하였으며, 1960년대 초반부터 피임약이 시장채널을 통하여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농촌에서도 가족계획사업이 효과적으로 전개되는 196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는 4.5명으로 출산율 감소의 속도가 둔화되지만, 197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3.5명에 이르고 출산력 저하의 또 하나의 모멘트가 형성되면서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후반부에 진입하였다.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후반부는 1975년부터 중화학 공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근대화, 도시화, 이농향도, 경제성장의 현대사와 일치하며,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전반부와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한마디로, 한국의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은 구미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는 달리, 극단적 빈곤상태와 과잉인구의 압력에서 시작하여 급속도의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속적인 진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후반부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상자녀수, 희망자녀수, 출산규제, 자녀가치 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출산활동에 '혁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이것은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전반부인 1960~1975년의 15년 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1975년 전에는 부부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가족규범에 의하여 이미 사회화되었으며, 결혼 전에 자녀출산을 피임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면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영·유아 사망률이 1970~1975년에 각각 55%과 6%의 수준으로 개선되고 생존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빈곤과 실업, 대가족 부양의 어려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가족계획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따라 1965년 이후 결혼한 부부들의 코호트는 1975년 이후 자발적으로 출산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후반부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출산력 변천의 넓은 시각에서 볼 때, 1975년부터 '이상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의 실현이라는 근대적인 의미의 출산활동이 젊은

부부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1980년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소가족 규범이나 태도를 학습하면서 자라온 최근 결혼 코호트의 행태적 적응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Kwon, 1992; 권태환, 1997).

### 3. 제2단계 출산력 변천의 시대

지난 1980년대 후반, 정확히 1983년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이다. 이것은 1980년대 당시 대부분의 인구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80~1985년의 2.38명에서 2000년의 1.47명으로 0.91명이 줄어들었다. 현재 관찰되고 있는 저출산으로의 이행과정은 한국의 1980년대의 정치적 민주화 투쟁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무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대의 6.0명 수준을 넘어서는 고출산의 상태에서 3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대체수준 이하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로 이행하는 출산력 변천은 세계역사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선호사상은 한국처럼,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출산력의 지속적 감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흔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높은 피임 효율성과 인공유산이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별·출생순위별로 나타나는 차별적 자녀선호사상은 한국의 출산력 저하를 오히려 가속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권태환, 1997; 김태현, 1990, 1993, 1997a; 김두섭, 1997).

영·유아 사망률이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녀 대체를 위한 ‘보험형’ 출산은 억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는 한국인 전체의 사망률 수준이 빠른 속도로 구미 선진산업사회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으로서, 1960년대 전반부터 근대화 및 경제발전과 아울러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국민개보험

(國民皆保險)이 실시되는 해인 1988년의 평균수명은 1960년대 전반보다 6.7세가 신장되었다. 즉 평균수명은 1960~1965년대의 52.1세에서 1985~1990년대의 68.8세로 증가하였으며, 1995~2000년 현재 평균수명은 75.6세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2j).

한국의 제2단계 출산력 변천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나친 과열경쟁, 고도 대중소비사회의 도래, 그리고 여성들의 자녀양육과 취업의 갈등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서 많은 응답자들은 실제 출산자녀수가 이상자녀수보다 적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가장 흔한 대답들은 (1) “자녀의 비용이 너무 크다”; (2)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 (3)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너무나 큰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가중한다”; 그리고 (4) “현재의 주택이나 아파트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희망자녀수 또는 기대가족수를 모두 낳아서 키울 수 없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답들은 대학 입학에 관련된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응답내용은 저출산 또는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의 이유로서 한국 사회에 만연된 치열한 생존경쟁을 열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출산력 저하를 더욱 더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대량소비사회의 도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주요특성은 인종, 종교, 언어 등의 동질성이다.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당신은 어떤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 60%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은 1980년대 이후, 1997년 금융위기에서 불구하고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통계청, 2002j). 좁은 국토와 언어, 계층, 취향, 생활양식 등의 동질성에 서구중심적 대중소비문화가 유입되어 대부분의 가정에 텔레비전이 있고, 각 가정에 소비재 재화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웃의 가정들이나 회사의 동료사원들은 중간계층의 준거집단(準據集團)으로 기여한다. 한국의 부부들은 무수한 생활상의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그것은 중산층의 생활이나 신분 또는 위신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자녀 규범은 한국사회에서 모든 가정의 규범이 되었다. 두 자녀 이상을 키운다는 것은 완전히 시대의 구

습이 되었으며, 두 자녀 이상이 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최근에 유지되고 있는 저출산 수준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저출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떤 여성학자는 이러한 출산력 감소 현상을 남성적인 사회적 관행에 대한 ‘여성의 복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성의 복수는 어쩌면 동북아시아의 반남성주의(反男性主義)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 여성들의 교육과 고용 수준의 향상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킹슬리 데이비스(Kingsley Davis)의 ‘20세기의 가장 조용한 혁명’이라는 표현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은 구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그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높아져 2000년 현재 남성의 해당 진학률과 거의 동일한 상태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통계청, 2002j).

### Ⅲ. 출산력 변천의 메카니즘

#### 1. 출산력 변천의 중간변수

〈표 3-1〉은 1960년대 이후 출산력 변천의 과정에서 5세 간격의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예외 없이 출산력이 저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연령은 15~24세와 35세 이상이다. 여성들의 결혼연기, 곧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산지연은 젊은 연령층의 출산력 감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35세 이상 여성들의 출산 감소는 ‘원치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출산규제를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출산력 수준은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1960~1985)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1985~2000)에서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약간 오르락내리락하였다. 정부가 1962년 대규모의 가족계획

〈표 3-2〉 합계출산율 변화의 구성요소, 1955~2000

구성요소	연도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합계출산율 변화율 (%)		5.6	-16.8	-17.6	-13.4	-24.6	-25.7	-18.3	1.2	-5.4
(a) 혼인상태별 구성		-3.9	-6.3	-3.7	-3.5	-5.6	-6.4	-6.5	-5.8	-9.9
결혼연령		-6.9	-7.6	-3.4	-3.7	-4.9	-6.7	-7.9	-5.6	-9.6
이혼·사별		3.0	1.3	0.5	0.2	0.7	0.3	1.4	-0.2	-0.3
(b)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9.5	-10.5	-14.1	-9.9	-19.1	-19.3	-11.8	7.0	4.5
피임		-	-1.7	-9.5	-5.9	-23.0	-23.9	-13.4	-5.3	-7.4
인공유산		-3.1	-5.1	-4.6	-4.0	3.9	4.6	1.6	12.3	11.9
기타		11.0	-3.8	-	-	-	-	-	-	-

주: 분해의 방법은 Kwon(1992)과 전광희(1997)를 참조할 것.

사업을 시작할 때, 합계출산율은 6.0명 수준이었으나, 1983에 처음으로 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다. 그 후 1987년에는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1.6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99년의 1.42명과 2000년의 1.47명에서 2001년에는 1.30명으로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이 더욱 더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구미 선진국의 평균치를 밑도는 것이라는 점에서, 20세기 후반에 전개된 한국 정부의 가족계획사업과 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혼인연령, 피임, 인공유산 등 출산력의 중간변수에 영향을 주면서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유산과 불임수술 등 근대적 피임법은 원치 않거나, 예기치 않는 또는 시의에 맞지 않은 출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선택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Bongaarts and Potter, 1983).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 초반 이후 효과적인 피임법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혼연령, 인공유산, 피임은 1960년대 이후 출산력 변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중간변수들이었다. 환언하면, 사회경제발전, 산업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은 1960~2000년의 지난 40년 동안 중간변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유도하였다.

〈표 3-2〉는 1960~2000년의 지난 40년 동안 출산력 변천의 과정에서 합계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 중간변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제1단계의 출산력 변

천이 일어났던 1960~1985년의 25년 동안에는 혼인연령, 인공유산, 피임 등이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을 5년 간격으로 보면, 혼인연령과 인공유산의 증가가 1960~1965년에는 출산력 변천을 주도하였으며, 피임과 인공유산은 1965~1970년에 출산력 감소를 주도하는 두 핵심변수였다.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에서는 이들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불임수술을 포함한 피임실천의 효과가 1975~1980년과 1980~1985년의 두 기간에는 더욱 더 괄목할 만한 것이었으며, 1990~2000년의 10년 동안 혼인연령의 상승이 아울러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에서 합계출산율을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 상태로 유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인공유산의 출산억제 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유배우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2. 중간변수의 검토

### 1) 유배우율의 변화

평균초혼연령(SMAM)은 1960년의 21.5세에서 2000년의 26.5세로 지난 40년 동안 5.0세나 상승하였다. 물론, 1980년대 후반 초혼연령의 상승속도는 약간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의 종점(終點)이 어디가 될 것인가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장의 끝 부분에서, 우리는 초혼연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이 특정기간에 관찰되는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평균초혼연령의 상승은 20대 초반과 후반의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20~24세의 경우는 유배우율이 1960년의 59.1%에서 2000년의 10.7%로 무려 48%나 감소하였다. 한편, 25~29세의 경우는 유배우율이 1960년의 93.1%에서 2000년의 59.1%로 34%나 감소하였지만, 30~34세의 경우는 유배우율이 1960년대의 91.7%에서 1970년과 1975년에 94.5%로 정점에 있다가, 최근에 이르러 87.0%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 증대 등 근대화나 산업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표 3-3〉 연령별 유배우 여성의 비율, 1960~2000

연령 \ 연도	1960	1966	1970	1975년	1980	1985	1990	1995	2000
15~19	0.070	0.038	0.028	0.026	0.017	0.009	0.005	0.008	0.007
20~24	0.648	0.477	0.423	0.372	0.337	0.281	0.195	0.167	0.107
25~29	0.931	0.898	0.884	0.868	0.849	0.818	0.773	0.699	0.591
30~34	0.917	0.939	0.946	0.944	0.943	0.931	0.924	0.914	0.869
35~39	0.882	0.892	0.920	0.932	0.934	0.935	0.928	0.922	0.907
40~44	0.821	0.827	0.848	0.882	0.869	0.884	0.903	0.900	0.889
45~49	0.760	0.760	0.769	0.791	0.867	0.882	0.861	0.864	0.861
초혼연령(SMAM)	21.5	22.9	23.3	23.7	24.1	24.7	24.8	25.4	26.5

자료: 해당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권태환·김두섭(2002: 306, 308-309).

변동이 가져온 혼인연령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초혼연령의 상승은 혼전 성활동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원치 않은 임신’을 가져온다면, 피임이나 인공유산 등을 통한 의도적인 출산규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혼여성들의 점증하는 혼전 성활동은 결혼변수와 피임·인공유산 등 유배우 출산율을 억제하는 중간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다(Kwon et al., 1997).

여성들의 유배우율은 30대 후반부터 약간씩 증가하여 왔다. 예컨대 1960년에서 1990년까지 35~39세는 88.2%에서 92.8%로, 40~44세는 82.1%에서 90.3%로, 45~49세는 76.0%에서 86.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2000년의 10년 동안 30대 후반의 여성들의 유배우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별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배우율이 약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근대화, 경제성장,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평균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지만, 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가족개념의 다양성이 논의되고 생애미혼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도 남녀 모두 여전히 1~2%에 머물고 있어서, 그 숫자는 구미 선진국의 6~15%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Kwon, 1992).

젊은 세대의 미혼율의 점진적 상승은 생애미혼율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전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평생 결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대단히 적고, 최근에도 생애독신의 지향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모두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보편혼(普遍婚)의 관행이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표 3-4〉의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은 〈표 3-1〉의 연령별 출산율과 비교할 때, 30대 미만에서는 큰 차이를 이루고 있지만, 30대 이상에서는 연령별 출산율과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30대 이상의 여성 유배우율이 90% 이상으로, 그 기준이 되는 대상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유배우 여성만을 기준으로 한 유배우 출산율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유배우 상태가 아닌 여성을 제외한 상태에서 출산행태를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여성들의 출산행태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4〉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1960~2000

(단위: %)

연령 \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4	442	456	456	478	404	423	426	377	364
25~29	368	367	363	304	286	194	219	253	255
30~34	297	265	218	154	121	44	55	76	97
35~39	217	181	113	62	43	10	10	16	19
40~44	114	91	47	24	17	2	2	3	3
45~49	23	18	17	6	7	1	0	0	0
합계 유배우 출산율 (TMFR)	7.27	6.88	6.07	5.14	4.39	3.37	3.56	3.63	3.69

주: 〈표 3-1〉의 연령별 출산율을 〈표 3-4〉의 연령별 유배우율로 나누어 유배우 출산율을 계산하였음.

〈표 3-4〉에서 20~49세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은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시작인 1960년의 7.3명에서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의 시작인 1985년에는 3.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1985~2000년의 15년 동안 3.60명을 기준으로 0.1명 정도 약간 밑돌거나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배우 출산율은 낮은 연령층일수록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결혼의 시작과 더불어 낳고 싶은 ‘희망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를 실제로 관찰 가능한 출산력의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단산과 함께 피임이나 인공유산 등을 통하여 출산억제를 실현하는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20~24세는 1960년의 442%에서 1975년에는 478%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율은 2000년에 364%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25~29세, 30~34세, 35~39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5~29세의 경우, 1960년의 368%에서 1985년의 19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255%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또 30~34세의 경우도 1960년의 297%에서 1985년의 44%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97%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35~39세의 경우, 1960년의 217%에서 1985년 10%으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19%으로 약간 올라가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20~24세와 25~29세의 유배우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시작된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과정에서 출산 수준만이 아니라 출산 속도를 조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혼연령의 상승과 관련하여 실제로 개인 여성들의 혼전임신이 어느 정도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있는가, 그리고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이 여성들의 출산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기간합계출산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 Ⅳ.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차별출산력

### 1. 출생성비의 불균형

출생성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생물학적 차원과 사회학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생물학적 차원은 태아기 성별 차별사망력이 남자가 여자보다 약 12%나 높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사회학적 차원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태아의 성감별이 가능해지고, ‘이상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로 표현되는 소자녀 규범이 보편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성선호의 자녀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초음파, 양수, 융모막 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가 남아가 아닐 경우 인공유산을 통하여 출산을 규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완료되는 1980년대의 전반부는 일반적으로 0~4세의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약 105~108명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의 연도별 차이는 미미했다. 그러나,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일어나던 1985~2000년의 기간 동안 0~4세의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10~116명으로 나타났다(김두섭, 1997).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성비의 원인을 강한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 조작에서 찾고, 그 결과로 일어날 장래 결혼시장의 혼란을 사회문제로 지적하면서, 남아선호사상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성감별에 의한 인공유산의 규제를 서둘러 왔다(김태현, 1993, 1997; Park and Cho, 1995; 김두섭, 1997).

〈표 3-5〉의 출생순위별 성비를 살펴보면, 셋째 이상 출생아의 성비가 첫째나 둘째의 출생성비보다 훨씬 높다. 한편, 전체 유배우 여성 가운데 세 자녀 이상 출산은 대체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던 1985년 이후 감소하여 2000년에 10% 미만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전체 출생성비에 대한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자연출생성비로부터의 이탈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해당 세대들의 사회화 과정에 수반되는 문제점 외에, 한국사회의 결혼제도, 가족제도, 여성의 지위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97년 이후 첫째와 둘째의 출생성비는 약간씩 정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기존 문헌이 지적하는 21세기 전반부의 결혼시장 혼란도 자연출생성비로부터의 이탈보다는 여성들의 결혼기피 현상과

〈표 3-5〉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1985~2000

연도	출생성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1985	109.5	106.0	107.8	129.0	146.8
1986	111.7	107.3	111.2	129.0	149.8
1987	108.8	104.1	109.1	138.5	148.0
1988	113.3	107.2	113.2	134.7	182.0
1989	111.7	104.1	112.5	164.5	198.0
1990	116.5	108.5	117.0	188.9	209.3
1991	112.4	105.7	112.5	179.8	194.6
1992	113.6	106.2	112.5	192.0	213.1
1993	115.3	108.5	117.0	189.2	235.8
1994	115.2	106.5	114.7	202.6	224.9
1995	113.2	105.8	111.7	177.5	204.3
1996	111.6	105.3	109.8	164.2	185.1
1997	108.2	105.1	106.3	133.6	153.9
1998	110.1	106.0	108.1	145.0	153.5
1999	109.6	105.6	107.6	142.1	154.7
2000	110.2	106.2	107.4	141.7	154.9

자료: 통계청(2002), 동태통계보고서(KOSIS) 해당 연도 참조.

아울러 결혼 적령기에 있는 상당수의 여성들 중에서 유흥업소, 특히 향락산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Kwon et al., 1997).

최근, 특히 1997년 이후 정부의 계몽활동 및 관련법의 강화는 출생성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남아를 선호하는 여성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출산을 원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자연출생성비의 복원에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지만, 남아선호가 이상자녀수를 넘어서는 '원치 않은' 출산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현재의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성선별에 의한 인공유산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성감별을 통하여 선별출산을 계속한다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계층별 출산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그 정도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인구구조의 불안정성은 물론 계층간 빈부격차 등 인구자질의 문제가 사회정책적 관심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차별출산력

### 1) 거주지와 출산율

지난 40년 동안, 한국은 농업위주의 전통사회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60~1980년의 20년 동안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향도는 한국의 출산력 변천을 가져오는 기관차의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화와 이농향도는 출산력 감소에 별다른 중요성을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Jun, 1987, 1999).

〈표 3-6〉을 보면, 1970~2000년의 30년 동안 ‘면부’의 농촌여성은 ‘읍부’의 도시여성보다 자녀수가 많으며, ‘읍부’의 도시여성은 ‘시부’의 도시여성보다 자녀수가 많았다. 예컨대, 2000년에도, 자녀수를 시읍면부 별로 살펴보면 15~55세의 평균 출생아수는 각각 1.25명, 1.53명, 1.7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을 종료했거나 종료할 준비를 하고 있는 40~44, 45~49, 50~54세의 여성에게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40~44세의 경우, 시읍면부 별로 살펴볼 때 각각 1.91명, 2.05명, 2.24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산력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표 3-6〉에서 1970년대 15~54세 여성 전체의 연령집단의 출생아수를 100으로 할 때, 15~54세 여성 전체의 출산율이 ‘시부’는 1980년 81, 1990년 67, 2000년 59이고, ‘읍부’는 1980년 79, 1990년 63, 2000년 53으로 나타나며, ‘면부’는 1980년 86, 1990년 65, 2000년 51로 나타난다. 즉 농촌이 도시보다 출산력의 감소 폭이 처음에는 완만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에

〈표 3-6〉 어머니의 현거주지 및 연령별 출생아수, 1970~2000

(지표: 1970=100)

연도	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평균
시부									
1970	0.01	0.34	1.59	3.00	3.91	4.61	5.01	5.17	2.11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26	1.37	2.37	3.02	3.63	4.10	4.56	1.71
	( - )	(76.5)	(86.2)	(79.0)	(77.2)	(78.7)	(81.8)	(88.2)	(81.0)
1990	0.00	0.13	0.95	1.73	2.18	2.63	3.14	3.69	1.42
	( - )	(38.2)	(59.7)	(57.7)	(55.8)	(57.0)	(62.7)	(60.7)	(67.3)
2000	0.00	0.06	0.59	1.47	1.81	1.91	2.16	2.53	1.25
	( - )	(17.6)	(37.1)	(49.0)	(46.3)	(41.4)	(43.1)	(41.8)	(50.2)
읍부									
1970	0.02	0.48	2.01	3.59	4.65	5.40	5.71	5.69	2.85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40	1.67	2.78	3.63	4.38	4.86	5.21	2.25
	( - )	(83.3)	(83.1)	(77.4)	(78.1)	(81.1)	(85.1)	(91.6)	(78.9)
1990	0.00	0.19	1.17	1.94	2.55	3.17	3.77	4.38	1.78
	( - )	(39.6)	(58.2)	(54.0)	(54.8)	(58.7)	(66.0)	(77.0)	(62.5)
2000	0.00	0.13	0.91	1.69	1.94	2.05	2.50	3.07	1.53
	( - )	(27.1)	(45.3)	(47.1)	(41.7)	(38.0)	(43.8)	(54.0)	(53.7)
면부									
1970	0.02	0.58	2.39	3.95	5.03	5.76	6.02	5.92	3.38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45	1.92	3.18	4.12	4.88	5.34	5.63	2.91
	( - )	(77.6)	(80.3)	(80.5)	(81.9)	(84.7)	(88.7)	(95.0)	(86.1)
1990	0.00	0.20	1.27	2.13	2.84	3.48	4.18	4.77	2.20
	( - )	(34.5)	(53.1)	(53.9)	(56.5)	(60.4)	(69.4)	(80.6)	(65.0)
2000	0.01	0.16	0.94	1.74	2.02	2.24	2.73	3.28	1.75
	( - )	(27.6)	(39.3)	(44.1)	(40.2)	(38.9)	(45.4)	(56.5)	(51.8)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출산력 표본자료.

접어들면서 빨라지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34세의 연령층보다는 35~44세의 연령층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도시 여성이 농촌 여성보다 혼인연령이 높지만, 농촌 여성이 도시 여성보다 적극적인

으로 피임이나 인공유산을 통하여 출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적극 추진되면서 1970년대에는 피임실천율이 도시가 농촌보다 높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출산력조사는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거의 소멸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과 도시에서 자녀의 '잠재적 수요'를 보여주는 이상자녀수도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감소하여 왔으며, 지역간 차이는 사실상 소멸한 단계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1997년 출산력조사에 의하면, 1970년대 이상자녀수가 2.8명이었으나 1985년에 2.0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 조금씩 늘어나 1997년에는 2.3명에 이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출산력조사에서 15~54세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8명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큰 변화 없이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읍부'나 '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은 평균 2.0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시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평균 1.7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보다 젊은 연령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자녀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더 적극성을 보이는 고학력층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 여성의 평균 자녀수는 1990년대에 들어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읍부'와 '면부' 여성은 2.1명 수준에서 2.0명으로 약간 저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차별출산력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현거주지의 도시성(都市性)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2000년대에는 1970년대보다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출산력조사에 의하면, 전체부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는 30세 이하의 부인과 35세 이상의 부인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3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0~1명을 이상자녀수라고 응답한 경우가 10~11% 수준이지만,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10% 미만이다. 또한 2명 이하를 이상자녀라고 한 부인이 3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74~80%나 되는 반면, 3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68%대에 이르고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시부’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 연령별 이상자녀수는 다소 흥미롭다. 즉 15~24세의 경우 0~1명을 이상자녀수라고 생각하는 부인이 10%로 고연령층보다 작은 반면, 2명을 이상자녀수라고 응답한 경우가 70%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연령층 부인들 중에서 3명 이상을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시부’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1명 이하를 이상자녀로 보기보다는 2명 이상을 이상자녀로 보는 경향이 고령의 여성들보다 더 강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읍부’ 여성이나 ‘면부’ 여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급격한 도시화는 현 거주지에 있는 여성만이 아니라 이농향도 여성의 출산력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한국의 출산력 변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영역이다. 한국에서 도시생활은 일차 관계나 전통적 가족주의의 소멸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이주자는 농업종사자들의 전통적 환경으로부터 격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자는 비이주자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도시생활에 대한 적응의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회이동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도시생활과의 접촉이 출산력 감소를 지원하지만, 이주자들은 비이주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소자녀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도시에서 찾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출산력을 분석한 전광희(1999; Jun, 1987)에 의하면, 도시이주는 이주자의 출산력 감소를 가져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도시에서의 인공유산과 피임에의 접근가능성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교육과 출산율

교육과 출산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항상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교육수준의 향상은 출산력 감소의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표 3-7>에 보는 것처럼,

〈표 3-7〉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연령별 출생아수, 1970~200

(지표 : 1970=100)

연도	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평균
무학 · 초등학교									
1970	0.02	0.60	2.26	3.73	4.73	5.41	5.70	5.68	3.36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2	0.59	1.97	2.98	3.75	4.43	4.89	5.20	3.00
	( - )	(98.3)	(87.2)	(79.9)	(79.3)	(81.9)	(84.2)	(91.5)	(92.0)
1990	0.00	0.55	1.56	2.18	2.72	3.21	3.78	4.33	2.98
	( - )	(91.7)	(69.0)	(57.7)	(57.5)	(59.3)	(66.3)	(76.2)	(88.7)
2000	0.00	0.43	1.04	1.66	1.96	2.22	2.50	3.01	2.60
	( - )	(71.7)	(46.0)	(49.0)	(49.0)	(41.0)	(45.4)	(53.0)	(77.4)
중 · 고등학교									
1970	0.00	0.27	1.42	2.82	3.68	4.31	4.73	4.98	1.27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0	0.22	1.32	2.31	2.89	3.41	3.82	4.26	1.14
	( - )	(81.5)	(93.0)	(81.9)	(78.5)	(79.1)	(80.8)	(85.5)	(89.8)
1990	0.00	0.14	1.06	1.77	2.19	2.58	3.01	3.45	1.19
	( - )	(51.9)	(84.6)	(57.7)	(59.5)	(59.9)	(63.6)	(69.3)	(93.7)
2000	0.00	0.16	0.87	1.63	1.88	1.94	2.17	2.50	1.38
	( - )	(59.3)	(61.3)	(49.0)	(51.1)	(45.0)	(45.9)	(50.2)	(108.7)
대학교(초급 · 전문대) 이상									
1970	0.00	0.11	1.00	2.21	2.86	3.50	4.00	4.12	1.05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09	0.85	1.94	2.43	2.82	3.03	3.46	1.38
	( - )	(81.8)	(85.0)	(87.8)	(85.0)	(80.6)	(70.5)	(84.0)	(131.4)
1990	0.00	0.05	0.59	1.47	1.87	2.20	2.52	2.82	1.01
	( - )	(45.5)	(59.0)	(66.5)	(65.4)	(62.9)	(55.0)	(68.4)	(96.2)
2000	0.01	0.02	0.37	1.28	1.73	1.77	1.92	2.15	0.80
	( - )	(18.2)	(37.0)	(57.9)	(60.5)	(50.6)	(44.3)	(52.2)	(76.2)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출산력 표본자료.

교육과 출산력과의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농촌이나 도시나 그 관계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총 출생아수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 이상자녀수, 피임실천율, 인공유산 의존도 등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역관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화되거나 역전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출산력 분석, 특히 적생아 기법을 사용하는 분석들은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전반부인 1960~1975년대에 한국에서 출산력 감소가 농촌과 도시에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육과 출산력의 관계가 1960~1975년의 15년 동안에 역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교육수준별 차별출산력이 점차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차별출산력에 관한 전통적 가설과 일치하고 있다. 곧, 출산력 변천의 초기에는 교육수준별 출산율의 차이는 강한 역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격차구조는 자녀를 생산재로 보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소비재로 보는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이행의 결과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들은 먼저 새로운 생활방식을 채택하고, 그들의 출산력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빨리 감소하기 시작한다.

〈표 3-7〉에 의하면, 1970년대 15~54세 여성의 출산율은 무학·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3.36명,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27명, 전문·초급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1.0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 중이던 1970년대에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무학·초등학교 졸업자와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출생아수를 비교해보면, 약 2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도 어머니의 현거주지 변수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젊은 층의 혼인연령 상승과 고연령층의 피임·인공유산율 통한 출산억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교육배경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상당부분은 25세 또는 30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1970~1980년대에 유배우 출산율이 4.4~4.8명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유배우 출산율을 분석하여 보면, 교육수준과 유배우 출산율은 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혼인연령이 높아 결혼생활의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때로는 결혼기간을 통제하는 회귀분석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혼인연령이 높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하여 완결가족수를 늘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표 3-7>에서 교육수준이 낮다고 해서 출생자녀수가 더욱 느린 속도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15~54세 여성 전체 연령집단의 출생아수를 100으로 할 때, 무학·초등학교 학력 여성의 출생아수는 1980년 92, 1990년 89, 2000년 77이고, 중·고등학교 학력의 여성은 1980년 90, 1990년 93, 2000년 108로 나타나며, 대학교(초급·전문대학) 학력의 여성은 1980년 131, 1990년 96, 2000년 76으로 나타난다. 즉 지난 30년 동안 고학력 여성들은 상당부분 출산력 감소의 속도에서 약간의 파국효과(disruption effects)를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35~44세의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출산력 감소의 폭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외에도 교육에 대한 원망(願望), 매스미디어 접촉, 여성고용, 모유수유, 영·유아 사망률, 직업, 소득 등 간접효과를 통한 것이다. 교육정도를 통제하는 경우, 소득 자체가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소득 부부의 경우 출산력에 대한 소득효과는 여타변수를 통제하는 경우 별로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는 데, 이것은 자녀에게 노후생활을 의존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V. 장래 출산력의 예측

이 절에서는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되는 21세기 전반의 상황에서, 봉가르츠(Bongaarts, 1998, 2002)의 희망자녀수와 합계출산율의 격차를 설명하는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장래 출산율을 예측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인구정책의 주요 쟁점은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저출산이 21세기의 전반부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을 완성한 나라들은 대부분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 몇 개 나라에서만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예외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비관론에 따르면, 대체출산율이란 개념 자체가 젊은 부부의 성활동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이 그대로 하나의 규범이 된 사회에서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개연성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Atoh et al., 2001).

낙관론을 펴는 인구학자들은 이런 생각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구미 선진국이나 한국 등 신흥공업국에서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며 적어도 몇 나라의 경우,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는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자료에서 희망자녀수나 기대자녀수가 2명 이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은 대체로 출산연령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만약 출산연령의 상승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 요인의 출산억제효과는 사라지고, 출산율은 대체수준으로 반등할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이들 두 견해는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아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은 겉으로 보기보다는 복잡한 내부요인들의 산물이며,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상자녀수와 이것을 출산력과 연계하는 2개의 변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이상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DSF):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에서는 자녀의 '잠재적 공급', 곧 부부의 가임력이 합계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이다. 한편,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을 완료한 사회에서 출산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는 자녀수요, 곧 이상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이다. 우리는 한국의 출산력 변천에서 차별출산력의 특성을 기술하면서 이상자녀수가 끊임없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3-8>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1960년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지만, 15~44세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5.0명이었다. 이것은 자녀의 '잠재적 공급'이 자녀의 '잠재적 수요'를 1.0명 수준에서 앞선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공급이 자녀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은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완료되는

〈표 3-8〉 기간출산율, 이상자녀수, 그리고 코호트 출산율, 1960~2000

기간 출산율 (Period TFR)		이상자녀수		코호트 출산율 (Cohort TFR)	
연도	합계출산율	15~44 여성	25~29 여성	출생연도	합계출산율
1960	5.99	5.0		1935	5.14
1966	5.29	3.9		1940	4.31
1974	3.58	2.8		1945	3.21
1982	2.69	2.5	2.2	1950	2.50
1984	2.09	2.0	1.9	1955	2.17
1987	1.62	2.0	1.9	1960	2.07
1990	1.52	2.1	1.9		
1993	1.67				
1994	1.67	2.1	2.1		
1997	1.54	2.2	2.1		
1999	1.42				
2000	1.47	2.2	2.1		

자료: 권태환(1997: 〈표 1-5〉, 1960~1990); 통계청(2002j: KOSIS, 동읍면/연령별 이상자녀수·기대자녀수, 1994~2000).

1983년까지 지속되었다(권태환, 1997). 그러나 1984년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자녀수요가 자녀공급을 초과하게 된다. 한마디로 1955년과 1960년의 출생코호트는 이상자녀수에 거의 근접하는 실제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1985년 이후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에 관찰되는 합계출산율은 이상자녀수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출산력에 관한 기존의 사회이론은 자녀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최근의 출산력 표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 대부분의 이상자녀수가 2명, 즉 보통 아들 1명과 딸 1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00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이상자녀수가 2명 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중소비사회의 도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생활방식이 자녀생육에 관한 비용관념에 전면적 변화를 초래하여, 이상자녀수가 2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한국사회가 어떤 유형의 사회정책, 특히 가족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와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방식이 개인주의화하느냐에 따라 부부들이 생각하는 이상자녀수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어찌면,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에서 출산억제효과를 생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인구정책이었다면,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에서 출산촉진효과를 생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정책, 특히 페미니즘 사회운동의 합의를 존중하는 가족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은 부부가 결혼 후 그들이 희망하는 자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 기회를 확충하는데 집중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원치 않은’ 출산율( $F_u$ ):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후반부에 이르면, 부부들 사이에서 ‘원치 않은’ 자녀수가 줄어든다. 물론 그 이유는 효율적인 피임방법과 그것을 보완하는 인공유산의 활용일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계속되는 21세기의 전반부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결국, 실제 출산율을 이상가족수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은 21세기의 전반부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며, ‘원치 않은’ 자녀의 출산은 지극히 희귀한 현상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이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이 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모성보호(母性保護)’ 또는 ‘자연출생성비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인공유산을 완전히 불법화하여,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3) 출산연령의 상승( $F_t$ ): 출산연령이 상승하는 한, 출산율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출산연령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구해진 <표 3-9>의 출산속도의 출생순위 효과를 제거한 수정합계출산율( $TFR'$ )은 실제로 관찰되고 있는 기간합계출산율( $TFR$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출산속도의 효과를 제거한다면, 현재의 기간합계출산율이 그렇게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면, 과거 수십 년 동안 출산연령의 상승은 출산억제효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출산연령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그 때에는 출산연령의 출산억제효과가 제거되면서 출산율

〈표 3-9〉 출생순위별 합계출산율, 평균초혼연령과 평균출산연령, 1985~2000

출생순위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출산율(여자 1인당)							
1	0.85	0.83	0.79	0.76	0.75	0.72	0.72	0.70
2	0.64	0.61	0.71	0.67	0.65	0.61	0.57	0.62
3+	0.21	0.13	0.14	0.15	0.15	0.15	0.13	0.15
합계	1.70	1.57	1.64	1.58	1.55	1.48	1.42	1.47
평균초혼연령(세)								
	24.1	24.8	25.4	25.5	25.7	26.1	26.3	26.5
평균출산연령(세)								
1	24.9	25.9	26.5	26.7	26.9	27.2	27.4	27.9
2	26.5	28.0	28.8	28.9	29.1	29.3	29.4	29.7
3+	29.6	30.3	31.9	32.0	32.1	32.2	32.3	32.4
합계	26.0	27.1	28.0	28.1	28.3	28.5	28.7	29.1
수정합계출산율(여자 1인당)								
1	0.94	1.04	0.90	0.84	0.94	1.02	0.90	1.40
2	0.71	0.87	0.85	0.74	0.81	0.76	0.63	0.89
3+	0.23	0.15	0.16	0.17	0.19	0.17	0.14	0.17
합계	1.88	2.06	1.91	1.75	1.94	1.95	1.67	2.46

자료: 통계청(2002): KOSIS, 해당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것의 구체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가족정책, 특히 최근의 여성학 연구의 성과를 포괄하는 사회정책의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Lavallette and Pratt, 1997).

현재의 대체수준 이하의 기간출산율과 관련하여 혼인연령의 상승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임이 분명하다. 〈표 3-9〉에서 인구동태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평균초혼연령<sup>1)</sup>은 1985년 24.1세에서 2000년 26.5세로 15년 동안 2.4세, 매년 0.16세씩 상승하였다. 또 첫째아이의 출산연령은 1985~2000년의 15년 동안 24.9세에서 27.9세로 3.0세, 매년 0.2세씩 상승하였다. 둘째 아이와

1) 이것은 앞에서 제시된 인구센서스 자료의 혼인상태, 특히 연령별 미혼여성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혼연령(SMAM)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구센서스 자료로부터 계산된 초혼연령이 합성코호트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여기에 제시된 초혼연령은 특정연도에 출산한 여성들의 초혼연령을 평균한 것이다.

〈표 3-10〉 봉가르츠 모형에서의 합계출산율과 희망가족수의 관계, 198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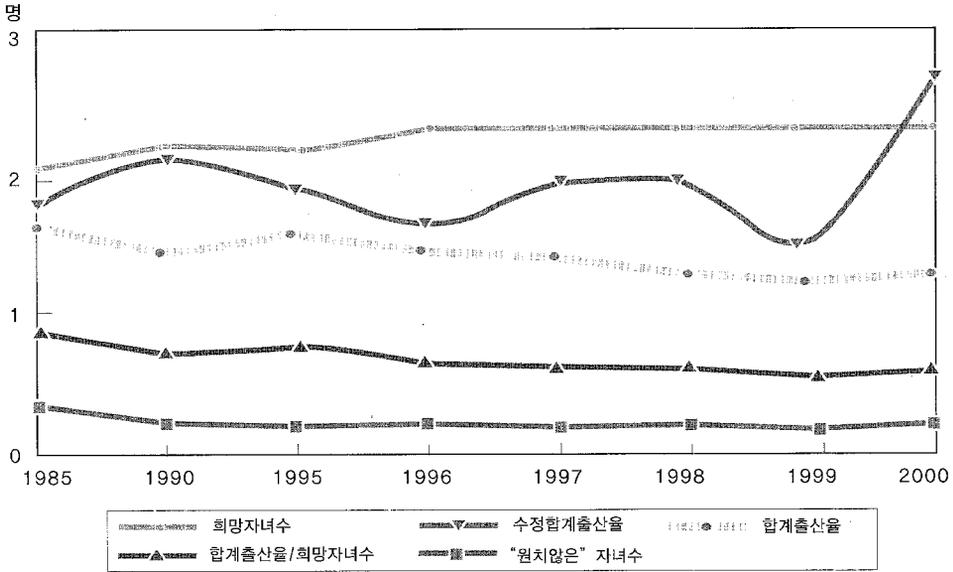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 합계출산율(TFR)	1.70	1.57	1.64	1.58	1.55	1.48	1.42	1.47
(2) 희망자녀수(DFS)	2.00	2.10	2.10	2.20	2.20	2.20	2.20	2.20
(3) 합계출산율/희망자녀수 (TFR/DFS)[(2)/(1)]	0.850	0.748	0.781	0.718	0.705	0.673	0.645	0.668
(4) '원치 않은' 자녀수(UWTFR)	0.220	0.117	0.126	0.120	0.120	0.120	0.104	0.120
(5) '원하는' 합계출산율 (WTFR) [(1)-(4)]	1.490	1.453	1.514	1.460	1.430	1.360	1.316	1.350
(6) 출산속도 효과를 제거한 수정합계출산율(TFR')	1.88	2.06	1.91	1.75	1.94	1.95	1.67	2.46
출산억제(축진)요인의 추정효과								
(7)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 산축진효과( $F_u$ )[(1)/(2)]	1.141	1.081	1.083	1.082	1.084	1.088	1.079	1.089
(8) 출산속도의 출산억제효 과 ( $F_t$ )[(1)/(3)]	0.904	0.762	0.859	0.903	0.799	0.759	0.850	0.598
(9) 기타변수의 출산억제효과 ( $F'$ )[(1)/(2)×(7)×(8)]	0.824	0.908	0.840	0.735	0.814	0.814	0.703	1.027

주: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축진효과( $F_u$ ), (8) 출산속도의 출산억제효과 ( $F_t$ ), 기타변수의 출산억제효과 ( $F'$ )는 Bongaarts(1997)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함. 합계출산율(TFR)은 <표 3-1>, 희망자녀수(DFS)는 <표 3-8>, 출산속도의 효과를 제거한 수정합계출산율(TFR')은 <표 3-9>을 참고할 것.

셋째 아이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출산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특히 초혼연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이 많이 상승한 경우, 여자 1인당 합계출산율의 실제 관측치(TFR)와 출산의 속도효과를 제거한 수정합계출산율(TFR')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혼인연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의 상승은 우리가 현재 관찰하고 있는 특정기간의 합계출산율(TFR)을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1.3~1.5명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합계출산율과 희망자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봉가르츠의 모형을 제시하면서 논의한 내용을 <표 3-10>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축진효과는 1985년의 14%의 최고수준에서 1990~2000년 동안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1960~1975년의 15년 동안 '원치 않은'

(그림 3-2) 합계출산율과 희망자녀수의 관계



자녀수가 20%대를 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어쩌면, 21세기 전반 부에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더욱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이상자녀수를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다면,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축진효과가 사라지면서, 현재의 저출산은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출산속도의 출산억제효과인데, 이것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이 상승이 있는 연도에 강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2000년에는 출산속도의 지연이 기간출산율을 40%나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1990년과 1998년에도 약 25%대의 기간출산율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기타 요인의 출산억제효과는 1996년과 1999년에 각각 26%와 30%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기타 요인이 2000년에는 3% 정도의 출산축진효과를 가지는데, 이것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모형자체가 포함하지 않는 변수들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기타 요인으로 간주된 영유아사망률( $F_r$ ), 성선택의 문제( $F_g$ ), 경쟁적

선호 및 비자발적 요인( $F_i$ )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들 3개 요인이 희망자녀수와의 관계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간단히 언급한다.

(1) **영·유아 사망률( $F_r$ )**: 영·유아 사망률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0세의 사망률은 10% 이하이다. 최근의 사망동태통계는 영아사망률이 약간씩 올라가서 의료사고문제의 빈발을 예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1~4세의 사망률은 1% 수준으로 구미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높은 편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를 지나면서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남자 71.7세, 여자 79.2세로 평균 75.6세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2). 한국도 구미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생아들 중 성년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며, 이것이 21세기 전반부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2) **성선택의 문제( $F_g$ )**: 남아선호사상은 한국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 페미니즘 사회운동이 발전하면서 딸과 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한국인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타이완 등 몇 개의 아시아 국가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구시대적 유산이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김태현, 1997; Park and Cho, 1995; 김두섭, 1997). 물론 한국의 젊은 부부들에게 이상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셋째 자녀가 아니라 둘째 자녀나, 심한 경우에는 첫째 자녀에서부터 성선택 인공유산술을 실천에 옮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 합계출산율을 더욱 낮추고, 따라서 대체수준 이하로의 출산율 감소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비자발적 출산억제 요인과 경쟁적 선호들( $F_i$ )**: 한국사회가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에 진입하면서, 출산개시연령과 생애미혼율이 상승하여 왔다. 이 혼율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추이는 신혼부부들이 출산의 고령화로 인한 가임력의 조기후퇴나 이혼·사별 등의 혼인해소로 이상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인다. 혼전동거 형식의 비공식적인 공동거주의 방식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것은 결혼을 대신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사회제

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특히, 상당수의 개인들이 생애미혼으로 남거나 안정적인 성활동을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보류하는 한, 유배우 남녀의 이상자녀수 또는 희망자녀수가 2명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출산율은 대체수준 이하에 머물고 반등의 가능성이 대단히 적을 수 있다.

## Ⅵ. 종합 및 결론

한국은 지난 50년에 걸쳐 자연출산력의 상태에서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 곧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출산율로 이행하는 역동적인 출산력 변천을 경험하였다. 통계청(2002j)의 추정에 따르면, 최근의 합계출산율은 1985년 1.65명, 1990년 1.59명, 1995년 1.65명, 2000년은 1.47명으로 대단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력 변천은 사망력 변천이 시작되고나서 50년의 세월이 경과한 후 시작되었다.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지난 1960년대 이전에는 사망률이 감소하는 중에도 출산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출산율과 사망률의 격차는 컸고 이로 말미암아 전체인구는 대폭 성장하였다. 그러나 1960년 6.0명에 이르던 높은 출산율이 1985년에는 대체수준을 밑돌면서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완료되었다.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전반부는 이상자녀수나 기대자녀수 등 가족가치에 대한 개념이 마련되지 않은 채, 농촌의 토지압박으로 인한 기아선상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1975년 이후 근대화, 도시화, 인구이동, 고도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방법의 혁신과 적응을 시작한 한국의 부부들은 자신들의 이상자녀수로 표현되는 가족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피임이나 인공유산 등의 적극적인 출산력 억제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80년대 중반에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시작된 후에는 출산율이 대체수준을 훨씬 밑돌면서, 합계출산율의 장래와 관련하여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출산력 변천의 과정에서 15~49세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연령은

15~24세와 35세 이상의 두 집단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은 물론 제2단계 출산력 변천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은 젊은 여성들의 출산력 감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가족형성의 후반부에 있는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피임이나 인공유산 등의 의도적인 가족계획을 통하여 출산을 억제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규모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 초반 이후 공공부문의 채널을 통하여 피임법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혼연령, 인공유산, 그리고 피임은 1960년대 이후 출산력 변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변수들이었다. 환언하면, 경제성장, 산업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은 1960~2000년의 지난 40년 동안 급격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을 빠른 속도로 견인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사회경제적 변수였다.

이 연구는 장래 출산력의 예측과 관련하여, 초혼연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은 물론 이상자녀수 변수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1985년 이후 제2단계 출산력 변천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부부가 최종적으로 낳을 자녀수(완결가족의 크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생애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남녀도 지극히 적은 상황이다. 그러나 고학력화와 취업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21세기의 전반부에도 초혼연령이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85년 이후의 연령별 유배우율과 연령별 출산율을 종래의 유형과 비교할 때, 결혼연기형과 출산연기형의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코호트 합계출산율보다도 기간 합계출산율을 더욱 더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장은 출생성비의 왜곡과 출산력과의 관계, 현거주지·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검토하였다.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출생순위별 성비, 즉 셋째 자녀 이상의 출생성비가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 성비보다 훨씬 높지만 전체 유배우 여성 중에서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여 그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현거주지별, 교육수준별 차별출산력을 살펴보면,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 중인 2000년대에도, 출산율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별 차별출산력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

라면 상대적 수준에서 그 차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촌이 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였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보다 빠른 속도로 출산력을 낮추는데 성공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출산력이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수렴구조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지난 40년 동안에 걸쳐 고전적인 의미의 제1단계 출산력 변천뿐만 아니라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의 시대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은 인간행동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다. 한국 여성의 재생산 유형은 이제는 구미 선진국을 닮아가고 있으며,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 중인 1985~2000년의 15년 동안 대체수준 이하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약간의 파동을 그리면서 변동하고 있다. 이것은 장래의 '예측하기 힘든' 인구예측을 위하여 의미 있는 현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고, 그것이 원치 않은 임신이나 출산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이상자녀수, 곧 자녀수요는 장래의 출산력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핵심변수가 된다.

한국에서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 15년 동안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0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정부나 인구정책 입안자들이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에 초혼연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이 급속도로 상승하지 않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면, 현재 관찰되고 있는 합계출산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곧, 고용정책이나 조세정책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결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출산연령이 안정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출산력 수준은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반등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출산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대다수 여성들이 출산속도를 더 이상 지연할 사유를 찾지 못한다면 분명히 기간 합계출산율은 반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족정책과 사회정책 전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영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인구규모의 축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체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이 중장기적으로 야기하게 될 생산활동인구의 부족이나 인구의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여 백

## 제4장 사망력

김 태 현

### I. 머리말

장수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건강과 생존에 관한 것들은 개인의 문제에서 공공의 문제로 전환되었다(Hansluwka et al., 1981: 170).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현장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사회정책을 도입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률의 수준과 성, 연령별 사망유형은 인구성장이나 성, 연령별 인구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인구의 성장과 구조는 다시 출산수준과 인구변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망수준이 상당히 감소한 대신 출산수준은 아직 높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인구증가 억제가 목표인 이들 사회에서의 인구정책은 국민의 보건향상이나 사망수준을 낮추는 것보다 출산억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사망률이 상당히 낮아졌으나 출산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국민의 보건보다는 출산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구의 건강수준은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과는 별도로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인구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출산억제가 인구성장속도를 낮추는 중요 요인이라고 한다면 사망(또는 보건)에 대한 적절한 조

치의 목표는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발전이 국민의 보건 또는 인구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는 데 필요한 시계열적인 사망률 지표의 작성과 사망률과 경제, 사회현상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구관련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률의 변화와 유형을 분석하여 인구현상의 변화를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사망률을 분석하여 인구 특성별 인구집단의 보건과 사망수준의 차이를 밝힌다. 이를 토대로 인구현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망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망률의 감소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자료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들 외에도 사망의 특성이나 추세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통계를 별도로 활용하였다.

**인구센서스 결과:** 인구센서스는 1925년 이후 2000년까지 거의 5년마다 총 16회 실시되었다. 그러나 인구센서스 자료는 성, 연령별 누락률이 차이나며, 상주 개념의 인구이므로, 인구동태통계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의 인구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필요할 경우에(예, 특성별 사망률 작성) 제한적으로 이용하였다.

**인구동태통계:** 인구동태통계의 역사는 길지만 사망신고의 부실로 자료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자료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게된 것은 1970년 이후이다(T.H. Kim, 1990).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당해 연도 사망신고율이 98%를 상회하였으므로(박경애, 1995) 사망지표를 작성하는데 신고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5 및 200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199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서 과거 35년간(1960년까지)의 인구 시계열을 정리하였다(통계청, 1996). 그리고, 200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서 1996년 이후 2050년까지의 성, 연령별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통계청, 2001c). 그러므로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1년간 추계인구를 당해 연도의 사망지표를 작성할 때 기준인구로 이용하였다.

**사망원인통계:** 사망신고에는 사망원인을 함께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사망원인 통계는 1980년 이후 일반에게 공표하고 있지만, 의사의 진단자료가 1980~1981년에 전체 신고자료의 25.3%에 불과하여 사망원인별 변화 유형만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였다(T.H. Kim, 1990). 그러나 1992년 이후 의사 진단율이 50%를 상회하였고(박경애, 1995), 최근에 들어오면서 사망신고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의 생명표:** 우리 나라의 생명표는 사망자료의 미비로 1980년경까지 주로 모형생명표에 의존하여 간접추계 하였다. 그러나 사망신고자료의 보완기법도 도입되면서 1970년 이후의 신고자료에 의한 생명표의 추계가 가능해졌다(T.H. Kim, 1990; 권태환·김태현, 1990). 그 후 누락신고율이 낮아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사망신고 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생명표를 작성(통계청, 1999b, 2001f)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사망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2. 연구 범위

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중에는 1925년부터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인구센서스나 사망신고자료의 직접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1960년 이후의 인구센서스 결과와 1970년 이후의 사망신고자료, 그리고 1980년 이후의 사망원인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자료를 보완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위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나라 사망력의 변화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조사망률(보통사망률)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사망력 변천을

연구하고, 성,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사망력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망력의 변동원인을 규명하고 장래 사망력 변천연구를 위한 차별사망력 분석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학적 변인(성, 연령)과 사회경제적 변인(교육정도, 혼인상태)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상 연령은 자료의 신빙도와 분석결과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25세부터 64세까지로 한정하였다. 끝으로, 사망원인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17대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설명과정에서 필요할 때에만 중분류 자료를 이용하였다.

### 3. 분석방법

사망력의 변화와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망력 종합연구로 Kwon(1986), T.H. Kim(1990), 권태환·김태헌(1990) 등이 있다. 사망력 지표를 새로 작성하고 분석할 경우에 이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절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 Ⅲ. 사망력의 변화

### 1. 사망력 변천

역사적으로 사망력의 감소는 선진지역에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현대 의학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선진지역에서는 사망력이 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후진지역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인구현상의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mran(1971, 1977)은 사망력의 변화를 세 가지의 역학변천모형-고전 또는 서구모형(classic or Western model), 가속모형(accelerated model), 지연모형(delayed model)-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전 또는 서구모형은 과거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에서 사망력이 점진적으로 낮아진 경우이며, 가속모형은 사망력 변천이 늦게 시작하였지만 고전모형 보다 빨리 떨어지는 경우이다. 지연

〈표 4-1〉 사망력의 변천과정

구분 \ 사망변천 유형	I	II	III	IV
지역	서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동과 남유럽, 일본	‘경제사회개발 주도’ 개발도상국	기타 개발도상국
사망률 감소의 주요원인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경제개발 후 공중보건향상	공중보건향상 후 사회경제개발	현대의술의 도입과 확산증
변천 시작 (평균수명 30~50년)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까지	19세기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	20세기 초
변천 (평균수명 50~70세)	1920년대에서 1950년대초까지	1930~1950년대	1950년 이후	1950년 이후
변천 끝 (평균수명 70세)	1950년대	1950~1960년대	1970년대 이후	(진행중)

자료: T.H. Kim(1990: 143, Table 5-1)을 보완.

모형은 사망률이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의술과 대량의 예방약품 공급으로 급속히 떨어졌지만, 1970년대 말 현재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사망유형에 해당된다.

Pathak과 Murty(1983: 259-260)는 변천과정에 있는 한 국가의 사망률의 감소요인을 기초로 세 가지 단계를 이용하여 사망력의 변천을 설명하였다. 사망력은 처음에 건강조건을 향상시키고 의술을 도입함으로써 감소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조건을 더욱 향상시키고 사람들의 경제적, 영양학적 상태를 증진시킬 때 사망률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현대 의료시설의 활용만이 아니라 보건과 사회경제적 발전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망률이 가장 낮은 단계로 계속 낮아질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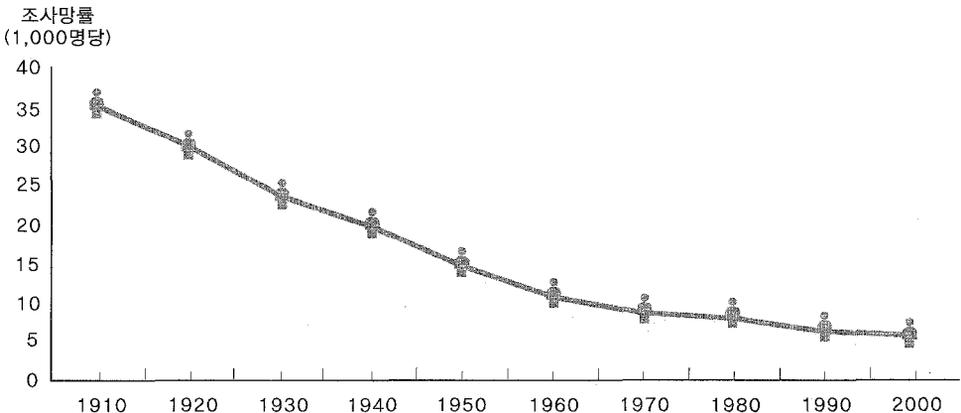
사망력 변천을 설명한 위의 모형들을 중심으로 사망력의 변천유형을 〈표 4-1〉에 재정리하였다. 개발도상국 중에서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사망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수명 7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여 위의 세 가지의 모형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현대의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전 사망률의 감소는 사회경제적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특히 선진국에서는 의학의 발달이 사망률

의 감소를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나 늦었지만 사망률의 감소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망률의 변천이 처음에는 보건정책과 서구 의학의 도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발달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사망률 변천은 19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남녀의 평균수명이 1906~1910년에 23세 정도(石南國, 1972)였으나, 1955~1960년에는 52세(고갑석·김일현, 1964)로 증가하였다. 그 후에도 사망률은 계속 감소하여 1970년대에는 60세를 상회하였으며, 1980년대 말에는 남녀 평균 70세를 넘어섰다(통계청, 1999b: 54). 이러한 사망률 변천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감염성 질환의 예방으로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사회경제개발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의 감소가 더욱 빨리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망률 변천은 <표 4-1>에서 유형 II와 IV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형 III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조사망률

조사망률의 추이로도 우리 나라 사망률의 변천이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작

(그림 4-1) 조사망률의 추이, 1910~2000



자료: 1) 1910~1965: 조사통계국 추정치(공세권 외, 1983: 62).

2) 1970 이후: 통계청(2001b: 28).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조사망률은 1910~1915년에 인구 1,000명당 33.7이던 것이 산업화가 시작된 1960~1965년에는 3분의 1 이하인 10.5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4-1〉 참조). ‘베이비 붐’으로 높아진 출생률이 낮아지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조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10 이하로 낮아지면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후에도 조사망률은 조금씩이나마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 5.8에 도달한 후 6.0 미만에서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출생률은 계속 낮아져서 인구증가폭은 출생률의 감소정도 만큼씩 낮아졌다.

그러나 조사망률은 인구의 성, 연령별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출산율이 낮아져서 사망률이 높은 0세와 1~4세 인구의 규모가 줄어들면 조사망률이 낮아지지만, 연령별 사망률이 감소하여도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노인의 사망자수가 늘어나게 되어 조사망률은 정체하거나 높아지게 된다.

### 3. 성 ·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사망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연령별 사망률은 〈표 4-2〉와 같다.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1970년 이후 30년 동안 남자의 조사망률이 37%(1-(9.2/5.8)) 감소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31% 감소하였다. 연령별 사망률의 경우는 남녀 모두 20대까지 사망률의 감소속도가 빨랐으며(15~19세에서 남녀 각각 83%와 88% 감소), 30대 이후에는 감소속도가 서서히 둔화되었다. 감소의 속도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빨랐다. 그러나 40대 이후부터 남녀의 차는 점차 줄어서 70~74세에서 지난 30년간 사망률의 감소는 남녀 각각 54%와 52%로 비슷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연령별 사망률의 감소가 여자의 경우 더 빠르지만 조사망률의 경우 남자보다 감소폭이 작았던 것은 여자의 사망률이 극히 낮았고(4.7/1000명), 여자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남자의 경우 40대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로 남녀 사망유형의 차이가 있었으나(T.H. Kim, 1990 참조), 남녀

(표 4-2) 성 및 연령별 사망률

(단위: 천 명당)

연령	남자			여자		
	1970	1990	2000	1970	1990	2000
전체	9.2	6.6	5.8	6.8	5.0	4.7
0~4	4.7	3.7	1.3	4.5	3.2	1.2
5~9	2.6	0.7	0.3	2.3	0.5	0.2
10~14	2.1	0.6	0.2	1.7	0.4	0.2
15~19	3.5	1.2	0.6	2.5	0.5	0.3
20~24	4.2	1.5	0.9	3.5	0.7	0.4
25~29	3.8	1.9	1.1	3.7	0.8	0.5
30~34	4.0	2.5	1.4	3.3	1.0	0.7
35~39	5.5	3.7	2.2	4.1	1.4	0.9
40~44	9.1	5.4	3.6	5.3	2.0	1.3
45~49	14.9	9.0	5.5	7.0	3.4	1.8
50~54	22.4	12.3	7.9	10.0	4.7	2.7
55~59	33.1	17.1	12.7	14.2	6.9	4.5
60~64	47.5	26.7	18.2	20.4	11.1	7.0
65~69	72.9	40.8	26.3	31.9	18.5	12.0
70~74	95.5	64.4	43.7	49.1	33.0	23.8
75~79	225.2 <sup>1)</sup>	97.0	74.6	179.2 <sup>1)</sup>	55.9	44.0
80 이상	-	187.0	152.1	-	137.1	121.2
영아사망률 <sup>2)</sup>	40.8	14.3	6.1	39.9	13.0	5.9

주: 1) 1970년의 75~79세는 75세 이상임.

2) 1970, 1990 및 2000년 자료의 실제 추정연도는 각각 1971, 1989, 1999년임.

자료: 통계청(2001f, 2001i).

사망률 감소의 차이가 줄어들면 남자 사망유형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그림 4-2〉 참조).

영아사망률은 일반적으로 한 사회나 국가의 건강상태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 지표이다(UN, 1982: 123; Rutstein, 1983: 7).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영아 사망 자료가 극히 부정확하여 김일현과 최봉호(1988)는 영아의 월별 사망건수를 선진국의 일령(1개월 미만)별, 월(1개월 이후)별 분포에 적용하여 영아사망 건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N.I. Kim(1976), T.H. Kim(1990) 등은 출산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 및 아동 사망률(또는 사망확률)을 간접 추정하였다. 최근

사망 신고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졌지만 영아 사망자료의 정확도는 여전히 낮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사망확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1993년과 1996년에 영아 사망조사를 실시하여 영아의 사망확률을 추정하였다. 통계청(2000f: 3)에서는 이 두 시점간의 연평균 변화율을 감안하여 1971년부터 1999년까지의 격년별 영아 사망확률을 추정하여 우리 나라 공식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1971년의 우리 나라 남녀별 영아사망확률은 각각 40.8과 39.9였으나, 1999년에는 각각 6.1과 5.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군에 속하게 되었다(<표 4-2> 참조).

#### 4. 성 · 연령별 기대여명

생명표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나 추정방법의 차이 때문에 1960년대까지 성,

〈표 4-3〉 연도별 평균수명의 추이, 1955~1999

(단위: 세)

연도	남자	여자	차(여자 - 남자)
1955~60	51.10	53.70	2.60
1960~65	52.70	57.70	5.00
1966	59.70	64.10	5.60
1971	58.99	66.07	7.08
1973	59.61	67.03	7.42
1975	60.19	67.91	7.72
1977	60.75	68.74	7.99
1979	61.28	69.51	8.23
1981	62.28	70.54	8.26
1983	63.21	71.47	8.26
1985	64.45	72.82	8.37
1987	65.78	74.04	8.26
1989	66.84	75.08	8.24
1991	67.74	75.92	8.18
1993	68.76	76.80	8.04
1995	69.57	77.41	7.84
1997	70.56	78.12	7.56
1999	71.71	79.22	7.51

자료: 1955~1960년: 고갑식·김일현(1964); 1960~1965년: D.W. Lee(1973); 1966년: 경제기획원(1971); 1971년 이후: 통계청(1999b, 2001f).

연령별 기대여명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 당시의 주요 추정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망신고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진 1990년대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청(1999b, 2001f)에서 1971년 이후의 생명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시계열을 <표 4-3>에 수록하였다.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은 20세기초에 남녀 각각 23세와 24세이었으며, 그 후 계속 증가하여 1942년에는 남자 43세, 여자 47세가 되었다(石南國, 1972).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지난 후인 1955~1960년에는 평균수명이 각각 51세와 54세로 높아졌으며, 1970년대 초에는 남녀 모두 60세를 넘었다.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 평균 70세에 도달한 것은 1989년경이며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1년부터 1985년까지 14년 동안 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5.46세와 6.75세씩 증가하여 여자의 사망률 감소속도가 훨씬 빨랐으나, 1985년 이후의 15년 동안에는 남녀 각각 7.26세와 6.40세씩 증가하여 남자의 사망률 감소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는 198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사망유형

### 1. 성·연령별 사망유형

<그림 4-2>에는 1970년부터 10년 간격으로 5세 계급별 사망률의 성비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 국가들의 생명표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의 사망률이 남자보다 낮다(UN, 1983: 7). 그러나 이 일반적인 유형이 한국인의 성별 사망률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권태환과 김태헌(1990)에서 1971~1975년의 성별 사망률을 비교하였을 때 5~14세와 20~34세의 두 연령계층에서 여자의 사망률이 남자보다 높았다.

<그림 4-2>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성별 사망률을 볼 수 있다. 사망률의 추정방법상의 차이로 사망률의 성비의 절대 수준이 권태환과 김태헌(1990)의 결과와 다르지만, 5~9세와 25~29세의 성비가 극히 낮은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 4-2〉 여자 사망률에 대한 남자 사망률의 비



주: 1) 사망률의 성비 = (남성사망률/여성사망률) × 100임.

2) 1970년의 75~79세는 7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2001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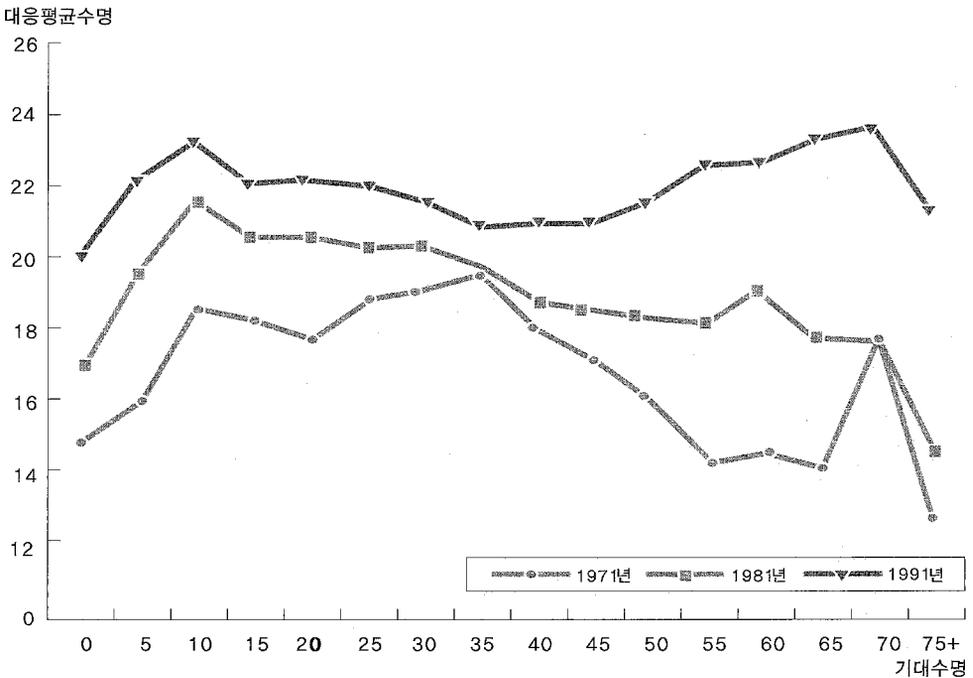
이처럼 5~9세에서 성비가 낮은 것은 전통적으로 남아에 대한 선호가 강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20대에서 사망률의 성비가 낮은 것은 출산수준이 높고,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모성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출산수준이 낮아지고, 사회경제발전이 이루어질 때 사라지게 된다. 〈그림 4-2〉에서 보면 1980년경부터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40대와 50대에서 성비가 300 전후의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 2. 한국의 사망유형과 모형 생명표

한국의 사망유형은 세계의 평균적인 사망유형과 다르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연령별 사망률의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세계평균으로 흔히 이용되는 Coale과 Demeny(1983)의 서부모형과 비교할 때 40대 이후의 사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UN(1982)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모아서 극동모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림 4-3〉은 우리 나라의 1971, 1981 및 1991년의 생명표에 나타난 생산율을 Coale과 Demeny의 서부모형생명표의 생산율과 비교하고, 대응평균수명을 정리한 것이다. 대응평균수명은 1971년의 유형을 보면 35~39세의 19.7을 정점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즉, 10~14세부터 30대까지는 18~19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40대 이후에 낮아지는 대응평균수명은 50대에서 14.2까지 떨어졌

〈그림 4-3〉 한국 남자의 사망유형과 Coale과 Demeny의 서부모형의 비교, 1971~1991



주: 75세 이상은 T75/T80으로 생산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음.

자료: 통계청(1999b).

다. 이러한 유형은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변화하였다. 즉 1981년의 경우 40대 이후의 감소현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1991년에는 50대 이후에 대응평균수명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남자 사망유형이 극동모형으로 그 특성이 뚜렷하였으나, 사망수준이 낮아지면서 선진사회의 평균모형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1930년대까지 관찰되던 극동모형이 그 후에 없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형은 사망률의 감소와 함께 특성이 소멸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V. 차별사망률

사회적 특성별 차별사망률은 현재의 사망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가치가 있다. 더욱이 이미 사망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사회에서 사망률의 추가감소는 어떤 질병의 감염이나 치사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그 사회의 각 계층간에 나타나는 사망률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찾아야 하고, 그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Hansluwka, 1968: 139-156).

지금까지 각국 또는 국가간의 사망률 연구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집단간에 유의할 만한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거나 하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사망률이 교육수준이 높거나 상위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 거주자나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평균 사망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Benjamin, 1965; Antonovsky, 1967; Ruzicka, 1982; Kobayashi, 1984; UN, 1984).

우리 나라에서도 도시지역의 거주자, 유배우 인구, 고학력 인구, 그리고 비농림 어업 종사자의 사망수준이 다른 특성을 가진 인구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윤덕중·김태현, 1989). 비록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사망률의 유형이 1970~1986년간에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동안 특성별 인구간의 사망수준의 차

이를 나타내는 사망비가 변해 왔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T.H. Kim, 1990: Ch. 3). 앞으로는 서로 다른 특성별 인구집단간의 불균등의 정도가 감소함으로써 사망수준의 감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사망수준은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특성별 인구집단의 구성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사망수준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구집단의 서로 다른 사망수준과 특성별 인구집단의 구성비 분석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국 평균사망수준의 변화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구 구성비의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차별사망력 분석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직업은 주로 교육수준에 의존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정도와 혼인상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1. 분석방법

### 1) 이용자료

호적신고자료를 이용한 인구동태통계와 인구센서스에서 얻어진 자료를 차별사망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사망신고자료는 1970년부터 정기적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신고자료의 완전성이 75% 이상에 도달하였으므로 사망력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Preston, 1984). 그러나 신고 자료의 불완전성 때문에 자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사회경제적 특성별 사망력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자료(사망신고와 인구센서스 자료)의 정의상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를 직접 분석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세권 등(1983)은 3개군(강화군, 홍천군 및 옥구군)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980년 사망신고자료와 특별조사자료의 항목들을 서로 대조한 결과 교육정도와 혼인상태에 대한 일치율이 전국 건수의 79%를 상회하였으므로, 전국수준에서 차별사망력의 유형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혼인상태와 교육정도별 차별사망력을 분석하므로, 분석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 미혼상태이고 재학중인 24세 이하의 연령층과 상대적으로 누락이나 부실 신고가 많은 65세 이상 연령층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특성별 인구의 사망수준 비교

사망자수의 보완을 위한 방법은 성·연령별로만 가능하고(Preston, 1980: 179-202; Bennett and Horiuchi, 1981, 1984), 인구 특성별 사망자수를 보완하기 위한 대조연구가 실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특성별 인구집단에 대한 사망률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성·연령별 계층에 의해 보완된 인구 특성별 신고의 누락정도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특성별 사망신고자료와 센서스자료의 비를 주의 깊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당해 연도의 신고율이 낮은 1980년 이전 자료에서 누락정도가 다른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신고의 기간을 늘려 1970~1972 및 1979~1981년의 사망자수에 1970 및 1980년도 인구센서스 기준 추계인구를 연결시켰다. 그리고 1990년 이후 자료에서는 해당 연도의 사망자수와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사망률과 사망비를 추정하였다. 또한 자료의 오류가 사망수준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세 연령계급별 사망률을 추정하였으나, 추정사망률의 절대수준에는 여전히 오류가 내포되었으므로 특성별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의 비로 차별사망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기간  $t$ 에 대한 특성  $i$ 의 인구 집단의 연령( $x$ )별 사망률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1)과 기간  $t$ 에서 연령계급  $x$ 에 대한 전국 평균 연령별 사망률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2)은 다음과 같다.

$$ASDR'_{ix} = D'_{ix} / P'_{ix} \dots\dots\dots (1)$$

$$ASDR'_{.x} = D'_{.x} / P'_{.x} \dots\dots\dots (2)$$

그러므로 특성별 차별사망력 연구를 위하여 전국 평균에 대한 인구특성  $i$ 의 연령별 사망률의 사망비가 다음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MR'_{ix} = ASDR'_{ix} / ASDR'_{.x} \dots\dots\dots (3)$$

### 3)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망수준의 변화과정 추정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사망비와 인구구성비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망수준의 변화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만약 특성  $i$  인 인구의 구성비가 주어진 기간(예를 들면, 1980년이래)동안 변화가 없었고, 2000년의 연령계급  $j$ 의 사망률,  $R_{j(2000)}^{2000}$  을 1.0으로 놓으면, 1980년과 2000년간의 연령계급  $j$ 의 사망률의 상대적 비,  $R_{j(80)}^{2000}$  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R_{j(80)}^{2000} = \sum_i (W_{ij}^{80} \cdot r_{ij}^{2000}) \quad \dots\dots\dots (4)$$

$W_{ij}^{80}$ 은 1980년 연령계급  $j$ , 특성  $i$ 인 인구의 구성비

$r_{ij}^{2000}$ 은 2000년 연령계급  $j$ , 특성  $i$ 인 인구의 사망비

그런데  $R_{j(2000)}^{2000} = 1.0$  이므로, 1980년과 2000년간의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연령계급  $j$ 의 사망수준의 변화정도(%)  $P_j$ 는 다음과 같다.

$$P_j = (1.0 / R_{j(80)}^{2000} - 1) \times 100 \quad \dots\dots\dots (5)$$

그러므로  $P_j$ 의 값으로부터 우리는 특성별 인구의 상대적 규모의 변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나 사망수준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과 성·연령별로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 교육정도별 차별사망력

Marthis(1969), Kitagawa와 Hauser(197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정도별 사망력의 차이에는 두 가지의 일반적인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층에서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교육정도와 사망률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

에게 더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성인(25~64세)의 사망률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4>참조). 사망수준과 교육정도 간의 역의 관계는 55~64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25~34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1970년대 이후 2000년까지 모두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강하였다. 남자 25~34세 연령층의 교육수준별 사망비는 2000년에 무학자의 경우 8.16에서 초급대 이상자의 경우 0.48로,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감소하였다. 이것은 무학인 남자의 사망위험이 초급대 이상인 남자에 비하여 17배

〈표 4-4〉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사망비의 변화, 25~64세, 1970~2000

연령 및 교육정도	남자				여자			
	1970 <sup>1)</sup>	1980 <sup>2)</sup>	1990	2000	1970 <sup>1)</sup>	1980 <sup>2)</sup>	1990	2000
25~3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학	3.41	8.51	6.48	8.16	2.20	8.55	14.77	15.58
초등	1.58	2.30	4.42	7.15	1.12	1.49	3.03	8.54
중·고	0.58	0.63	0.96	1.35	0.44	0.46	0.74	1.11
초대이상	0.35	0.32	0.40	0.48	0.29	0.38	0.50	0.57
35~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학	1.53	3.35	4.69	4.40	1.15	2.41	4.06	4.59
초등	1.38	1.77	2.81	4.64	1.09	1.07	1.64	2.86
중·고	0.60	0.58	0.78	1.07	0.50	0.51	0.67	0.89
초대이상	0.36	0.30	0.33	0.36	0.37	0.33	0.44	0.45
45~5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학	0.96	1.47	1.77	2.41	0.95	1.17	1.28	2.07
초등	1.32	1.34	1.67	2.17	1.19	1.02	1.19	1.39
중·고	0.65	0.65	0.77	0.89	0.66	0.62	0.20	0.79
초대이상	0.41	0.39	0.43	0.43	0.52	0.55	0.49	0.54
55~6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학	0.84	0.92	1.08	1.32	0.89	0.91	0.95	1.09
초등	1.54	1.29	1.28	1.37	1.70	1.27	1.15	1.13
중·고	0.69	0.74	0.81	0.90	1.02	0.88	0.72	0.77
초대이상	0.45	0.50	0.57	0.57	0.46	0.78	0.64	0.52

주: 1) 1970~1972년간의 평균치임.

2) 1979~1981년간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2002j; KOSIS,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및 인구동태통계연보); T.H. Kim(1990: 65).

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속히 감소하여 55~64세에서는 2배 정도가 되었다<sup>1)</sup>. 한편, 여자 25~34세의 경우, 2000년에 무학자의 사망률은 초대 이상자에 비하여 무려 28배나 되었으나, 35~44세 이후에 급속히 낮아져서 연령계급별 사망률의 차이가 남자보다 작아졌다. 교육정도별 사망률 차이의 유형은 남녀 모두 동일하였다.

지난 30년 동안(1970~1972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수준별 사망위험의 차이는 커다란 변화를 보여왔다. 교육정도별 사망위험의 상대적인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특히 젊은 연령계급(25~34 및 35~44)에서 증가현상이 뚜렷하였다. 예를 들어, 35~44세 남자의 경우 무학자의 사망률이 초대 이상자보다 1970년에 약 4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12배로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3배에서 10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학력별 사망률의 차이가 커졌으며, 남녀 모두 동일한 유형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교육수준에 따라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나 보건 등의 서비스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Behm, 1980: 154). 일부 경제학자들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있다. 즉, 현명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건강에 좋은 습관을 들이며, 위험부담이 적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교육의 역할이 크다는 데서 교육이 직·간접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Feldstein, 1979).

교육이 직·간접으로 사망수준을 낮춰 주고 있기 때문에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계층은 낮은 교육수준을 갖는 계층보다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반대로 낮은 교육수준의 계층에서 무학 계층의 사망수준이 평균사망수준에 대한 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교육수준이 낮은 인구의 전 인구에

1) 55~64세 연령계급의 사망위험이 초등학교만 다닌 적이 있는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연령층에서 사망신고 시 낮은 교육수준(특히 무학)을 높은 교육수준(여기서 초등학교)으로 보고한 결과인 것 같다. 이러한 보고상의 오류가 최근 감소함에 따라 이 역현상이 사라지고 있다.

대한 구성비가 낮아질 때 점점 더 커진다. 그런데 무학인 남자의 전체 남자인구에 대한 구성비가 여자보다 낮으므로 남자의 경우 교육정도별 사망률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 3. 혼인상태별 차별사망률

유배우 인구의 사망률이 미혼이나 사별, 이혼 또는 별거중인 인구의 사망률보다 낮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Gove, 1973; Kobayashi, 1984). 이 사망률의 차이는 특히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생활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남자가 독신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따른 '충격'(수명을 단축시키는 충격)이 여자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Gove, 1973: 59-60). Spiegelman은 유배우 남자의 사망률이 낮은 것은 건강이 나빠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유배우자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주의, 특히 병에 걸렸을 경우에 간호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독신자들보다 사망률이 낮다고 주장하였다(Fox et al., 1982: 76에서 인용).

우리 나라의 혼인상태별 차별사망률의 유형은 일반적인 현상을 따르고 있다(<표 4-5>참조). 유배우 인구의 사망수준이 남녀 모든 연령계급에서 독신자의 사망수준보다 분명히 낮게 나타났다. 미혼자의 사망수준은 남녀 모두 35세 이상 연령계급(2000년 남자 35~44세 제외)에서 가장 높았으며,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그 차이가 훨씬 더 심하였다. 비록 1925년이래 결혼시기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누구나 결혼하여야 하는 사회에서 35세 이후에도 미혼으로 남아 있는 소수의 인구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에는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결혼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사별, 이혼 및 별거 인구의 경우에도 역시 유배우 인구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외로움과 고민을 많이 느끼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손

〈표 4-5〉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사망비의 변화, 1970~2000

연령 및 혼인상태	남자				여자			
	1970 <sup>1)</sup>	1980 <sup>2)</sup>	1990	2000	1970 <sup>1)</sup>	1980 <sup>2)</sup>	1990	2000
25~3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1.89	1.77	1.48	1.28	6.27	4.37	2.45	1.38
유배우	0.65	0.64	0.67	0.68	0.61	0.57	0.64	0.75
기타 <sup>3)</sup>	5.56	7.28	7.00	5.69	2.76	5.11	7.92	6.28
35~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13.57	8.25	6.09	3.07	42.01	23.78	8.49	2.92
유배우	0.82	0.83	0.77	0.70	0.74	0.71	0.73	0.81
기타 <sup>3)</sup>	4.88	5.18	4.38	3.65	1.81	2.36	2.70	2.50
45~5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17.07	10.70	7.22	4.10	47.06	33.85	15.47	3.70
유배우	0.88	0.87	0.87	0.83	0.84	0.78	0.78	0.85
기타 <sup>3)</sup>	3.67	3.74	3.25	2.62	1.20	1.41	1.67	1.59
55~6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혼	15.94	9.40	7.79	3.46	37.35	30.49	19.27	5.28
유배우	0.87	0.87	0.89	0.92	0.90	0.85	0.78	0.84
기타 <sup>3)</sup>	2.32	2.57	2.39	1.85	1.02	1.09	1.23	1.28

주: 1) 1970~1972년 간의 평균치임.

2) 1979~1981년 간의 평균치임.

3) 사별, 이혼 및 별거를 포함.

자료: 통계청(2002); KOSIS,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및 인구동태통계연보); T.H. Kim(1990: 67).

상된 건강상태로 재혼도 여의치 못하게 되므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혼인상태별 사망수준의 차이 유형은 지난 30년 동안 뚜렷이 변화하고 있다(〈표 4-5〉참조). 유배우 인구나 미혼 인구간의 사망수준의 차이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서 점차 작아지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높아져서 2000년에는 남녀 각각 29.3세와 26.5세에 이르렀으며(통계청, 2001e: 124), 25~34세의 남녀 모두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사망률 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1970년 미혼자의 사망률이 유배우자에 비하여 남녀 각각 2.9배와 10.3배이던 것이 2000년에는 각각 1.9배와 1.8배로 낮아졌다. 미혼여자의 사망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연령층 미혼율의 상승속도가 남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35~44세 이후 연령계층에서 미혼자의

사망비는 남녀 모두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들 연령층의 미혼율이 여전히 극소하지만, 지난 30년 간 증가율이 25~34세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사별, 이혼 및 별거자의 사망비는 25~34세에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낮아졌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인구의 구성비가 높아진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사망률이 낮은 여자의 경우 사별, 이혼 및 별거인구의 구성비가 남자보다 높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25~35세)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사망비가 남자보다 낮았다.

또한, 사별, 이혼 및 별거자의 사망비는 지난 30년 동안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는 1980년의 사망비가 가장 높았으며 그 후 점차 낮아졌다. 여자의 경우는 1990년까지 증가(55~64세 제외)하였으며 2000년에 다시 낮아졌다. 이것은 1980년대를 고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sup>3)</sup>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교육정도가 직업, 소득, 개인의 건강관리 등에 영향을 주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망수준이 낮아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사회에서는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일 때 미혼율이 높고, 결혼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 이혼이나 사별에 의한 독신율이 높아질 것이다. 결혼 적령기를 지나서 미혼이나 독신상태로 있는 인구의 교육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가 교육정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정도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후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성 및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기초로 표준화한 혼인상태별 사망률을 산출하여 <표 4-6>에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는 대표적 연령계층인 45~55세의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비를 표준화하여 측정자료와 비교하였다. 사망수준을 결정하는 교육정도의 영향을 제거

2) 여자 25~29세와 30~34세의 미혼율은 1970년에 각각 9.7%와 1.4% 이던 것이 2000년에는 각각 40.1%와 10.7%로 상승하였다. 또한 40~44세 남녀의 미혼율은 지난 30년 동안 각각 0.4%와 0.2%에서 4.9%와 2.6%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1c: 21).

3) 재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사별, 이혼 및 별거자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미혼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것과 같이 사별이나 이혼 후 독신생활자의 증가가 뚜렷해졌다(연도별 인구센서스 결과 참조).

(표 4-6) 측정사망률과 표준화 사망률의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비, 2000

성 및 혼인상태	측정사망률의 비 <sup>1)</sup>	표준화사망률의 비 <sup>2)</sup>
남 자 45~54세	1.00	1.00
미혼	4.10	3.31
유배우	0.83	0.85
기타 <sup>3)</sup>	2.62	2.38
여 자 45~54세	1.00	1.00
미혼	3.46	4.39
유배우	0.92	0.86
기타 <sup>3)</sup>	1.85	1.50

주: 1) 사망신고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작성한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비임.

2) 45~54세 전체 사망자의 성 및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기초로 혼인상태별 사망률을 표준화하여 계산한 것임.

3) 사별, 이혼 및 별거를 포함.

하였으므로 표준화 사망비가 측정치보다 낮아졌다면 미혼이나 독신자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망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표준화 사망비가 높아졌다면, 이들의 교육수준은 오히려 유배우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6〉에서 미혼여자의 표준화 사망비가 증가(0.93)하였으며, 남자 미혼과 기타, 여자 기타의 표준화 사망비는 낮아졌다. 또한 45~55세 미혼여자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유배우자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남녀 모두 미혼자와 사별, 이혼 및 별거자의 사망률이 유배우자의 사망률에 비하여 약 2배(기타 여자)에서 약 4배(미혼남자)나 높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는 교육정도별 차이와 함께 우리 나라 사망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4.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 국가나 사회의 사망변천은 각종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구집단의 구성비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증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두 요인들은 사회경제개발을

포함하는 사회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경제개발과정에서 인구의 전반적인 사망수준은 낮아지지만 특성별 인구구성도 함께 변화한다. 사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별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전체 사망수준은 감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증가하기도 한다.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 사망수준의 차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조는 사회경제개발과 함께 변화하므로, 여기서 사망수준과 이들 구성비의 변화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7〉은 2000년에 측정된 연령계층,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별 사망률에 대한 추정사망률(2000년의 특성별 인구구성비가 1980년의 구성비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산)의 상대적 사망비와 2000년에 추정사망률로부터 측정사망률의 증감정도(백분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정도별 인구의 구성비에 기초를 둔 상대적 사망률의 비는 가장 젊은 연령계층인 25~34세에서 남자의 경우 약 2.5배이고, 여자의 경우 약 4.1배나 되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비는 급격히 떨어져서 남녀 모두 1.1~1.3배 정도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사망수준의 감소정도(실측치와 추정치의 차이)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5~34세 연령계층에서 남자의 경우 60.3%, 여자의 경우 75.5%로 크게 나타났다. 이 감소정도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어 55~59세 연령계층에서는 남녀 각각 22.8%와 9.7%로

〈표 4-7〉 1980년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2000년 사망률의 상대적 비와 사망수준의 변화정도

연령	교육수준 <sup>1)</sup>				혼인상태 <sup>2)</sup>			
	남자		여자		남자		여자	
	$R_j^{3)}$	$R_j^{4)}(\%)$	$R_j^{3)}$	$R_j^{4)}(\%)$	$R_j^{3)}$	$R_j^{4)}(\%)$	$R_j^{3)}$	$R_j^{4)}(\%)$
25~34	2.521	-60.3	4.083	-75.5	0.879	13.8	0.910	9.9
35~44	2.203	-54.6	2.363	-57.7	0.781	28.0	0.952	5.0
45~54	1.550	-35.5	1.531	-34.7	0.897	11.5	1.109	-1.9
55~64	1.220	-18.0	1.082	-7.6	0.986	1.4	1.049	-4.7

주: 1) 4계급: 무학, 초등, 중·고, 초대 이상.

2) 3계급: 미혼, 유배우, 기타.

3) 2000년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가 1980년과 같고 2000년의 측정된 사망률을 1.0으로 놓았을 때, 2000년의 연령계층 사망률의 상대적 비.

4) 1980년 각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비율의 변화에 따른 연령계층  $j$ 의 사망률의 상대적 비( $R_j$ )로부터 2000년에 측정된 사망률의 상대적 비(1.0)로 변화한 정도(%).

감소정도가 낮아졌다. 남녀 모두 젊은 연령계층에서 사망수준의 감소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표 4-2〉 참조)은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이 사망수준의 감소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지면서 백분비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은 연령과 함께 교육수준의 향상의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남녀 모두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계층에서 사망수준이 실측치와 추정치 간에 차이가 줄어들어 가는 것은 사망수준이 교육정도에 따라 더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며, 결국은 누구에게나 유사한 수준의 사망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정도에 의한 결과와는 반대로,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에 기초를 둔 상대적 비는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계층에서, 여자의 경우 25~44세 연령계층에서 1.0 이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는 약간씩 증가하여 가장 연령이 높은 계층(남자 55~64세와 여자 45~64세)에서 약 1.0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이 상대적 비를 기준으로 사망수준의 변화를 보면 오히려 실측치보다 더 높게 되는데, 이것은 혼인상태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오히려 사망수준을 높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배우 인구의 경우 사망수준이 다른 혼인상태의 인구에 비하여 낮으므로, 우리 나라 남녀의 미혼 인구구성비의 증가는 오히려 사망수준을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흐려지고 있다.

## Ⅵ. 사망원인별 사망력

### 1. 사망원인의 유형과 변화

사망력의 변천과정에서 개별 사망의 원인과 전체 사망원인의 유형이 함께 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UN(1984: 43)의 한 연구는 사망률이 높은 인구일수록 소화기계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소화기계 질병대신 순환기계 질병이나

신생물로 대부분 사망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20세기 초의 사망원인은 천연두, 폐렴, 결핵과 같은 호흡기계, 소화기계 및 전염성 질병이었다(S.B. Lee, 1980: 174-176). 또한 1920년경의 주요 사망원인도 콜레라, 천연두,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병이었다(Kwon and Kim, 1968). 권이혁(1968)의 연구에 나타난 1938~1942년의 사망원인을 제7차 개정 국제질병분류로 재분류하여 보면 소화기계(Ⅸ) 호흡기계(Ⅷ), 신경계(Ⅵ),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Ⅰ)에 속한 질병으로 사망한 인구가 전체의 66%에 해당하였으며(〈표 4-8〉 참조)<sup>4)</sup>, 증상, 증후 및 불명확한 병태(ⅩⅥ)를 제외하면 전체 사망자의 87%가 이들 질병으로 사망하였다(T.H. Kim, 1990: 73-74).

또한 1966년의 사망원인의 유형도 1938~1942년과 유사하였다. 중심 사망원인의 질병분류는 Ⅷ, Ⅸ, Ⅵ 그리고 Ⅰ이었으며, 이 네 분류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한 인구는 사망총수의 53%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 4대 분류의 사망자 구성비가 13% 감소한 반면에, 신생물(Ⅱ)과 순환기계의 질환(Ⅶ)에 의한 사망자의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망원인의 구조는 1980년 이후 선진국의 유형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주요 사망원인으로 신생물(Ⅱ)과 순환기계의 질환(Ⅶ) 이외에도 손상 및 중독(ⅩⅦ)이 대두되었다. 이 세 가지 분류의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는 1980~1981년에 전체의 50%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과 2000년에는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망원인의 유형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도별 10대

4) 〈표 4-8〉의 분류는 제2차 개정 한국표준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7대 분류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경제기획원, 1979 참조).

- |                             |                      |
|-----------------------------|----------------------|
| I.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II. 신생물              |
| III. 내분비, 영양 및 대사의 질환과 면역장애 | IV.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
| V. 정신장애                     | VI.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
| VII. 순환기계의 질환               | VIII. 호흡기계의 질환       |
| IX. 소화기계의 질환                | X.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 XI. 임신, 분만 및 산욕의 합병증        | X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 XI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XIV. 선천이상            |
| XV. 주산기에 관련된 명백한 병태         | XVI. 증상·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
| XVII. 손상 및 중독               |                      |

(표 4-8) 사망원인별 사망자 구성비의 변화, 1938~2000

사망원인 <sup>1)</sup>	1938~42 <sup>2)</sup>	1966 <sup>3)</sup>	1980~81 <sup>1)</sup>	1990 <sup>1)</sup>	2000 <sup>1)</sup>
평균수명 <sup>4)</sup>	42.6	55.2	66.2	70.8	75.6
I	14.38	11.39	4.41	2.86	2.53
II	0.79	4.57	11.87	20.15	24.10
III	0.19	0.23	0.17	0.17	0.19
IV	0.53	2.50	1.00	2.50	4.82
V	0.05	1.03	0.74	0.56	2.63
VI	15.77 <sup>5)</sup>	11.52 <sup>5)</sup>	1.41	1.09	1.17
VII	0.99	3.91	28.35	29.86	23.91
VIII	16.80	15.06	5.02	3.98	6.58
IX	19.46 <sup>6)</sup>	15.10 <sup>6)</sup>	8.42	8.10	6.08
X	3.38	1.21	0.97	0.82	0.16
XI	0.75	0.37	0.13	0.05	0.87
XII	0.17	0.03	0.06	0.02	1.28
XIII	0.23	0.37	0.36	0.44	0.02
XIV	0.01	-	0.25	0.61	0.54
XV	0.51	0.01	0.05	0.06	0.38
XVI	23.96	29.21	26.62	13.25	12.93
XVII	2.03	3.49	10.16	15.44	11.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제9차 개정 국제질병분류(ICD)에 기초한 제2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1979)의 17대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제10차 개정 ICD에 기초한 제3차 개정 한국표준분류(통계청, 1995)의 눈과 귀의 질환을 'VI.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에 포함하였음.

2) 원래 제5차 개정 ICD를 기초로 분류한 것(石南國, 1972: 153)을 제7차 개정 ICD에 따라 재분류 하였음(T.H. Kim, 1990: 74).

3) 제7차 개정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분류한 것임.

4) 평균수명의 해당 연도와 출처는 다음과 같음: 42.6세(1936~1940년), 石南國(1972); 55.2세(1960~1965년), D.W. Lee(1973); 66.2세(1981), 70.8세(1989) 및 75.6세(1999), 통계청(2001j).

5) 제2차 개정 한국표준분류의 'VII. 순환기계 질환'에 속한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순환기계 장애'를 포함.

6) 제2차 개정 한국표준분류의 'I.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속한 '신생아의 설사'를 제외한 '장염·대장염'을 포함.

자료: 1938~1942년: 권이혁(1968: 50); 1966년: 경제기획원(1968: 84); 1980~1981년: 경제기획원(1982b, 1983); 1990 및 2000년: 통계청(1992b, 2001j).

주요사망원인을 비교하였다. 국제질병분류의 개정에 따라 사망원인의 분류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사망원인의 중요도에 따른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므로 각 연도의 주요사망원인을 직접 비교하였다.

〈표 4-9〉 10대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 1966~2000

순위	1966 <sup>1)</sup>	1980~81 <sup>2)</sup>	1990 <sup>3)</sup>		2000 <sup>3)</sup>	
			사인	사망률 <sup>4)</sup>	사인	사망률 <sup>4)</sup>
1	폐렴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110.4	악성신생물	122.1
2	결핵 <sup>5)</sup>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75.6	뇌혈관질환	73.2
3	중추신경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심장질환	47.4	심장질환	38.5
4	악성신생물	사고 <sup>6)</sup>	운수사고	39.7	운수사고	25.4
5	위염, 장염 등	심장질환	고혈압성 질환	35.6	간질환	22.9
6	사고 <sup>6)</sup>	결핵 <sup>5)</sup>	간질환	33.8	당뇨병	22.6
7	독감	간질환	당뇨병	11.8	만성하기도 질환	16.8
8	심장질환	기관지염 및 천식	호흡기계 결핵	11.0	자살	14.6
9	홍역	폐렴	만성하기도 질환	10.5	고혈압성 질환	8.9
10	기관지염	자살	자살	9.8	폐렴	8.2

주: 1) 제7차 개정 ICD 50대 항목의 사망원인 기준; 2) 제9차 개정 ICD 55대 항목의 사망원인 기준; 3) 제2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인 순위 선정을 위한 선택 56항목의 사망원인 기준(통계청, 2001e: 270-272); 4)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임; 5) 모든 결핵 포함; 6) 모든 사고 포함.  
자료: 1966년: 경제기획원(1968); 1980~1981년: 경제기획원(1982b, 1983); 1990년 및 2000년: 통계청(2001j: 8).

〈표 4-9〉를 보면, 1966년에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폐렴과 결핵이었다. 그리고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에는 개발도상국의 주요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그리고 전염성 질병에 속한 사망원인이 6가지(폐렴, 결핵, 위염 등, 독감, 홍역, 기관지염)나 되었다. 이러한 질병의 순위는 1980~1981년에 크게 바뀌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악성 신생물과 고혈압성 질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66년에 10대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위염 등과 독감, 홍역은 빠지고(1980~1981년에), 사고, 간질환, 자살 등이 새로 10대 주요 사망원인으로 포함되었다.

〈표 4-9〉에서 1990년 이후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운수사고가 4대 원인으로 고정되었다. 나머지 6대 사망원인은 1990년에 있던 호흡기계 결핵이 빠지고, 2000년에 폐렴이 포함된 것 외에는 사망원인의 순위가 서로 바뀐 정도로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사망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사망원인별 사망률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변화에서 보면 악성 신생물과 당뇨병의 경우 각각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12명과 5명 정도나 늘어났다. 그리고 만성하기도 질환과 자살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였다.

## 2. 성·연령별 사망원인

사망원인은 연령과 성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 유아기에는 주산기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이 주요 사망원인이지만, 청소년기에는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 그 후에는 악성 신생물과 뇌혈관 질환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된다(통계청, 2001j: 24-25). 한편, 사망률의 차이가 큰 것과 같이 성별 사망원인도 그 차이가 뚜렷하다. 예를 들면, 40~49세의 경우 간질환과 자살이 남자의 주요 사망원인 순위가 각각 2위와 6위이지만, 여자의 경우 그 순서가 바뀌어 각각 4위와 6위가 된다. 이와 같이 성, 연령별 사망원인의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고,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이 유형의 변화를 <표 4-10>에 정리하였다.

이 표는 사망률이 높고,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5세 이상에서는 10세 계층별로 분류하여 노인의 사망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증상·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XVI)의 구성비가 커지므로 구성비의 변화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성, 연령별 구성비의 순위의 변동을 중심으로 성, 연령별 사망원인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4-10>을 보면, 1981년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의 질환(VII)이었다.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사망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구성비를 보이는 질병분류는 젊은 연령층(35~54세 또는 35~64세)에서 신생물(II)이었으며, 그 후에는 질병분류 VIII의 구성비

〈표 4-10〉 성, 연령 및 사망원인별 사망자 구성비의 변화, 1981~2000

사망 원인 <sup>1)</sup>	1981				1990				2000			
	35~54	55~64	65~74	75+	35~54	55~64	65~74	75+	35~54	55~64	65~74	75+
남 자												
I	5.91	4.71	2.74	1.22	4.31	3.64	3.01	1.94	3.47	2.73	2.77	3.04
II	16.16	16.90	10.36	3.63	24.35	34.34	25.58	10.98	24.86	38.04	36.59	20.42
VII	25.92	30.18	29.10	22.30	21.30	30.06	34.53	35.55	15.74	21.28	25.73	25.20
VIII	1.91	2.60	4.00	4.88	2.13	3.67	4.84	6.23	2.54	4.80	8.21	11.99
IX	14.34	10.59	6.68	4.24	18.57	12.24	6.88	4.49	16.05	9.87	5.48	3.84
XVI	18.30	26.81	42.45	60.64	0.59	0.77	15.27	33.43	3.65	1.84	4.70	21.59
XVII	13.23	4.99	2.32	1.12	23.51	9.93	5.29	3.25	25.28	11.93	6.51	3.72
기타	4.23	3.22	2.35	1.97	71.25	5.35	4.60	4.13	8.41	9.51	10.01	10.2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 자												
I	4.86	2.52	1.47	1.11	3.25	1.81	1.50	1.27	2.57	2.01	1.93	1.94
II	22.00	17.22	8.83	2.83	33.69	31.79	19.14	6.47	39.32	36.36	26.45	10.72
VII	29.31	34.02	31.59	22.88	29.74	40.72	42.11	37.21	17.74	28.52	35.03	28.49
VIII	1.81	2.68	4.12	4.44	2.18	2.59	3.83	5.64	2.45	3.54	5.26	8.26
IX	8.75	7.64	5.08	3.96	7.72	6.43	4.44	3.59	6.24	5.23	4.06	3.01
XVI	19.42	28.00	43.90	61.98	0.51	0.75	17.32	38.80	2.24	1.50	5.45	31.16
XVII	8.26	3.92	2.33	0.96	15.75	8.48	4.82	2.52	20.55	9.63	5.54	2.90
기타	5.59	4.00	2.68	1.84	7.16	7.43	6.84	4.50	8.89	13.21	16.28	13.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제3차 개정분류의 '눈과 귀의 질환'을 'VI.신경계질환'에 포함하여 총 17개 분류로 조정하였음.

자료: 1981년: 경제기획원(1982b); 1990년: 통계청(1992b); 2000년: 통계청(2001j).

가 높았다. 또한 2000년 남자 35~54세의 경우에는 손상 및 중독(XVII)의 사망 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지난 1981년에 전 연령층에서 순환기계의 질환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1990년 이후에는 젊은 연령층부터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00년에는 35~54세에서 사고 및 중독에 의한 사망이 주를 이루고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주를 이루는 연령계층은 남자의 경우 65~74세까지 이어졌다.

성별 사망원인의 전반적인 유형은 비슷하지만 연도별로 연령별 사망원인 구성비의 차이가 뚜렷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성별 구성비의 차이가 가장 큰 사망원인은 소화기계의 질환(Ⅸ)이었으며, 64세 이하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2000년까지 동일하였다. 이것은 사망률의 감소와 함께 소화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도 감소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4-11〉 참조). 그리고 사고 및 중독(ⅩⅧ)에 의한 사망구성비도 남녀 모두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남자의 경우 다른 질병 분류의 사망구성비의 증가보다 빨라서 2000년에는 35~54세에서 가장 높은 구성비를 기록하였다. 또한 사망률이 낮아질수록 신생물(Ⅱ)에 의한 사망구성비가

〈표 4-11〉 남자의 연령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성비, 2000

연령별 사망원인 <sup>1)</sup>	사망률 <sup>2)</sup>		사망률 성비 (여자: 100.0)	상대적 성비 (전체성비: 1.00)
	남자	여자		
30~39 전체	179.0	77.2	231.8	1.00
1) 악성 신생물	25.3	23.8	106.3	0.46
2) 간질환	16.4	2.1	780.9	3.37
3) 운수사고	32.7	8.2	398.8	1.72
4) 심장질환	10.7	3.4	314.7	1.36
5) 뇌혈관 질환	7.8	3.8	205.2	0.88
40~49 전체	441.0	148.7	296.6	1.00
1) 악성 신생물	98.2	57.1	171.9	0.58
2) 간질환	68.4	7.8	876.9	2.95
3) 운수사고	43.9	11.1	395.5	1.33
4) 심장질환	33.2	8.5	390.6	1.31
5) 뇌혈관 질환	31.0	14.6	212.3	0.71
50~59 전체	1,007.3	355.6	283.2	1.00
1) 악성 신생물	341.8	136.7	250.0	0.88
2) 간질환	117.3	19.1	614.1	2.17
3) 운수사고	61.1	19.2	318.2	1.12
4) 심장질환	76.8	23.9	321.3	1.13
5) 뇌혈관 질환	99.7	53.1	187.7	0.66

주: 1) 남자 40~49세의 사망원인 상위 5항목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비의 변화를 비교.

2) 2000년 사망신고자료와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계산.

자료: 통계청(2001c, 2001i, 2001j).

높아지는 것은 남녀 모두 동일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더 빨리 노년층의 중요 사망원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젊은 연령층(35~54세)의 주요 사망원인은 남녀 모두 사고 및 중독(XVII)이 될 것이고, 신생물(II)이 노년층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근골격 및 결합조직의 질환(VIII)에 의한 사망 구성비가 남녀 모두 노인(특히 75세 이상)에게서 빠르게 증가하여 신생물(II), 순환기계 질환(VII)과 함께 노인의 3대 사망원인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1999년에 7.5년)는 선진국의 평균치(6.4년)보다 높다(통계청, 2001f: 19).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연령별 사망유형이 극동모형에 속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하여 연령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성별로 비교하였다(〈표 4-11〉 참조).

우리 나라 남자 사망유형의 특징은 40대 이후 사망률이 다른 연령계층이나 여자의 사망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표 4-11〉에서는 남자 40~49세 연령계층의 5대 주요 사망원인의 사망률을 중심으로 30대와 50대, 그리고 여자의 사망률을 비교하여 남자 40대 사망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를 사망원인의 특성에서 찾았다.

남자 40~49세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41.0이었으며, 이것은 여자(148.7)의 2.9배에 해당되어 전체 연령계층에서 사망률의 성비가 가장 높았다. 이때 남자 사망의 5대 주요원인은 악성 신생물, 간질환, 운수사고,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이었다. 이 중에서 사망률 성비가 가장 높은 것은 간질환(876.9)이었으며, 운수사고(395.5)와 심장질환(390.6)도 전체평균(296.6)보다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30대와 50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30대에서는 사망률의 절대수준이 낮았고, 50대에서는 여자의 사망률도 빠르게 상승하여 사망률의 성비가 낮아졌기 때문에 남자 40대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사망원인으로 위의 세 가지 질병을 들 수 있다. 〈표 4-11〉에서 40대 전체의 사망률 성비를 1.0으로 놓았을 때 위의 세 질병에 의한 사망률의 상대적 성비는 1.3보다 높았으며, 특히 간질환의 경우는 평균 성비의 3배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성비는 1980~1981년 35~44세의 간질환(4.17)이나 각종 사고

(2.81)(T.H. Kim, 1990: 80)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남자 사망유형이 극동모형에서 세계 평균 모형인 서부모형에 접근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3.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기대여명

위에서 우리는 성,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의 구성비와 사망률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유형과 그 변화, 그리고 성·연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면 주요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변화와 이 사망원인을 제거하였을 경우 평균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표 4-12〉에서 1990년이래 주요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변화를 성별로 비교하였다. 순환기계 질환과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률은 남녀 모두 22~29% 감소하였으나, 각종 암에 의한 남녀의 사망률은 각각 14%와 6%씩 증가하였다. 각종 암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대장암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위암과 간암의 사망률 감소분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고혈압성 질환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로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아졌고, 운수사고와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의 감소로 각종 사고사의 사망률이 낮아졌다.

그 외 사망원인 중에는 호흡기계 결핵과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에서 남녀 모두 30%이상 감소하였으나 당뇨병과 만성하기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가 컸다. 특히 당뇨병에 의한 여자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는 남자의 사망률보다 높아졌다.

우리 나라의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여 1999년에 0세에서 기대여명(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71.7세와 79.2세이었다(통계청, 2001f). 이것은 4년 전에 비하여 남녀 각각 2.1세와 1.8세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사망률이 감소하고 기대여명이 증가한 것은 대부분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이 감소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감소정도가 서로 상이하고, 어떤 사망원인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기대여명의 증가폭을 둔화시키고 있다.

〈표 4-13〉은 1995년과 1999년에 특정 사망원인을 제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표 4-12〉 성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변화, 1990~2000

(단위: 인구 10만 명당)

주요 사망원인	1990		2000		증감률 (%)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각종 암 <sup>1)</sup>	136.9	82.9	155.8	88.2	14.0	6.4
위암	39.1	23.6	31.3	17.2	-19.9	-27.1
대장암	4.4	4.5	9.4	8.3	113.6	84.4
간암	35.4	12.0	32.5	10.0	-8.2	-16.7
폐암	20.8	7.7	36.1	12.6	73.6	63.6
순환기계 질환 <sup>2)</sup>	165.8	163.9	119.0	127.4	-28.2	-22.3
고혈압성 질환	36.8	34.7	6.7	11.2	-81.8	-67.7
허혈성 심장 질환	11.3	9.6	24.0	19.0	112.4	97.9
뇌혈관 질환	75.0	77.3	69.4	77.1	-7.5	-0.3
기타 심장 질환	37.4	36.9	16.2	17.8	-56.7	-51.8
각종 사고사 <sup>3)</sup>	121.3	45.7	85.8	35.5	-29.3	-22.3
운수사고	57.9	20.3	36.8	13.9	-36.4	-31.5
추락사고	5.5	1.6	7.7	3.8	40.0	137.5
익수사고	6.6	1.6	5.4	1.5	-18.2	-6.3
자살	13.2	6.3	20.3	8.9	53.8	41.3
기타주요사망원인						
호흡기 결핵	16.0	5.7	9.7	3.8	-39.3	-33.3
당뇨병	12.9	10.8	22.5	22.7	74.4	110.2
만성하기도 질환	10.9	10.3	18.9	14.6	73.1	41.7
간질환	53.1	13.0	36.9	8.7	-30.5	-33.1

주: 1) 췌장암,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을 포함.  
 2) 류마치스성 심질환, 기타심장질환 및 동맥경화증을 포함.  
 3) 화재사고, 중독사고, 피살 및 기타 사고사를 포함.  
 자료: 통계청(2001i).

기대여명의 증가를 성, 연령별로 정리한 것이다. 연령은 평균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0세와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65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 나라의 3대 사망원인인 각종 암, 순환기계 질환 및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을 제거한다면 1999년에 남자의 경우 평균수명이 13.28세가 증가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7.95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1995년에 비하여 남녀 각각 1.94세와 1.26세가 길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1999년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85.0세와 87.2세로 증가하며, 남녀의 평균수

(표 4-13) 특정사인 제거시 연령별 증가 기대여명, 1995 및 1999

(단위: 년)

사망원인	1995				1999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세	65세	0세	65세	0세	65세	0세	65세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결핵	0.44	0.35	0.14	0.07	0.57	0.45	0.23	0.13
	0.26	0.23	0.02	0.00	0.43	0.36	0.14	0.08
각종 암(악성 신생물) 위암 간암 폐암	4.72	3.67	2.46	1.55	5.01	3.94	2.60	1.62
	0.92	0.83	0.44	0.29	1.16	1.05	0.61	0.44
	0.98	0.67	0.21	0.11	1.17	0.84	0.34	0.22
	1.01	0.99	0.25	0.19	0.99	0.97	0.30	0.2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당뇨병	0.68	0.62	0.59	0.52	0.64	0.58	0.56	0.47
	0.63	0.59	0.54	0.49	0.59	0.55	0.51	0.41
순환기계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3.62	3.21	3.08	2.64	4.45	4.12	3.79	3.20
	2.06	2.02	1.88	1.66	2.50	2.53	2.26	1.97
	0.12	0.15	0.13	0.12	0.52	0.56	0.50	0.45
	1.23	1.01	0.84	0.70	1.29	1.07	0.92	0.75
호흡기계 질환 폐렴	0.89	0.95	0.41	0.37	0.90	0.92	0.52	0.44
	0.18	0.20	0.04	0.02	0.17	0.14	0.11	0.07
소화기계 질환 간질환	1.42	0.87	0.37	0.23	1.99	1.30	0.57	0.40
	1.16	0.66	0.20	0.08	1.64	1.00	0.35	0.20
각종 사고사(사망의 외부요인) 운수사고 자살	3.00	1.27	1.15	0.40	3.82	1.56	1.56	0.54
	1.24	0.52	0.41	0.13	1.97	0.83	0.75	0.28
	0.62	0.28	0.22	0.02	0.48	0.22	0.23	0.07

주: 심장 질환은 허혈성 질환을 포함한 모든 심장 질환임.

자료: 통계청(1997b, 2001f).

명의 차이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즉 우리 나라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가 큰 것은 위의 3대 질환에 의한 성별 사망률의 차이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65세에서의 기대여명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망원인도 위의 3대 사망원인과 동일하지만,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0세 때와 크게 차이가 난다. 즉, 순환기계 질환을 제거했을 때 65세에서 증가하는 기대여명은 0세 때와 비슷하였으나, 각종 암과 각종 사고사의 경우에는 크게 줄어든다. 이들 질환에 의한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 기대여명의 차이도 뚜렷하였다.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여명)의 증가에서 각종 암, 소화기계 질환(간질환), 각종 사고사 등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65세에서의 기대여명에서도 동일하였으며, 1995년 이후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 Ⅶ. 맺는 말

우리 나라 사망력의 변화와 유형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우리 나라의 사망력변천은 1980년대에 마무리된 제3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 향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사회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망력변천이 완결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 나라의 조사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졌으나 1990년대 이후 6.0 미만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다시 상승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셋째로, 1970년대까지 우리 인구에서 나타난 5~14세와 20대에서 여자의 사망률이 남자보다 높은 현상은 전반적인 사망률의 감소와 함께 사라졌다. 이것은 그 동안 출산율이 낮아졌고, 남아선호에 따른 자녀에 대한 양육의 차이가 소멸되는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UN의 극동모형에 속한다고 하던 우리 나라의 남자 사망유형은 1980년대 이후 그 특성이 소멸되고, 서구의 평균유형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망유형의 변화로 볼 때 극동모형은 사망력의 변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망력의 감소와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사망력변천의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하여 사망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정도와 혼인상태별 사망력의 차이로 이들 변인의 변화가 성·연령별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교육수준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교육수준에 따라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나 보건 등의 서비스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우선 1970년대 이래 약 30년 동

안 교육수준별 사망위험의 차이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정도별 사망위험의 상대적인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학력별 사망률의 차이가 커졌으며, 남녀 모두 동일한 유형으로 변화하였다. 우리 나라의 결혼상태별 사망수준의 차이는 뚜렷하였으며, 그 유형은 지난 30년 동안 크게 변화하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높아지면서 유배우 인구와 미혼 인구간의 사망수준의 차이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서 점차 작아지고 있다. 여자의 미혼율 상승속도가 남자보다 빠르므로 사망률감소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를 지나서 미혼이나 독신상태로 있는 인구의 교육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가 교육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정도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후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연령계층인 45~55세의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비를 표준화하여 추정자료와 비교하였다. 교육수준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남녀 모두 미혼자와 사별, 이혼 및 별거자의 사망률이 유배우자의 사망률에 비하여 약 2배(기타 여자)에서 약 4배(미혼남자)나 높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는 교육정도별 차이와 함께 우리 나라 사망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별 사망수준의 차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조는 사회경제개발과 함께 변화하므로, 사망수준과 이들 구성비 변화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사망수준의 감소정도가 큰 것은 교육수준의 향상이 사망수준의 감소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교육정도와는 반대로, 사망수준에 미친 혼인상태의 영향은 남·여 미혼 인구구성비의 증가로 사망수준을 높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사망력의 변천과정에서 개별 사망의 원인과 전체 사망원인의 유형이 함께 변한다. 지난 1966년에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폐렴과 결핵이었다. 그러나 1980~1981년에는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악성 신생물과 고혈압성 질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운수사고가 4대 원인으로 고정되었다.

우리 나라 남자 사망유형의 특징은 40대 이후 사망률이 다른 연령계층이나 여자의 사망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자 40~49세 연령계층의 5대 주요 사망원인의 사망률을 중심으로 30대와 50대, 그리고 여자의 사망률과 비교하였다. 남자 사망의 5대 주요원인 중에서 사망률 성비가 가장 높은 것은 간질환이었으며, 운수사고와 심장질환도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이후 크게 낮아졌으므로 우리 나라 남자 사망유형이 극동모형에서 세계 평균유형인 서부모형에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70년을 상회하고,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10명 이하로 낮아지면서 사망력변천이 완료되었고, 남자의 연령별 사망률이 여자의 경우보다 빨리 낮아지면서 UN 극동모형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20대 이후 남자의 연령별 사망률이 여자보다 2~4배나 되고,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건강한 국민생활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녀의 연령별 사망률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흡연과 음주의 영향을 받는 간질환, 고혈압, 폐암 등 각종 암, 운수사고 등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동안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교육수준별 사망률의 차이는 더욱 커졌으며, 미혼이나 이혼 및 사별의 경우도 여전히 높은 사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과 가족 생활이 더욱 만족스러워 지고, 개인이 건강한 생활습관에 익숙해진다면 성별 사망수준의 차이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과 보건의료지원의 확대는 계층간의 사망수준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안정된 가족의 형성과 만족스러운 가족생활이 건강한 삶과 장수의 길이라고 한다면 최근 변하고 있는 혼인행태와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 백

## 제5장 국제이동과 해외 한인사회

권 태 환

### I. 머리말

한국은 전통적으로 폐쇄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세기 초 일제의 침략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오랜 동안 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유지해 왔다. 한국인은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생계체계나 친족조직, 의식주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이나 일본 문화와는 매우 다른 속성을 보였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전통 한국에서 국경을 넘어선 인구의 이동이 거의 없었던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거꾸로 문화적 폐쇄성은 한국인의 국제이동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하간 인구이동의 폐쇄성은 전통 한국사회의 핵심 성격의 하나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성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폐쇄성은 19세기 후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연이은 흉작과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굶주린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초부터는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는 인구의 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반대로 1945년에 우리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막대한 인구의 유입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주로 남한지역으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분단으로 두 지역은 각기 다른 인구과정을 겪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남북한 사이의 이동을 제외하면 1950년에서 1960년 사이

에는 국제이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남한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주로 노동과 농업이민으로 규정되는 독일과 남미로의 이동을 그 시발점으로 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의 이민법 개정으로 미국으로의 대량이민이 발생하여 그 곳에 새로운 한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체류자들은 1950년 이후 각각의 지역에서 독자적이고 독특한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삶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 공동체는 세대교체 및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함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해외 한인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국제이동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주요 해외 한인사회로 꼽히는 중국, 일본 및 미국에 형성된 동포사회의 성격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 II. 국제 이동의 개관

### 1. 디아스포라의 시작

현재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사회의 형성은 조선왕조 말기인 1860년대에 굽주린 함경도 주민의 만주(또는 간도)와 연해주로의 월경 이주를 그 효시로 한다. 즉, 당시 육진 지방에 발생했던 약 10년 간에 걸친 흉작의 결과로 먹을 것이 없던 농민들이 사람이 살지 않고 토지가 비옥한 간도 지방으로 이주한 것을 중국은 물론 해외 한인 집단거주지 형성의 출발로 여기고 있다. 이 시기(1860년대)에 간도지방에 이주하여 거주한 한인 즉 조선족의 총 숫자는 약 7,700명으로 알려져 있다(崔昌來 외, 1989: 771). 이후 간도로의 월경 이동자는 계속 늘어 1910년에는 20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1860년까지 만주에 속해 있다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된 연해주에는 1882년 조선인이 10,137명에 이르렀고, 이는 러시아인 보다도 많은 숫자였다. 그 이후 민족별 인구에서는 러시아인에 뒤지지만 러시아의 조선인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02년에는 32,410명, 1908년에는 45,396명, 1926년에는 188,480명으로 늘어났다(고승제, 1973: 55-59).

〈표 5-1〉 1860~1890년대의 한국의 디아스포라 요인

1852	흉년이 들어 유랑민이 많아짐.
1853	전국에 아사자가 많이 생김.
1856	영남에 수재 심함.
1862	진주민란이 일어나 충청, 전라, 경상도에 파급. 제주, 함흥, 공주 등지에 민란.
1863	남해에 민란.
1875	울산에 민란.
1878	경상, 전라도에 수해가 심함.
1880	함경도민, 악정과 착취로 국경을 넘어 도망하는 자가 많음.
1889	길주, 정선에서 민란이 일어남. 흉년.
1890	함창현에 민란.
1892	함흥부 덕원부 민란. 경상도 민란. 평안도 검천, 강계 민란.
1893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계속 일어남.
1894	동학란 시작. 청일전쟁 일어남.
1895	을미사변 일어남.
1899	전주, 임파 등서 민란.

자료: 권태환 · 신용하(1977: 322-323).

그러나 당시 간도나 연해주로의 월경 이주는 함경도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흉작과 기근은 함경도 지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조선왕조실록은 당시 흉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미 1850년대 초부터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어 유랑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이후 각종 재앙이 전국을 강타하였다. 그리고 1862년에는 굶주림과 학정으로 인해 진주민란이 발생했고, 민란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그러한 굶주림과 사회적 혼란은 1894년에 발생한 동학란으로 귀결된다. 만약 기근이 국내 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어떤 특정 해에만 발생했다면 정부의 구호미 방출이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전국적인 기근과 정치적 혼란은 국경 근처의 사람들에게는 월경 이주의 선택을 강요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웃 지역의 땅이 비옥하고 비어있다고 할 때,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선택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미 1880년 함경도민 가운데 약정과 착취로 인해 국경을 넘어 도망하는 자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조선 전체의 인구규모로 볼 때, 19세기 후반 간도로의 이주 규모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함경도민의 숫자가 200만 명을 넘지 않았고, 월경 이주가 집중된 함경북도의 인구가 60만 명 이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곳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sup>1)</sup> 지난 1990년의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연변지역의 함경도가 고향인 조선족 가운데 함경북도 출신이 9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복·권태환, 1993: 74). 이러한 점은 당시 월경이주가 지역적 특성을 매우 강하게 띠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간도로의 이주자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주를 결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도 중국과 조선의 국경통제가 철저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즉 1880년대 간도로의 이주의 또 다른 요소로는 국경통제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이미 조선에서는 빈곤과 정치적 혼란으로 국경통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그 동안 만주족의 고향 즉 성지로 여겨 봉금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간도지방에 대한 이주가 청조의 퇴조와 함께 완화되어, 조선인의 이주는 비교적 쉬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식민지 시대의 대 탈출

조선으로부터의 인구탈출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가속화되고 조선내의 이동 지역은 물론 대상 이주지역도 다양해진다. 한 마디로 주로 일제시대로 대표되는 20세기 전반기는 우리 나라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20세기 우리 나라의 새로운 디아스포라는 1903~1905년 사이의 미국 하와이와 멕시코로의 노동이주를 그 출발로 한다. 그 수는 미국 7,394명과 멕시코 1,031명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Kim and Patterson, 1974: 90; 전경수, 1996: 41). 그리고 하와이로의 이주도 그곳 일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1) 1925년 간이국세조사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인구는 593,000명, 함경남도는 138,000명으로 보고되었다.

〈표 5-2〉 중국과 일본의 조선인 거주 상황, 1910~1944

(단위: 명, %)

연도	중국		일본	
	총수	연 성장률	총수	연 성장률
1910	220,000		790*	
1915	282,070	3.36	3,989	26.99
1920	459,427	9.76	30,175	40.47
1925	531,973	2.93	133,170	29.69
1930	607,117	2.64	298,091	16.12
1935	826,570	6.17	628,678	14.92
1940	1,450,384	11.24	1,190,444	12.77
1944	1,658,572	3.35	1,936,861	9.73

주: \*: 1909년도.

자료: 한상복·권태환(1993: 27); 이문웅(1996: 53-54).

압력으로 1903년 이후 중단되었다(Yoon, 2001: 25). 결과적으로 바다를 건너 이주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합병된 다음 일본으로의 이주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191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910년대까지는 기존의 만주와 연해주로의 이주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일 합방(1910년)은 조선인에게 새로운 이주의 조건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라를 빼앗긴 울분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도층의 만주로의 이동과 일제의 조직적인 농업착취로 인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그것이다. 가령 1910~1920년 사이에 만주 조선인 인구의 수는 약 220,000명에서 459,500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이주지역도 간도를 벗어나 다른 만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주자 가운데 귀환자도 30% 가까이 이르러 한일 합방 이후 조선과 만주 사이의 왕래가 매우 쉬워졌음을 알 수 있다.<sup>2)</sup> 그러나 1920년 이후 만주로의 이주는 급속히 줄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본이 조선인의 만주로의 이동을 억제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만주로의 이동의 주 기원지인 북쪽 국경지역

2) 송할(1965: 31)에 의하면 1911~1920년 사이 조선에서 만주로의 이주자는 325,700명에 달한다. 반면 1910~1920년 사이의 만주의 조선인 인구증가는 약 240,000명에 이른다.

인구의 감소로 인해 만주 이동의 규모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한편 1920년대 이후 일본으로의 노동이동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물론 이에는 일본 노동자에 비해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이 1/2내지 1/3에 불과할 정도의 싼 임금이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인의 이주가 전체 식민지정책의 틀에서 짜여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주로의 이동과 일본으로의 이동을 분리시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일제시대 대부분의 조선인, 특히 가난한 농민의 생활은 토지조사사업에 기초한 토지수탈로 더욱 어려워졌다. 땅을 잃고, 빚을 져 살길이 없던 이들은 몰래 도망하여 만주나 연변,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향하였다. 특히 전에 탈출구가 막혀 있던 남쪽 지방 거주자들은 대거 일본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말 세계 공황의 여파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조선 탈주의 물결은 더욱 거세졌다. 가령 1930년대 만주로의 총 이동자수는 740,7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총 거주자수는 607,000명에서 1,450,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으로의 총 이주자수도 비슷한 숫자인 728,900명으로 조사되었다(朴在一, 1957: 22-32). 특히 1930년대 후반기 만주 이동자의 급격한 증가에는 조선총독부의 집단 농업이주정책의 영향이 컸다(한상복·권태환, 1993: 29-36). 이러한 조선인의 만주로의 이동은 1939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거의 중단되었다.

반면 일본으로의 이동은 일본의 조선침략 이후 지속적으로 빠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고, 이는 당시 일본 정부의 자국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선인 노동이동의 억제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준비로 1939년부터 노동동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일본으로의 이주자수는 급격히 늘어난다. 일본으로 동원되어간 조선인 노동자의 총수는 1939~1944년의 6년간 692,000명에 이르렀고, 약 30%에서 시작한 전체 이동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높아져 전쟁 말기에는 다른 이동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Kwon, 1977: 185). 전쟁과정에서 일본 조선인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조선으로 가서 일본 조선인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

는 사람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sup>3)</sup>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형성된 중국의 조선인 인구는 1910년 220,000명에서 1920년 459,000명, 1930년 607,000명, 1944년에는 1,659,000명으로 늘어 45년간 약 7.5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면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될 당시 거의 없었던 일본의 조선인 거주자는 1928년에 238,000명, 1938년에 800,000명으로 늘었고, 1943년에는 1,882,500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당시 중국과 일본의 조선인 수는 각각 1,700,000명과 2,000,0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로의 이주자들의 수는 1923년 100,000명, 1936년 200,000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비공식 추정에 따르면 1920년대 말에 그 수가 250,000명에 달하고, 1930년대 후반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고려인(조선인)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조선인 유입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송무, 1990: 13, 28-29).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조선인의 외국으로의 이주자는 1945년 해방 당시 약 400만 명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95%에 이르는 380만 명이 1910~1945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한 총 조선인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 3. 해방과 귀환이동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과 우리 나라의 해방은 일본과 중국 조선인들의 대규모 귀환이동을 초래하였다. 특히 귀환이동은 비교적 이동의 역사가 짧고, 후기에는 강제 징집이 주를 이루었던 일본에서 컸다. 또한 1945년의 해방은 남북한의 분단을 가져와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국가 경계가 그어졌고,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이동이 이 두 지역 사이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 민족의 국제이동은 남한과 북한을 나누어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인구이동에 대한 통

3) 1941~1944년 순 이주자수가 739,244명인데 반해, 당시 조선인 총 이주자수는 984,506명이었다. 이는 단기간내의 귀국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won, 1977: 180, 185).

〈표 5-3〉 해방 이후 남한 지역으로의 귀환자 및 이입자

(단위: 천 명)

출발지	신고 자료		인구총조사 (1949년)	추정값	
	외무부	사회부		김철	권태환
일본	1,118	1,407	936	1,300	1,379
만주 외 북한	423	619	270	430	416
총계	2,190	2,482	1,687	1,880	2,535

자료: Kwon(1977: 177).

제가 매우 심했고, 결과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국제이동은 한국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해방이후의 국제인구이동은 남한을 위주로 고찰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일본, 만주와 북한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도시에 몰려든 생계가 막연한 이입자들의 구호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관되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는 외무부의 집계와 사회부의 집계 그리고 1949년 인구총조사 집계가 있다. 한편 추정값으로는 金哲과 권태환의 것이 있다. 〈표 5-3〉에 제시된 이들 자료는 출처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가령 일본으로부터 귀환한 사람은 94만에서 141만의 숫자를 보이고, 만주와 기타 지역으로부터는 62만 명에서 27만 명,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이입자는 74만에서 15만으로 큰 차이가 난다.<sup>4)</sup> 공식 자료들은 그 수집 목적과 방법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가령 구호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부 자료가 나타내는 이동의 규모는 큰 반면, 1949년 센서스에서 파악된 수치는 일본과 만주로부터의 이동자의 경우 그 완전성이 2/3에 불과하다. 아마도 그 주요 원인은 센서스가 이미 귀환자들이 정착한 다음에 실시되어 이전의 거주지로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누락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부의 신고에는 구호양곡과 약품을 받기 위한 거짓 보고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추정값 가운데 金哲의 북한 숫자에는

4) 이들 자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Kwon(1977: 176-179) 참조.

〈표 5-4〉 해외 거주 한인의 추세, 1970~2000

(단위: 명, %)

연도	총수	연평균 성장률	중국, 독립국연합 제외	연평균 성장률
1970			702,928	
1975			1,016,016	7.37
1980			1,590,832	8.97
1985			2,006,216	4.64
1989			2,320,099	3.63
1991	4,943,590		2,890,597	10.99
1996	5,544,229	2.29		
2000	5,653,809	0.49		

주: 자료의 기준시점이 1월 1일자로 되어 있어 통상 인구학의 관례에 따라 전년도 연말 인구로 가정함.  
자료: 외교통상부(2002).

주로 피난민만 포함되고 고향이 남한 지역인 사람으로서 일제 말기에 북한 지역으로 노동이주를 한 사람들의 귀환이 빠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해방 직후 귀환이동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자는 총 150만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130~140만 명 정도가 남한지역으로 이주하였다.
- (2) 만주에서 귀환한 사람은 총 70~80만 명 정도로 그 가운데 남한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은 40만이 조금 넘는다.
- (3) 북한지역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은 귀환자와 피난민으로 구분된다. 둘을 합한 총수는 65~7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4) 러시아로부터는 귀환이 거의 없었다.

총괄적으로 일제시대의 이주자 약 400만 명 가운데 한반도로 돌아온 사람은 총 220~230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남한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은 180~190만에 이른다.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을 합하면 남한의 인구는 국제이동으로 인해 1949년 인구의 12~13%에 해당하는 250~260만이 늘어난 셈이 된다. 반면 북한은 오히려 인구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한마디로 해방으로 야기된 국제이동은

남한 지역에 엄청난 인구압력을 집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동

한국(남한)에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다시 본격화된 것은 1960년 이후이다. 해방 이후 해외 한인의 대규모 유입으로 엄청난 인구압력에 시달리던 한국인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광부와 간호원으로 구성된 독일로의 노동이민과 남미에로의 농업이민이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신천지를 향한 새로운 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으로의 이민에 의해 촉발되었다. 미국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940년 8,568명, 1970년 65,150명에 불과하던 미국 내 한인의 수는 2000년에 1,076,872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공관을 통한 집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말 미국 영주 한인은 176만 명에 달하고, 일시 거주자까지 합하면 210만 명이 넘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가 된 셈이다. 다음이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의 순서로 되어있다. 이들 국가의 한인 거주인구는 각각 50만 명을 넘고 이들 4개국에 해외 한인거주자의 91.5%가 집중되어 있다. 다음이 캐나다로 14만 명, 브라질과 호주의 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국 정부는 2000년 말 현재 565만 명 정도의 해외 한인 인구가 150여 국가에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970년까지만 해도 해외 거주 한인의 수는 중국, 일본, 소련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기타 국가의 한인 수는 1991년에는 246,000명으로 그리고 2000년에는 481,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 해외 한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거주 국가의 집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으로 분산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세계(New World)’로 향한 1960년대의 이동은 초기에는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지탱하기 어려운 많은 인구와 빠른 인구증가를 한국의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보고 1962년에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채택하였다. 가족계획을 통한 출산력 억제와 함께 정부는 인구의 해외이민을 추진

〈표 5-5〉 해외 거주 한인의 수, 2000

(단위: 명, %)

지역/국가	총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b+c	(d/a)*100	a의 %분포
	a	b	c	d	e	f
아태 지역	2,670,723	1,756,825	582,530	2,339,355	87.6	47.2
일본	640,234		551,942	551,942	86.2	11.3
중국	1,887,558	1,738,200	1,696	1,739,896	92.2	33.4
대양주	65,565	18,383	27,099	45,482	69.4	1.0
기타	77,366	242	1,793	2,035	2.6	1.4
북미 지역	2,264,063	710,200	1,179,526	1,889,726	83.5	40.1
미국	2,123,167	638,873	1,125,198	1,764,071	83.1	37.6
캐나다	140,896	71,327	54,328	125,655	89.2	2.5
중남미 지역	110,460	10,717	76,997	87,714	79.4	2.0
유럽 지역	595,073	517,363	18,911	536,274	90.1	10.5
독립국연합	521,694	508,076	4,110	512,186	98.2	9.2
독일	30,492	6,747	7,918	14,665	48.1	0.5
기타	42,887	2,540	6,883	9,423	22.0	0.8
중동 지역	7,208	37	326	363	5.0	0.1
아프리카	5,256	91	817	908	17.3	0.1
총계	5,652,783	2,995,233	1,859,107	4,854,340	85.9	100.0

주: 〈표 5-4〉의 주와 같음.

자료: 외교통상부(2002).

하였다. 또한 국내의 실업을 줄이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정부는 독일, 우간다, 말레이시아 등과 접촉하여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63~1978년에 걸쳐 이루어진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파견이었다. 총 계약 이동자는 21,000명에 달하였고, 이들은 거의가 귀국하지 않고 독일과 다른 서방국가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부는 남미에 대규모 이민을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정부는 1960년대 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미개발 숲을 구매해 그곳을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고 거기에 한인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된 이 계획은 완전 실패로 끝났다. 농업은 실패했고 이주자들은 원래의 정착지를 떠나 대도

시로 옮겼고, 후에 많은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로 재이주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60년대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은 간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고 해당 직업 경력이 별로 없는 중산층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즉 당시 이주자들의 1차 목표는 극도로 가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으로부터의 탈주였다.

한편 미국 이민은 1965년 새 이민법이 제정되고 1969년에 시행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1950년대 중반이후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 이주가 이미 시작되었다. 당시 이주의 기회는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부산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이주는 몇 가지 유형을 보인다. 그 첫째가 소위 전쟁 신부(war brides)라 일컫는 미국 군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이주이다. 다음은 주로 대학원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유학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 초기 유학생들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두뇌유출이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에 거주한 미국 군인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나 버려진 아이들로 주로 구성된 전쟁 고아들(war orphans)의 이동이다.

미국이 1952년에 채택한 이민법은 각 국가별로 이민자 수를 할당하였고, 한국에 할당된 수는 매년 105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5년에 채택된 새 이민법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대신 가족관계를 기초로 직계 존·비속의 이민을 허용하고, 고용과 관련된 기술을 이민의 주 고려 사항으로 정하였다. 새 기준의 적용으로 미국에서 1969년부터 한국인 이민은 급증하였다. 즉 1964년까지 2,000명 정도였던 미국 이민자 수는 새 이민법이 실시되기 시작한 1968년에는 3,800명, 1970년에는 9,300명으로, 그리고 1976년에는 31,000명으로 늘었다(구해근·유의영, 1983: 435). 한편 미국 센서스에 의하면 한국인 수는 1970년에 70,000명, 1990년에는 800,000명으로 1970~1990년의 20년 동안 11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Ⅲ. 중국 조선족 사회

#### 1. 공동체의 성격

중국 조선족은 우리에게 만주로 알려진 동북 3성, 즉 길림성, 흑룡강성 및 요녕성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조선족 가운데 이들 3성 거주자의 비율은 1990년 현재 97%를 넘고 있다. 이 가운데에도 연변을 포함하고 있는 길림성에 약 62%가,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에 43%가 살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조선족은 거주지의 집중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중국 조선족이 그들 거주지역의 개척이민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간도의 경우 1910년 총인구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에 달했고, 그 비율은 1922년 82%까지 올라갔다. 그 이후 일제가 멸망할 때까지 조선인 비율은 계속 70%를 넘었다.

전체 만주 지역에서의 조선족 비율은 매우 낮았지만, 조선족은 한족이나 만주족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조선족은 주로 조선족과 교류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였다. 특히 독특한 언어와 문화적 전통은 조선인들의 거주지역과 생활세계의 분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중국 조선족의 만주 안에서의 거주지는 조선족공동체의 팽창과 함께 어느 정도 분화,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중국의 총 조선인 인구 가운데 간도 거주자의 비율을 보면,

〈표 5-6〉 중국 조선족 인구의 지역별 분포, 1982 및 1990

(단위: 명, %)

지역	1982		1990		성장률
	인구	분포	인구	분포	
중국 전체	1,765,240	100.0	1,923,361	100.0	1.07
만주지역	1,733,967	98.2	1,868,377	97.1	0.93
길림성	1,104,071	62.5	1,183,567	61.5	0.87
(연변)	654,706	42.8	821,497	42.5	1.06
흑룡강성	431,644	24.5	454,091	23.6	0.63
요녕성	198,252	11.2	230,719	12.0	1.90
기타	31,273	1.8	54,984	2.9	7.05

자료: 중국 1982년 및 1990년 인구조사 자료.

1912년 68%이던 것이 1944년에는 39%로 떨어진다. 그러나 신중국 형성 이후 그 비율은 다시 50%로 올라간다. 특히 1944~1949년 사이의 변화는 만주로부터 조선으로의 귀환이동의 각종 선택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교적 정착의 기간이 길었던 간도 지역보다는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그리고 생활이 어려웠던 후기 이주자들로 구성된 다른 지역 거주자들 가운데 귀환자가 집중되어 있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귀환자 가운데는 인근의 북한 출신들보다는 남한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신중국의 건설과 함께 중국 조선족 사회의 집중성과 동질성이 보다 높아졌음을 알려준다.

조선족 사회의 성격은 아마도 조선족 마을을 통해 가장 잘 부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족 마을은 한족 마을과 겉모습부터 다르다. 집의 구조와 지붕의 모양이 다르고, 벽의 색깔이 다르다. 농촌의 경우 멀리서 보아도 그것이 한족 마을인지 조선족 마을인지 쉽게 구분된다. 도시에서도 조선족 집거지와 한족 집거지는 쉽게 구분된다. 거리의 밝기, 색깔, 동네 분위기가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신중국 건설 이후 조선족이 한족과 같이 생활을 해왔지만 두 민족 사이에 생활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생활세계의 분리는 거주지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관찰된다. 옷이나 음식, 주거 관습에서는 물론 사고방식, 상호인식, 혼인에 대한 관념 등에서도 엄격한 격리 현상이 보인다. 사회조사에서는 흔히 두 집단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의 하나로서 이들 집단 사이의 혼인에 대한 태도를 사용한다. 조선족은 한족과의 혼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령 딸이 한족과 혼인을 한다고 할 경우, 부모는 이를 부끄럽게 생각할 뿐 아니라 딸과 의절을 하기까지 한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같이 대학을 나와도 조선족과 한족이 친구로 지내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이는 조선족이 그들만의 생활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다른 말로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한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분리는 문화적 전통이나 공동체 형성의 배경에 의해 설명된다. 여기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민족언어의 사용, 민족문화의 유지와

발전, 민족학교 등은 소수민족의 자부심을 키우고, 그들의 민족정체성을 지속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반대로 소수민족의 중국 주 문화의 중심으로 진입 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 2. 인구 추세와 공동체의 위기

중국 조선족 사회의 지식인들은 조선족공동체의 자동적 해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중국 형성 이후 아직까지 조선족은 인구의 증가를 계속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선족은 중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적어도 2010년경부터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변의 경우 이미 1996년부터 조선족 인구는 총 성장에서는 물론 자연 성장에서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연변이 중국 조선족 거주지의 중심임을 고려할 때 주변부의 사정은 더 나쁠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은 1974년 1.74, 1891년 1.81이던 연변 조선족의 합계출산율이 1999년에는 1.1로 떨어진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양국옥, 2000: 6). 다시 말해 가만히 놔두어도 기존의 전통적인 조선족공동체는 약화되고 결국 해체되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체의 요소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이농향도 현상, 중국의 여러 도시로의 진출, 한국으로의 진출, 한족 인구의 조선족 집거지로의 유입, 조선족 여성의 한족 남성과의 혼인 증가 및 한국 농촌 총각과의 혼인 등도 해체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이동이 조선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조선족 인구 성장과 구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남한 남성과 조선족 여성의 결혼을 통한 조선족 여성의 남한으로의 이주이다. 지난 1992년경부터 시작된 남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혼인 이주는 신고된 것만 1992~2001년의 10년 간 4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sup>5)</sup> 센서스에 따르면 1990년 20~29세 조선족 여성 인구가 총 195,000명이

5)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1992~2001년 사이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의 총혼인신고 건수는 47,564건이다. 이 가운데 약 2,500명의 여성은 비조선족으로 추정된다.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을 통한 조선족 여성의 한국 이민이 중국 조선족 인구 성장에 대해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조선족 혼인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조선족 총각들을 농촌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선족의 이동은 혼인이동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노동이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동은 단계적 성격이 강하다. 우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는 도시 인근 농촌으로, 인근 농촌 사람들은 인근 도시로, 그리고 도시에서는 중국의 주업 도시나 한국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성과 미혼자의 이동이 남성과 기혼자의 이동에 앞서는 경향도 나타난다. 기혼자들의 단독이동도 광범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이동의 추세는 조선족공동체와 가족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부부의 장기적인 별거와, 자녀의 경우 한 부모 또는 부모 없이 할머니와 생활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상태이다. 또한 부부의 장기적인 별거는 이혼을 부추겨 이혼율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농촌 마을의 해체는 조선족공동체 자체의 해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흑룡강성과 같은 곳에서는 전에는 한족 중심 도시였던 곳에 인근 농촌의 조선족이 모여 새로운 집거지와 조선족 학교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박광성, 1999: 6; 정신철 1999: 82-90). 이러한 새로운 조선족 도시공동체는 길림성과 요녕성에서도 새로운 조선족 발전모형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또한 북경과 같은 중국의 대도시나 조선족이 많이 모이는 청도나 위해와 같은 연안 도시에도 조선족 학교와 조선족 집거지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조선족의 삶이 도시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동체의 모습도 바뀌고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다.

### 3.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

조선족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생활해 왔다. 그들은 중국 국민인 동시에 조선족이다. 즉 그들은 조국과 모국을 구분한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의식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족의식은 늘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소수민족은 명목적으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 대상이 되어 왔다. 가령 연변자치주의 경우 1953년 조선족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선족의 인구의 절대 지배를 약화시키기 위해 거의 한족 인구로만 구성된 돈화현을 연변자치주에 귀속시키는가 하면,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연변 주변 지역에 한족을 대거 이주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변의 조선족 인구 비율은 40%로 줄어들었다.

한족 인구의 지배는 결과적으로 행정,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조선족 영향력의 약화를 가져왔고, 이와 함께 연변자치주에서조차 조선족의 위치는 계속 떨어졌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이들 국가에서 민족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중국 내에서도 티벳, 신강에서 민족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에서도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정치, 교육, 경제 영역에서의 조선족의 영향력은 자치주 내에서조차 크게 약화되었다. 즉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각종 공공 영역에서 조선족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족은 모국의식에 있어서도 혼란을 겪어왔다.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중국은 줄곧 북한과 혈맹 관계를 유지해 왔고 1980년대 초반까지도 남한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족에게 모국은 북한이었다. 그러나 문화혁명기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긴장이 발생함에 따라, 조선족은 적어도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다. 한편 북한이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중국이 발전하면서 조선족의 자부심과 민족적 위치도 약화되었다. 그러던 것이 중국과 남한과의 비공식적인 경제교류가 시작되고, 1986년 중국이 서울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고, 다시 1988년 서울 올림픽 경기가 전 중국에 중계되면서, 조선족은 잃어버린 민족적 자부심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족의 남한과의 교류가 시작되고 약간의 혼란을 거쳐 남한이 이들에게 새로운 모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들에게 남한은 기회의 땅으로 생각되었고, 그들은 동포애 또는 가족주의적 온정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남한을 통해 성공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 부채질을 한 것은 조선족을 중국 국민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 취급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처럼 법석을 편 한국의 언론과 끝없이 이어지는 한국의 백두산과 연변 방문단,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한 약삭빠른 장사꾼이었다. 이들은 이제까지 폐쇄적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해 오던 연변을 비롯한 중국의 조선족공동체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얼마 가지 않아 조선족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이들은 다시 심각한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 즉 북한은 못사는 나라로서 그들의 자부심을 채워주지 못하고, 남한은 부도덕하고 동포를 착취하는 나라로서 분노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들은 모국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들의 민족의식과 자아의식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중국 사회의 현대화와 경제발전도 조선족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화와 발전은 바로 생활세계의 확대를 의미하고, 조선족에게 있어서는 보다 광범한 그리고 본격적인 한족 문화와의 접촉 및 수용을 뜻한다. 이때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민족언어이다. 조선족에게 조선어는 단순한 언어소통이나 교육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민족문화의 상징이었고, 조선족의 정신세계와 감정을 이끄는 민족문화를 탄생, 유지, 발전시켰다. 최근 조선어의 유용성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세계의 확대와 함께 조선어는 점점 중국에서 조선족이 출세를 하고 상승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연변에서조차도 조선족이 언어 때문에 취업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조선족 학교보다는 한족 학교에 보내려는 경향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민족언어 상실에 대한 우려는 조선족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부추기고 있다.

중국 조선족 사회의 역사는 100년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사이의 변화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 그 이전 1세기의 변화를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족공동체의 기초였던 농업적 배경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관념과 활동에 젖어 들고 있다. 요즘 조선족은 정치 영역에서 좌절을 느끼면서, 점점 경제적 성공에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에게 경제적 기회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들의 중국 내에서의 경제적 지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희망은 남한으로부터의 도움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생활은 이제 정치와 행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점점 더 한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대중문화는 물론, 예술, 의례, 가치관, 교육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영향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들에게 한족 또는 중국의 문화는 지금까지 한번도 생소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것은 그들이 지역적으로는 중국에서 생활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고립된 섬'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전통을 같이 한 한국 사람들과의 접촉은 그들의 감정에 공명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한국인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였고 그 만큼 실망도 컸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은 돈과 여자만 아는 부도덕하고 세속적이며 자본주의에 젖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들도 닮아 간다. 또 가끔 그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된다. 세대간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규범적 갈등이 커지고, 새로이 형성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계급적 갈등이 짙고, 사회적으로 아노미 현상이 널리 관찰된다. 공동체의 유대는 느슨해지고 중요한 민족 문화의 상징들이 사라져 간다. 한마디로 중국 조선족 사회는 도처에서 해체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는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아마도 현재 모든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 IV. 재일 동포 사회

### 1. 사회적 위치와 차별

재일 동포의 일본에서의 위치는 다른 해외 동포와 크게 다르다. 중국이나 미국의 동포들은 자신들을 중국과 미국 사회의 한 구성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그 곳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민족 사회의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재일

동포는 여러 가지로 일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재일 동포는 대부분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 국민의 신분으로 이주했거나 징용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재일 동포는 일본 식민지 정책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1952년 미국의 일본 점령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조약의 발효와 함께, 구 식민지 출신자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출입국 관리령(1951년에 제정)에 기초해 재일 동포는 한순간에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 가운데 한쪽 국적의 선택을 강요당하였다. 당시 재일 동포는 거의 대부분이 남한 지역 출신이었으나 대다수가 북한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 주 이유는 식민지 시대에 그들이 조선인으로 분류되었고 자신들도 스스로 조선인으로 불렀던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적 선택에 있어 조선인은 바로 북한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한국전쟁 상태에서 그들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을 조선인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시 재일 동포 사회에서 좌익의 활동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에 어느 정도 공헌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간 1950년대 초기에는 재일 동포의 90% 이상이 조선(북한)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한국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한국 국적자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어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재일 동포는 일본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그들이 일본 국적을 거부당한 배경에는 일본인들의 민족의식과 국가관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단일 민족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혈통의 순수성과 함께 문화적 동질성을 국가 형성의 기초로 여기고 있다. 결국 재일 동포를 일본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관념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이문웅, 1996: 98; Ryang, 2001: 63-64).

이렇게 재일 동포는, 한국인이나 조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국적 외국인으로서 남게 되었다. 일본 사회에서 재일 동포는 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특별한 존재였다. 그들은 1950년대 초만 해도 전체

외국인의 90% 이상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재일 동포들은 일본 민족과 문화의 단일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이들은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일본에 대해 강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각종 통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재일 동포는 아직도 영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1993년 그 비율은 52%로 감소하였고 현재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재일 동포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갖가지 사회적 차별을 겪어야 했다.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적 차별 이외에 과거 식민지 국민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재일 동포는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재일 동포는 공적으로 민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한국어(또는 조선어)와 민족역사, 민족의 풍습에 대한 교육은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조총련에서 운영하는 학교와 민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학력인정과 교수 내용의 문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인 학교에 취학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재일 동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일 동포 2세대와 3세대는 학교 교육을 통한 민족언어와 민족문화 학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물론 1세대의 경우 민족언어를 집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는 일본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마디로 외모와 행동에서 일본인과 구분하기 힘든 2세대와 3세대 재일 동포는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등 대부분이 일본 문화에 동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는 차이를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일 동포는 현실적으로 각종 기회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 그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직이 허용되지 않았고,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재일 동포는 이러한 차별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1970년대를 거치면서 취업에 있어서의 민족 또는 외국인 차별에 대한 재일 동포의 소송이 잇따랐다. 예를 들면, 1970년 히타찌 회사를 상대로 한 박군의 취직차별 무효 소송, 1972년 김경득 씨의 귀화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소송, 1980년 한종석 씨의 지문날인 거부 소송, 1982년 공립학교 교원 채용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거치면서 재일

동포들은 일본 사회의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들 소송의 결과로 제도에 수정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본 사회의 민족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보다는, 일본 사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이제까지 참고 지내야 한다면서 차별을 숙명적으로 받아드리던 재일 동포에게는 새롭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 2. 인구의 추세

같은 식민지 시대에 주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를 떠난 이주민이 었지만 중국의 조선족과 일본의 재일 동포는 이주 후 완전히 다른 삶의 궤도를 걸었다.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먼저 귀환이동의 규모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약 3/5이 돌아오지 않은 중국의 조선족과는 달리 일본의 조선인은 3/4 이상 귀환하였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조선인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 반면 일본의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노동자였다는 것과 일본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짧았고 강제 동원자가 많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의 일본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재일 한인의 수는 1946년 3월 현재 647,000명이었다(다나카, 1994: 73). 그러나 1950년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545,000명으로 줄어든다.<sup>7)</sup>

여하간 이들 귀환하지 않은 재일 동포는 거의가 고향에 돌아가도 있을 집도 경작지도 없는 사람으로 일본에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거의가 도시에 거주하며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어 1993년 자료에 의하면 재일 동포의 40%가 오사카와 도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85% 가량이 대도시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문웅, 1996: 92-92; 다나카 2000: 38-39).

재일 동포를 주로 하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조선인 등록자 수는 1950~1990년 기간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러나 1950년 545,000명이던 등록자 수는

6) 재일 동포의 일본 정부와 사회의 차별 철폐에 대한 도전은 다나카(2000: 제 5장) 참조.

〈표 5-7〉 일본의 외국인 및 한국·조선인 등록자수

(단위: 명, %)

연도	외국인	한국·조선인	비율	한국·조선인 연평균성장률	일본의 연평균성장률
1950	598,696	544,903	90.3		
1960	650,566	581,257	89.3	0.65	1.18
1970	708,458	614,202	86.7	0.55	1.03
1980	782,910	664,536	84.0	0.79	1.13
1985	850,612	683,313	80.3	0.56	0.68
1990	1,075,317	687,940	63.9	0.13	0.44
1995	1,362,371	666,376	48.4	-0.64	0.31
2000	1,686,444	635,269	37.7	-0.96	0.26

자료: 이문웅(1996: 94).

1970년에는 614,000명으로, 그리고 1990년에는 688,000명으로 그 증가 속도는 매우 느렸다. 반면 1990년 이후에는 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감소 추세는 최근에 올수록 빨라지고 있다. 재일 동포 수의 증가 속도는 일본 전체 인구 증가 속도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느리다. 예를 들어, 1950~1990년의 40년 동안 일본 인구는 48%가 증가했는데 비해 한국·조선인 수는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증가의 속도가 일본 인구의 5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 동포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해 설명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일 동포 인구는 일본 인구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조출생률은 높고 조사망률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일 동포의 평균 자녀수도 일본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문웅, 1996: 134-135; 이광규, 1984: 139). 즉 재일 동포 인구의 느린 증가는 인구이동이나 제3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밖에 없다. 인구이동에 의한 대규모 감소는 1959~1984년에 걸친 북한으로의 송환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기간 총 북한 송환자는 93,339명이었고, 그 가운데는 일본인 처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1차 송환은 1959~1967년에 걸쳐 행해졌으며 송환자 총수는 88,611명에 달하였

7) 여기 10여만 명의 차이는 아마도 1946년 3월 이후 귀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8〉 재일 동포 혼인자의 배우자 민족구성

(단위: 명, %)

연도	총 혼인자수	재일 동포	일본인	기 타	일본인과 결혼한 동포의 성별 구성	
					남자	여자
1960	5,839	79.3	20.1	0.6	73.5	26.5
1971	10,771	72.0	27.1	0.8	47.4	52.6
1980	10,316	59.3	39.8	0.8	40.2	59.8
1985	11,031	43.6	55.7	0.7	41.1	58.9
1990	15,013	31.1	68.4	0.4	25.2	74.8
1992	13,638	28.8	70.6	0.6	27.2	72.8
1997	8,504	25.9	73.2	0.9	37.3	62.7
2000	10,016	20.6	78.1	1.3	28.8	71.2

자료: 이문용(1996: 142) 및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조사 1997년과 2000년에서 계산.

다. 그 가운데서도 최초 3년에 송환이 집중되어 있었다.

제3의 요인에는 일본인과의 혼인, 일본인 남편 또는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일본국적 취득 등이 속한다. 과거 재일 동포 사회에서는 일본인과의 혼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인과의 혼인을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민족 내혼 규범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이러한 규범의 적용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일본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2~3세대가 증가하면서 민족 내혼 규범은 의미를 계속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재일 동포의 혼인 배우자의 민족구성의 변화에 잘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60년에 약 80%에 달하던 민족 내혼은 1980년에는 60% 정도로 줄어든다. 민족 내혼 규범의 와해 속도는 더욱 빨라져 1990년에는 30% 선으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해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본인과의 혼인은 초기에는 남성 가운데 많았으나 1970년부터 그 추세가 바뀌어 점점 여성 위주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1990년경부터는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하는 재일 동포의 70% 정도가 여자이다. 이러한 일본인과의 혼인에 있어 성 불균형의 심화는 재일 동포 남성들에게는 혼인시장 축소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국적 취득을 뜻하는 귀화는 1983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우 어려웠고 배

우자가 일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인과의 혼인에 따른 자녀 출생의 경우에 부인이 일본인이면 자녀는 남편의 국적에 따라 일본 국적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1985년 남녀 평등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적법이 실시되면서 부계 혈통 규정은 폐기되었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경우 그 자녀의 일본 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규정의 변경은 재일 동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와 재일 동포의 자녀 가운데 '신청'에 의해 자동 국적 취득자가 새로운 법이 시행된 3년간 3만 명에 달했다. 여하간 1952년 일본국적을 상실한 재일 동포들 가운데 1993년까지 일본국적을 취득한 총수는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관찰되는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의 출산수준의 감소와 함께 혼인관련 일본 국적 취득 및 변경으로 재일 동포 인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른 감소를 보이기 시작했다. 가령 1990년 688,000명에 달하던 한국·조선인 외국인 등록자 수는 1995년에는 666,000명, 2000년에는 635,000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조선 국적의 재일 동포를 뜻하는 특별영주자의 수는 1993년 579,000명에서 2000년 507,000명으로 12.4% 줄었다. 이들과는 달리 한국·조선인 등록자 가운데 일반 영주자와 비영주자는 최근에 올수록 그 수가 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한국·조선인 사회는, 아직까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위축되어 가는 한국·조선국적의 재일 동포와 일본국적의 재일 동포 그리고 한국인 장기 체류자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 3. 정체성의 분화

재일 동포의 정체성은 세대에 따라 카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주 1세대는 일본을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믿고 사는 '나그네(sojourner)'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이러한 나그네 의식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특징으로 간주된다(Lie, 2000: J12; Ryang, 2001: 59). 따라서 이들은 일본문화에 동화하기를 거부하고 민족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재일 동포의 문화적 정체성은 일본 사회가 단일 민족문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나그네 정체성은 일본 사회와 일본인들의 재일 동포에 대한 민족적 차별로 이어졌고, 반대로 차별은 나그네 정체성을 더 강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갈 곳’ 즉 조국에 대한 관념 즉 국민정체성은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재일 동포 사회의 분단을 의미했고,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 힘의 균형은 재일 동포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그들은 현실적으로 남한이나 북한 중 한 쪽 국적을 택해야 했고, 따라서 한반도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초연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조국 또는 국민 정체성의 혼란은 대부분의 재일 동포들이 자신들을 소속 국가명을 생략한 채 “자이니찌(재일)”라고 칭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세대, 3세대 가운데는 어떤 쪽의 국적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소위 무국적 재일 동포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 재일 동포의 민족정체성은 국민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1세대의 정체성 동일은 생활조건 변화, 2세대, 3세대들의 생활세계의 확대에 의해 약화되고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새 세대는 교육을 통해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일본어로 이루어져 민족언어 사용능력이 매우 약화되었다. 즉 이들은 국민정체성과는 별도로 문화적으로는 일본 문화에 더욱 익숙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 동포 2세대, 3세대들로 하여금 이중문화 또는 다문화 정체성에 종속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을 분리시키는 태도를 발전시켰다. 재일 동포의 일본 국적 취득이 늘면서 국민정체성도 계속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민족정체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민족정체성 운동이 일본 국적 취득자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민족이름 찾기 운동’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모든 일본인은 일본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법 때문에 재일 동포 귀화자들은 귀화와 동시에 공식적으로 민족이름을 버려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상당수는 일상생활에서는 민족이름을 사용하고 공식적으로는 일본이름을 사용한다. 특히 민족이름은 민족정체성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귀화자들에게 민족이름의 포기는 민족정체성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일 동포 귀화자들 가운데 몇몇이 1980년대 중반 호적에 민족이름 등재를 요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결과 ‘민족이름 찾기 회’가 만들어 졌다. 그리하여 1987년 박실 씨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승소하여 민족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소송을 내 모두 이름 되찾기에 성공하였다. 아직도 제일 동포 또는 조센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일본 사회에서 민족이름을 되찾으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귀화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매우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에서는 민족성의 표현에 있어서 개방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기존의 정형화된 민족성의 상징들, 가령 이름, 언어 등을 벗어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표현을 강조한다. 그들은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구들에게 또는 일터에서 자기가 한민족임을 밝힘으로서 보다 자연스럽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민족정체성 또는 이중적 민족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민족정체성을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배타적인 속성으로 파악하는 데서 벗어나, 개인 스스로 자신의 민족성을 규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민족성을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문화 개념으로 파악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일본인과의 혼인을 민족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한 1세대의 관념을 완전 폐쇄 정체성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생각은 완전 개방 정체성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Kashiwazaki, 2000). 한마디로 제일 동포의 민족정체성은 혁명적 전환을 겪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제일 동포 사회와 문화는 다양화되었다.

## V. 미국의 한인 사회

### 1. 인구규모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자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센서스 자료와 한국 공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 사이에는 무려 100만 명의 차이가 난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재외 공관을 통해 수집한 재미 한인의 수는 2000년 말 현재 2,123,000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시민권 소유자와 영주권 소유자만 1,764,000명으로 집계되었다(〈표 5-5〉 참조). 한편 2000년 미국 센서스에 보고된 미국 거주 한국인 수는 1,077,000명으로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 센서스 자료는 상당한 정도 과소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는 과대 보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 자료는 미국의 각 지역의 한인단체의 추정치를 수집하여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추정 값은 보통 센서스 값의 2배 내지 3배에 달한다. 한편 센서스 자료의 질은 여러 연도의 수치를 종합해 판단하면 그 윤곽의 파악이 가능하다. 가령 총인구의 증가와 증가의 구성을 살펴보면 센서스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표 5-9〉에서 1940년 이후 센서스에 나타난 미국의 한인 추세를 보면 인구학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센서스에서 수집된 총인구수에서 이민 입국자수를 뺀 나머지를 자연증가 분으로 가정할 때, 1940년 이후 자연 증가는 약간의 굴곡이 있으나 대체로 큰 무리가 없는 수준과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8)</sup>

다시 말해 센서스 자료가, 상당한 정도 과소 보고된 것은 틀림없으나, 한국 정부의 수집자료보다는 질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인구학자들은 센서스에 나타난 미국 한인의 과소 보고 수준이 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 한인의 수는 120~1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센서스 과소 보고는 불법 이민자와 유학생의 센서스 참여 저조, 노인이나 최근 이민자 등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조사를 기피하는 사람, 백인과의 혼인자와 그 자녀들의 백인으로서의 분류 등에 의해 주로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2000년 센서스에 집계된 한인의 수 1,076,872명은 미국 총인구(281,420,000)의 0.4% 그리고 아시아계 인구(10,243,000)의 10.5%의 규모에 해당한다. 이는 또한 1990년 한인 수에 비해 34.8% 증가한 규모이다. 인구증가율로 볼 때, 1910년에서 1940년까지의 한인 인구의 증가는 자연증가의 정도를 별로 넘지 못하는 매우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50~1965년 사이에는 한

8) 보다 구체적으로 1940~1970년 사이의 미국 한인의 연평균 자연증가율은 1.9%, 1970년대는 1.4%, 그리고 1980년대는 2.1%, 1990년대는 1.1%로 나타난다.

〈표 5-9〉 미국의 한인 인구와 이민으로 입국한 한인의 추세, 1940~2000

(단위: 명, %)

연도	센서스 인구	연평균 성장률	이민 입국자		입국자 / 인구증가 비율
			기간	입국자수	
1940	8,568		1941~1950	107	72.2*
1950			1951~1960	6,231	
1960			1961~1970	34,526	
1970	65,150	6.76	1971~1980	267,638	91.6
1980	357,393	17.02	1981~1990	333,746	75.6
1990	798,848	8.04	1991~1998	136,651	63.4
2000	1,076,872	2.99	1941~1998	778,899	

주: \*: 1941~70년 기간의 비율임.

자료: Barringer and Cho(1989: 19); Yu(2001: T1).

국전쟁과 관련된 이민, 즉 전쟁 신부와 전쟁 고아의 이민으로 인구증가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이민법이 제정되고 실시되는 196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이민 비자로 입국한 한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다. 즉 1971~1980년 사이에는 이 기간에 증가한 한인 총증가수의 91.6%에 해당하는 268,000명이, 그리고 1981~1990년에는 75.6%인 334,000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이민에 의한 한인 인구 증가추세는 1990년대부터 급속히 완화된다. 예를 들어, 1991~1998년 사이에는 이민이주자가 약 절반으로 감소하여 증가 인구수에 대한 비율도 63.4%로 낮아졌다.

## 2. 한인 사회의 특성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의 사회적 배경은 이주 시기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초기 이주자들은 전쟁 신부를 포함한 미국 군인과 혼인한 여성과 전쟁 고아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1950~1964년 사이의 이주자 17,000명 가운데 이들의 숫자는 각각 6,000명과 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Yu, 1977; Min, 1995). 이들은 이주 후 한인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기보다는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도 주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군과 혼인하여 이주한 여성들의 대다수는 미국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한인 사회와는 떨어져 사회적 차별과 이혼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한편 1945~1965년 사이에 미국으로 간 유학생은 6,000명을 헤아렸다. 거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다수는 공부가 끝난 다음 미국에 정착하였고, 이들이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1965년 사이 미국 이주자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위로 볼 때 매우 대조적인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미국 이민법이 1965년에 개정되면서 매년 105명으로 묶여 있던 이민 할당이 폐지되고 가족이민과 취업 및 투자이민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미국 시민의 가족이 대량으로 이동하였고, 이는 연쇄 이동(chain migration)으로 이어졌다. 또한 한국 중산층의 각종 도피성 이동도 발생하였다. 대체로 당시 이동자들이 언급하는 주요 이주의 이유로는 한국의 정치적 독재와 불안, 한국 경제의 불안정과 불평등, 한국의 입시제도와 자녀 교육의 문제가 지적된다. 한마디로 1970년대 이후의 이주자는 그들의 사회적 배경에 있어 매우 커다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편 1975년 한국에서는 자본과 두뇌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976년에 전문 직업집단의 압력으로 특정 직업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주를 규제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소위 중산층의 이민은 어려워졌다. 또한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외 이민에 대한 꿈이 약화되면서 미국 이민의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였다.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해외이주 허가자와 미국의 한국 이민자 자료를 비교하면 한국 해외이주자의 3/4이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은 남자의 경우 25~39세, 여자는 20~34세, 그리고 남녀 모두 0~4세 아동연령층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연령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특히 이주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젊은 노동력 연령층과 0~4세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집중성이 훨씬 더 높다(권태환·김태현, 1990: 106 참조).

또한 1970년대 한국인 미국 이민자의 성비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된다. 가령 0~4세에서는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를 뜻하는 성비가 65 정도로 나타

나고, 20~29세에서는 35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0~4세 한인 이민자의 비율이 전체 미국 이민집단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구해근·유의영, 1983: 436). 이는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와 입양에 의한 이동이 1970년 이후에도 미국 이주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입양의 경우 여아선호가 두드러지는 것을 이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로부터 미국으로의 이민의 역사는 100년을 맞았고, 미국 한인 사회는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한인 사회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도 형성단계에 있으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주로 이민에 의해 1970년 이후 한인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였다는 것은 현재 미국 한인의 대다수가 이민 1세대와 1.5세대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2세대는 아직도 한인 사회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민의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의 차이는 미국 한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미국의 한인은 미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 강한 지역적 집중성을 보인다.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주로 2000년 현재 여기에 32.1%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이 뉴욕과 뉴저지가 17.2%를 점유해, 총 한인의 절반 가량이 이 두 곳에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거대 도시권 집중성도 한인 거주자의 특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1992년 LA폭동 이후 인구의 분산현상이 관찰된다. 가령 1990~2000년 사이에 한인 거주자 증가율이 50% 이상이었던 주를 보면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테네시, 델라웨어, 워싱턴, 애리조나, 플로리다, 버지니아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한인의 지역적 집중성은 최근 이주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주자들의 미국에서의 적응 및 생계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가족 이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미국 사회의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영어의 필요성이 덜한 대도시에 형성된 한인촌을 거주지로 선호하게 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연이나 학연, 혈연을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에 필요한 주요 사회적 자산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으로 갔

다. 거기에는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부와 안정, 질 좋은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이들의 생활은 거의가 이러한 꿈과는 거리가 멀다. 많은 사람이 생계에 쫓기고, 인종 차별에 시달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할 것도 별로 없다. 따라서 그들의 이민생활의 합리화는 주로 자녀 교육과 자녀의 성공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크다. 그들은 한인이나 소수종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과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한다.<sup>9)</sup>

이민 1세대의 정치적 문화적 관심은 미국 주류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미국 정치보다는 한국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의 정도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에 못지 않다. 그들의 문화적 관심도 한국의 대중문화의 지배를 받는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한국 신문을 구독하며, 한국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주로 한인 교회에 나가고 한인 단체에서 활동한다. 한마디로 미주 한인 1세대의 다수는 미국 속에 있으나 미국과는 동떨어진 고립된 한인 등우리(Korean enclave)에 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민 1세대의 미국 생활 적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는 교회를 꼽을 수 있다. 미주 한인의 약 70%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 약 20%의 무려 3.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미국 한인의 대다수가 교회에 다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주로 미주 한인교회의 역할에서 찾는다. 흔히 교회는 한인, 특히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합 서비스 기능(one-point service station)을 수행한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외로움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취업 및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외 온갖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역할은 다른 측면에서는 한인의 미국 사회와 문화의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한인교회는 한국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그 성원들의 미국 주류 문화에의 동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최협·박찬웅, 1996: 121-125; Kim and Kim 2000).

9) 1989년 자료에 따르면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한인 가운데 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는 47.6%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1963년도 자료에 따르면, 이들 종사자와 주로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제조업자를 합한 비율은 각각 74.2%와 49.5%가 된다(최협·박찬웅, 1966: 84-89에서 계산함).

### 3. 세대와 정체성

이민 1세대와는 달리 1.5세대나 2세대는 주로 학교 교육과 동료 집단을 통해 미국 주류문화를 익힌다. 그들은 부모와 집에서 한국말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한국말에 영어로 답하기도 한다. 언어의 단절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 문화가 몸에 밴 1.5세대나 2세대에게는 부모의 한국 문화와 한국적 사고방식은 생소하기 그지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 세대의 차이는 문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세대간의 갈등이나 단절을 가져온다. 그러나 2세대들도 자라는 과정에서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한마디로 1세대가 한국인(Korean) 정체성을 고집하고 있다면, 2세대는 미국인(American) 정체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민족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으로 되어 가는 경향이 강하다(L. Kim, 1999).

미국에서 한인 1.5세대와 2세대들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사건은 1992년의 LA폭동으로 알려져 있다. LA폭동은,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전 미국에 한인 사회를 부각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흑백 갈등에서 시작한 폭동은 한흑 갈등처럼 묘사되었고, 한인 지역(Korea Town)이 공격과 약탈의 주 대상이 되었다. 부모에게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던 1.5세대와 2세대들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구어 놓은 기반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쳐다보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서, 한인 사회 및 1세대들과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한인 사회의 시위와 투쟁을 조직하였다. 한마디로 LA폭동은 이들에게 자신들이 한국인(Korean)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 사건 외에도 높아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미주 한인들 사이에 한국인 정체성을 확산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g, 1999; 최협·박찬웅, 1996: 136-142). 경제성장, 민주화, 올림픽 및 월드컵(축구) 개최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일체감의 형성이 세대간 문화적 간격의 극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는 역시 미국 문화가 편하며 당연하다. 그들에게는 같은

민족끼리의 결혼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 사회가 세대가 지나면서 미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용광로 이론(melting pot theory)으로 지칭되는 동화이론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흑인 문화와 백인 주류문화의 차이, 히스패닉 문화의 지속, 일본이나 중국 문화의 지속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문화현상은 동화나 융합보다는 하나의 그릇에 담겨있는 샐러드와 같이 다양한 문화의 종합으로 설명(salad bowl theory)하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의 지속은 이민 1세대들에게는 물론 1.5세대와 2세대들에게도 민족적 결합이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Yoon, 2001). 이러한 뜻에서 한국계 미국인 정체성은 2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 VI. 맺는 말

한국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이래 해외 한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령 1970년 당시 수교가 없었던 중국과 소련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한 한인은 703,000명 정도로 집계되었다(〈표 5-4〉 참조). 그 숫자는 1989년 2,322,000명으로 19년 사이에 3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과 독립국연합을 포함한 해외 한인의 수는 1990년 4,832,000명에서 2000년 5,654,000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의 1차 원인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주로의 대량 이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해외 거주 한인 가운데 일시체류자의 급속한 증가도 중요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시 체류자는 최근에 올수록 빠르게 증가한다. 가령 1994년 일시 거주자의 수는 총 해외거주자의 5.6%인 290,000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영주거주자 수는 약간 줄어든 데 비해 일시 거주자는 14.1%인 798,000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일시 거주자의 증가현상은 세계화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주요 국가별 한인 사회의 성격은 빠르게 변화고 있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농촌공동체 중심에서 도시공동체 위주로 바뀌고 있고, 조선족 인구의 지역적 분산과 집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외지로의 노동이동은 전통적 지역공동체와 함께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조선족 여성의 한국 남자와의 혼인,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 수준 등으로 인해 조선족 인구는 급격한 감소기에 접어들었다. 많은 조선족 지식인들은 얼마 안가서 연변자치주는 자치주의 위상을 상실하고, 조선족 인구는 5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궁극적으로 조선족은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재일 동포는 2세대와 3세대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급속한 일본 문화로의 동화를 경험하고 있다. 혼인을 통한 귀화와 그 자녀들의 일본 국적 취득으로 1990년이래 한국·조선국적을 가진 재일 동포의 수는 급속한 감소기에 접어들었다. 한 때 외국인 가운데 재일 동포의 비율은 90%를 넘었다. 그러나 이제는 50%이하로 떨어졌으며, 아직도 계속 줄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문화적 동화와 일본인과의 혼인으로 기존 재일 동포 사회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동시에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계 일본인 정체성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인공동체는 그 속도가 전 같지 않지만 아직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거주지역 역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한인 사회는 다른 나라의 한인 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구성원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는 입양 어린이들이나 미국 군인의 신부로 이주한 사람들, 유학 후 정착하게 된 사람들, 가족 초청 이민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배경에 따라 직업과 생계활동, 생활세계도 다르다. 그러나 미국의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한인 동우리', 또는 '미국 속의 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주류 사회는 물론 소수 인종들로부터의 차별과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정치세력화는 한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해외동포정책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해외 한인 사회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이민 2~3세대의

한인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그들의 삶에 한국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한인의 연결망이 세계화 시대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해외 한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 비교적 역사가 긴 중국의 조선족과 일본의 재일 동포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이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한인 사회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해외 한인 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일시 체류자의 급격한 증가이다. 이들은 사실상 해외 한인 사회에 속하지 않거나 그 사회의 주변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과 해외 영주자들 사이에는 접촉이 불가피하며, 접촉의 양식에 따라 심한 갈등의 소지도 있다. 이 문제도 중요한 정책 고려 사항의 하나로 판단된다.

## 제6장 성과 연령구조

조 남 훈 · 변 용 찬

### I. 머리말

현대사회가 점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출산 및 사망 형태도 과거의 다산다사형(多産多死型)에서 소산소사형(小産小死型)으로 변모함에 따라 유소년인구의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하에서 인구에 대한 관심도 과거의 양의 문제에서 질의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는 남북분단, 한국전쟁,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등 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이던 것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에 도달한 후 2001년 1.30까지 감소하여 우리 나라도 저출산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인구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고령화를 촉진하여 사회복지후생비를 증대시키며, 연로한 노동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 또는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조남훈·이삼식, 2001). 또한 이러한 저출산 수준의 지속과 함께 성감별 기술의 개발이 남아선호사상과 결합하면서 성 선택적 출산이 크게 늘어나 성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 교육, 노동 시책 등은 이러한 인구의 구조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무엇

보다도 인구의 성·연령 구조의 변화 추이를 세밀히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은 192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인구의 성 및 연령 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자료

성 및 연령구조 분석에는 인구센서스 자료, 인구동태통계자료, 그리고 미래의 성 및 연령구조의 분석을 위해서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등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성 및 연령 구조를 분석하는 이 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구센서스가 처음으로 실시된 1925년부터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00년까지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이러한 인구센서스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센서스 자료와 인구추계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추계자료가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인구동태통계자료, 성 및 연령별 생산률, 국제이동 등을 모두 감안하여 기준인구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인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상대차이지수(index of relative difference)와 불일치지수(index of dissimilarity)를 적용하였다(Shryock et al., 1980: 232). 상대차이지수와 불일치지수는 모두 두 개의 연령분포의 차이를 요약하여 하나의 지수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대차이지수는 비교집단간 성 및 연령별 구성비(%)의 차이를, 불일치지수는 비교집단간 성 및 연령별 구성비의 퍼센트 차이를 요약하여 지표화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상대차이지수와 불일치지수는 다음 <표 6-1>과 같다.

인구센서스 자료와 추계인구 자료의 성·연령별 상대차이지수는 1960년 남자의 경우 7.41, 여자의 경우 6.10으로 매우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표 6-1〉 센서스 인구나 추계인구간 상대차이지수 및 불일치지수, 1960~2000

연도	상대차이지수(IRD)		불일치지수(ID)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60	7.41	6.10	4.88	4.41
1966	1.17	1.38	0.91	0.88
1970	2.15	2.47	1.28	0.93
1975	1.28	0.97	1.24	0.85
1980	0.94	0.94	1.00	1.08
1985	0.79	0.85	0.70	0.91
1990	1.08	0.85	0.85	0.64
1995	0.80	0.56	0.95	0.66
2000	0.88	0.58	1.01	0.59

주: 1) 상대차이지수  $IRD = 1/2 \times \frac{\sum |(\frac{r2a}{r1a} \times 100) - 100|}{n}$

2) 불일치지수  $ID = 1/2 \times \sum |r2a - r1a|$

단,  $r1a$  는 추계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성비,  $r2a$  는 센서스 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성비.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1960년 실시된 인구센서스 자료와 추계인구간 성·연령별 구성비의 분포가 남자는 연령계층별로 추계인구에 비하여 평균 7.41%, 여자는 평균 6.10%나 차이가 나고 있어서 두 자료간에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2000년 남자의 상대차이지수는 0.88, 여자는 0.58로 크게 줄어들었다. 즉, 이것은 인구센서스 자료와 추계인구간의 성 및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의 괴리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인구센서스 자료의 성 및 연령분포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불일치지수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Ⅲ. 기존 연구 검토

성 및 연령 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조남훈 외(1995)와 장영식 외(1996), 권태환 외(1997)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조남훈 외(1995)의 연구는 1991년 통

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에 의한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향후의 출산율 변동예측과 더불어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우리 나라의 인구변화가 사회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적정인구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력 뿐만 아니라 노동인력, 환경문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조절정책에서 인구자질 향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우리 나라의 신인구정책 마련에 기초가 되었다.

한편, 장영식 외(1996)는 1996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인구변동의 특징,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에 대한 전망, 성비불균형 문제, 그리고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심층분석하고 있으며, 노동력문제, 노인복지문제, 가구구조의 변동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권태환 외(1997)는 1995년도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방법의 확대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성비 불균형 문제는 조남훈·서문희(1994), 김두섭(1997) 등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성비의 불균형문제는 남아선호관,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의 보편화, 태아성감별을 위한 의학기술의 발달 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국민 홍보를 통한 의식의 전환, 학교교육의 강화 등 국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 가족법의 개정, 여성고용평등법의 준수, 탁아 및 육아시설의 증설 및 지원,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 등 여성 지위향상, 의료인의 윤리의식의 개선, 의료윤리에 대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강화 등 의료인의 의식개혁, 그리고 불법 의료에 대한 감시체계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두섭(1997)은 성선별 출산행위가 남아선호관, 기혼자녀의 수와 성별 구성, 희망 자녀수 및 의료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성 · 연령별 구조

#### 1) 성 · 연령별 인구규모의 변화 추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1925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남북한을 합친 우리 나라의 총 인구는 1,902.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소년(0~14세) 인구는 755.1만 명, 15~64세의 청장년 인구는 1,072.9만 명,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4.1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후 광복되기 1년 전인 1944년에 실시된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당시 남북한을 합친 총 인구수는 2,512.0만 명으로서 약 20년 동안 61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14세 유소년 인구는 329.9만 명, 15~64세 청장년 인구는 256.6만 명,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3.5만 명이 증가하여, 0~14세 유소년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소년 인구가 청장년 인구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반기에 징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해외로의 유출인구가 청 · 장년층에서 많았던 점이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광복 후 혼란기였던 1949년 남한 단독으로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다. 남한의 인구는 1949년 현재 2,016.7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유소년 인구는 839.2만 명, 청장년 인구는 1,066.3만 명,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인구와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인구가 많았다. 이 후 우리 나라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00년 4,598.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962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 위주의 인구증가억제 정책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영향으로 0~14세 유소년 인구는 197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70년 1,324.1만 명이던 유소년 인구는 2000년 현재 963.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5~64세의 청장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표 6-2〉 연도별 연령계층별 인구규모의 변화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0~14	15~64	65 +	75 +
1925	19,020	7,551	10,729	741	144
1930	20,438	8,160	11,491	788	168
1935	22,208	9,090	12,278	840	210
1940	23,547	9,856	12,834	857	209
1944	25,120	10,850	13,295	976	248
1949	20,167 <sup>1)</sup>	8,392	10,663	1,076 <sup>2)</sup>	-
1955	21,502	8,865	11,924	714	163
1960	24,989 <sup>1)</sup>	10,153	13,886	935	233
1966	29,160	12,684	15,514	961	257
1970	31,435	13,241	17,154	1,039	289
1975	34,679	13,208	20,264	1,207	339
1980	37,407	12,656	23,305	1,446	401
1985	40,420	12,095	26,575	1,750	526
1990	43,390	11,134	30,094	2,162	667
1995	44,554	10,236	31,678	2,641	834
2000	45,985	9,639	32,973	3,374	1,079
연평균 증가율					
1925~1930	1.5	1.6	1.4	1.3	3.3
1935~1940	1.7	2.3	1.4	1.3	5.0
1930~1935	1.2	1.7	0.9	0.4	-0.1
1940~1944	1.7	2.5	0.9	3.5	4.7
1944~1949	-	-	-	-	-
1949~1955	1.1	0.9	2.0	-5.6 <sup>3)</sup>	-
1955~1960	3.2	2.9	3.3	6.2	8.6
1960~1966	2.8	4.2	2.0	0.5	1.7
1966~1970	2.0	1.1	2.6	2.0	3.1
1970~1975	2.1	0.0	3.6	3.2	3.5
1975~1980	1.6	-0.8	3.0	4.0	3.7
1980~1985	1.6	-0.9	2.8	4.2	6.2
1985~1990	1.5	-1.6	2.6	4.7	5.4
1990~1995	0.5	-1.6	1.1	4.4	5.0
1995~2000	0.6	-1.2	0.8	5.6	5.9

주: 1) 미상 포함.

2) 60세 이상 인구임.

3) 1949년 센서스는 60세 이상 인구이고, 1955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1c). 이에 따라 노동력 수급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문제가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6-2>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55년 71.4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70년 103.9만 명으로 백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1990년에는 2백만 명을, 그리고 2000년에는 3백만 명을 돌파하여 337.4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율 역시 1960년에서 1966년 사이의 0.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5.6% 수준에 있다. 즉 2000년 현재 연평균 증가율이 5.6%나 되는 매우 빠른 속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6-2>에서 1955년 16.3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1985년 52.6만 명, 그리고 2000년에는 107.9만 명으로 백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후기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65세 이상인구보다 더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기 고령인구는 신체적으로 노쇠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보건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인구성장의 요인

인구의 성장은 출생,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인구이동은 출생이나 사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최근에는 외국인의 입국이 내국인의 출국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1c).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구동태통계를 통하여 출생과 사망의 영향만 살펴보고자 한다.

총출생아수는 1970년 현재 100.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25.9만 명으로서 자연증가 인구는 74.8만 명이였다. 그 후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1970년의 63.3% 수준인 63.7만 명이였다. 그러나 사망자수는 1970년 25.9만 명에서, 1980년 27.8만 명, 1990년 24.9만 명, 그리고 2000년

〈표 6-3〉 인구성장의 요인, 1970~2000

(단위: 명)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수	지수	수	지수	수	지수
1970	1,006,645	1.000	258,589	1.000	748,056	1.000
1975	874,869	0.869	270,851	1.047	604,018	0.807
1980	865,350	0.860	277,767	1.074	587,583	0.785
1985	662,510	0.658	246,121	0.952	416,389	0.557
1990	658,552	0.654	248,991	0.963	409,561	0.548
1995	721,074	0.716	248,089	0.959	472,985	0.632
2000	636,780	0.633	247,346	0.957	389,434	0.521
차이 (1970-2000)	369,865	-	11,243	-	358,622	-

자료: 통계청(2002); KOSIS, 해당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24.7만 명으로 1970년의 95.7% 수준으로서 그 규모에 있어 지난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자연증가 인구는 1970년 74.8만 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38.9만 명으로 1970년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연증가 인구의 증가 둔화 경향은 결국 출생아수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 3) 성·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추이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925년부터 2000년까지 유소년 인구, 청장년 인구, 그리고 고령인구 등 3대 연령계층으로 구분하여 인구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1970년까지는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소년 인구는 약 40~43% 내외에서, 그리고 청장년 층은 54~56% 내외에서,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3~4% 수준에서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결과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유소년 인구비중의 감소, 청장년 인구비중의 점진적 증대, 그리고 65세 이상

〈표 6-4〉 생산가능인구의 순진입률, 1960~2000

(단위: %)

연도	계	남자	여자
1960	278.73	320.76	241.75
1966	273.73	316.77	236.16
1970	269.09	304.34	238.18
1975	333.58	376.70	295.73
1980	325.87	375.38	283.76
1985	276.38	340.88	225.70
1990	218.19	263.22	181.08
1995	139.63	164.50	117.69
2000	100.67	119.48	83.44
2005	64.14	75.49	-53.28
2010	30.28	40.22	20.60
2015	1.24	8.94	-6.25
2020	-24.00	-19.08	-28.79
2025	-34.13	-30.68	-37.52
2030	-39.84	-37.22	-42.44
2035	-42.66	-40.49	-44.43
2040	-42.34	-41.10	-43.60
2045	-37.66	-37.20	-38.14
2050	-37.10	-37.69	-36.45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1c).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대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먼저, 0~14세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6년 43.5%를 차지하여 정점에 도달한 후 1970년에는 42.1%, 1975년 38.1% 등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21.0%로 1970년의 4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소년 인구의 비중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피임실천율의 증대, 인공임신중절의 확산, 초혼연령의 상승, 소자녀 규범의 형성 등에 힘입은 바 크다. 그 결과 학령기 인구의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군입대 연령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가족계획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1966년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2%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1980년 62.3%로서 60%를 넘어 섰고, 1995년 71.1%, 그리고 2000년 현재 71.7%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2001c)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2014년 72.2%를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64.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순진입률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노동시장의 신규진입 대상인구로서 15~24세 인구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대상으로서 55~64세 인구간 차이는 노동력 공급규모 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가늠케하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조남훈·이삼식, 2001). 순진입률이 양(+인 경우에는 노동력의 신규공급이 노동력 이탈에

〈표 6-5〉 연도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추이, 1925~2000

(단위: %)

연도	총인구	0~14	15~64	65+	75+
1925	100.0	39.7	56.4	3.9	0.8
1930	100.0	39.9	56.2	3.9	0.8
1935	100.0	40.9	55.3	3.8	0.9
1940	100.0	41.9	54.5	3.6	0.9
1944	100.0	43.2	52.9	3.9	1.0
1949	100.0	41.6	52.9	5.3 <sup>b)</sup>	-
1955	100.0	41.2	55.5	3.3	0.8
1960	100.0	40.6	55.6	3.7	0.9
1966	100.0	43.5	53.2	3.3	0.9
1970	100.0	42.1	54.6	3.3	0.9
1975	100.0	38.1	58.4	3.5	1.0
1980	100.0	33.8	62.3	3.9	1.1
1985	100.0	29.9	65.7	4.3	1.3
1990	100.0	25.7	69.4	5.0	1.5
1995	100.0	23.0	71.1	5.9	1.9
2000	100.0	21.0	71.7	7.3	2.3

주: 1)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표 6-6〉 주요 저출산 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

국가	도달 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 → 14%	14% → 20%
한국	2000	2019	2026	19	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자료: 통계청(2001c).

비해 커 노동력이 증가하고 젊어지는 반면, 음(-)인 경우에는 노동력 이탈이 신규진입보다 커 결과적으로 노동력 전체규모가 감소하고 고령화됨을 의미한다.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의 경우 2015년 이전에,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2020년 이전에 순진입률이 음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인구보다 이탈대상인구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까지는 약 4%수준 내외에서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다가 1985년 4.3%, 1990년 5.0%, 그리고 1995년 5.9%, 2000년에는 7.3%에 도달하였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할 때, 2000년(7.3%)을 기해 우리 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14.4%)에는 고령사회에, 그리고 2026년에는 20.0%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1c).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19년이 소요된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4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115년이 나 소요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 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

〈표 6-7〉 부양인구비의 변화 추이, 1925~2000

(단위: 명)

연도	유소년 부양인구비	노년 부양인구비	총 부양인구비	고령화 지수	잠재적 노년부양인구비
1925	70.4	6.9	77.3	9.8	14.5
1930	71.0	6.9	77.9	9.7	14.6
1935	74.0	6.8	80.9	9.2	14.6
1940	76.8	6.7	83.5	8.7	15.0
1944	81.6	7.3	89.0	9.0	13.6
1949 <sup>1)</sup>	78.7	10.1	88.8	12.8	9.9
1955	74.3	6.0	80.3	8.1	16.7
1960	73.1	6.7	79.9	9.2	14.9
1966	81.8	6.2	88.0	7.6	16.1
1970	77.2	6.1	83.2	7.8	16.5
1975	65.2	6.0	71.1	9.1	16.8
1980	54.3	6.2	60.5	11.4	16.1
1985	45.5	6.6	52.1	14.5	15.2
1990	37.0	7.2	44.2	19.4	13.9
1995	32.3	8.3	40.6	25.8	12.0
2000	29.2	10.2	39.5	35.0	9.8

주: 1) 1949년 센서스의 경우 최상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집계하고 있으므로, 노년 부양인구비 등의 계산에서는 다른 센서스의 65세 이상과는 달리 60세 이상이 사용되었음.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양인구구성은 경제적으로 부양연령층의 인구나 피부양층 인구의 구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부양인구비를 지표로 사용한다(권태환·김두섭, 1989). 부양연령층은 통상적으로 15~64세 청장년 인구를 사용하지만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라고도 한다. 이러한 부양인구비는 한 사회의 사회경제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센서스가 처음 실시된 1925년 총 부양인구비는 77.3이었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 인구 100명이 피부양층인 유소년과 노인 77.3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유소년 부양인구비가 70.4이고 노년 부양인구비가 6.9로 나타나 인구구조상 대부분의 부양부담이 유소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유소년 부양부담은 1966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상위 연령층을 60세 이상으로 집계한 1949년 센서스를 제외할 경우, 1966년 유소년 부양비는 81.8로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유소년 부양인구비는 2000년 현재 29.2에 불과하여 1966년의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년 부양인구비는 1985년까지 6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 후 급격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유소년 부양부담의 감소와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 노년 부양인구비는 1990년 7.2, 1995년 8.3, 그리고 2000년에는 10.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소년 부양인구비의 감소폭이 노년 부양인구비의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2000년 총 부양인구비는 1925년의 절반 수준인 39.5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 현재의 인구구조가 1925년의 인구구조에 비해 부양부담이 적은 연령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소년 인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주로 이들의 교육에 있다면, 노인인구에 대한 고려는 이들의 보건, 의료와 노후생활의 보장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인구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고령화지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0~14세 유소년 인구로 나눈 것으로, 유소년 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수를 의미한다. 고령화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살펴보면, 1975년까지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유소년 인구 100명 당 10명 미만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가 1980년에 11.4명에 진입하고, 1995년에 25.8명, 그리고 2000년에는 35명 수준에 이르러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1인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즉 잠재적 노년부양비(potential support ratio)는 1975년 16.8명으로서 정점에 있다가 그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17명이 노년인구 1인을 부양하면 되는 인구구조에서 2000년 현재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10명이 노년인구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30년에는 2.8명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통계청(2001c)은 전망하고 있다. 즉 생산

〈표 6-8〉 주요 국가의 잠재적 노년부양인구비 비교

(단위: 명)

국가	1998	2050	국가	1998	2050
한국	10.03	2.40	러시아	5.57	2.41
프랑스	4.19	2.26	독일	4.08	1.75
이태리	4.42	1.52	영국	4.07	2.36
일본	4.26	1.71	미국	5.37	2.57

자료: UN(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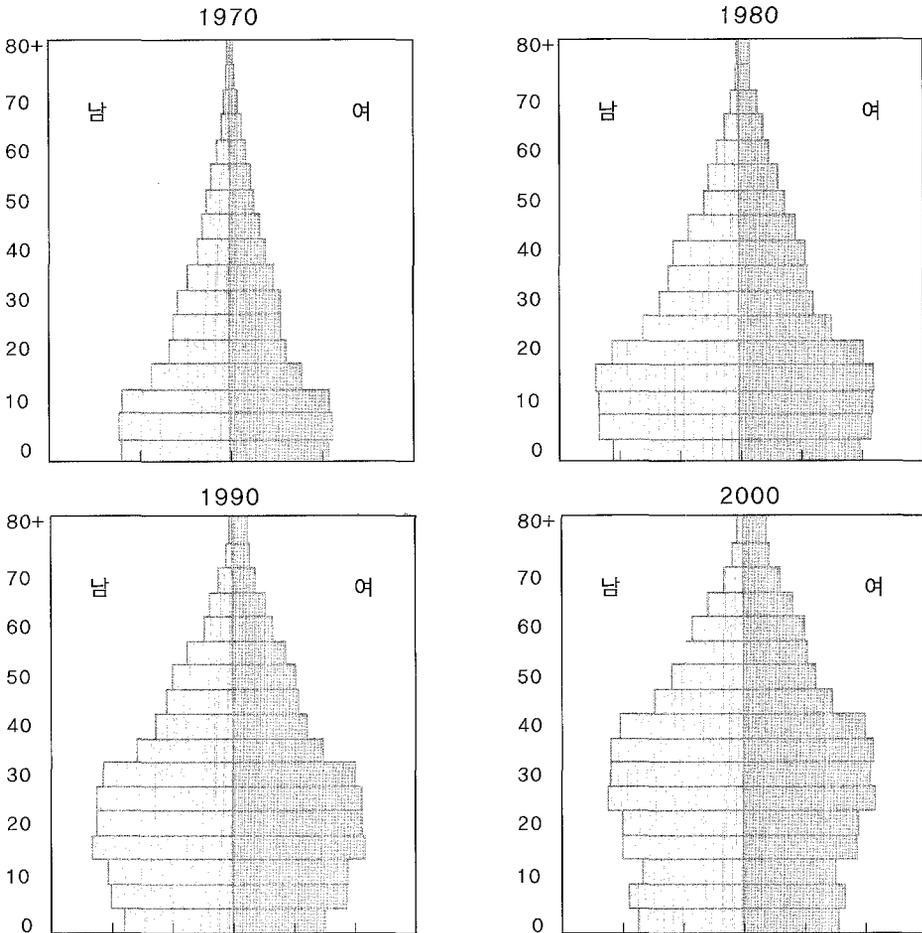
가능인구 약 3인이 노인인구 1인을 부양해야하는 인구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노인복지 부담이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표 6-8〉에서 UN에서 추정 한 저출산국가의 잠재적 노년부양인구비를 비교하여 보면, 1998년 우리 나라의 잠재적 노년부양인구비는 10.03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2050년에는 다른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미국보다는 오히려 더 낮게 추정되었다. 〈표 6-8〉에 제시된 다른 국가들의 경우, 52년에 걸쳐 잠재적 노년부양인구비가 약 절반 수준으로 낮아 지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약 1/4수준으로 낮아져 그만큼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우리 나라의 출산율 수준이 이들 비교 국가에 비해 더욱 급속하게 낮아져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 4)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는 인구의 구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세 가지 인구성장의 구성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권태환·김두섭, 1989: 69-73). 〈그림 6-1〉은 우리 나라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인구는 출생률의 감소에 의하여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반면,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인구구성비가 최근에 올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 인구 피라미드, 1970~2000



여기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의 각 세별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인구변동과정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를 전후하여 살펴보면, 1945년 광복 전후의 혼란기로 인하여 출생이 줄어들었다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0세를 전후한 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출생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전후 '베이비 붐'으로 인하여 출생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출생의 증가는 1965년생인 35세 연령까

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 35세 전후와 22세 전후의 인구 피라미드는 각각 광복 전후의 혼란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한 세대 후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960년대 초부터 정부주도로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40세부터 출생아수의 규모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0세 미만의 연령층의 경우, 미혼율 및 초혼연령의 증가에 따라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5) 지역(도시·농촌)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지역별 인구구조는 지난 40년 동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지난 40년 동안 읍면 지역 인구는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유소년 및 청장년이 모두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읍면지역의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 41.2%에서 2000년에는 18.6%로 22.6% 감소한 반면, 노년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 4.2%에서 2000년에는 14.7%로 10.5% 증가하였다.

한편 2000년 현재 읍면지역은 15세~64세의 청장년 인구와 0~14세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동지역보다 적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동부의 경우 전체인구의 5.4%(200.1만 명)이나 읍면지역에서는 동지역보다 9.3%

〈표 6-9〉 동·읍면지역의 연령구조, 1960, 2000

(단위: 천 명, %)

구분	1960			2000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	24,989	6,997	17,992	45,985	36,642	9,34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0.6	39.1	41.2	21.0	21.6	18.6
15~64세(%)	55.6	58.4	54.5	71.7	73.0	66.7
65세이상(%)	3.7	2.5	4.2	7.3	5.4	14.7
고령화지수	9.2	6.4	10.3	35.0	25.3	78.7

자료: 경제기획원(1963); 통계청(2002a).

가 높은 14.7%(137.1만 명)로 나타나, 우리 나라 읍면지역의 고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2000년 현재 우리 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지수를 보면 동지역의 경우 25.3인데 비하여 읍면지역은 78.7로 동지역보다 53.4가 높아, 읍면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과 읍면 지역의 도시 편입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성비 불균형의 변화 추이

### 1) 출생성비 불균형의 변화 추이

우리 나라에서 출생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은 남아선호관, 소자녀 가치관, 태아성감별을 위한 의료기술의 보급, 그리고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보편화 등의 요인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조남훈 외, 1995).

〈표 6-10〉은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0세 아동의 성비이다. 대체로 1970년까지는 106정도로서 정상에 가까웠으나, 1975년에는 108까지 상승하였고, 1985년 이후부터는 110을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에는 여아 100명에 비해 남아가 112.5명이나 되었고, 1995년에는 이 비율이 더욱 상승하여 여아 100명당 113.8명을 기록하였다. 인구센서스에서 여아보다는 남아의 보고비율이 높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0세 아동의 성비가 113까지 이른 것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그 동안의 지속적인 홍보 등의 노력 결과 2000년에는 0세 아동의 성비가 111.5로 199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이처럼 0세 아동의 성비가 높은 것은 셋째아에서의 출생성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90년의 경우 전체적인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6.5명으로 나타났는데, 첫째아인 경우 108.5으로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둘째아의 출생성비는 117.0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셋째아인 경우

〈표 6-10〉 0세 인구의 성비 추이, 1940~2000

(단위: 명, 여자 100명 당 남자수)

연도	계	남자	여자	성비
1940	842,947	428,879	414,068	103.58
1944	970,641	481,897	488,744	98.60
1966	843,369	436,968	406,401	107.52
1970	816,020	420,811	395,209	106.48
1975	698,362	362,718	335,644	108.07
1980	754,560	392,305	362,255	108.30
1985	611,070	320,689	290,381	110.44
1990	632,402	334,829	297,573	112.52
1995	655,707	349,050	306,657	113.82
2000	599,073	315,765	283,308	111.46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188.9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셋째아 이상에서 태아성감별을 통해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하는 등 성 선택적 출산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최근의 홍보, 태아성감별 의사에 대한 처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6-11〉에서 2000년 출생성비는 110.2로 감소하였고, 특히 둘째아의 성비가 107.4로 거의 정상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아인 경우 141.7로서 1994년의 202.3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성비가 높으며, 특히 셋째아의 성비가 141.7이나 된다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태아성감별에 의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출생성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시도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6-12〉에서 2000년 현재 출생성비가 111을 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로서 영남 지역에서 높은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1년의 경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출생성비는 각각 124.9와 122.7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남아선호관이 강하고

〈표 6-11〉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1985~2000

(단위: 여자 100명 당 남자수)

연도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1985	109.5	106.0	107.8	129.0	146.8
1990	116.5	108.5	117.0	188.9	209.3
1994	115.2	106.0	114.1	202.3	224.9
1995	113.2	105.8	111.7	177.2	204.3
1996	111.6	105.3	109.8	164.0	185.1
1997	108.2	105.1	106.3	133.5	153.9
1998	110.1	105.9	108.0	144.7	153.5
1999	109.6	105.6	107.6	141.9	154.7
2000	110.2	106.2	107.4	141.7	154.9

자료: 통계청(2002); KOSIS, 해당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태아의 성감별 및 이에 따른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시술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2) 노인 성비 불균형의 변화 추이

노인인구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이 쇠퇴하는 이른바 노인기에 들어서 있는 인구집단으로서, 다른 연령계층과 비교해 볼 때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사실 외에도 이들 집단에 독특한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노인인구를 성별로 고찰해 보면 이들의 성별 사망률의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성비가 전체인구에 비하여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센서스가 처음 실시된 19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성비는 83.6이며 7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2000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령이 높을수록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한편, 1925년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83.6이던 것이 그 후 점차 낮아져서 1980년 59.4까지 감소하고 있다. 그 후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소폭이지만 조금씩 높아져 2000년에는 61.8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자의 연령별

〈표 6-12〉 지역별 출생성비의 분포, 1991~2000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수)

지역	1991	1993	1995	1997	1999	2000
전국	112.4	115.3	113.2	108.2	109.6	110.2
서울	110.1	113.2	110.8	106.3	107.8	108.9
부산	115.9	118.3	117.2	110.9	111.0	112.8
대구	124.9	124.6	116.9	111.5	113.1	113.4
인천	108.1	112.2	112.6	107.2	110.0	108.7
광주	110.8	110.8	107.5	106.6	108.5	110.0
대전	113.4	118.3	114.4	106.1	108.8	107.2
울산 <sup>1)</sup>	-	-	-	112.9	114.6	112.6
경기	109.4	112.6	111.5	107.9	108.9	109.4
강원	109.7	115.2	112.3	106.4	108.9	110.7
충북	112.4	116.1	114.7	105.8	108.9	112.5
충남	112.5	114.2	111.5	107.4	110.6	109.9
전북	107.2	110.4	112.3	107.7	107.3	108.1
전남	110.4	112.8	111.7	106.0	109.6	109.3
경북	122.7	124.1	118.3	112.6	112.9	113.6
경남	117.1	121.2	119.2	111.8	110.8	112.7
제주	103.7	108.1	112.0	108.9	110.8	105.6

주: 1) 울산광역시의 경우 19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1997년부터 자료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이전 자료는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2002): KOSIS, 해당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기대여명이 남자보다 높은 데서 오는 결과이다. 이러한 성별 인구수의 불균형 상태는 노인층 인구의 결혼상태와 직결되는 동시에 노인의 성문제, 노후의 고독 등 노후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 불균형은 평균수명의 남녀간 차이에 기인한다. 〈표 6-14〉에서 1971년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는 7.1세이지만 1981년에는 8.2세, 1991년에는 8.2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0년 현재 남자의 평균수명은 72.1세, 여자는 75.9세로 여자가 7.4세 높다. 이러한 남녀별 차이는 남녀 사망률의 격차 축소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6-13〉 연도별 연령계층별 성비, 1925~2000

(단위: 여자 100명 당 남자수)

	계	0~14	15~64	65+	75+
1925	104.6	105.6	105.6	83.6	74.4
1930	103.6	104.8	104.3	82.8	73.2
1935	103.1	104.5	103.5	83.0	72.1
1940	101.1	104.1	100.2	82.7	69.9
1944	99.4	103.6	97.5	81.9	69.2
1949 <sup>1)</sup>	102.1	103.8	103.1	82.3	-
1955	100.0	108.3	96.1	72.9	64.6
1960	100.8	107.5	98.6	70.1	62.5
1966	101.4	107.4	99.5	64.8	54.8
1970	100.8	107.2	98.9	62.1	49.7
1975	101.2	107.4	100.3	61.2	45.1
1980	100.5	106.9	100.3	59.4	41.2
1985	100.2	107.2	100.4	59.4	41.8
1990	100.7	108.0	101.8	60.0	43.4
1995	100.7	110.0	102.3	58.5	45.3
2000	100.7	111.8	102.5	61.8	47.2

주: 1) 60세 이상 인구임.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표 6-14〉 평균수명의 추이, 1971~2050

(단위: 세)

	1971	1981	1991	2000	2010	2020	2030	2050
합계	62.3	66.2	71.7	75.9	78.8	80.7	81.5	83.0
남자	59.0	62.3	67.7	72.1	75.5	77.5	78.4	80.0
여자	66.1	70.5	75.9	79.5	82.2	84.1	84.8	86.2
차이	7.1	8.2	8.2	7.4	6.7	6.6	6.5	6.3

자료: 통계청(2001c).

### 3) 지역별 성비 불균형

동·읍·면 등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별 성비는 지역의 성별 인구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선별적인 인구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표 6-15〉에서 25~29세 인구의 경우 전국의 성비는 100.9로서

남자와 여자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동부와 읍부의 성비는 각각 98.5와 98.6으로서 면부의 130.7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면부의 경우 20대 후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반면, 동부와 읍부의 경우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연령대의 여성이 면부로부터 동부와 읍부로 많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 면부의 성비는 161.8이나 되어 이 연령층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지역의 서비스업종 등에서 20대 여성의 취업기회가 많은 현실과 상관이 있다고 해석된다.

〈표 6-15〉 지역(동·읍·면)별 연령별 성비, 2000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수)

구분	전국	동부	읍부	면부
계	100.7	101.1	100.6	98.1
0~4	110.2	110.2	109.9	110.4
5~9	113.6	113.8	112.5	112.4
10~14	111.4	112.1	109.2	107.5
15~19	107.7	107.7	104.3	109.6
20~24	111.4	105.8	122.7	161.8
25~29	100.9	98.5	98.6	130.7
30~34	102.1	100.6	102.8	117.6
35~39	102.3	100.2	112.7	114.2
40~44	103.2	101.4	115.6	110.4
45~49	102.8	103.0	105.9	99.1
50~54	101.7	103.0	100.3	95.7
55~59	95.1	100.1	87.7	80.9
60~64	87.8	92.1	82.2	79.4
65~69	75.9	77.6	74.0	73.4
70~74	61.1	59.3	60.9	64.8
75~79	54.3	50.6	55.9	61.2
80~84	44.9	41.5	46.8	51.0
85+	29.8	28.3	29.7	32.4

자료: 통계청(2002a).

### 3. 성 · 연령 구조 변화의 사회적 의미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논의한 성 및 연령구조의 변화는 크게 유소년 인구의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생성비 및 노인인구의 성비 불균형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노인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노인복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노인 복지 수준의 향상과 함께 다루기로 한다.

#### 1) 유소년 인구 감소 및 교육 문제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출산력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출산력의 감소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은 바 크지만, 아울러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소자녀 규범의 확산, 사교육비의 증대에 따른 아동 양육비의 증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기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학령기 아동의 감소, 신규 노동력의 감소, 군입대 대상 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아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학령기 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진다. 즉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인구(6~11세)는 1970년 571.1만 명에서 2000년 현재 407.3만 명으로 약 164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2030년에는 250.1만 명으로 추가로 157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감소는 지역별 인구가동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과밀현상이, 그리고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균형적인 국토발전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심한 이동 현상은 지역적으로 학교 수급전망과 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적정하게 학생을 교육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급격한 학생수 증감에 적기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학령기 아동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교육시설이 남아 돌아가 폐교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인구이동에 따른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인구분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이동정책과 연계하여 교육투자를 계획하여야 하며, 폐교시설에 대해서는 양로원이나 수련원 등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여성 및 노인 인력의 활용 활성화

21세기 노동공급 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정책과제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력의 활용이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학력화 추세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젊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의 활용과 고령자 활용 대책은 고용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 인적자본과 관련된 변수, 가족형성의 주기 등이 영향을 준다. 특히 취학 전 자녀 유무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이다.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참여는 크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보육시설이 미비할수록 더욱 그러하게 된다. 기혼 취업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양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되는 기혼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될 수 없는 실정이며 보육사업을 위한 사회적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엔젤 플랜을 보면 일본도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아동보육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실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여성의 자녀양육과 일에 대한 양면적 지원, 지역의 자녀양육지원센터 확충, 모자보건의료체제의 충실화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등을 정책의 골자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아동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동보육의 사회화 추이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노인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고령자 취업 확대 및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조기정년퇴직은 이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이 많은 실정이지만,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직장이 55세를 전후하여 정년을 정하고 있어, 생애주기로 보면 자녀의 결혼 등 경제적 부담이 큰 50대에 조기정년퇴직을 하고 있다. 정년퇴직자들의 대부분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강하지만, 기업의 일반적 인식은 젊은 노동력을 구하고 정년 후 재취업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나 임금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수준을 체감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 정년의 단계적 연장은 향후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와 노동력 부족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시책으로 인하여 당장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가 안정되는 일정 시기부터는 전 직종 종사자에 대한 점진적인 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을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생산활동에 활용하고, 적당한 일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과 함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활력 있는 고령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복지대책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소득, 의료, 여가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의존적인 노인의 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 예로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아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인의 의료비 증가율은

약 20배인 반면, 65세 이상인구의 의료비는 무려 7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러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외에도 연금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경제 제반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노인문제가 바로 여성 노인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소득 활동이 미약하고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노인의 성문제, 노후의 고독 등 노후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 4) 출생시 성비 불균형 대책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는 교육기관에서 남녀간의 성비 불균형일 것이다. 출생성비가 105~106으로 정상이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높은 영아사망률이 사라진 현재 학교 내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나타날 수 있지만, 성비가 110을 넘을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구나 여자 짝을 찾지 못하여 남자아동 끼리 짝을 하게 되는 경우 어릴 때부터 남녀간 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가까운 장래에 결혼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 현재 5~9세의 남자아이가 성장해서 2010년 25~29세가 되었을 때 20~24세 여자인구와의 성비는 무려 129로 추정되고 있어, 이 연령집단의 남자 129명 중 29명은 신부부족으로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조남훈 외, 1995). 그 결과 남녀간 결혼연령 차이의 확대, 해외로부터의 신부수입, 독신 증가 등 전통적인 결혼풍속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출생성비 불균형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태아 성감별과 함께 이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이다. 인공임신중절은 태아 및 모성건강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윤리적인 문제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 V. 요약 및 결론

이 장은 192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인구의 성 및 연령 구조의 분석을 통해 그 동안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성 및 연령구조의 변화는 크게 유소년 인구의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생시 및 노인인구의 성비 불균형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인구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1962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 사업 위주의 인구증가억제 정책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영향으로 0~14세 유소년 인구는 1970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5~64세의 청장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955년 71.4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70년 103.9만 명으로 백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1990년에는 2백만 명을, 그리고 2000년에는 3백만 명을 돌파하여 337.4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인구의 구조 측면에서 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6년 43.5%를 차지하여 정점에 도달한 후 1970년에는 42.1%, 1975년 38.1% 등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21.0%로 1970년의 4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소년 인구 비중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피임실천율의 증대, 인공임신중절의 확산, 초혼연령의 상승, 소자녀 규범의 형성 등에 힘입은 바 크다. 그 결과 학령기 인구의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군입대 연령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가족계획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1966년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2%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1980년 62.3%로서 60%를 넘어 섰고, 1995년 71.1%로 70%를 넘어선 이래 2000년 현재 71.7%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2014년 72.2%를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64.6% 수준으로 낮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까지는 약 4% 수준 내외에서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다가 1985년 4.3%, 1990년 5.0%, 그리고 1995년 5.9%, 2000년에는 7.3%에 도달하여 우리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14.4%)에는 고령사회에, 그리고 2026년에는 20.0%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 0세 아동의 성비가 110 이상으로 높은 것은 출생 순위별로 보면 셋째아에서의 성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셋째아 이상에서 태아성감별을 통해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하는 등 성 선택적 출산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생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는 교육기관에서 남녀간의 성비 불균형일 것이다. 여자 짝을 찾지 못하여 남자아동끼리 짝을 하게 되는 경우 어릴 때부터 남녀간 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가까운 장래에 결혼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남녀간 결혼연령 차이의 확대, 해외로부터의 신부 수입, 독신 증가 등 전통적인 결혼풍속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노인의 성비 불균형은 여자 노인의 노후가 매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여자 노인은 여성의 취업기회가 매우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적고, 더구나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재산도 축적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보건의료문제, 노후의 고독 등 여러 가지 노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성 및 연령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고령자 취업 확대 및 정년 연장,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의 확충, 그리고 출생성비 불균형 대책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연령구조는 저출산의 지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 및 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정년제도, 가족제도, 여성 및 노인복지, 인력개발 등 사회경제 모든 부문에 걸친 총체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대응전략이 향후 우리 나라 인구정책의 주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여 백

## 제7장 혼인상태

변 화 순

### I. 머리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은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혼인양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여성은 물론 남성의 혼인상의 지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된 인구학적 지표의 변화로 미혼율 증가, 결혼율 감소, 혼인연령 증가, 이혼율 증가, 재혼율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혼인과 관련된 제반 현상 중 주목할 점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참여증대 등으로 인해 평균 초혼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건수도 늘어나는데, 여기서 초혼남-재혼녀의 결혼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혼인양태의 다양한 유형은 혼인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허용하고, 이혼 및 재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에서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통계청(1999d)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3.8%로 그다지 높지 않지만, 여성과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경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거나(29.1%), 찬성(8.6%)하는 비율이 37.7%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여성과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재혼에 대한 태도에서 72.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과 젊은 층의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는 혼인 관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혼인에 있어 수동적 위치에 있던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족관계에서도 남녀평등 사상과 개인주의가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데서 그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남녀 모두 이미 다양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많은 갈등을 안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에 관련되는 가치관으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결혼이데올로기’, 남성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여성은 남편을 보조하여 자녀양육을 잘해야 한다는 ‘가장규범과 현모양처규범’,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하면 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살라는 ‘정절이데올로기’ (문소정, 1995)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혼인양태에는 이미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 변화가 가져오는 괴리 현상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혼인상태의 다양한 현상을 가족에 대한 포스트모더니티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Doherty, 1999).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족에 가져온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적 가부장 중심의 규범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이와 더불어 상호 존중하는 양성 평등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인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남성 가장이 생계를 유지하고 여성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규정하는 규범은 대체적으로 전통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그 괴리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혼인상태와 관련된 제반 인구학적인 변화에서 여성의 미혼율 증가, 혼인율 감소, 재혼의 증가, 그리고 이혼의 증가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각 주제마다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변화 및 쟁점을 젠더의 관점에서 밝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인구학적 장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 II. 연구자료 및 개념정의

### 1. 연구자료

이 연구의 기본자료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보고서』와 당해 연도 2% 표본조사 자료, 그리고 『인구동태통계연보』 및 당해 연도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센서스 보고서』 중 혼인에 관한 자료는 조사시점 인구의 혼인상태(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를 조사한 관계로 혼인연령, 혼인표 등 주요 지표를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이에 최근 국민의 호적신고(또는 인구동태신고)율이 향상됨에 따라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이용한 혼인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혼에 관한 자료는 『인구센서스 보고서』와 당해 연도 2% 표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1990년 이후의 초혼, 재혼 및 이혼의 변화를 교육, 직업, 지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인구센서스 보고서』와 『인구동태통계연보』, 그리고 원자료를 활용하거나 2차 자료를 재이용하였다.

### 2. 개념 정의

사전적인 개념정의에서 ‘혼인’이란 (남녀가)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 곧 한 쌍의 남녀가 지속적인 생활 관계를 맺거나 또는 그와 같은 관계에 들어가는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에 의한 중생적인 결합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인구학에서 혼인력의 지표로는 초혼연령과 혼인상태를 본다.

초혼연령은 결혼생활로 돌입하는 시기로 혼인력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초혼연령은 15세 이상의 인구 중 5세 간격으로 한 미혼인구를 바탕으로 헤이날(Hajnal)이 계산한 평균초혼연령(SMAM)이 혼인력의 지표로 널리 사용된다(권태환·김두섭, 1989). 평균초혼연령은 센서스 자료로부터 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연구에서는 『인구동태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혼인상태 역시 혼인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혼인상태는 개인의 현재 결혼상의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미혼과 기혼으로 크게 나뉘며, 기혼은 다시 유배우, 이혼 및 사별로 구분된다. 국제적인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해 UN의 인구위원회는 혼인상태의 기본 범주를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자, 결혼하여 유배우 상태에 있는 자,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은 자,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자, 그리고 결혼은 하였으나 법적으로 별거 상태에 있는 자로 구분할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혼인상태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외의 법적 별거 등을 포함하는 상태는 미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혼인상태를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로 구분하며, 또한 혼인을 초혼과 재혼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 Ⅲ. 기존 연구 검토

한국인의 혼인 형태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에서 이삼식(1993)은 근대화, 산업화에 따라 우리 나라의 혼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결혼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을 볼 때, 혼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는 2005년 이후에는 절대적인 혼인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교육기간의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는 초혼연령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만혼의 경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혼에 관한 연구로는 박경애(2000)의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율이 증가하지만, 남녀 모두 40, 50대 중년층의 이혼율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4세 이하 젊은 층의 이혼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초기의 이혼율 역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결혼 후 일정 기간에 이혼이 집중되던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시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미혼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혼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Retherford 등(2002)은 일본 남성의 미혼율을 2000년에 15%, 2010년 20%로 전망하고 있으며, 여성의 미혼율은 같은 기간에 7%에서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도시가 농촌에 비해 미혼율이 높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남자의 경우 저학력 소지자가, 여자의 경우 고학력 소지자가 미혼으로 남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 수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보수적인 일본의 기성세대에 대해 젊은 여성들이 비판적이며,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매 10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시행하여 왔는데 2000년 센서스 자료가 최근에 발표되어,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의 센서스 당국은 결혼형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교육연수, 출산력, 연령, 인종, 결혼연령 및 결혼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한바 있다(U.S. Bureau of Census, 1992). 이 보고서에서 지난 25년 간 미국의 초혼율이 감소하고 이혼율은 증가하였으며, 재혼부부의 재이혼이 초혼부부의 이혼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율과 재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과 이혼의 연령, 교육수준과 이혼, 혼전 임신과 이혼, 그리고 이혼연령과 재혼가능성 등의 관계에 대한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아동들이 다양한 주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많은 아동들이 한 부모,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여성의 빈곤화가 초래된다는 점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혼사에 대한 회상기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37,000가구를 조사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가족과 이혼 유형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도 있다(Kreider and Fields, 2001). 이 연구는 결혼의 시작과 끝남,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세대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한 횟수, 초혼의 지속연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결혼, 별거, 이혼, 사별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과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상태와 주택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이혼자의 초혼 평균 결혼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한번 결혼을 했지만 20세기 후반기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이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재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을 더 많이 하고, 별거는 덜 하고 있다. 초혼 후 이혼한 사람의 절반이 3년 내에 재혼을 하였으며, 별거 혹은 이혼한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빈곤한 상태에 있다. 이 보고서는 패널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해주며, 한국에서도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패널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 IV. 분석 결과

### 1. 혼인상태의 변화

#### 1)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지난 85년 간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를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양상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915~1945년의 일제하 통치시기를 제1기로 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높은 혼인율과 낮은 이혼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2기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 및 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면서도 경제개발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적은 시기로 특징지어지는 1946년 이후부터 1960년까지로 보는데, 이 시기에는 낮은 혼인율과 낮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제3기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 이후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이는 1961년 이후부터 1980년까지로, 증가하고 있는 혼인율과 이혼율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표 7-1〉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1915~2000

(단위: 천 명, 건수, %, %)

연도	총인구 (천 명)	혼인수 (건수)	조혼인율 (%)	이혼수 (건수)	조이혼율 (%)	혼인에 대한 이혼비 (%)
1915	15,958	111,443	9.0	7,995	0.5	7.2
1920	17,264	138,505	8.0	7,982	0.5	5.8
1925	19,020	186,710	9.8	7,607	0.4	4.1
1930	21,438	180,833	8.9	8,894	0.4	4.9
1935	22,208	135,143	6.1	5,323	0.2	3.9
1938	21,951	158,271	7.2	8,151	0.4	5.2
1949	20,167	85,043	4.2	3,223	0.2	3.8
1955	21,502	127,489	5.9	5,825	0.3	4.6
1960	24,989	186,187	7.5	7,016	0.3	3.8
1965	28,670	259,081	9.0	8,150	0.3	3.1
1970	31,458	295,137	9.2	11,615	0.4	3.9
1975	35,341	283,226	8.0	16,453	0.5	5.8
1980	37,417	403,031	10.6	23,662	0.6	5.9
1985	40,420	376,847	9.2	38,838	1.0	10.3
1990	43,390	399,312	9.3	45,694	1.1	11.4
1995	44,564	398,484	8.7	68,279	1.5	17.1
2000	45,985	334,303	7.0	119,982	2.5	35.9

주: 1) 1945년 이전 수치는 남북한 관련 수치임.

2) 1945년, 1950년 자료는 해방, 전쟁으로 기록이 없음.

3) 1925~1955년의 총인구는 통계청의 자료와 차이가 있으나 자료의 일관성을 고려해 그대로 인용하였음.  
자료: 1) 1970년 이전: 이태영(1960, 1981); Byun(1987).

2) 1970년 이후: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및 인구센서스 보고서).

제4기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지만 IMF 경제위기를 겪은 1981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로, 이 시기는 지속적인 혼인율 감소와 급격한 이혼율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1기는 전반적으로 높은 혼인율과 낮은 이혼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높은 조혼인율은 1925년의 9.8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1935년에 6.1을 기록한 이후 다소 반등하여 1938년에는 7.2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제 말년에 징병, 정신대 차출 등 제반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결혼을 일찍 함으로써 이

를 면하고자 시도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혼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15년의 인구 1,000명당 0.5라는 낮지 않은 비율을 보이면서 1935년의 0.2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38년에 0.4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7-1>에서 1915~1930년 사이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은 개화초기 부모가 정해진 배우자가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아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게 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태영, 1960).

제2기로 특징지어지는 해방 후 남한의 조혼인율은 1949년 4.2로 낮지만 서서히 증가하여 1955년 5.9에서 1960년 7.5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해방과 전쟁 등 사회적 불안으로 인하여 결혼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이후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혼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55년 전후의 혼인율 증가는 ‘베이비 붐’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출산율의 증가를 유발하였고, 이는 후에 인구동태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조이혼율은 0.3 이하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3기로 접어들어 1965년에 9.0이던 조혼인율이 1975년에 8.0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1980년에 10.6으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에 조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5년의 0.3에서 1980년에는 0.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까지는 전통적인 결혼관, 이혼관으로부터 이탈하는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4기의 조혼인율은 1985년에 9.2에서 1990년 9.3으로 다소 높아진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여 1995년에는 8.7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는 7.0으로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이혼율도 증가하여 1985년에는 1.0으로 이전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지속되어 2000년에는 2.5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아마도 1997년부터의 IMF 경제 위기가 혼인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혼인행태와 관련하여 장래에도 미혼율 증가, 혼인율 감소, 그리고 이혼율과 재혼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을 성과 연령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성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표 7-2〉에는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는 혼인상태를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고, 기혼은 다시 유배우, 사별, 이혼으로 구분하였다. 미상은 1% 미만이어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당해 연도의 인구구성비의 변화이므로 그 해의 결혼, 사별, 혹은 이혼에 대한 통계 수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표 7-2〉를 보면, 유배우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과반수는 유배우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별자 구성비의 성별 비교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여자가 남자의 사별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10% 이상 높다는 점이다. 이혼의 경우에는 다른 혼인상

〈표 7-2〉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추이, 1925~2000

(단위: 천 명, %)

혼인상태	1925	1930	1955	1960	1970	1980	1990	2000
여자	5,754	6,219	7,606	8,077	9,266	12,542	16,266	18,366
유배우	76.0	77.4	54.0	56.5	59.1	57.4	58.8	60.0
사별	17.7	16.2	14.3	14.6	15.2	13.3	12.5	12.8
이혼	1.1	0.6	1.3	0.8	0.9	0.6	0.9	2.1
미혼	5.3	5.9	30.4	27.6	24.9	28.7	27.8	25.1
남자	6,066	6,494	7,347	7,868	8,927	12,209	15,991	17,981
유배우	72.1	72.1	53.1	55.4	59.8	57.4	59.3	61.2
사별	8.5	7.6	3.3	2.8	2.4	1.9	1.8	1.8
이혼	1.4	1.6	0.8	0.5	0.4	0.4	0.7	1.8
미혼	18.1	18.8	29.1	41.0	37.4	40.4	38.2	35.1

주: 1) 1955년 이전의 수치는 남북한 관련 수치임.

2) 1940년 자료는 비교기준이 산업별, 혼인상태별로 다른 연도와 달라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조선총독부,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태에 비해 낮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미혼자 구성비율이 여자의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10.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자가 남자보다 사별자의 구성비율이 높다는 점과 남자가 여자보다 미혼비율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사별자 구성비율의 남녀 격차는 일차적으로 남자가 사별 후 재혼을 하는 경향이 여자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2000년에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에(40~44세 남자 3.8, 여자 1.2; 45~49세 남자 5.7, 여자 1.9)(통계청, 2001i, 2002d), 중년 남자의 높은 사망률로 인해 여자의 사별자 구성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미혼

〈표 7-2〉에서 미혼자 구성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여자는 1960년 27.6%에서 1970년 24.9%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이후 감소하여 2000년에는 25.1%로 나타났다. 남자의 미혼자 구성비율 역시 1970년 이후 증가하지만, 1980년의 40.4%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여 2000년에 35.1%이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연령집단별로 보면, 젊은 30~34세 연령층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표 7-3〉에서 여자의 2000년 미혼율은 10년 전에 비해 25~29세 집단에서 18.0%, 30~34세 집단에서 6.4% 증가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남자의 미혼율 역시 30~34세 집단에서 14.2% 증가하였고, 35~39세 집단에서 6.8% 증가하였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지낼 확률이 높은 45~49세 집단의 미혼자 비율도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여자는 1.7%, 남자는 2.4%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미혼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남자의 미혼율이 여자보다 높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결혼적령기 여자 미혼율의 증가속도가 남자의 그것을 앞선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인연령의 상

〈표 7-3〉 성 및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 추이, 1970~2000

(단위: 천 명, %)

		1970	1980	1990	2000
여자	미혼 인구수	2,303	3,601	4,517	4,617
	15~19	97.1	98.2	99.5	99.3
	20~24	57.2	66.1	80.5	89.1
	25~29	9.7	14.1	22.1	40.1
	30~34	1.4	2.7	5.3	10.7
	35~39	0.4	1.0	2.4	4.3
	40~44	0.2	0.5	1.1	2.6
	45~49	0.0	0.3	0.6	1.7
남자	미혼 인구수	3,335	4,933	6,114	6,317
	15~19	99.7	99.8	99.9	99.4
	20~24	92.6	93.1	96.4	97.5
	25~29	43.4	45.2	57.3	71.0
	30~34	6.4	7.3	13.9	28.1
	35~39	1.2	1.7	3.8	10.6
	40~44	0.4	0.7	1.5	4.9
	45~49	0.2	0.4	0.8	2.4

자료: 경제기획원(1972, 1982a); 통계청(1993, 2002a).

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혼자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혼인시장을 결정하는 결혼적령인구의 수의 불균형,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지역적인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Mason and Tsuya, 1999).

결혼적령인구의 불균형에 대한 주원인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혼적령기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를 초과하는 현상은 1990년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2010년에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1970~2000년의 기간 평균결혼연령이 남자 27.1~29.3세, 여자 23.3~26.5세였음을 감안하여 〈표 7-4〉에서는 남자 26~30세와 여자 23~27세 연령집단을 결혼적령기로 간주하였다. 이 표에서 결혼적령기 남녀의 비는 1970년에 100.6이었지만, 1980년에는 반대로 여자 100명당 남자 83.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7-4〉 결혼적령기 남녀 인구 및 성비의 변화 추이, 1970~2020

(단위: 명)

연도	여자 (23~27세)	남자 (26~30세)	성비 <sup>1)</sup>
1970	1,112,478	1,119,511	100.6
1980	1,732,522	1,439,994	83.1
1990	2,076,567	2,210,165	106.4
2000	1,826,244	2,111,766	115.6
2010	1,611,600	2,043,324	126.8
2015	1,454,669	1,678,757	115.4
2020	1,588,928	1,793,194	112.9

주: 1)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자료: 경제기획원(1972, 1982a); 통계청(1993, 2001c, 2002a).

1990년부터 다시 남자의 수가 여자에 비해 많아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도 커져서 2000년에는 성비 115.6으로 남자초과 현상을 크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결혼적령기의 성비는 2010년에 126.8, 2011년에 129.1로 정점을 이루다가 2020년 이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남성들은 앞으로의 20년간의 혼인시장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남아 초과현상이 결혼적령기 여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이어져, 남자의 결혼을 힘들게 만드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남녀평등사회를 향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은기수(2002)는 결혼연령의 변화에서 특히 1997년 이후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즉 최근 성, 결혼, 출산, 이혼, 재혼 등 가족가치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성에 대한 태도도 자유로와 지고, 결혼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던 과거의 고용관행이 사라지고 지금은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줄어 결혼시기를 미루게 되고, 그 결과 남성들의 결혼연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혼율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경우 남성 못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직장도 불안정하기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 과거 처럼 결혼을 통해 안정된 생활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대폭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성들도 결혼을 지연하게 되고, 그 결과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미혼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 미혼에 관한 문제는 출산율의 감소, 혹은 다양한 삶의 선택을 위한 논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인구학적, 경제적 원인 외에도 남성들의 미혼율의 증가는 남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국민일보, 2002).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의 연구팀의 25~33세의 미혼남성 6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 가령 섹스 상대나 자식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결혼생활에 실패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결혼을 미루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결혼에 대한 압력이 예전과 같이 심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비롯한 독신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결혼을 미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혼율의 증가 양상은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다르다. 남녀 모두 도시 거주자의 미혼자 구성비율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0년 현재 15세 이상 전체 여자인구 중에서 시부의 미혼자 구성비율은 36.3%, 군부는 30.7%이다. 남자인구의 미혼자 구성비율도 시부와 군부가 각각 27.2%와 17.5%로 나타나, 도시 거주자의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02a). 그러나 <표 7-5>에서 연령별 미혼인구의 비율을 보면, 도시 여자는 농촌 여자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남자의 경우 30~34세 이후부터 미혼자의 비율이 도시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농촌 총각의 결혼이 매우 힘들다는 근래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현재까지는 여자의 미혼율이 남자의 그것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미혼율이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기회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독립

〈표 7-5〉 성, 연령 및 지역별 미혼인구의 비율, 2000

(단위: %)

연령	여자		남자	
	시부	군부	시부	군부
20~24	89.3	77.5	96.2	93.5
25~29	40.7	25.2	70.2	66.1
30~34	10.7	6.1	27.0	28.6
35~39	4.4	3.0	9.9	12.4
40~49	2.2	1.8	3.4	4.8

주: 15~19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결혼할 연령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7-6〉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미혼인구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2000년 현재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여자인구 중에서 미혼자의 비율은 5.9%이고, 고등학교 30.2%, 대학 49.1%, 그리고 대학원 이상은 39.7%로 나타났다. 한편 남자의 경우에는 미혼자의 구성비율이 중학교 이하 24.3%, 고등학교 38.6%, 대학 46.8%,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19.0%로 집계되었다. 즉 여자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혼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면 미혼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반 여건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7-7〉은 2000년 현재 남녀인구의 미혼자 구성비율을 직업별로 제시한 것

〈표 7-6〉 15세 이상 인구의 성 및 교육수준별 미혼인구의 비율, 2000

(단위: %)

교육수준	여자	남자
중학교 이하	5.9	24.3
고등학교	30.2	38.6
대학교	49.1	46.8
대학원 이상	39.7	19.0

자료: 통계청(2002a).

〈표 7-7〉 15세 이상 인구의 성 및 직업별 미혼인구의 비율, 2000

(단위: %)

직업	여자	남자
고위직	13.1	4.1
전문가	48.2	20.1
기술공	48.9	21.2
사무직	54.0	20.4
서비스직	16.0	22.8
판매종사자	17.2	17.8
농림업	0.8	7.0
기능원	10.4	21.1
장차	18.3	19.4
단순노부직	5.5	20.8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동태통계 원자료).

이다. 물론 직종에 따라서 남녀 절대인구의 규모가 차이 나기 때문에 미혼자의 구성비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가, 기술공, 사무직 여자 근로자의 미혼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사무직 종에서 여자의 미혼율이 5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기술공의 경우도 각각 48.2%, 48.9%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과 사무직 직종에 종사하는 여자 근로자의 경우,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한 직업수행과 결혼이 상충되면 결혼보다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자의 경우 미혼자의 비율은 서비스 종사자가 22.8%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공 21.2%, 전문가 20.1%, 농림업 종사자는 7.0%, 고위직 4.1%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종에 따른 미혼율의 차이가 여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혼인

#### 1) 초혼 및 재혼 특성의 변화

지난 30여 년 간의 평균초혼연령을 보면, 남성, 여성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즉 1972년 여자 22.6세, 남자 26.7세에서, 1981년 여자 24.8세, 남자 26.4세로, 1990년 여자 24.8세, 남자 27.8세로, 그리고 2001년에는 여자 26.8세, 남자 29.6세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 이후 결혼연령은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통계청, 2002f, 2002j). 그 동안 결혼 필요성의 약화, 또는 여성에게 있어서 취업으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 등 제반 사회적 변화의 조짐은 있었으나, 이것이 뚜렷이 가시화 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결혼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과 취업 증대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Bumpass and Choe, 1999).

(1) 교육수준 및 직업별 초혼연령의 변화

〈표 7-8〉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초혼연령의 변화를 보면, 비록 그 절대 수는 작지만, 남녀 모두 무학과 초등학교 학력 소유자의 초혼연령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학과 초등교육을 받은 여자의 초혼연령이 1990년에 각각 30.7세와 26.3세에서 2000년에는 35.2세와 33.3세로 높아졌다. 이러한 상승경향은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녀 모두 중등교육보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초혼연령이 높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의 유무가 초혼연령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면 결혼을 늦게 하는 경

〈표 7-8〉 성 및 교육수준별 평균 초혼연령, 1990, 2000

(단위: 세)

교육수준	1990		2000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무학	30.7	35.9	35.2	38.9
초등	26.3	30.0	33.3	35.6
중등	24.1	27.4	26.1	29.0
대학 이상	25.4	27.9	26.6	29.1
전체	24.8	27.8	26.5	29.3

자료: 통계청(1990년과 2000년 인구동태통계 원자료).

〈표 7-9〉 취업여성의 직업별 평균 초혼연령, 1990, 2000

(단위: 세)

직업	1990	2000
고위직	25.6	27.5
전문가	26.6	26.8
기술공	24.4	26.6
사무직	25.1	26.0
서비스직	24.7	26.3
농림업	23.8	27.1
기능원	23.4	25.1
장치		24.4
단순노무직		25.3
가사	24.2	25.8
군인	25.3	25.3
무직	25.1	25.9

자료: 통계청(1990년과 2000년 인구동태통계 원자료).

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표 7-9〉에서 여성의 직업별 평균초혼연령을 보면, 1990년에는 전문가가 26.6세로 가장 높았으며, 고위직 25.6세, 사무직원 25.1세의 순이었고, 농림업 종사자와 기능원의 초혼연령이 낮았다. 그리고 가사에만 종사하는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24.4세로 취업여성에 비해 평균 1세 정도가 낮았다. 사소한 예외는 있지만 이러한 양상은 2000년에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단지 2000년에는 농림업과 고위직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평균초혼연령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2) 재혼 건수 및 재혼 비율의 변화

〈표 7-10〉에서 보는 것처럼, 재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재혼연령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자의 평균재혼연령은 1990년 34.0세에서 2001년에는 37.6세로 증가하였고, 남자의 경우 각각 38.9세에서 42.1세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까지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재혼 건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혼인 건수에 대한 재혼의 비율 역시 낮았다. 그러나 2000년에는 상

〈표 7-10〉 성별 재혼건수 및 재혼비율의 변화 추이, 1980~2001

(단위: 건수, %, 세)

연도	재혼 건수		총 혼인에 대한 재혼의 비율		평균재혼연령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80	16,367	25,579	4.1	6.4		
1990	28,153	33,348	7.1	8.4	34.0	38.9
2000	48,324	43,617	14.5	13.1	37.5	42.1
2001	46,900	52,500	16.4	14.7	37.6	42.1

자료: 통계청 (2001i, 2002f, 2002j).

황이 역전되었다. 즉 2000년도 여자의 재혼 건수는 48,324건이고, 남자는 43,617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혼인에 대한 재혼의 비율에서도 여자가 14.5%로 남자의 13.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혼이 증가하고 초혼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전체 결혼에서 초혼남-재혼녀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결혼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초혼남과 재혼녀의 비율은 1970년의 0.9%에서 1980년 1.2%, 1990년 2.3%, 그리고 2001년에는 5.6%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2f, 2002j).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여자의 재혼은 힘들고, 재혼 남자들도 결혼상대를 처녀를 원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결혼 풍속의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신부가 '처녀이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결혼한 경험여부와 관계없이 '뜻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혼과 재혼, 사별과 재혼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재혼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혼녀의 결혼이 증가하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남자 중심의 호주제도가 재혼가족의 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여성신문, 2002).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씨를 계부의 성씨로 바꿀 수 없으므로 아버지와 자식의 성이 다를 때 받는 사회적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혼 여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혈연중심의 가족가치관에서 벗어나 배우자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족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 2) 부부 상호간 결혼 특성의 변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만혼과 재혼의 증가, 초혼 비율의 감소, 부부간 연령 격차의 축소 등 결혼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은 기본적으로 동질혼의 형태를 띠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강해 고향이라는 변수가 결혼 결정에 한번쯤은 고려된다. 이에 배우자의 고향, 그리고 부부간 교육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결혼의 동질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표 7-11>에는 각 도별로 동일 지역 배우자와 결혼한 남녀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지난 10년 간 부인의 본적별 동향 배우자의 비율을 보면, 지역별 결혼의 동질성이 미미하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동향의 배우자가 생활습관, 사고방식에서 유사한 태도를 보여 배우자 선택에 있어 보다 유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7-11>를 보면, 서울에 본적을 둔 여자가 서울 남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1990년 42.2%에서 2000년에 40.1%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출

<표 7-11> 부부 상호간 동향배우자 선택 비율, 1990, 2000

(단위: 명, %)

구분		서울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1990	여자	42.2	40.9	76.4	41.9	63.6	37.1	60.6
	남자	36.6	39.9	76.2	42.1	68.5	40.6	63.7
2000	여자	40.1	38.2	74.1	41.2	62.0	39.1	65.0
	남자	38.4	39.9	73.7	41.9	62.5	39.3	64.3

주: 동향배우자라 함은 같은 각 지역의 본적 소유자가 동일한 지역의 본적을 가진 배우자를 택하는 것을 의미함. 이 밖에 신고지역에 따라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배우자가 신고하는 지역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지역과 본적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적을 택하였음.

자료: 통계청(1990년과 2000년 인구동태통계 원자료).

신의 남녀가 결혼하는 비율 역시 서울에 비하면 다소 낮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표 7-11>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울과 경기도 출신 남녀의 결혼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7-11>에서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의 남녀가 동향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비율은 각각 7할과 6할을 상회한다. 특히 경상도 출신의 여자가 같은 경상도 남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1990년 76.4%, 그리고 2000년에 74.1%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한편, 전라도 출신의 여자가 동향의 남자와 결혼하는 비율은 1990년과 2000년에 각각 63.6%와 62.0%이었으며, 경상도 남자와 결혼하는 비율은 각각 11.0%와 10.8%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강원도 출신의 여자가 동향의 남자와 결혼하는 비율은 1990~2000년의 기간 동안 37.1%에서 39.1%로 다소 증가하였다. 제주도 출신의 여자도 동일 지역의 남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10년 동안 60.6%에서 65.0%로 높아졌다. 한편 남자를 중심으로 볼 때, 동질혼의 경향은 경상도, 강원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자에 비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1990년에 남자의 동질혼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여자 60.6%, 남자 63.7%), 2000년에는 반대로 여자의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여자 65.0%, 남자 64.3%).

<표 7-12>에서 부부 상호간의 교육수준을 비교해보아도 동질혼의 경향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서 2000년은 1990년에 비해 남편의 교육수준보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무학의 남편과 무학 부인의 결혼비율은 1990년 70.4%에서 2000년에 48.9%로 감소하였고, 중등학교 학력의 부인과의 결혼은 13.8%에서 28.0%로 증가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학력의 남편이 동일한 교육수준 배우자와의 결혼비율 역시 1990년 59.9%에서 2000년에 48.0%로 감소하였다. 중등학교 학력의 남자가 동일 학력의 배우자와 결혼할 확률은 95.1%로 매우 높다. 그러나 2000년에 그 비율은 83.0%로 낮아진 반면, 대학 학력을 가진 여자와 결혼할 확률이 14.7%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가 동일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

〈표 7-12〉 부부 상호간의 교육수준, 1990, 2000

(단위: %)

구분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이상
부인	1990	무학	70.4	2.6	0.1	0.0
		초등학교	15.5	59.9	1.8	0.1
		중등학교	13.8	36.8	95.1	41.6
		대학이상	0.4	0.7	1.8	58.2
	2000	무학	48.9	4.1	0.2	0.0
2000	초등학교	20.0	48.0	2.1	0.1	
	중등학교	28.0	44.6	83.0	28.2	
	대학이상	3.1	3.3	14.7	71.7	

자료: 통계청(1990년과 2000년 인구주택총계 원자료).

자와의 결혼비율이 1990년 58.2%에서 2000년에는 71.7%로 증가하였다. 이 역시 여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부부간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이혼

##### 1) 이혼율 및 평균 이혼연령의 변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7-1〉에서 1980년 인구 천 명당 조이혼율은 0.6, 결혼에 대한 이혼비는 5.9%이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조이혼율이 1.1, 결혼에 대한 이혼비가 11.4%로 증가했다. 그리고 불과 10년 후인 2000년에는 조이혼율이 2.5, 결혼에 대한 이혼비가 35.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이혼연령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2002f, 2002j)의 동태통계연보에 의하면, 1990년 여자의 평균이혼연령이 32.7세에서 2001년에는 36.7세로 상승하였다. 남자의 평균이혼연령은 같은 기간에 36.8세에서 40.2세로 증가하였다.

이혼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은 결혼기간과 관계없이 중년층, 노년층의 이혼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가족중심주의에서 개인성을 존중하는 가치로 변하면서, 부부간의 갈등 시 부인이 주로 참고 지내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13〉에서 일반이혼율은 1970년에 인구 천 명당 2.1명에서 2000년 10.9명으로 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 15~24세 남자는 천 명당 34.5명, 그리고 여자는 32.9명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낮아져 60세 이상의 경우 남자는 1.8, 여자는 1.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이혼증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여자의 경우 15~24세 집단의 증가율이 789.2%로 남자의 그것보다 다소 높지만, 25~29세에서 351.3%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그후 여자의 이혼증가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증가하여 55~59세의 1,250.0%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남자의 이혼증가율은 50대 초반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이혼증가율이 15~24세의 702.3%에서 연령의 상승과 함께 점점 낮아지면서 30~34세에서 361.8%를 기

〈표 7-13〉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의 추이, 1970~2000

(단위: 이혼율(%), 증가율(%))

	여자					남자				
	1970	1980	1990	2000	증가율	1970	1980	1990	2000	증가율
일반이혼율	2.1	3.3	4.8	10.9	419.0	2.1	3.3	4.8	10.9	419.0
15~24	3.7	5.7	11.4	32.9	789.2	4.3	6.5	12.9	34.5	702.3
25~29	3.9	5.5	8.1	17.6	351.3	3.7	5.1	8.2	19.7	432.4
30~34	2.7	5.0	7.1	15.3	466.7	3.4	5.3	7.2	15.7	361.8
35~39	1.8	3.3	5.4	14.4	700.0	2.4	4.7	6.6	15.1	529.2
40~44	1.1	2.0	3.3	11.9	981.8	2.0	2.9	5.2	13.8	590.0
45~49	0.7	1.1	2.1	7.5	971.4	1.4	2.0	3.5	10.8	671.4
50~54	0.4	0.7	1.0	4.5	1,025.0	0.9	1.4	1.8	7.4	722.2
55~59	0.2	0.5	0.7	2.7	1,250.0	0.6	1.0	1.1	4.7	683.3
60세 이상	0.1	0.2	0.3	1.0	900.0	0.3	0.6	0.7	1.8	500.0

주: 증가율 = ((2000이혼율 - 1970이혼율) / 1970이혼율) × 100.

자료: 박경애(2000: 19);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및 인구동태통계연보).

록한 후, 다시 차츰 증가하여 50~54세의 722.2%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흔히 50대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그 동안의 시집살이의 어려움, 남편의 외도, 혹은 성격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같이 살던 부부들이 자식이 성장한 후 이혼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특히 1990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이혼 시 부부 재산의 공유인정과 자녀양육권의 공동행사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변화순, 1995). 한편 20대 젊은 층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결혼 시 부부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평균 동거기간 및 교육수준별 이혼사유

통계적으로 이혼사유의 변화를 볼 것 같으면 대다수가 부부불화로 인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관계를 포함한 가족 간 불화는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일정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과거에는 가족문제가 이혼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었지만, 이제는 부부 당사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부부 간의 경제적 문제가 이혼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80년에는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중 3.6%로 나타났으나, 1990년에는 2.0%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10.7%로 증가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에는 6.6%로 전년도에 비해 2.4%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표 7-14>에서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을 동거기간별로 분석해 볼 때, 동거기간이 15년 이상의 부부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부 사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14>에는 이혼의 원인으로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성격차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표에서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은 동거기간이 15년 이상 된 부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육체적 학대의 경우 그 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15년 이상의 부부(4.8%)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표 7-14〉 동거기간별 이혼원인, 2000

(단위: %)

이혼원인	0~4	5~9	10~14	15 이상
배우자 부정	6.2	8.1	9.1	9.4
정신적·육체적 학대	4.2	3.9	4.6	4.8
성격차이	43.3	41.4	40.4	37.7
가족간 불화	22.2	21.6	21.5	22.8
건강상	1.2	0.7	0.7	0.9
경제문제	8.2	11.0	11.5	12.3
기타	14.8	13.2	12.3	12.1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동태통계 원자료).

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동거기간이 0~4년의 부부(43.3%)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 간의 성격차이가 부부불화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특히 동거기간이 짧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배우자의 부정이나 학대는 동거기간이 길수록 이혼의 원인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젊은 배우자를 위해서는 결혼시 부부 간의 상호 원활한 이해를 위한 부부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중년기 부부에게 있어서는 배우자 학대예방교육, 그리고 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표 7-15〉에는 여자의 교육수준별로 이혼의 주요 원인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성격차이가 가장 중요한 이혼의 원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배우자 부정은 초등학교 학력의 여성에게서 높았으며(10.0%), 배우자 학대는 무학의 여성(6.8%)에게서 높았다. 경제문제의 경우 중등학교, 대학 이상의 여성이 저학력의 여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반드시 학력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7-15〉 여성의 교육수준별 이혼원인, 2000

(단위: %)

이혼원인	무학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이상
배우자 부정	8.8	10.0	8.1	7.0
정신적·육체적 학대	6.8	6.4	4.2	3.4
성격차이	32.7	35.9	41.3	41.6
가족간 불화	25.0	24.0	21.9	21.7
건강상	2.4	1.4	0.8	0.9
경제문제	8.3	9.6	11.1	10.3
기타	16.0	12.7	12.7	15.1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동태통계 원자료).

## V. 결론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미혼, 초혼, 재혼, 이혼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변화현상을 토대로 정책제언의 함의를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연령이 늦어지는 현상과 더불어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현상으로, 미혼율이 증가한다는 현상과 더불어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앞으로 20년간의 혼인시장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즉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남아 초과현상은 남자들이 결혼을 하기 원해도 결혼적령기 여자의 절대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미혼 비율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2002년의 합계출산율이 1.3임을 감안할 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의 환경을 택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미혼에 대한 논의가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혹은 다양한 삶의 선택을 위한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의 총각이 결혼을 하더라도 최근 중국 등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셋째, 이혼 후 재혼의 증가와 아울러 재혼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혼 후 재혼은 성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경제적 적응의 문제가 수반되지만, 자녀에게 있어서는 생애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이혼부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심리적,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재혼 시 자녀의 호적이 문제가 된다.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할 경우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오는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현재 이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적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혼부부 혹은 재혼부부의 자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혼한 부부의 종단적 패널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이혼, 재혼, 그리고 재이혼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사유에서도 경제적 불화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의 경제위기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갈등이 내재해 있는 가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IMF 경제위기로 인해 결혼, 이혼 및 재혼 연령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경제적 위기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동거기간이 오래된 부부가 파탄을 맞으며, 평균재혼연령 역시 1998년을 시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에 따른 변화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던 혼인에 관련되는 의식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동거기간에 따라 부부간 불화의 이혼원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젊은 배우자를 위해서는 결혼 시 부부간의 상호 원활한 이해를 위한 부부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중년기 부부에게 있어서는 배우자 학대예방교육, 그리고 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일단 결혼하는 형태에서 함께 살며 서로의 인생관을 확인한 뒤 결혼하는 ‘동거’ 형태가 늘고 있다. 이미 서구의 동거는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는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결혼의 형태를 명시하고, 동거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법적 혼인을 했는지 아니면 사실혼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혼인과 가족유지에 대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통계로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 동거의 형태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더불어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인구센서스 조사에 결혼식을 했는지 아니면 동거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항목을 새로이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자녀양육 문제 등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 여 백

## 제8장 가족과 가구

김 정 석

### I. 머리말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삶과 행위의 준거로서, 그리고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족은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그 형태와 구조 및 가치의식면에서 심대한 변화를 겪어 왔다(김유순·김정석, 2001; 안병철, 1997; 한남제, 1999). 이러한 가족변화의 속도와 양상은 많은 사회적,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이영분·양심영, 1999; 임돈희·자넬리, 2002; 전영자, 2000). 이 연구는 지난 20년 간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연구와 가족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흔히 가족(family)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형성된 관계로서 주거단위를 넘어서 유지되는 반면, 가구는 물리적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동체로 그 구성원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권태환·박영진, 1995). 따라서 가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원들 간의 관계분석은 가족생활의 많은 측면들을 고찰할 수 있는 작업이 된다. 이와 같은 작업에 특히 유용한 자료로는 가구별로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가 파악되어 있는 인구센서스를 들 수 있다(권태환·김두섭, 2002). 이 연구에서는 1980년과 2000년 사이의 센서스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형태(household type)와 거주

형태(living arrangements)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분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분석상의 단위이다. 한국의 가구 및 가족변화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나 발표는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전체 가구수 중에 특정 형태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한 예로, 2000년도 총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이 15.5%)이나 가구수의 증가 등을 보여주는 보고서 등이 속하며, 가족 혹은 가구형태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가족 혹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인구의 가족 및 가구는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최근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불거지고 있는 노인문제를 한 예로 들어 가구와 가구원이 분석단위로서 갖는 유용성의 일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분석단위를 가구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노인단독가구수의 증가는 신체적으로 쇠약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개량과 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노인 개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자녀동거비율의 감소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 혹은 별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노인 부양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가구를 분석단위로 발표한 기존의 가구 및 가족 관련 통계표를 정리하는 한편, 가구원의 관점에서 가구형태 및 거주형태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1인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 아동들과 노인들의 거주형태의 변화, 여성가구주의 증가 등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첫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가구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사람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에서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들의 비율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가구원들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인 성,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에 따라 해당 비율이 어떻게 다르며 시기별로 변해왔는지를 살핀다.

둘째,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이라 볼 수 있는 아동과 노인의 거주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아동의 경우, 이들이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가, 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가,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거주지역과 연령별 차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노인의 경우, 이들이 1인가구 및 부부가구에 살고 있는가,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가 등을 살피고 성,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에 따라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셋째, 남녀별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어떻게 다르며,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 질문에서는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이들의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동시에 살핀다. 또한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 및 연령의 분포를 거주지역별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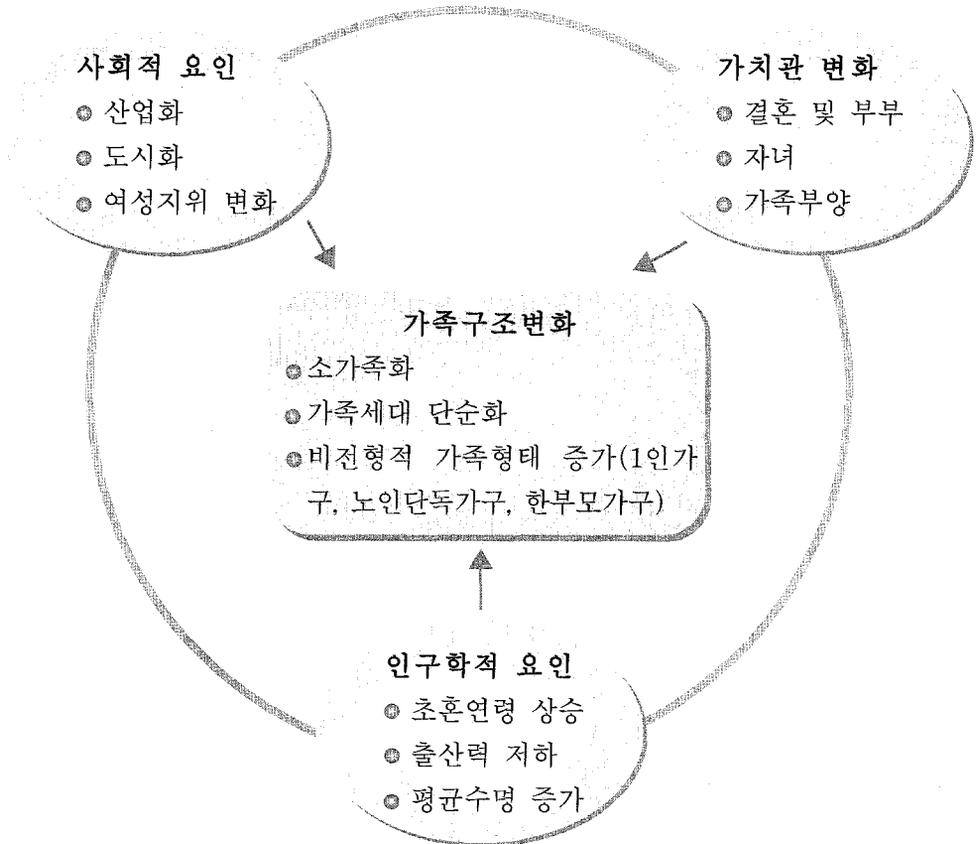
## II. 가구변화의 전반적 추세와 쟁점

특정 가구형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앞서 가구 및 가족 변화의 주요 요인과 전반적인 추세를 간략히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의 가구 및 가족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한편 학제간 연구를 통해 가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김승권·송인주, 2000a). 이러한 학문적 동향은 그간 사회변동으로 인해 가족관련문제가 누적되는 한편 기존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의 가족형태가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다.

가족연구나 논의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주제나 영역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가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가족기능, 가족성원간의 내면적 관계, 가치관 등의 영역에 비해 가족구조는 경험적인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연구수행상의 이점을 가진다. 또한 가족구조는 여타의 다른 영역과 매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하고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구조를 통해 가족의 여러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대체적으로 가족구조는 크게 사회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및 가족가치관적 요인 등에 의해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김

〈그림 8-1〉 가족구조변화와 요인들간의 관계



승권, 2000a). 〈그림 8-1〉은 이러한 요인들과 그 구성요소들이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은 독자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한편 그 구성요소들도 거시적 요인들 안팎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상호영향력을 가진다. 가령, 사회적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라는 요소는 결혼이나 부부관계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과 같은 인구학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가족구조는 가족규모가 작아지며 가족세대는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오는 한편, 1인가구, 노인단독가구, 한부모가족가구, 여성가구주가구와 같은

〈표 8-1〉 가구 및 가족구조 관련 변화추세, 1980~2000

(단위: 천 가구, 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총가구수(1,000가구)	7,969	9,571	11,355	12,958	14,312
평균가구원수(명)	4.5	4.1	3.7	3.3	3.1
가구규모 (%)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5인가구	20.0	19.5	18.8	12.9	10.1
6인 이상 가구	29.9	19.5	9.8	5.5	3.3
가족형태구성 (%)					
핵가족	74.0	75.3	76.0	79.8	82.0
직계가족	11.2	10.7	10.3	9.1	7.9
기타	14.8	14.0	13.8	11.2	10.1
세대구성 (%)					
1세대 가구	8.3	9.6	10.7	12.7	14.2
2세대 가구	68.5	67.0	66.3	63.3	60.8
3세대 가구	16.5	14.4	12.2	9.8	8.2
4세대 이상 가구	0.5	0.4	0.3	0.2	0.2
기타	6.3	8.6	10.5	14.1	16.7
성별 가구주 (%)					
남성 가구주 가구	85.3	84.3	84.3	83.4	81.5
여성 가구주 가구	14.7	15.7	15.7	16.6	18.5

자료: 통계청(2002j: KOSIS, 해당 연도 한국의 사회지표, 가구세대구성은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비전형적인 모습의 가족형태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 변화의 몇 가지 모습은 가구형태의 구성변화에 관한 기존의 통계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8-1〉은 이 연구에서 다루는 기간인 1980년과 2000년 사이의 가구수, 가구규모, 가구구조, 가족구조 및 여성가구주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980년의 총가구수가 약 797만 가구이었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439만 가구에 이르

렸다. 한편, 이 기간에 평균 가구원수는 한 가구당 4.5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 가구내 구성원수는 감소하는 한편, 이들이 개별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 및 가구수의 증가는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설명된다.

소가족화 경향과 함께 세대구성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세대관계의 단순화와 핵가족의 증대로 특징 지워진다. 앞의 <표 8-1>에 의하면, 1980년에 핵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율은 74.0% 이었으나, 2000년에는 82.0%에 이르렀다. 가구규모 변화에 비해 핵가족 가구 비율 증가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 1인가구가 가족형태별 가구구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세대별 구성으로 살펴본 가구분포에서도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1세대가구는 8.3%에서 14.2%로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16.5%에서 8.2%로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핵가족 및 1세대가구의 증가에는 무엇보다도 성인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노인부부만이 남게 되는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구를 이루는 세대구성이 단순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표 8-1>에 의하면 1980년에 여성가구주 가구는 14.7%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18.5%에 이르고 있다. 가구주란 통상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혈연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거나 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가구원을 뜻한다(권태환·박영진, 1995). 남자가 가구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증가는 가족제도 변화의 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는 주로 집을 떠난 미혼여성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거나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현상으로 설명되는데, 많은 경우 이들 가구는 불안정한 가족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통계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이 분명함을 확인시켜 준다. 가족의 소가족화, 핵가족화가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아옴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즉 다양해지는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가족관련 사회정책에 대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질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의 초석이 된다.

1인가구, 노인단독 혹은 노인부부가구, 한부모가족 등과 같이 비전형적인 가족구조의 증가현상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김승권 · 송인주, 2000b, 2000c). 우선, 이러한 가족형태를 정상적인 가족유형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적인 가족유형으로 규정하고 가족해체론적 관점에서 이들 가족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가족의 다양화현상을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단기간 내에 외생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장경섭, 2000), 가족은 가족해체적인 모습과 새로이 등장하는 대안가족의 모습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가족변화의 양상을 이 두 가지 축 위에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변화의 세부 요인들과 그것이 개인들에게 갖는 의미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노인부부가구의 증가를 한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자녀에게 주로 의존하는 우리 사회의 경우,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의 증가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부양이 약화되었다는 지표로 흔히 제시된다. 특히 이러한 점은 노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세대 측에서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나 대중매체 등의 보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고 건강한 노인들의 경우 스스로 자녀와의 별거를 선택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위치, 건강상태 혹은 선호도에 따라 노인부부가구를 형성하는 이유는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Kim and Rhee, 1997, 1999, 2000). 특히 능동적으로 성인자녀와 별거하면서 노인부부끼리 살고자 하는 비율은, 앞으로 노인이 될 중고령층의 인구학적 특

성으로 보았을 때 점차 높아지리라 전망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노년기에 부부끼리 사는 형태는 점차 일반화될 것이며 이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노년기의 대안적인 가족형태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적 대안들은 자녀로부터 외면당한 노인뿐 아니라 노년기에 독자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차별적이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 장래를 예측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에 앞서 기존의 인구센서스 원자료를 이용해 변화의 실태와 양상을 좀 더 엄밀히 분석해보고자 하는 탐색적 작업의 결과이다. 우리 사회 가족구조변화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증가, 사회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는 아동과 노인들의 거주형태, 학문적 실천적 함의가 강한 여성가구주의 증가현상에 주목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특정 가족형태에 속해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일반가구원의 가구형태 변화

이 절에서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하, 가구원)이 어떠한 가구형태에 속하는지를 살펴본다. 일반가구는 주로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가구로 이루어지며, 5인 이하의 비친족가구도 포함된다. 한편 집단가구는 집단시설가구와 6인이상의 비친족가구가 포함된다. 인구비율로 볼 때 집단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일반가구에 속하는 인구만을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 제시하는 가구형태는 1인가구(1인만이 거주하는 가구), 부부가구(직계가족이 없이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 2세대가구(직계관계에 있는 두 세대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3세대 이상가구(직계관계에 있는 3세대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및 기타일반가구(앞의 네 가지 형태를 제외한 가구)로 정의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형태의 가구 중에서 특히 1인가구와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간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까지의 가구유형변화에서 전체가구 중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과연 이러한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연구 관심을 근거로 한다. 또한, 다섯 가지 유형의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들의 상대적 비율을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개별 가구 유형에 관한 설명은 중첩된다. 따라서, 기술상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들의 비율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되 필요한 경우는 다른 형태의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언급하기로 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원들이 속한 가구유형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이어 일정 연령에 한정해서 배우자 유무별로 1인가구 및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미혼,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하 무배우자)는 부부가구 자체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결혼한 사람(이하 유배우자)인 경우,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1인가구와 부부가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15세 이상의 연령층에 한정해서 무배우자 및 유배우자로 나누어 1인가구 및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을 분석하기로 한다.

## 1. 전체가구원의 가구구성 비율

〈표 8-2〉는 다섯 가지의 가구형태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을 성과 거주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체 가구원을 보았을 때 지난 20년 동안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3세대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령, 1980년에는 1인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비율은 1.1%로 전체 가구원 100명당 1명 정도가 1인가구에 거주하였지만 2000년에는 해당 가구원 비율이 5.1%로 상승하여 전체 가구원 100명당 5명의 꼴로 1인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 또한 1980년에 3.2%에서 2000년 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표 8-2〉 가구원의 성 및 거주지역별 가구형태 비율, 1980~2000

(단위: %)

연도	가구형태	전체	성		거주지역	
			남성	여성	도시	농촌
1980	1인가구	1.1	0.8	1.5	1.2	1.1
	부부가구	3.2	3.2	3.1	3.1	3.2
	2세대가구	69.1	70.7	67.6	73.3	63.6
	3세대이상가구	24.3	23.2	25.4	19.1	31.2
	기타일반가구	2.3	2.2	2.3	3.3	0.9
1985	1인가구	1.7	1.3	2.1	1.7	1.7
	부부가구	3.9	4.0	3.9	3.5	4.7
	2세대가구	70.0	71.6	68.5	74.0	62.7
	3세대이상가구	21.6	20.5	22.6	17.4	29.4
	기타일반가구	2.7	2.6	2.9	3.4	1.4
1990	1인가구	2.6	2.2	3.0	2.5	3.0
	부부가구	5.2	5.3	5.1	4.3	8.0
	2세대가구	71.0	72.6	69.6	74.3	61.5
	3세대이상가구	18.7	17.6	19.8	16.2	26.3
	기타일반가구	2.4	2.3	2.4	2.8	1.2
1995	1인가구	3.9	3.3	4.4	3.5	5.2
	부부가구	7.3	7.4	7.1	5.5	13.5
	2세대가구	71.2	72.6	69.9	74.6	58.9
	3세대이상가구	15.5	14.4	16.5	13.9	21.0
	기타일반가구	2.2	2.3	2.1	2.4	1.4
2000	1인가구	5.1	4.2	5.9	4.6	6.8
	부부가구	8.8	9.0	8.6	6.8	16.4
	2세대가구	70.4	71.9	68.9	73.9	56.8
	3세대이상가구	13.6	12.8	14.5	12.4	18.5
	기타일반가구	2.1	2.1	2.1	2.3	1.4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각 연도에 있어서 1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여성들에게서 약간 높은 반면,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남성들에게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8-2〉에서 1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을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1985년 이전에는 그 비율이 도시와 농촌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로는

〈표 8-3〉 가구원 연령별 가구형태 비율, 1980~2000

(단위: %)

연도	가구형태	전체	연령						
			15 미만	15~24	25~34	35~44	45~54	55~64	65+
1980	1인가구	1.1	0.0	1.5	1.4	0.8	1.6	3.6	4.8
	부부가구	3.2	0.1	3.5	6.5	1.6	3.9	9.5	10.1
	2세대가구	69.1	75.9	67.2	68.7	76.1	72.1	50.1	21.3
	3세대이상가구	24.3	23.4	20.0	21.2	21.0	21.9	36.0	63.1
	기타일반가구	2.3	0.5	7.9	2.2	0.5	0.5	0.7	0.7
1985	1인가구	1.7	0.0	2.0	2.4	1.3	1.8	4.8	6.7
	부부가구	3.9	0.1	3.3	6.8	1.9	4.9	12.8	13.2
	2세대가구	70.0	78.1	69.0	69.1	78.0	72.7	48.8	22.3
	3세대이상가구	21.6	21.1	17.0	18.7	17.9	19.7	32.4	56.4
	기타일반가구	2.7	0.7	8.7	3.0	0.9	0.9	1.2	1.4
1990	1인가구	2.6	0.0	2.4	3.8	1.9	2.4	6.0	9.5
	부부가구	5.2	0.1	2.8	8.0	2.3	6.6	18.2	17.5
	2세대가구	71.0	80.7	72.7	69.8	78.8	74.2	49.3	23.1
	3세대이상가구	18.7	18.8	14.3	15.1	16.3	16.3	25.8	49.0
	기타일반가구	2.4	0.4	7.8	3.2	0.7	0.6	0.7	0.8
1995	1인가구	3.9	0.0	3.5	5.4	2.9	3.6	7.2	13.8
	부부가구	7.3	0.1	3.0	9.0	3.5	9.8	25.4	24.0
	2세대가구	71.2	83.9	74.1	70.1	79.4	73.1	47.6	22.9
	3세대이상가구	15.5	15.7	12.4	11.8	13.5	12.9	19.2	38.4
	기타일반가구	2.2	0.3	7.0	3.8	0.8	0.6	0.6	0.8
2000	1인가구	5.1	0.0	3.7	7.0	4.1	4.8	8.2	16.8
	부부가구	8.8	0.1	1.9	9.6	3.9	11.6	28.6	29.2
	2세대가구	70.4	85.2	76.7	68.5	79.4	71.8	47.4	23.3
	3세대이상가구	13.6	14.4	11.1	10.6	11.6	11.1	15.2	29.9
	기타일반가구	2.1	0.2	6.5	4.3	0.9	0.7	0.6	0.7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도시보다 농촌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비율도 1980년 당시 도시와 농촌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85년 이후로는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보다 농촌에서 1인가구 및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질 뿐 아니라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온 현상은 농촌에서 자녀를 도시로 보내고 홀로 남겨나

부부끼리 남은 노인들이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태환·박영진, 1995; 김태헌, 2001).

가구원의 연령별로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은 <표 8-3>과 같다. 대체적으로 각 연령에서 1인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 또한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층을 제외한 각 연령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15~24세층의 비율이 1980년 3.5%에서 2000년 1.9%로 감소한 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기인한다.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령별로 가구원들이 속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조애저, 2000). 그러면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2000년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우선 15세 미만인 아동들의 대부분은 2세대 혹은 3세대 가구에 속하면서 부모와 조부모의 집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15~24세에 이르면 일부는 가족을 떠나 1인가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미혼의 젊은이들이다. 부모를 떠나는 비율은 그 다음 연령인 25~34세에서 더 많아지는 동시에 결혼을 통해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 또한 많아진다.

미혼자들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구를 형성한 다음 연령인 35~44세에서는 미혼 독신가구가 줄어드는 한편, 이혼이나 사별에 의해 1인가구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 전의 연령에 비해서는 적어진다. 한편 이 연령에서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2세대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45~54세에 이르러서는 자녀들이 장성함에 따라 분가하면서 다시 부부가구로 복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추세는 65세 이상 연령까지 지속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별로 인해 배우자를 잃고 혼자서 살아가는 비율이 높아진다.

가구원의 연령별로 나타나는 1인가구 및 부부가구 구성비율은 대체로 젊은 층과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확인해진다. 이 중에서 1인가구 형성비율을 주목해서 볼 때 연령층에 따라 상당히 다른 함의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1인가구 형성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속적인

혼인연령의 상승과 도시간 혹은 도시내에서의 이동성이 커진 탓으로 대부분 설명이 된다(권태환·박영진, 1995).

젊은 층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정도는 이들의 결혼의 필요성이나 필수성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 사회조사에 의하면 각 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젊은 층일수록 결혼을 개인적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김승권, 2000). 따라서 앞으로 결혼이 과연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만약 결혼의 보편성이 없어진다면 젊은 층의 1인가구는 생애주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태도변화와는 별도로 대부분이 일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관찰되는 젊은 층의 1인가구는 대부분 일시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고령층에서 보이는 1인가구는 연령증가와 함께 그 비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최근으로 올수록 보다 많이 관찰되고 있다. 고령층에서 보이는 1인가구 형성경향이 생애주기상 일시적 현상이 아닐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오랜 노후기간을 혼자 지내게 된다는 뜻이 된다. 이는 곧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수십년 간 젊은 층의 대규모 진출을 경험한 농촌 노인들, 그리고 배우자를 잃고 살아가는 기간이 긴 여성노인들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 요구된다.

## 2. 15세 이상 무배우자들의 1인가구 형성비율

배우자가 없는 15세 이상 가구원들이 다른 가족성원들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비율을 살펴보자. <표 8-4>는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무배우자 중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성,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다. 혼인상태와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던 앞의 <표 8-2>와 <표 8-3>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 거주지역, 연령별의 차이는 보다 분명해진다. 성의 경우, 15세 이상 무배우자들 중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들의 비율

〈표 8-4〉 무배우자들의 성,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별 1인가구 거주비율, 1980~2000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3.7	5.4	8.0	12.3	15.6
성	남성	2.6	4.1	6.8	10.7	13.2
	여성	4.7	6.6	9.1	13.5	17.5
거주지역	도시	3.6	5.3	7.7	11.1	14.0
	농촌	3.8	5.6	9.1	16.8	22.2
혼인상태	미혼	2.3	3.7	5.5	8.3	10.1
	사별	8.3	11.5	16.4	23.9	30.6
	이혼	16.8	20.8	26.1	30.1	32.2
연령	15~24	1.6	2.2	2.5	3.7	3.9
	25~34	6.5	9.6	14.4	17.2	17.5
	35~44	8.6	13.0	19.4	27.0	30.4
	45~54	8.2	10.2	15.1	22.1	29.0
	55~64	11.1	15.2	21.6	29.3	36.2
	65+	8.1	11.8	17.3	25.4	33.7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보다 꽤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남녀간의 비율차이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남녀간의 차이는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율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배우자들 내에서의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의 차이는 1990년에 이르러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후부터는 농촌거주자들에게서 1인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4〉에서 2000년 현재, 15세 이상 무배우자 중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인가구에 속할 비율은 14%에 이르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인가구에 거주할 비율은 22.2%로 나타난다. 이는 농촌에서 홀로 남은 노인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는 혼인상태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적은 미혼보다는 연령이 많은 사별자들에게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데서도 확인된다.

무배우자들의 혼인상태별 1인가구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각 연도에 있어서 1인

가구 거주비율이 이혼한 사람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별자, 미혼자의 순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1980년에 이혼한 사람들의 16.8%, 사별한 사람들의 8.3%, 그리고 미혼자들의 2.3%가 1인가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이 비율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00년에는 이혼한 사람들의 32.2%, 사별한 사람들의 30.6%, 미혼자들의 10.1%가 1인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0년 현재,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은 10명 중 3명, 미혼인 사람들은 10명 중 한 명 정도가 1인가구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미혼자들에게서 1인가구 거주비율이 높아진 현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는 한편,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사별이나 이혼을 한 사람들에게서도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이와 같은 가족생애사적 사건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점차 혼자 살아가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여유가 있음을 뜻할 수도 있으나, 다른 가족원에게 의지할 형편이 못됨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홀로된 노인들의 경우 자녀가족과의 결합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각 연도에 있어서 1인가구에 속하는 무배우자들의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가면서 높아지다가 55~64세를 정점으로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특히 2000년에 뚜렷한데, 25~34세 중 1인가구에 속하는 무배우자 비율은 17.5%, 다음 연령인 35~44세에서는 해당 비율이 30.4%로 높아지고 55~64세에서는 다시 36.2%로 오르고 나서 65세 이상에서는 33.7%로 약간 낮아지고 있다.

저연령층 무배우자들의 1인가구 거주비율이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하는 현상은 주로 미혼인 사람들 내에서의 1인가구 거주 경향이 늘어났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연령층에서의 1인가구 거주 무배우자들의 증가는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들에게서의 1인가구 거주 경향이 높아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3. 15세 이상 유배우자들의 부부가구 형성비율

〈표 8-5〉에는 15세 이상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유배우자 내에서 성별로 살피는 작업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성별 비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 표에 의하면 유배우자들이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1980년에 도시에서나 농촌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985년 이후로는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유배우자들에게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성인자녀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에 남은 고연령층 부모들이 부부가구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해석은 유배우자의 연령별 부부가구거주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유배우자 중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5~24세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25~34세부터 낮아지면서 45~54세부터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젊은 부부가 자녀 없이 부부가구를 형성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부부가구를 벗어났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떠나면서 다시 부부가구로 돌아오는 현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부부

〈표 8-5〉 유배우자들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부부가구 거주비율, 1980~2000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7.5	8.8	11.1	14.7	17.5
거주지역	도시	7.4	7.8	9.1	14.8	13.7
	농촌	7.7	10.5	16.8	14.6	30.4
연령	15~24	24.3	28.2	36.4	38.1	37.3
	25~34	7.7	8.4	10.4	12.3	15.0
	35~44	1.6	2.0	2.4	3.7	4.3
	45~54	4.4	5.5	7.3	10.9	13.1
	55~64	13.0	17.2	23.8	32.1	35.2
	65+	22.0	27.2	36.5	50.0	55.8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가구의 형성은 1980년보다 2000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가 장성한 이후 노부모 둘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한편, 그 기간 또한 길어짐을 의미한다.

## IV. 특정 연령층의 거주형태

연령별 인구를 고려할 때 15세 미만의 아동들(이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계층이라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 두 연령층의 거주형태(living arrangements)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아동들과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가구 뿐 아니라 집단시설가구를 비롯한 집단가구까지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동일 연령층 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극히 취약한 인구집단은 시설이나 기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로 인해 가족해체의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의 가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아동이나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파악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주요부분이며 현실적 시급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아동들과 노인들이 거주하는 일반가구에 한정해서 분석을 실시하며 집단가구에서 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연구는 추후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1. 아동들의 거주형태

최근 아동들의 거주형태에 관해서는 학문적, 정책적 논의가 있어 왔다. 몇 가지 연구사례로는 공선영(2001), 김오남(1999), 김성천 외(2001), 문선화(1999), 오승환(2001), 이에재(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한 가구 내에 살고 있는가 혹은 한부모와 살고 있는가, 만약 한부모와 살고 있다면 어머니와 살고 있는가, 아버지와 살고 있는가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아동들의 성장과정에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가, 또래의 형제자매와 함께 성장하는가 등도 사회적으로

〈표 8-6〉 15세 미만 아동들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거주형태, 1980~2000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0~4	5~9	10~14
1980						
가구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89.0	88.8	89.2	93.2	90.0	84.4
가구내 아버지만 함께 사는 비율	1.1	1.0	1.2	0.5	1.1	1.6
가구내 어머니만 함께 사는 비율	6.0	6.8	5.2	3.0	5.8	8.9
가구내 부모가 없는 비율	3.9	3.4	4.5	3.3	3.1	5.2
가구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24.1	17.9	31.4	26.4	23.8	22.5
가구내 부모없이 조부모가 있는 비율	0.6	0.4	0.9	0.3	0.7	0.8
가구주의 자녀인 비율	90.7	92.5	88.4	87.5	92.4	91.6
가구주의 손자녀인 비율	7.1	5.2	9.5	11.4	6.3	4.3
가구내 15세 미만 평균아동수	2.7	2.5	3.0	2.5	3.0	2.7
1985						
가구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90.2	90.6	89.3	94.2	91.3	85.7
가구내 아버지만 함께 사는 비율	1.3	1.2	1.4	0.6	1.3	1.9
가구내 어머니만 함께 사는 비율	5.0	5.2	4.4	2.0	4.3	7.9
가구내 부모가 없는 비율	3.6	2.9	4.9	3.1	3.1	4.4
가구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21.8	16.6	31.2	23.9	22.1	19.9
가구내 부모없이 조부모가 있는 비율	0.7	0.4	1.1	0.4	0.7	0.8
가구주의 자녀인 비율	91.3	93.0	88.2	87.8	92.4	93.1
가구주의 손자녀인 비율	6.8	5.2	9.8	11.1	6.5	3.7
가구내 15세 미만 평균아동수	2.3	2.2	2.6	2.1	2.6	2.3
1990						
가구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91.4	92.0	89.3	95.4	92.1	87.4
가구내 아버지만 함께 사는 비율	1.6	1.5	2.0	0.6	1.6	2.4
가구내 어머니만 함께 사는 비율	4.1	4.2	3.9	1.5	3.6	6.7
가구내 부모가 없는 비율	2.9	2.3	4.8	2.5	2.7	3.5
가구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19.7	16.0	31.5	19.8	20.1	19.2
가구내 부모없이 조부모가 있는 비율	0.9	0.6	1.7	0.5	0.9	1.1
가구주의 자녀인 비율	91.5	93.3	85.8	89.0	91.8	93.2
가구주의 손자녀인 비율	7.3	5.6	12.8	10.4	7.3	4.9
가구내 15세 미만 평균아동수	2.1	2.0	2.3	1.8	2.2	2.1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표 8-6〉 15세 미만 아동들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거주형태, 1980~2000 (계속)

(단위: %, 명)

	전체	도시	농촌	0~4	5~9	10~14
1995						
가구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92.1	92.6	90.1	95.7	93.1	88.0
가구내 아버지만 함께 사는 비율	1.7	1.5	2.2	0.6	1.4	2.9
가구내 어머니만 함께 사는 비율	3.7	3.9	3.2	1.7	3.2	6.1
가구내 부모가 없는 비율	2.5	2.0	4.5	2.0	2.3	3.1
가구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16.5	13.9	27.7	16.0	16.8	16.8
가구내 부모없이 조부모가 있는 비율	0.8	0.5	1.9	0.4	0.8	1.1
가구의 자녀인 비율	93.2	94.5	87.7	91.9	93.5	94.1
가구의 손자녀인 비율	5.7	4.5	10.9	7.3	5.6	4.3
가구내 15세 미만 평균아동수	1.9	1.9	2.0	1.8	2.1	1.8
2000						
가구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91.2	91.6	89.4	94.5	91.5	87.6
가구내 아버지만 함께 사는 비율	2.0	1.9	2.6	1.0	2.0	3.1
가구내 어머니만 함께 사는 비율	4.2	4.5	3.1	2.2	4.2	6.4
가구내 부모가 없는 비율	2.5	2.0	4.9	2.3	2.4	2.9
가구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15.3	12.9	26.0	15.5	15.1	15.5
가구내 부모없이 조부모가 있는 비율	0.9	0.6	2.2	0.7	0.9	1.2
가구의 자녀인 비율	93.6	95.0	87.7	92.2	94.0	94.7
가구의 손자녀인 비율	5.4	4.1	10.9	7.1	5.1	4.0
가구내 15세 미만 평균아동수	1.9	1.9	2.0	1.8	2.1	1.8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의미 있는 질문이 된다. 또한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복지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표 8-6〉은 일반가구에 속하는 15세 미만 아동들 중에서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비율,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비율, 가구 내 부모 없이 사는 비율, 부모에 상관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및 가구 내 15세 이하의 평균 아동수 등을 아동들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이 표에서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부모의 혼인상태가 아니라 가구 내에 부모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가령, 부모 중 한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는 아동에게 있어 부모의 혼인상태보다 실제 가구 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가가 아동들의 정서나 경제적 상황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김승권·송인주, 2000b).

〈표 8-6〉에 의하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9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사는 비율은 1~2%정도,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사는 비율은 3~6%정도이며, 부모가 없는 비율은 2~5%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이 표에 제시된 수치들은 일반가구에 속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기관에 있는 아동들을 포함할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어느 정도 작아질 것이라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일시적인 생존전략으로 아동들을 시설에 맡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구 내에 어느 부모와도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도시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를 농촌의 조부모에게 위탁한다든지, 부모를 잃어버린 아동들이 농촌의 조부모나 친지에게 맡겨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가구 내에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1980년 24.1%에서 2000년 15.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3세대이상의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적어짐을 반영한다. 아동들이 거주하는 가구 내 15세 미만 아동들의 평균인원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율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조부모와 일상적인 삶을 공유함으로써 맺을 수 있는 세대간 연대가 약해짐을, 그리고 형제자매라는 가족관계망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1980년을 제외하고는 가구 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록 비율이 적기는 하나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동비율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 연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홀로 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거리가 많은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의 도시-농촌간의 차이는 확연하다. 각 연도에 있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의 비율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의 비율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내 15세 미만 평균인원수는 각 연도에 있어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력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농촌의 아동들이 도시의 아동들보다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약간 적지만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고 동일연령의 아동들이 있을 확률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들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각 연도에 있어서 아동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양부모와 거주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2000년의 경우 0~4세 사이의 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94.5%이지만 5~9세에서는 91.5%, 그리고 10~14세에서는 87.6%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아동들의 성장과 함께 부모들이 사망, 별거,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짐을 반영한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의 비율은 1990년 이전에는 아동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약간 씩이나마 감소하고 있으나 1995년 이후로는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거나 약간 높아지고 있다. 이는 1980년 노인들의 사망률이 2000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조부모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이다.

## 2. 노인들의 거주형태

노인층에서는 이들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가, 같이 산다면 동거자녀는 기혼자녀인가 미혼자녀인가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 만약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이들은 혼자 1인가구를 형성하는가 혹은 부부단독가구를 형성하는가 등도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노인층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Kim and Rhee(1997, 1999, 2000), 유성호(2000), 원영희(1995) 등이 그 몇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표 8-7>은 65세 이

〈표 8-7〉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 혼인상태 및 거주지역별 거주형태, 1980~2000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무배우	유배우	도시	농촌
1980							
자녀없이 사는 비율	19.5	22.8	17.6	13.1	27.3	15.2	22.2
1인가구 거주비율	4.8	1.5	6.8	8.1	0.9	3.3	5.8
부부가구 거주비율	10.1	18.0	5.4	-	22.0	6.5	12.3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61.7	48.2	69.6	74.3	46.3	63.5	60.5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8.8	29.0	12.8	12.6	26.3	21.3	17.3
가구주 비율	32.2	71.3	9.2	13.8	54.6	31.4	32.7
가구주 배우자 비율	9.1	0.1	14.4	-	20.1	7.0	10.4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49.4	25.3	63.6	70.9	23.3	53.6	46.7
1985							
자녀없이 사는 비율	25.2	29.7	22.5	17.6	33.5	19.5	29.9
1인가구 거주비율	6.7	2.3	9.4	11.8	1.3	5.2	8.0
부부가구 거주비율	13.2	23.2	7.2	-	27.2	8.7	16.9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57.4	44.6	65.2	70.3	43.6	60.5	54.9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7.3	25.7	12.3	12.1	23.0	20.0	15.2
가구주 비율	32.1	70.7	8.9	13.1	52.6	32.2	32.0
가구주 배우자 비율	9.5	0.2	15.1	-	19.7	7.7	10.9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47.4	25.2	60.8	68.1	25.1	50.2	45.2
1990							
자녀없이 사는 비율	31.8	38.4	27.9	22.5	41.9	24.2	40.5
1인가구 거주비율	9.5	3.5	13.1	17.3	1.1	7.0	12.4
부부가구 거주비율	17.5	30.9	9.6	-	36.5	12.3	23.6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51.5	38.5	59.2	65.0	36.8	56.7	45.6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6.7	23.1	12.9	12.5	21.3	19.1	13.9
가구주 비율	44.4	80.2	23.2	32.5	57.5	40.5	49.0
가구주 배우자 비율	11.6	0.2	18.3	-	24.2	9.3	14.2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41.1	18.4	54.5	62.6	17.6	46.9	34.3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표 8-7〉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 혼인상태 및 거주지역별 거주형태, 1980~2000 (계속)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무배우	유배우	도시	농촌
1995							
자녀없이 사는 비율	43.1	50.6	38.6	31.6	55.6	33.6	55.5
1인가구 거주비율	13.8	4.9	19.1	25.4	1.2	10.2	18.6
부부가구 거주비율	24.0	41.4	13.8	-	50.0	17.7	32.3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43.6	30.4	51.4	58.9	27.0	50.4	34.7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3.3	19.0	10.0	9.5	17.5	15.9	9.9
가구주 비율	47.6	81.1	27.9	38.5	57.6	42.7	54.0
가구주 배우자 비율	13.3	0.5	20.9	-	27.9	11.1	16.2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36.7	17.5	48.0	57.4	14.1	43.2	28.1
2000							
자녀없이 사는 비율	50.9	58.1	46.6	39.0	61.9	42.5	62.6
1인가구 거주비율	16.8	5.9	23.5	33.7	1.4	13.8	21.0
부부가구 거주비율	29.2	47.5	18.0	-	55.8	23.5	37.1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35.7	24.3	42.7	50.6	22.0	41.0	28.3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3.4	17.6	10.8	10.4	16.1	16.5	9.1
가구주 비율	51.1	82.9	31.6	45.7	56.1	47.3	56.3
가구주 배우자 비율	16.0	0.9	25.2	-	30.6	13.8	18.9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31.1	15.5	40.7	50.8	13.0	36.7	23.4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상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노인들의 성, 혼인상태 및 거주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거주형태 중에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 및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에 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노인들이 사는 가구 내에 적어도 1인 이상의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미혼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로 정의하였고,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가구 내에 기혼자녀가 없이 미혼자녀가 적어도 1인 이상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의 합계는 전체 경우가 된다. 한편, 자녀 없이 사는 비율 속에는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과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 등이 포함되며, 자녀

이외의 친족이나 비친족과 함께 사는 비율도 포함된다.

〈표 8-7〉에 의하면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한편,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에 비해,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부모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혼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사는 경향은 강하게 남아 있지만, 일단 결혼한 자녀들은 분가해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증가, 즉 자녀와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노인들의 증가는 이들이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되는 비율의 증가에도 반영된다. 자녀 없이 사는 노인의 비율이 20% 미만인 1980년의 경우, 노인들의 41.3%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49.4%가 가구주의 부모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이 50%를 넘어서는 2000년에는, 노인들의 67.1%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인 한편, 31.1%가 가구주의 부모로 나타난다. 자녀, 특히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의 감소는 노인들이 가구주의 위치를 자녀에게 줄 기회가 없이 그대로 지속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거주지역, 성 및 배우자 유무별로 거주형태의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도시보다는 농촌에게서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농촌의 성인자녀들이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에 노부모들만 남게 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자녀(기혼 및 미혼)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 노인들이 가구주의 부모가 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 없이 사는 노인의 비율을 성별로 보면 이 비율이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1인가구 거주비율과 부부가구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연도에 있어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그러나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성노인들은 홀로 사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사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7>에서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여성노인에게서 가구주의 배우자가 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부부가구 노인비율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무배우자와 유배우자로 나누어 거주형태를 보면,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은 연도에 상관없이 유배우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능력이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별거하면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잃고 난 후에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배우자들의 자녀별거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표 8-8>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별로 거주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연도에 관계없이 노인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기혼자녀와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주 혹은 가구주 배우자의 비율도 기혼자녀와의 동거비율 상승과 함께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0년에 비해 2000년에 65~69세 연령층의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동시에 90세 이상의 최고령층에서도 그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난 20년 간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자신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초고령층에서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고 하겠다.

(표 8-8)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별 거주형태, 1980~2000

(단위: %)

	전체	65~69	70~74	75~79	80~84	85~89	90+
1980							
자녀없이 사는 비율	19.5	22.8	20.7	15.7	10.7	8.9	5.3
1인가구 거주비율	4.8	5.0	4.9	5.0	3.6	4.5	2.4
부부가구 거주비율	10.1	12.8	10.3	7.1	4.5	2.5	0.4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61.7	52.0	63.1	71.9	77.5	80.3	83.0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8.8	25.1	16.2	12.4	11.8	10.7	11.7
가구주 비율	32.2	41.2	32.2	22.1	16.0	11.5	7.7
가구주 배우자 비율	9.1	13.9	7.9	4.2	2.1	0.4	-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49.4	37.8	51.6	62.4	67.8	67.1	62.8
1985							
자녀없이 사는 비율	25.2	29.5	27.0	20.8	14.5	10.4	8.0
1인가구 거주비율	6.7	7.2	7.1	6.2	5.6	4.2	3.5
부부가구 거주비율	13.2	16.5	14.1	9.8	5.2	3.3	2.4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57.4	46.1	58.5	68.8	75.5	80.0	80.5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7.3	24.4	14.6	10.4	10.0	9.6	11.5
가구주 비율	32.1	41.9	32.2	22.7	14.3	8.8	7.8
가구주 배우자 비율	9.5	14.5	8.9	4.3	1.9	0.7	-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47.4	34.2	48.7	61.4	68.4	71.4	67.1
1990							
자녀없이 사는 비율	31.8	36.7	34.7	26.7	19.8	12.4	6.9
1인가구 거주비율	9.5	9.8	10.4	9.4	7.9	5.8	4.5
부부가구 거주비율	17.5	22.0	19.0	13.1	8.2	3.8	0.7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51.5	40.0	51.0	62.8	71.2	77.1	83.2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6.7	23.3	14.3	10.5	9.0	10.5	9.9
가구주 비율	44.4	53.3	46.7	35.6	27.1	18.3	12.8
가구주 배우자 비율	11.6	17.5	10.7	6.1	2.9	0.9	0.5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41.1	27.7	40.5	54.8	64.5	68.6	67.8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표 8-8〉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별 거주형태, 1980~2000 (계속)

(단위: %)

	전체	65~69	70~74	75~79	80~84	85~89	90+
1995							
자녀없이 사는 비율	43.1	48.4	46.1	39.7	29.1	20.5	16.5
1인가구 거주비율	13.8	13.4	15.2	14.8	12.1	9.5	5.9
부부가구 거주비율	24.0	29.6	25.7	19.6	12.4	6.0	4.0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43.6	32.0	42.5	52.9	64.8	72.5	73.3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3.3	19.6	11.4	7.4	6.0	7.0	10.2
가구주 비율	47.6	54.3	50.8	43.2	31.7	21.3	15.4
가구주 배우자 비율	13.3	20.4	12.5	7.0	3.5	1.6	0.5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36.7	23.9	34.9	47.3	59.8	69.3	71.5
2000							
자녀없이 사는 비율	50.9	56.0	54.7	47.8	37.1	25.6	18.8
1인가구 거주비율	16.8	14.3	19.2	20.2	17.2	13.8	7.3
부부가구 거주비율	29.2	36.4	30.6	23.2	16.0	7.9	5.7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35.7	24.6	34.0	44.3	56.3	67.9	73.4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3.4	19.4	11.3	7.9	6.6	6.5	7.9
가구주 비율	51.1	56.6	53.9	48.6	38.3	25.3	15.4
가구주 배우자 비율	16.0	23.9	15.5	8.3	4.0	1.9	0.8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31.1	18.6	29.3	41.0	53.8	67.0	72.2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 V. 성별 가구주 비율과 특성

여성가구주 가구 혹은 여성가구주에 대한 연구사례로는 이성림과 김민정(2001)을 들 수 있는데, 이 영역은 앞서 소개한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들과 연계되어 있지만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은 아직 부진한 실정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후, 각 성별로 가구주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이어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다.

## 1. 성별 가구주 비율

남성가구원과 여성가구원 중에서 가구주 비율을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8-9>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남성들 중 가구주 비율은 59.2%에서 69.9%로 상승한데 비해, 여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8.3%에서 15.0%로 늘어났다. 남녀 모두에게서 가구주 비율이 증가한 것은 1인가구나 소규모가구수의 증가로 전체가구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여기서 우선 주목할 점은 성인 남성들의 경우 과반수가 자신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로 인정되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에 비해 가구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는 성인남녀가 동일 가구

〈표 8-9〉 남성과 여성들의 거주지역, 혼인상태 및 연령별 가구주 비율, 1980~2000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남성 <sup>1)</sup>	여성 <sup>2)</sup>								
전체	59.2	8.3	60.2	7.6	64.6	11.3	68.7	12.9	69.9	15.0
거주지역										
도시	58.8	9.3	60.3	8.5	65.1	11.1	68.3	12.2	69.2	14.4
농촌	59.7	6.9	29.9	6.0	63.1	12.0	70.2	15.1	72.7	17.2
혼인상태										
미혼	6.0	4.1	6.1	4.5	11.4	8.8	15.5	11.0	17.5	13.5
결혼	91.0	3.9	91.4	3.4	93.1	3.3	94.2	3.4	94.4	4.3
사별	50.2	33.3	47.4	32.5	66.7	49.9	66.9	53.9	66.7	56.7
이혼	49.4	45.0	54.5	42.7	72.0	75.6	77.1	80.9	79.6	82.4
연령										
15~24	6.2	3.2	5.6	3.4	6.4	5.3	8.1	6.2	6.9	6.8
25~34	66.5	4.5	64.2	3.7	67.3	5.6	66.2	6.7	60.7	9.2
35~44	93.0	10.1	93.0	9.1	93.1	10.2	93.2	10.7	92.3	12.2
45~54	95.7	17.1	95.8	15.0	96.7	17.4	97.0	18.1	96.5	18.6
55~64	93.3	17.3	92.6	16.5	95.8	25.4	95.9	24.6	95.0	23.6
65+	71.3	9.2	70.7	8.9	80.2	23.2	81.1	27.9	82.9	31.6

주: 1) 남성들 중에서 가구주 비율.

2) 여성들 중에서 가구주 비율.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에 속해 있을 경우 남성이 대부분 가구주로 지목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여성들 중에서 가구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미혼여성이 1인가구를 형성하거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 빈번해짐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가구주 비율을 거주지역별로 보면,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1980년과 1985년에는 해당 비율이 도시에서 높았으나, 1990년부터는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고령층의 여성들이 많고 이들 중 사별한 여성들이 자녀와 별거하면서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에서도 관찰되는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1995년 이후부터 도시보다 농촌에서 남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여성들의 가구주 비율은 사별이나 이혼한 여성들에서 가장 높으며,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음으로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가구주는 거의 남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미혼여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지난 20년 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혼여성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결혼한 남성의 대부분이 가구주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여성 가구주 비율 또한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표 8-9>에서 1980년과 1985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주가 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다가 55~64세를 정점으로 해서 6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기혼자녀의 가구에 합류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각 연도에 있어 이와 유사한 연령별 유형이 발견된다. 그러나 1990년부터 단초를 보이기 시작하고 1995년부터 확연해지는 유형은 여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서보다도 65세 이상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의 경우, 65세 이상 여성의 31.6%가 자신의 가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여성들이 자녀와 별거하면서 자신이 1인가구를 이끌어 가는 경향이 강해짐을 반영한다.

## 2. 가구주의 성에 따른 특성

앞에서는 여성들의 가구주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 및 연령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8-10>은 가구주의 성 및 거주지역에 따라 혼인상태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표 8-10〉 가구주의 거주지역별 혼인상태, 1980~2000

(단위: %)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1980	미혼	4.5	2.6	3.7	17.5	4.9	13.1
	결혼	93.9	95.0	94.4	30.5	23.7	28.1
	사별	1.2	2.1	1.6	47.4	69.2	55.0
	이혼	0.4	0.3	0.3	4.6	2.2	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5	미혼	4.0	2.8	3.6	19.3	5.7	15.7
	결혼	94.4	95.0	94.6	28.2	23.0	26.8
	사별	1.1	1.8	1.3	47.8	69.2	53.6
	이혼	0.4	0.4	0.4	4.7	2.0	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0	미혼	6.9	3.4	6.0	26.0	6.0	20.5
	결혼	90.9	92.9	91.4	20.0	10.6	17.4
	사별	1.4	2.8	1.8	46.7	81.1	56.2
	이혼	0.8	0.8	0.8	7.3	2.3	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5	미혼	7.9	4.1	7.1	26.0	6.2	20.8
	결혼	89.4	91.8	90.0	18.8	9.0	16.2
	사별	1.5	3.0	1.8	45.9	82.2	55.5
	이혼	1.2	1.1	1.2	9.3	2.6	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미혼	8.5	5.0	7.7	26.0	7.1	21.4
	결혼	87.8	90.3	88.3	20.0	10.2	17.6
	사별	1.4	2.9	1.7	40.1	78.0	49.4
	이혼	2.3	1.8	2.2	13.9	4.7	11.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이 표에 의하면 남성가구의 경우는 대부분이 결혼한 남성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남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의 경우 사별한 여성이 가장 많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과 이혼한 여성들의 상대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중에서 이혼한 여성들의 비중은 1980년에는 3.8%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11.7%에 이르고 있다. 여성가구주 중 이혼녀들의 증가는 전체 인구 중에서 이혼여성이 증가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혼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가구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강해진 면도 반영하고 있다.

도시의 여성가구주와 농촌의 여성가구주들의 혼인상태분포를 보면, 농촌여성가구의 대부분이 사별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여성가구주에게서도 사별여성이 많기는 하지만 농촌여성가구주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시여성가구의 상당수는 미혼이거나 결혼중인 여성들이므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도시여성 가구주들 중 미혼과 이혼한 여성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남성가구주들과 여성가구주들은 연령분포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표 8-11〉 참조). 남성가구주들에 비해 여성가구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연도별 변화를 보면 여성가구주들이 고령층에 속한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가구주들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도시여성가구주들과 농촌여성가구주들의 연령분포에서는 농촌여성가구주들이 도시여성가구주들에 비해 높은 연령층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농촌여성가구주들이 고령층에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Ⅵ. 맺는 말

이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의 센서스 자료를 분석을 통해 일반 가구원들이 속한 가구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구를 단위로 한 가구 및 가족형태

(표 8-11) 가구의 거주지역별 연령분포, 1980~2000

(단위: %)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1980	15~24	3.9	2.4	3.3	15.5	4.8	11.8
	25~34	32.8	19.2	27.0	14.3	7.8	12.0
	35~44	32.2	27.6	30.3	22.4	20.2	21.6
	45~54	18.5	24.7	21.2	25.5	32.1	27.8
	55~64	9.0	17.1	12.5	15.7	23.1	18.3
	65+	3.5	9.0	5.9	6.6	12.0	8.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5	15~24	3.0	1.9	2.6	15.0	4.5	12.1
	25~34	32.7	20.6	28.5	13.9	8.4	12.4
	35~44	30.9	23.7	28.4	20.6	17.8	19.9
	45~54	20.6	26.6	22.7	25.5	31.4	27.1
	55~64	9.0	17.3	11.9	17.2	25.9	19.5
	65+	3.7	9.8	5.8	7.8	12.1	9.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0	15~24	2.8	1.3	2.4	14.7	3.6	11.7
	25~34	32.1	18.0	28.5	16.0	4.9	12.9
	35~44	30.6	22.0	28.4	18.4	8.8	15.8
	45~54	20.1	24.5	21.3	20.5	19.7	20.3
	55~64	9.9	20.3	12.6	18.2	31.1	21.7
	65+	4.4	14.0	6.8	12.2	31.9	1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5	15~24	2.7	1.5	2.4	12.9	3.4	10.4
	25~34	27.2	16.5	24.8	15.5	4.3	12.6
	35~44	33.6	23.5	31.3	20.3	8.6	17.2
	45~54	20.0	20.1	20.0	19.8	14.3	18.4
	55~64	11.6	22.6	14.1	17.4	28.7	20.4
	65+	4.9	15.8	7.3	14.2	40.6	2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15~24	1.9	1.3	1.8	10.2	3.0	8.4
	25~34	21.9	14.1	20.2	16.5	4.6	13.6
	35~44	34.3	25.2	32.3	21.3	8.5	18.1
	45~54	22.4	19.9	21.8	19.7	12.3	17.9
	55~64	13.1	20.3	14.7	15.3	23.6	17.3
	65+	6.5	19.2	9.3	17.1	48.0	2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변화에 관련된 기존의 통계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간 한국의 인구는 그 가구형태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머리말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질문별로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한 일반가구원의 비율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가구원들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1인가구와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무배우자 중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미혼보다는 이혼이나 사별자들에게서,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비율에서는 무배우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별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무배우자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때 두드러진 현상은 지난 20년 간 도시와 농촌 간에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 차이가 확대되었다는 점, 이혼이나 사별자보다 미혼자들의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점, 다른 연령에 비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유배우자 중에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이 비율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한편, 연령별 비율에서는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인 34세 이하와 성인 자녀가 출가한 이후 시점인 55세 이상에서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유배우자들이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높아지고 있다.

둘째, 양부모와 함께 사는 15세 미만 아동들의 비율은 지난 20년 간 90%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아동과 농촌아동 간의 차이는 작지만 1980년을 제외하고는 도시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아동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아동들의 거주형태에서 가장 확연한 것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로 지난 20년 간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으며, 특히 도시아동들에게서 이러한 비율의 감

소가 두드러진다. 또한 도시아동들과 농촌아동들은 자신들의 형제자매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농촌아동에 비해 도시아동들의 평균형제자매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거주형태에서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그리고 무배우자보다는 유배우자에게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노인들은 대체로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들은 1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셋째, 지난 20년 간 남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에 비해 여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1980년과 1985년에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높았으나, 1990년 이후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에서도 발견된다.

혼인상태별로는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사별, 이혼, 미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들의 경우에 유배우자가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여성들이 1인가구를 형성함으로써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볼 때, 1985년 이전에는 55~64세에서 65세 이상으로 가면서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하락하였지만, 1990년 이후로는 65세 이상에서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그 이전 연령층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남성가구주의 특성과 비교해 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사별, 이혼 혹은 미혼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별의 비중은 줄고 이혼과 미혼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여성가구주 중에서 이혼과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촌보다도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연령분포에서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들의 고령화현상은 도시보다는 특히 농촌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변화는 도시-농촌, 연령, 성 등에 따라 가족구조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차별적 작용과 그 기제는 가족구조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들 속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족의 변화와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할 때 농촌-여성-고령이라는 축이 가장 시급하고도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이 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여 백

## 제9장 교육수준

이 장 영

### I. 머리말

교육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역사상으로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지만 자손들의 종교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오늘날 나라를 다시 찾았을 뿐 아니라 세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로부터 학문을 매우 중하게 여겼고 현재는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양 자식 교육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교육의 역할이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사회에서도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가 변화해 가는 방향으로 적절한 교육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교육의 내용을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향후 사회변동을 잘 예측할 수 있을 때 더욱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자의 수요예측은 교육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은 사회의 불평등 요소를 파악하는데 적절할 것이다.

이 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교육과 인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전반부에서는 우리 나라 교육인구의 변화, 학력인구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는데, 대략 1980년 이후부터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수준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교원수와 학교수의 증가를 다루었다. 또 각 학급별 진학률과 취학률을 다루었고, 취학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다.

중반부에서는 교육과 국제화, 소득, 출산을 다루고 있다. 교육과 국제화에서는 해외유학생들과 국내유학생,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학력을, 교육과 소득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 종사상 지위, 산업분포 등을, 그리고 교육과 출산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른 출생아수를 분석하였다. 중반부에서는 학생수의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교육예산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교육관에 대해서 다루었고, 가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교육과 인구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문헌들이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대개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즉, 한국인들의 과거 교육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의 동향과 장래에 필요한 예측들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기존의 문헌과 더불어 통계청이 발행한 공식자료를 이용하였고, 또한 부분적으로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 II. 교육수준의 변화

### 1. 교육수준에 따른 학생수의 변화: 1945~2000

서양의 경험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는 1945년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은 후 도시화와 더불어 빠른 인구 증가를 경험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급속한 인구증가를 경험하면서도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인구증가와 함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갔다. 해방 이래로 우리 나라 정부는 교육기회의 팽창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1948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었다. 의무교육의 실시로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표 9-1>에 제시되어 있듯이, 초등학생들의 수가 1945년 137만 명에서 1950년 266만 명으로, 그리고 1975년에는 정점을 이루어 560만 명을 이루었다가, 1980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약 402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수가 1980년 이후 감소하는 이유는 1953년부터 1960년 정도까지 계속된 ‘베이비 붐’ 세대가 지나가면서 취학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9-1〉 교육수준과 학생수의 변화, 1945~2000

(단위: 1,000명)

	1945	1950	1961	1970	1975	1980	1989	2000
초등학교	1,366	2,658	3,855	5,749	5,599	5,658	4,894	4,019
중학교	81	381	621	1,319	2,027	2,472	2,371	1,860
고등학교			279	590	1,123	1,697	2,325	2,071
대학교			143	146	209	403	1,021	2,829

자료: 1945~1950년은 Y. Chang(1980); 그 이후는 통계청(2002g, 2002j).

초등학교 교육은 1960년부터 매우 보편화되었고 초등학교 인구의 증가에 이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인구가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중학교 인구는 1945년 8만 명, 1950년 38만 명, 1970년 132만 명, 1980년 247만 명을 이루었다. 중학생 수는 1980년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여 1989년 237만 명 그리고 2000년에는 186만 명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생 수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인구는 1961년 28만 명이었으나 1970년 59만 명, 1980년 170만 명, 그리고 1989년 232만 명에 달하였다가 2000년 20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9-1〉에서 보는 것처럼, 1961년 매우 작은 인구인 14만 명으로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대학생들의 수는 1970년에도 15만 명을 유지하다가 1980년에 40만 명, 1989년에 102만 명, 그리고 2000년에는 28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1980년 이래로 급격하게 증가한 대학생 수는 대학생 인플레이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의 공급과잉은 대졸 실업자를 양산하고 또 대졸자들이 고졸자가 할 만한 일자리에 취직함으로써 학력간 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고졸자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고학력자와 고용·임금과의 관계는 이 장의 뒤에 언급하였다.

## 2. 학력구성의 변화: 1980~2000

우리 나라의 교육열과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나라 인구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표 9-2〉에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나라 6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간동안

〈표 9-2〉 6세 이상 인구의 학력 구성비, 1980~2000

(단위: %)

	초졸	중졸	고졸	초급대	대학 이상	합계
합계						
1980	38.9	25.3	27.4	1.6	6.7	17,632,940
1985	28.3	24.4	35.7	3.0	8.6	20,167,007
1990	20.8	19.9	43.8	3.3	12.3	24,151,014
1995	16.8	15.6	46.1	4.6	20.0	26,439,565
2000	14.8	13.6	44.8	9.6	17.2	27,232,550
남자						
1980	31.1	24.5	32.3	2.2	9.9	8,903,066
1985	22.2	22.1	39.6	3.9	12.2	10,115,606
1990	15.9	17.5	46.3	3.7	16.6	12,179,394
1995	12.5	13.6	47.2	4.8	21.9	13,216,800
2000	11.0	12.1	45.1	10.0	21.8	13,417,267
여자						
1980	46.9	26.2	22.4	0.9	3.5	8,729,874
1985	34.5	26.8	31.8	2.0	4.9	10,051,401
1990	25.8	22.3	41.3	2.8	7.8	11,971,620
1995	21.1	17.5	45.0	4.3	12.0	13,222,765
2000	18.4	15.0	44.5	9.2	12.8	13,815,283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인구증가와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교육받은 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남녀를 합한 합계를 보면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전체 학위 소지자들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38.9%와 25.3%에서 각각 14.8%와 13.6%로 줄어들었다. 우선 1980년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 졸업자 인구에서 가장 많은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자는 25.3%, 고등학교 졸업자는 27.4%, 초급대(전문대 포함) 졸업자는 1.6%, 그리고 대학 이상 졸업자는 6.7%이다. 이런 추세는 2000년에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14.5%, 중학교 졸업자는 13.6%, 고등학교 졸업자는 44.8%, 초대전문대 졸업자는 9.6%, 그리고 대학이상 졸업자는 17.2%로 변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46.1%를 최고로 2000년에는 44.8%로 감소하고 있다. 초급대 졸업자들은 1980년 1.6%에서 2000년 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졸자의 과잉공급으로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취업이 더 유리한 초급대나 전문대의 선호가 낳은 결과로 보인다. 대학이상 졸업자는 1995년 20.0%를 거쳐 2000년에는 17.2%로 감소하고 있다.

남자들만을 분석하여도 이러한 학력의 변화는 유사하다. 즉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초졸자와 중졸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고졸자는 1990년 46% 정도까지 증가하였다가 그대로 유지되는 듯하다. 대졸이상 학력자의 경우도 1995년부터 약 22%를 유지하고 있으나, 초급대 졸업자의 경우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2%에서 10.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 초졸자와 중졸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졸자는 1995년부터 45%를 유지하고 있다. 초급대 졸업자는 남자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졸이상 졸업자는 남자와 달리 1980년 3.5%에서 2000년 12.8%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의 학력 구성비 변화의 특징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비율의 감소와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의 현상유지, 그리고 초급대 졸업자의 꾸준한 증가이다. 남자들은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1995년부터 약 22% 정도로 유지되는 반면 여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자들의 고학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자와 비교하여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표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2000년 자료를 보면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남자는 60.5%이고 여자는 3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녀의 불균형은 최고 학위인 대학원에서는 더 악화되어 석사 학위 소지자 중에서 남자는 74.5%, 여자는 25.5%를 이루며, 박사학위에서는 남자가 84.4% 여자가 15.6%를 이룬다. 이를 보면 여자들의 학력구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최고학력에서는 아직 남자들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이상 고학력자의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자는 감소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신광철(2002)에 의하면 이공계를 포함한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1997년 1,578명, 1998년 1,452명, 1999년 1,260명, 2000년 1,207명, 그리고 2001년 958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고급인력에 대한 보상체계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우리 나라 성인들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1980년부터 2000년의 기간동안 인구

〈표 9-3〉 교원수 및 학교수, 1980~2000

(단위: 명, 개)

	1980	1985	1990	1995	2000
초등학교					
교원수	119,064	126,785	136,800	138,369	140,000
학교수	6,479	6,519	6,335	5,772	5,267
중학교					
교원수	54,858	69,553	89,719	99,931	92,589
학교수	2,103	2,371	2,474	2,683	2,731
고등학교					
교원수	50,948	69,546	92,683	99,067	104,351
학교수	1,355	1,602	1,683	1,830	1,957
초급대					
교원수	6,052	6,406	7,382	10,384	11,707
학교수	139	120	117	145	158
대학·대학원					
교원수	14,696	27,028	34,034	45,853	42,641
학교수	206	312	416	563	1,001

자료: 통계청(2001e, 2002j).

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교육시설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의 총인구는 1980년 3,741만 명에서 1990년 4,339만 명, 그리고 2000년에는 4,59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2a). 이런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수준의 증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에 따른 것으로 교원수와 학교수의 증가를 살펴보면 〈표 9-3〉과 같다.

이 기간동안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급대의 경우 교원수가 증가하였고, 중학교와 대학·대학원은 1995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 20년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는 교원수가 약 2 배정도 증가하였고, 대학과 대학원은 약 3. 배정도 증가하여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가 더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교수의 변화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98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취학 아동수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

상이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준에서 학교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학교는 1980년 2,103개에서 1990년 2,474개, 그리고 2000년에는 2,731개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와 초급대도 중학교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는 1980년 206개에서 1990년 416개로 약 2배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001개로 약 5배나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대학과 대학원 수의 증가는 앞으로 고급지식을 지닌 인력이 더욱 필요한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적 수요가 클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고학력 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후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절하게 순응하지 못한다면 교육과 산업간 불균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IT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조사」에 의하면 2006년까지 이 분야에 학사급 88,000명, 그리고 석·박사급 6,3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에도 약 30,000명 정도의 IT산업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권남훈, 2002).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변화하는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원 확보율의 향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절대치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 1만 명 당 학생수의 변화가 <표 9-4>의 하단에 나타나 있다. 인구 1만 명당 학생수가 1980년대에는 157명과 309명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342명과 421명으로, 그리고 2000년에는 602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전체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러한 학생수의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교육 구성비가 교육의 양적인 면에서의 측정이라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질적인 면에서의 측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표 9-4>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표 9-4>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인구 1만 명당 학생수, 1980~2000

(단위: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초등학교	47.5	38.3	35.6	28.2	28.7
중학교	45.1	40.0	25.4	24.8	20.1
인문고	33.9	31.6	25.4	22.1	20.9
실업고	32.6	30.0	23.4	21.4	18.2
인구 1만명당 학생수	157	309	342	421	602

자료: 통계청 (2001e, 2002j).

모든 수준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조건은 향상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1980년에는 교원 1인이 학생 47.5명을 담당하였으나 1990년에는 35.6명으로, 그리고 2000년에는 28.7명으로 20년 동안 약 20여 명이 감소하였다. 중학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고도 1980년 33.9명에서 2000년 20.9명으로 감소하였고, 실업고도 32.6명에서 18.2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향상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표 9-5〉는 각 학급에 따른 취학률과 졸업생의 진학률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각급 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로 올라가는 진학률((진학자/졸업자)×100)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경우 1970년 66.1%에서 1980년 95.8%, 그리고 1985년 99.2%를 이루었고, 이후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경우는 1970년에 70.1%이던 것이 1990년에는 95.7%를, 그리고 2000년에는 99.6%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1970년에 26.9%, 1980년에 27.2%, 1990년에 33.2% 이었으며, 그리고 2000년에는 무려 68.0%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확대는 고학력자의 양산과 더불어 교육시설의 과잉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를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과 대학정원을 대학입학에 필요한 수능능력시험 응시자를 가지고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해 보자. 최근 2003학년에

〈표 9-5〉 학교 수준별 취학률 및 졸업생의 진학률, 1970~2000

(단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률	진학률	취학률	진학률	취학률	진학률	취학률
1970	100.7	66.1	51.2	70.1	28.1	26.9	8.4
1975	105.0	77.2	71.9	74.7	41.0	25.8	9.3
1980	102.9	95.8	95.1	84.5	63.5	27.2	15.9
1985	99.9	99.2	100.1	90.7	79.5	26.4	35.1
1990	101.7	99.8	98.2	95.7	88.0	33.2	37.7
1995	100.1	99.9	101.6	98.5	91.8	51.4	55.1
2000	98.7	99.9	99.5	99.6	95.6	68.0	77.8

자료: 통계청(2001e, 2002j).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2001년보다 약 6만 명이 줄어든 67.5만 명이 응시하였다. 이들의 분포는 성별로는 남학생이 52.7%인 35.6만 명, 여학생이 47.3%인 31.9만 명이며, 재학생이 71.3%, 졸업생이 26.6%, 그리고 검정고시생 등 기타가 2.1%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가장 적게 지원한 2001년의 74만 명에 비해서도 6만 명 정도 적게 응시한 것인데, 고3 재학생수가 그 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제 대학정원(38.4만 명)과 수능응시 인원 중 대학지원율(2002학년도 79.7%)을 적용한 단순입학 경쟁률은 2001년의 1.53대 1에서 1.36대 1로 낮아졌다(조채희, 2002).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5학년도에는 단순 경쟁률이 1대 1이 되는데, 이럴 경우 지방대나 비인기학과에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수능 지원자가 줄어들면 선호도에 있어서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다음으로 취학률을 보면, 취학률은 적정연령계층의 인구에 대한 취학자(연령계층에 상관없이)의 비율로 100을 넘을 수 있다. <표 9-5>에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초등학생의 경우는 거의 100을 넘고 있어서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중학교는 1985년을 기점으로 취학률 100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 28.1%이던 것이 2000년 95.6%가 되었다. 대학교의 취학률은 1970년 8.4%, 1980년 15.9%, 1990년 37.7%, 그리고 2000년에는 77.8%로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취학률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표 9-6>과 같다. 각 연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슷한 연도로 간주하면 우리 나라의 취학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표에서 중등교육은 중·고등학교를 나타내며 고등교육은 초급대학 이상을 의미한다. 먼저 학교전 아동들은 취학률이 88로 홍콩 83, 프랑스 89, 독일 89와 유사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교육은 94로 홍콩 94, 이란 98과 유사하나 일본 101, 인도네시아 113, 미국 102, 독일 104보다는 낮다.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68로 개발도상국가들, 프랑스, 독일보다 높으나 캐나다의 88, 미국의 81보다는 낮다.

〈표 9-6〉 각 국가의 수준별 취학을

(단위: %)

국가	연도	학교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국	1997	88	94	-	68
중국	1997	28	123	70	6
홍콩	1995	83	94	73	-
일본	1997	-	101	-	-
인도	1996	5	100	49	7
인도네시아	1996	19	113	56	11
이란	1996	11	98	77	18
태국	1996	62	87	56	22
멕시코	1996	73	114	64	16
캐나다	1995	64	102	105	88
미국	1995	70	102	97	81
프랑스	1996	83	105	111	51
독일	1996	89	104	104	47

자료: 통계청(2001e, 2002j).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장애인 교육은 이런 면에서 국가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 부분이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자료는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장애인 취학자수는 1990년 19,971명에서 1995년 21,607명, 그리고 2000년 23,60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장애인 취학자 중에서 각 장애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시각장애자가 7.7%, 청각장애자가 22.1%, 정신지체자가 57.5%, 그리고 지체부자유자가 12.7%를 이루고 있어서 전체 장애인 취학자 중에서 정신지체자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는 1995년과 2000년에도 계속되는데 다른 장애인 취학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정신지체자의 비중이 80%로 높아졌다.

미국의 장애인 교육을 보면 1990년 공립학교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학습장애아가 44%, 언어장애가 26%, 정신지체자가 12%, 정서장애자가 9%, 그리고 지체부자유자가 9%를 차지하였다(Anderton et al., 1997: 506). 미국의 경우 학습장애아의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지체자 취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Ⅲ. 교육수준과 인구

#### 1. 교육과 국제화

위에서 언급한 바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으나 국내의 열악한 교육과 고용환경은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이민이나 자녀를 해외에서 공부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하였다. 이런 분위기는 해외이민 박람회나 유학 박람회가 성황을 이루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먼저 국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유학생수를 보면 1971년 41개국 7,632명, 1980년 35개국 13,302명, 1985년 46개국 24,315명, 1993년 61개국 84,765명, 그리고 1999년 154,21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인의 해외 유학생은 국가에 따른 편중이 심한 편으로 1999년에 미국 42,890명, 캐나다 53,888명, 호주 9,526명으로 이들 영어권 나라들이 전체 유학생들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도 지역편중이 심하여 일본에 12,746명 그리고 중국에 9,204명으로 아시아권 유학도 편중되어 있다(교육부, 2000).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더욱 치열해진 사회경쟁에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해외에서 공부하여 적어도 영어만큼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을 가지고, 많은 어린 학생들이 일부는 합법적으로 또 일부는 불법으로 해외에 나가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불법 조기 유학생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999년 1,650명이었던 초·중·고 불법 유학생이 2000년에는 3,728명으로 늘어났고, 2001년에는 7,378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5,000명 정도의 초·중·고 학생들이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단기 해외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해외유학의 증가로 2002년 상반기 동안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은 약 8천억 원이다. 반대로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이 본 국에서 우리 나라로 보내오는 금액은 122억 원으로 우리 나라 해외송금액의 1.4% 정도에 해당된다.

자녀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크게 보면 하나는 유학생 자신들이 해외에서 겪는 수고와 가족다운 가족을 만들지 못하는 헤어져 사는 가족의 증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국해서 겪는 정체의식의 혼동

이다. 조기유학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그 동안 여러 차례 방송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 학문적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유학 추세는 연령적인 측면에서 초·중학생까지 낮아졌고, 계층적인 면에서는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되었다.

조기유학의 계기 또는 요인으로는 대학진학 가능성 여부, 영어 조기교육,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불신(예컨대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 과도한 과외비, 촌지, 학교 내 폭력, 집단 따돌림, 한국대학의 공부 외면 풍토)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한국인 조기 유학생들을 연구한 안병철(1997)에 의하면 조기 유학생들의 유학동기는 미국사회의 흡입요인(pull factor)이라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교육기회, 새로운 경험,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등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사회의 배출요인(push factor)인 한국의 학교교육이 싫어서, 한국의 입시제도가 싫어서 등이 지적되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학업, 친구문제, 향수병,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조기유학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이산가족의 출현이다. 아이들 뒷바라지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외국과 남편이 있는 한국을 왕래하며 살고 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 가족과 헤어져 살며 아이들 교육비를 준비하느라고 생업에 종사한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며, 때로는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까지 가기도 한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 교육환경의 열악한 배출요인과 외국의 흡입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은 지속되리라 여겨진다.

공무원, 해외 상사 주재원, 유학생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갔거나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외국에서 습득한 문화와 정체성이 한국의 그것과 섞이면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귀국한 청소년은 1995년에 약 2,2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 청소년의 국내적응을 연구한 이장영(1997)에 의하면, 귀국 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약 50%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아직 학업이나 대인관계가 덜

복잡한 초등학생이, 해외체류 기간에서는 다른 문화와 접촉한 기간이 적은 학생이, 그리고 귀국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한국문화에 익숙한 학생이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이 높았다. 고등학생은 과중한 학업부담과 복잡한 교우관계 때문에, 그리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은 문화적 혼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이들이 귀국 후 1~2년 동안 한국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이들이 두 개의 문화를 습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들을 장차 우리 나라와 외국을 연결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도 규모가 작지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수는 1992년 1,989명에서 1995년 1,983명, 1997년 4,753명, 그리고 1999년 6,27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와 초급대 350개를 대상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를 분석한 2000년 자료를 보면, 유학생 수는 6,160명으로 전체 대학생 수의 약 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국·공립대에 20.0%, 사립대에 76.4%, 그리고 초급대에 3.6%로, 사립대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중 장학금 수혜자는 국·공립대가 31.6%, 사립대가 29.1%, 초급대는 41.6%로 나타나 초급대가 약간 높으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조채희, 2000).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 자료를 보면 2000년 현재 일본(1,692명), 중국(1,601명), 타이완(487명)으로 아시아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국제무역을 보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시장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함을 지적 받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유학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우리 나라의 학문적 교류가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학문발전과 국가발전을 고려할 때 인적교류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중국의 중·고등학교와 교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지방과 서울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중국 북경에서

〈표 9-7〉 주요 국적 및 교육수준별 외국인, 2000

(단위: 명)

	초등	중	고등	대학 이상	불취학	합계
전국	10,889	25,206	62,687	45,953	5,201	150,812
중국	2,144	8,001	10,945	3,390	582	25,109
중국 조선족	2,565	5,752	11,393	2,312	330	22,365
일본	590	678	4,738	6,547	661	13,398
필리핀	274	752	4,924	5,957	167	12,083
미국	1,123	607	1,757	7,350	939	11,940
인도네시아	326	1,577	7,675	881	48	10,513

자료: 통계청(2002g, 2002j).

중국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박람회 개최했으며, 서울의 한 대학은 매년 2,000명 정도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은 많고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은 적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들의 노력과 교육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때다.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분포와 학력을 보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인적교류의 대강을 알 수 있는데, 1만 명 이상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의 외국인들과 학력을 정리하면 〈표 9-7〉과 같다. 이 표에서 2000년 우리 나라에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나라는 5개국 6개 민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수는 약 15만 명이며 중국, 조선족, 일본, 필리핀, 미국, 인도네시아 순이다. 전국적으로는 고등학교와 대졸자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특징을 보면 중국인, 조선족,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들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가 많으며, 일본, 필리핀, 미국은 대학 이상인 자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순이다. 학력에 따른 직업을 고려하면 중국인, 조선족, 인도네시아 인들은 저임금 직종에 그리고 일본과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종에 취업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교육과 소득

교육과 소득의 관계는 〈표 9-8〉에 정리되어 있으며 학력에 따른 추이를 보

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는 1980년에 1,200만 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900만 명으로, 그리고 2000년에는 77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 국민들의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오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같은 연도에 각각 720만 명, 530만 명, 388만 명으로 줄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8.5%, 57.5%, 그리고 50.2%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자들의 15세 이상 인구는 1990년까지 증가하여 760만 명을 이루었고, 그 후 감소하여 2000년에는 6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4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졸 이상자들은 중졸 이하의 사람들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가 1980년 497만 명에서 2000년 1,48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해에 66.2%에서 64.5%로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15세 이상 대졸 이상자들도 1980년 118만 명에서 2000년 68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참가율은 82.5%에서 77.0%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특징은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인구가 감소

〈표 9-8〉 교육수준별 경제활동 인구, 1980~2000

(단위: 1,000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초졸 이하	15+ 인구	12,347	10,379	9,208	8,226	7,750
	경제활동인구	7,219	5,737	5,299	4,405	3,888
	참가율	58.5	55.3	57.5	53.5	50.2
중졸	15+ 인구	5,960	7,179	7,620	6,856	6,715
	경제활동인구	2,946	3,299	3,597	3,387	3,248
	참가율	49.4	46.0	47.2	49.4	48.1
고졸	15+ 인구	4,976	7,937	10,848	13,617	14,807
	경제활동인구	3,292	4,912	7,054	9,058	9,552
	참가율	66.2	61.9	65.0	66.5	64.5
대졸 이상	15+ 인구	1,180	2,057	3,211	4,964	6,831
	경제활동인구	974	1,644	2,589	4,003	5,262
	참가율	82.5	79.9	80.6	80.6	77.0

자료: 통계청 (2002g, 2002j).

하고 있고, 중졸 인구는 완만하게 증가하며, 고졸 인구는 약 3배, 그리고 대졸 이상 인구는 약 6배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초졸 이하는 50%대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중졸자는 48%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졸자는 64%로 완만하게 감소하며, 대졸 이상자는 77%로 감소하고 있다.

다음은 교육수준에 따른 월평균 임금에 관한 내용으로 <표 9-9>에 정리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우리 나라 임금 근로자들의 학력간 임금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박세일, 1983; 이정우, 1991; 이장영, 1992; 석현호, 1997; 방하남 외, 1999).

학력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의 학력은 1980년에 평균 124,435원에서 1990년에 476,949원, 그리고 2000년에 1,261,618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고졸의 경우는 같은 연도에 평균이 각각 180,919원, 569,394원, 1,461,083원으로 약 8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초급대 졸업자들은 각각 264,762원, 668,200원, 1,508,493원으로 약 5.7배 증가하였으며, 대졸 이상자들은 각각 413,318원, 1,055,950원, 2,321,652원으로 약 5.6배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학력에 따라 임금을 단순비교 하면 저학력자들의 임금상승이 고학력자들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동안 임금을 고졸자를 기준으로 횡적으로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표 9-9>에서 1980년 고졸자 임금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중졸 이하는 68.8%, 초급대졸 146.3%, 그리고 대졸 이상자는 228.5%로, 대졸 이상자의 임금이 고졸자보다 약 2.3배 많아서 그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1990년에 감소하였다. 즉 1990년 고졸자에 비해 중졸 이하는 83.8%를 그리고 대졸자는 185.5%의 임금을 받았다. 그리고 2000년에는 그 격차가 더 감소하여 중졸 이하는 86.3%를 그리고 대졸 이상자는 158.9%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임금 액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고졸자 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학력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임금에 관한 자료는 조사기관에 따라 급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급여액을 대상으로 남녀의 급여를 비교하였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1980년 중학교 졸업자

〈표 9-9〉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의 추이, 1980~2000

(단위: 원, %)

	중졸 이하	고졸	초급대졸	대졸 이상
1980	124,435	180,919	264,762	413,318
1985	226,272	303,049	393,450	686,490
1990	476,949	569,394	668,200	1,055,950
1995	959,087	1,100,306	1,192,628	1,715,411
2000	1,261,618	1,461,083	1,508,493	2,321,652
1980	68.8	100.0	146.3	228.5
1985	74.7	100.0	129.8	226.5
1990	83.8	100.0	117.4	185.5
1995	87.2	100.0	108.4	155.9
2000	86.3	100.0	103.2	158.9

자료: 통계청(2001e, 2002j).

에서 여자는 남자 임금의 51.4%를, 그리고 대졸 이상에서 여자는 남자의 60.5%를 받고 있어서, 저학력에서 성별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에서 여자는 남자 임금의 62.1%를, 그리고 대졸 이상에서 여자는 남자의 74.2%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g). 이는 저학력에서 성별격차가 더 큰 현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성별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 나라의 교육인구는 각급 학교에서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고 특히 고등교육 인구는 1980년 교육개혁 조치 이후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증가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유럽 선진국들보다 훨씬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의 팽창은 고학력자를 양산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부분에 공급됨으로써 성장에 기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와 취업난을 가중시켰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감소시킨 면이 있다(김혜영, 1992).

대학 졸업자는 많은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산업시설은 충분하지 못한 고학력자의 공급과잉 상태로 인하여 고학력자가 예전의 고임금 직종에 취직하지 못하고 낮은 임금 직종에 취직함으로써 자신들의 임금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저학력자들도 낮은 임금에 묶이게 되었다. 이런 교육 인플레이 현상은 결국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였다. 고용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학력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한 역할을 하였다.

〈표 9-10〉은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본 것이다. 이 표에서 불취학자의 경우 16.2%가 임금·봉급 근로자이며 51%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이다. 그리고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0.8%이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32%를 차지하고 있다. 전 학력을 통하여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초등학교학력자의 경우는 32.7%가 임금·봉급 근로자, 40.5%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2.1%가 고용원을 둔 사업주, 그리고 24.6%가 무급가족 종사자이다. 불취학자에 비하여 임금·봉급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학력자의 경우 65.6%가 임금·봉급 근로자, 20.8%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6.9%가 고용원을 둔 사업주이며, 무급가족 종사자는 6.7%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 학위자의 경우에는 이 구성비율이 각각 76.7%, 12.0%, 11.1%, 그리고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봉급 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며, 불취학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력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특히

〈표 9-10〉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 2000

(단위: %)

	임금·봉급 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불취학	16.2	51.0	0.8	32.0
초등학교	32.7	40.5	2.1	24.6
중학교	50.5	32.1	4.5	12.9
고등학교	65.6	20.8	6.9	6.7
초급대	78.6	11.0	7.4	3.1
대학교	76.7	10.2	11.1	1.9
대학원 석사	81.6	6.4	11.4	0.7
대학원 박사	86.5	2.4	10.8	0.3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종사상 지위와 교육수준별 임금을 동시에 고려해 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 분석이 적절하지 않는 면도 있다. 왜냐하면 초급대 이상 졸업자들은 약 80%가 임금·봉급근로자임에 반하여 중학교 졸업자들은 약 50%가,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자나 불취학자들은 32.6%와 16.7% 만이 임금·봉급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 소득을 연관하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교육과 가구전체의 소득이나 부(wealth)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산업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수급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준경·김정호, 1992; 최강식, 2000). 우리 나라는 20세기에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각 산업 분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변할 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변하고 있다. 최강식(2000)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향후 노동력 공급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령화, 고학력화, 여성노동력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는 향후 경제가 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화에 비중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지식 정보 관련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고용 역시 이 산업부문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에서 고기술 산업 및 고학력 직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기술 직종이 증가하고 정보통신인력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1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표 9-11>에 제시하였다. 이 표를 보면, 1980년의 경우 불취학자들은 대다수인 83.1%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7.6%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들은 농림수산업에 52.5%, 제조업에 18.2%,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14.2%가 종사하고 있다. 불취학자들에 비하면 제조업이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초급대 이상에서는 이런 추세가 변하여 농림수산업에는 2.8%, 제조업에 22.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15.1%, 그리고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는 42.5%가 종사하고 있다.

<표 9-11>에서 1990년의 경우, 불취학자들은 여전히 농림수산업에 78.6%가

〈표 9-11〉 교육수준별 산업분포, 1980~2000

(단위: %)

		불취학	초등	중	고등	초급대	대학교	대학원
1980	농림수산업	83.1	52.5	17.1		2.8		
	광업	0.3	1.0	0.6		0.3		
	제조업	3.7	18.2	31.4		22.0		
	전기가스수도	0.0	0.1	0.4		0.9		
	건설업	2.4	5.6	5.9		5.6		
	도소매 및 음식숙박	7.6	14.2	21.0		15.1		
	운수창고 및 통신	0.3	2.6	7.2		3.9		
	금융보험부동산	0.2	0.6	3.4		6.9		
	사회개인서비스	2.3	5.2	13.0		42.5		
1990	농림수산업	78.6	51.2	18.4	6.8	3.5	1.7	0.5
	광업	0.1	0.6	0.6	0.3	0.2	0.1	0.0
	제조업	6.3	16.8	33.7	34.8	25.7	24.1	15.9
	전기가스수도	0.0	0.0	0.0	0.5	0.8	0.9	0.7
	건설업	3.4	7.5	9.4	7.1	6.3	6.0	2.8
	도소매 및 음식숙박	8.0	14.9	21.1	23.7	19.6	16.7	7.3
	운수창고 및 통신	0.4	2.5	6.5	7.1	5.6	4.0	1.9
	금융보험부동산	0.5	1.4	2.5	6.8	8.6	11.3	9.7
	사회개인서비스	2.6	5.0	7.1	12.6	29.6	35.0	60.9
2000	농수림업	74.3	45.9	16.2	4.8	1.8	1.2	0.5
	어업	1.8	2.3	1.4	0.4	0.1	0.0	0.0
	광업	0.0	0.1	0.2	0.1	0.1	0.0	0.0
	제조업	5.0	13.4	23.5	26.9	20.5	17.8	11.1
	전기가스수도	0.0	0.1	0.1	0.4	0.7	0.9	0.6
	건설	2.2	6.4	9.6	8.3	7.0	6.4	3.0
	도소매	6.0	9.3	13.6	19.6	17.4	15.3	5.3
	숙박음식	4.0	8.6	12.6	9.0	5.1	3.1	0.8
	운수	0.5	2.6	6.8	6.5	3.9	3.2	1.1
	통신	0.0	0.1	0.4	1.1	2.1	2.2	1.7
	금융 및 보험	0.2	0.8	1.5	4.0	5.0	6.5	3.9
	부동산 및 임대업	0.8	1.6	2.0	2.0	1.6	1.8	0.8
	사업서비스업	0.9	1.7	1.9	3.0	7.2	8.5	12.1
	공공행정국방	1.2	1.5	1.4	3.2	5.5	6.8	7.1
	교육서비스업	0.2	0.8	1.2	1.9	9.9	16.3	33.5
	보건 및 사회복지	0.3	0.6	0.5	1.5	6.0	3.5	8.2
	오락문화운동관련	0.2	0.5	0.9	1.9	2.7	2.8	2.1
기타수리, 개인서비스	1.5	2.9	5.2	5.0	3.6	3.0	8.1	
가사서비스	0.6	0.8	0.7	0.3	0.1	0.2	0.1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0.1	0.0	

주: 1) 1980년 중은 중고등학교를, 그리고 초급대는 초급대 이상임.

자료: 통계청(2002j).

종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제조업에 34.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23.7%,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12.6%가 종사하고 있다. 대학원 학력자들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져 15.9%를 이루고, 반대로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는 60.9%가 종사하고 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2000년에는 산업분류도 매우 다양해졌다.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서비스업에 초급대,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들의 진출이 두드러져 각각 9.9%, 16.3%, 그리고 3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서비스업도 각각 7.2%, 8.5%, 12.1%로 진출해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지식기반산업과 정보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학력자들이 이 분야에 많이 진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 3. 교육과 출산

인구학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로 교육과 출산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 출생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9-12>를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출생아수는 15세 이상 기혼여자가 낳은 아이의 수로서 생존아와 사망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당해 연도에 조사된 총출생아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있다. 우선 1980년의 경우, 학력에 따른 총출생아수와 비율을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불취학과 초등학교가 약 1,300만 명 정도로 각각 40%를 차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이 중·고등학교와 초급대 이상에서는 각각 18.9%와 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어머니의 출생아수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총출생아수를 15세 이상 기혼부인수로 나눈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불취학과 초등학교 학력이 5.05명과 3.66명으로 가장 높다.

<표 9-12>에서 1990년은 불취학과 초등학교 학력의 어머니의 총출생아수가 절대치에서도 감소하고 비율도 감소하였다. 비율은 각각 28.9%와 32.8%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균 출생아수에서는 불취학은 4.88명으로 감소하고 초등학교 학력은 3.71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표 9-12〉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출생아수, 1980~2000

(단위: 1,000명, %, 명)

	1980		1990		2000	
	총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총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총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불취학	12,830 (40.0)	5.05	10,077 (28.9)	4.88	7,481 (21.4)	4.40
초등학교	12,709 (39.5)	3.66	11,449 (32.8)	3.71	9,366 (26.8)	2.54
중·고등학교	6,089 (18.9)	2.29				
중학교			5,901 (16.9)	2.43	5,014 (14.4)	2.42
고등학교			6,072 (17.4)	1.82	9,532 (27.3)	1.88
초급대 이상	540 (1.7)	1.98				
초급대			264 (0.8)	1.48	1,303 (3.7)	1.56
대학교			1,071 (3.1)	1.66	2,034 (5.8)	1.65
대학원			46 (0.1)	1.58	192 (0.5)	1.50
합계	32,168(100.0)	3.59	34,880(100.0)	2.96	34,921(100.0)	2.54

주: 1) 출생아는 15세 이상의 기혼여자가 낳은 아이의 수로서 생존아와 사망아를 포함함.

2) 평균출생아수는 총출생아수를 15세 이상 기혼 부인수로 나누었음.

3) 학력미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2002j).

학력의 어머니의 출생아수가 증가하였다. 이 두 집단은 각각 16.9%와 17.4%를 차지하여 합하면 34.3%를 이룬다. 그리고 2000년을 보면, 불취학과 초등학교 학력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출생아의 구성비율의 감소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증가와 함께 초급대(3.7%), 대학교(5.8%), 그리고 대학원(0.5%)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요약하면 1980년까지도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 학력의 어머니의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고등학교 학력의 어머니의 출생아수는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초급대 이상 학력의 어머니의 출생아수가 비율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 기간동안 전체적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특히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출생아수의 분포를 〈표 9-13〉으로 정리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대구, 경북지방의 출생성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조남훈·서문희, 1994; 김두섭, 1997; 김한곤, 1997), 이와 유사하게 교

육수준과 가족 구성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표에서 1980년 전국을 보면, 어머니가 학교를 안 다닌 경우 자녀가 4명 이상이 74%를 차지하며 경북지방의 경우도 유사하게 75.2%를 차지하고 있다. 두 집단에서 초등학교 학력의 경우도 유사하여 출생자녀 0명은 약 4%, 1명은 9%, 2명은 16%, 3명은 20%, 그리고 4명 이상은 50%이다. 두 집단에서 중·고등학교 학력의 경우도 유사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력의 경우는 출생자녀수 0명의 비율이 증가하여 약 12%, 1명은 20%, 2명은 29%, 3명은 21%, 그리고 4명 이상은 18% 정도이다. 이런 추세는 지속되며 초급대 이상 학력의 경우도 두 집단에서 유사하다.

또한 2000년 전국을 보면 어머니가 학교를 안 다닌 경우 자녀가 4명 이상이 67.4%로 1980년에 비해서 감소하였고, 경북지방의 경우도 70.6%로 줄어들었다. 초등학교 학력의 경우는 자녀를 2~3명 가진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대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의 구성이 50%에서 44.4%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표 9-13〉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출생아수, 1980, 2000

(단위: %)

	전국 기혼여성 출생자녀					경북 기혼여성 출생자녀				
	0명	1명	2명	3명	4명+	0명	1명	2명	3명	4명+
1980										
불취학	2.5	5.2	7.0	11.0	74.0	2.5	4.9	6.7	10.7	75.2
초등학교	4.3	9.2	16.2	20.3	50.0	4.41	9.1	16.0	20.9	50.0
중·고등학교	11.4	20.0	29.1	21.2	18.3	12.5	20.6	28.6	20.8	17.6
초급대 이상	12.5	21.2	37.0	19.8	9.5	13.9	23.5	37.0	17.6	8.0
2000										
불취학	2.9	6.3	9.5	13.8	67.4	2.6	5.0	7.7	13.3	70.6
초등학교	2.0	6.8	21.7	25.1	44.4	1.7	5.0	18.3	25.3	49.6
중학교	2.9	11.4	47.2	24.6	13.8	2.7	9.6	46.7	26.3	14.6
고등학교	6.9	19.9	56.6	13.0	3.6	6.6	19.9	58.3	12.4	2.8
초급대	13.5	28.3	48.9	7.7	1.6	13.9	32.2	47.1	6.0	0.7
대학교	11.2	25.9	52.1	8.9	1.7	10.9	26.7	53.0	7.8	1.2
대학원	15.6	30.0	46.1	7.3	1.0	12.5	34.5	43.7	8.9	0.3

자료: 통계청(2002j).

경북지방의 경우는 4명 이상 자녀의 비율이 49.6%로 1980년과 별 차이가 없다. 초급대 이상은 자료를 시계열로 직접 비교할 수가 없지만 전국과 경북을 비교하면 비슷한 추세로 한 명 또는 두 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전국과 경북의 출생자녀수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이 4명 이상의 자녀비율이 시간적으로도 줄어들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교육과 인구이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3장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교육정도별 거주지 이동의 한 사례만 분석하였다. <표 9-14>는 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지난 5년간 시·군·구 경계를 넘어 이동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교육수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1990~1995년과 1995~2000년의 기간 동안 각각 967만 명과 936만 명이 이동하였는데 고등학교 학력자의 이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는 같은 기간동안 그 비율이 15.7%에서 14.7%로 별 차이가 없으며, 중학교는 약간 감소하였고 초급대 졸업자가 5.4%에서 11.7%로 구성비율과 실제 이동자수 모두에서 약 두 배로 증가하였다.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고등학교 다음으로 많은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기간동안 큰 변화는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동자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으며 초급대 졸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9-14> 교육수준별 인구이동(6세 이상), 1995, 2000

(단위: 1,000명, %)

	1995		2000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초등	1,563	15.7	1,371	14.7
중	1,250	12.5	851	9.1
고등	3,987	40.0	3,400	36.3
초급대	536	5.4	1,090	11.7
대학교	2,047	20.5	2,022	21.6
대학원	218	2.2	285	3.0
불취학	366	3.7	336	3.6
합계	9,668	100.0	9,356	100.0

자료: 통계청(2002).

## IV. 정책적 함의

### 1. 정부 교육예산의 증가

우리 나라에서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교육받은 인구의 증가는 우리의 교육열과 더불어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요약하면 정부투자가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 9-15>에 나타나 있듯이 1980년 정부예산은 5.8조원이었고 1990년에는 약 4배 증가하여 22.7조원, 그리고 2000년에는 약 16배 증가하여 약 94조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예산 중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교육부 예산도 증가하였다. 즉 1980년에는 정부예산 중 18.7%인 1.4조원이 교육부 예산으로 배정되었고 1990년에는 22.3%인 5조원이, 그리고 2000년에는 23.3%인 19조원이 투자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의 특징은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부에 투자하는 비중이 199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망과 이를 예산에 반영시킨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00년에는 교육부 예산이 절대액수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9-15>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1980~2000

(단위: 10억원, %)

연도	정부예산(A)	교육부예산(B)	B/A(%)
1980	5,804	1,099	18.9
1985	12,275	2,492	20.3
1990	22,689	5,062	22.3
1995	54,845	12,496	22.8
2000	93,937	19,172	20.4

자료: 통계청 (2001e, 2002j).

## 2. 한국인의 전통적 교육관

우리 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에는 국가의 공급과 국민의 수요가 적절하게 작용하였다.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나라가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어쩌면 다른 나라들도 교육에 관한 관심은 이스라엘이나 우리 나라처럼 높지만 그 운영제도가 다르거나 또는 표현방식이 달라서 별로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까지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학교공부 외에 3~4 가지 과외를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교육열이라고 표현해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열은 한마디로 적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열의 본질적 속성은 부모의 성취욕구와 자녀사랑의 결합이다. 옛날에는 자녀가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고 부모를 모시며 효도를 다하였다. 요즘에도 이런 풍토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으나 특이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출세를 위하여 매우 투쟁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대의 이런 부모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사임당, 맹자의 어머니, 한석봉의 어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더불어 돈벌이에 목숨을 건 복부인의 모습도 함께 떠올린다는 것이다. 돈벌이에 억척이듯이 자녀의 출세도 마찬가지로 억척스럽게 해 낸다는 것이다.

인구학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대개 자녀들이 많았고 그것이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 그리고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 먹을 것은 가지고 난다'는 말을 믿고 많이 낳았고, 또 피임방법도 확실하지 않아서 원치 않는 아이도 태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형, 누나, 오빠, 동생들 틈바구니에서 인간성도 형성되며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도 대충 잘 자랐다. 그래서 첫 딸은 살림 밑천으로 어머니를 도와 집안 일을 많이 꾸려 나갔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 중에서 한 두 명만 출세해도 만족하며, 아니 아이들이 모두 평범한 사람들로 성장해도 대체로 만족하며 세상을 살았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달라졌다. 부모들의 생활이 과거처럼 힘들지는 않게 되었고 또 자녀수도 한 명 또는 두 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좋아진 생활 수준과 줄어든 자녀수는 자연스럽게 치열한 자녀경쟁이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한 두 명이 출세해도 되는 과거의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수의 자녀를 반드시 출세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양보다 질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처럼 많은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등을 모아 한 곳에 집중투자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환경의 요즈음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학교공부와 과외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취욕구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과 자녀를 위한 것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극성맞다고 까지 표현되는 부모의 활동은 자기 자신의 체면, 부모 도리의 다함, 노후에 돌아올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감, 남들에 대한 자녀 사랑과 그를 통한 대리 만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이종각, 1995).

부모가 이렇게 열성적인 이유는 학벌이 많은 것을 결정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 나라는 대학교를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그 사람의 일생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은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때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자식에게 쏟아 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아이의 그 다음 인생이 훨씬 풍족해 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구조가 학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출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가 부모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 3. 사회변화와 교육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라고도 하고 지식기반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한다. 이 책의 제17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이지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된 정보관련 문항은 컴퓨터 사용, 인터넷 사용, 그리고 휴대폰 소유 여부인데, 자료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정보의 불평등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 그리고 이동전화 소유 유무를 통하여 알아본 바 교육수준에 따라서 정보이용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향후 미래를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 정보사회라고 예견한다. 정보사회의 사회구조는 분명 산업사회와 다를 것이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분배하는데

영향력을 가진 계층이 사회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로서도 이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세계 속의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더 클 것이다. 국가 전체로는 이런 향후 사회 변화에 따른 IT산업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의 전반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우리 나라는 향후 IT산업의 고급인력이 부족하다고 예견되는데, 산업사회에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교육이 기여하였듯이 정보사회에도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의 공급이 필요하다.

정보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투자가 국민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나라의 경우 학력 수준에 따라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그리고 정보기기 소유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학력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보화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미시적 수준에서 가계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알아보자. 우리 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교육에 대한 가계의 지출이 크다.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가계의 연간 교육비 지출은 <표 9-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도시 가구를 보면 연간 소비지출액이 1980년 215만원 중에서 교육비는 약 13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비지출의 증가는 절대액수의 증가와 더불어 연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즉 1985년에는 연간 소비지출액 380만원 중 연간교육비는 약 28만원으로 7.4%이던 것이, 1990년에는 각각 823만원과 66만원으로 8.1%, 그리고 1999년에는 1,775만원과 192만원으로 10.8%에 이르렀다.

농촌 가구의 경우도 이런 추세는 비슷하다. <표 9-16>를 보면, 1980년 연간 소비지출 214만원 중에서 교육비는 약 20만원으로 9.4%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1990년에는 각각 823만원과 86만원으로 10.5%를, 그리고 1999년에는 각각 1,712만원과 165만원으로 9.7%를 점유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는 1999년에 들어서 그 동안의 증가세가 약간 감소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교육적 열망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교육과 이런 교육이 국민에게 적절하게

〈표 9-16〉 가계의 교육비 지출비율, 1978~1999

(단위: %)

연도	도시 가구			농촌 가구		
	연간 소비지출(A)	연간 교육비(B)	B/A(%)	연간 소비지출(A)	연간 교육비(B)	B/A(%)
1978	1,343,280	78,720	5.9	1,320,508	105,358	8.0
1980	2,151,288	125,676	5.8	2,138,323	200,283	9.4
1985	3,804,300	279,960	7.4	4,690,854	555,338	11.8
1990	8,227,944	664,704	8.1	8,227,213	862,436	10.5
1995	15,190,680	1,484,004	9.8	14,781,890	1,553,337	10.5
1999	17,746,512	1,921,704	10.8	17,123,221	1,652,714	9.7

자료: 통계청 (2001e, 2002j).

분배되어 특히 저학력자들에게 제공되어 학력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V. 맺는 말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부모들은 자신의 체면과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대단한 교육열을 지니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현대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의 자녀관이 바뀌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도 변하였다. 과거에는 생활도 넉넉하지 못했고 대개 많은 수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대개 각 가정마다 한 두 명의 자녀를 두기 때문에 그 소수의 자녀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정성을 자녀 교육에 쏟아 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여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였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인구가 먼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대학생들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중·고등학교 인구는 대략 1980년대에 정점을 이루

고 대학생들은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고학력자의 증가 현상에도 불구하고 장차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IT산업의 경우는 향후 공급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 세계화를 보면 우리 나라는 해외에 나간 유학생은 많은 반면 우리나라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매우 적은 편으로, 인적교류에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어권과 중국,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나가서 공부하는 조기유학생들의 증가와 그에 따른 가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가진자들의 조기유학과 정보소유와 못 가진 자들의 소외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교육적 불평등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류층과 하류층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에 따른 임금을 보면 경제규모가 확장됨에 따라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임금의 절대값에 있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즉, 중졸자, 고졸자,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 성별격차를 보면 여성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에 비하여 남자들의 임금과 비교하여 더 적게 받고 있으나 격차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고학력 여성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따른 대우가 점점 실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과 출산을 보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출생아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평균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출생아수, 그리고 그 구성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자의 출생아수와 그 구성비율이 감소하였다.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1990년대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 감소하고 있으며, 초급대 졸업 이상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수준의 증가에는 정부예산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지난 1981년부터 1998년까지를 보면 교육부의 예산이 1.4조 원에서 18조원으로 늘어났다. 각 가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하였다. 즉 1978년부터 1999년까지 도시 가구에서

는 일년에 7.8만 원에서 192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농촌 가구에서도 10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 교육에서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과외비로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많은 가구가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이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 여 백

## 제10장 경제활동: 직업 및 산업

은 기 수

### I. 머리말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일과 여가로 구분될 수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의 대가로 살아간다.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일의 성격은 다르다. 현대사회에서도 일의 종류와 내용은 사회마다 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일의 성격과 상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의 일의 성격, 그리고 서비스업이 주가 되는 사회에서의 일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의 변천에 따라 산업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바야흐로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과학기술, 특히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일의 성격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하고 살지만, 사회의 변천에 따라 일의 성격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일생동안 하게 되는 일의 성격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여 다양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수요에 맞추어 공급되어야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일자리는 별로

없는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 실업자가 많은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전에는 만성 실업 현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산업부문에 따라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일자리의 수요가 늘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후반에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의 각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우리 주위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후 몇 년 지난 오늘날에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하지만, 일의 성격과 수요·공급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회마다 크게 변하고, 일의 종류 및 필요한 일자리를 점유하는 사람들의 특성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가령 1900년대의 100년으로 한정 시켜도 우리 나라는 단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모한 정도가 아니다. 식민지 사회를 경험했고, 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맞았었으며, 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에 의한 경제구조를 경험했었고, 그 이후에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 근대화를 겪는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엄청난 변동을 겪었다.

지난 20세기 후반에는 그 이전 시기의 압축적 성장의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사회로 진입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회의 모습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일의 성격과 일자리의 모습도 양적,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 연구는 격변의 세기인 20세기, 그 중 20세기 후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인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는지, 직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직업과 산업의 모습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한국인의 경제활동의 내용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직업과 산업구조 및 그 변동을 밝힌다. 따라서 한국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직업구성을 성,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산업구조의 최근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시기로는 일단 20세기 후반의 경제활동과 직업 및 산업구조를 연구대상

으로 삼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1955년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 다른 경우에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활동과 직업 및 산업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II. 기존연구 검토

한국의 직업과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최근에 두드러진 업적이 나와 있다.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7)는 통계청이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의 특성에 관해 분석을 했다. 이들은 직업분류체계의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 1995년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한 직업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직업을 이용한 계층구조의 해명 등 한국사회의 직업과 경제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들은 1995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를 이용했지만, 그 이전 시기는 인구센서스 보고서 및 경제활동인구연보 등 통계청에서 발간한 2차 통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직업과 경제활동을 분석했다. 홍두승·김병조·조동기(1999)는 홍두승 외(1997)를 다듬어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세기 후반기 한국의 직업과 경제활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95년까지 홍두승 외(1997, 1999)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나와 있고, 이들이 이용한 자료가 통계청에서 발간한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이들의 연구성과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이 1955년 혹은 1960년부터 1995년까지 밝힌 한국의 직업과 경제활동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를 분석하여 2000년 현재까지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 Ⅲ. 직업구조의 변화: 1955~2000

#### 1. 경제활동과 직업구성의 추이

직업구조의 변화를 살피기에 앞서 한국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부터 살펴본다. 우선 1955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표 10-1> 및 <표 10-2>와 같다.

남자들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까지 기복을 보이는데 1955년부터 지금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1990년으로 68.3%였고, 그 다음은 1985년으로 72.3%, 그리고 2000년이 74.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연령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10대 후반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1.2%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도 50.9%로 매우 낮다. 또한 20대 초반 남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의 40.2%와 1970년의 50.3%를 제외하면 2000년의 20대 초반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제일 낮다. 남자 20대 후반의 2000년 경제활동참가율도 84.2%로 1990

〈표 10-1〉 남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55~2000

(단위: %)

연도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1955	85.9	61.7	85.9	97.1	99.2	99.4	99.5	99.4	99.4	99.2	83.6	57.8
1960	78.9	45.2	75.9	90.9	95.7	96.3	96.9	96.4	91.1	88.5	71.1	39.3
1966	81.0	52.8	81.1	93.6	95.7	95.8	95.6	95.0	92.2	83.9	63.6	30.1
1970	74.8	45.9	50.3	85.7	95.6	96.6	95.9	95.2	91.9	85.4	67.9	35.1
1975	80.7	46.3	84.3	96.1	98.5	98.6	98.0	96.8	93.7	85.6	68.3	34.4
1980	75.1	26.1	71.2	92.7	97.3	97.4	96.8	95.2	90.6	82.6	68.9	40.6
1985	72.3	14.5	63.3	90.8	96.4	96.5	94.9	93.3	88.1	77.3	44.2	
1990	68.3	8.4	40.2	82.1	93.7	94.5	93.5	91.4	87.1	77.5	61.3	36.1
1995	77.5	10.6	58.5	90.6	98.5	98.5	97.8	96.6	93.0	85.3	69.8	40.5
2000 <sup>1)</sup>	74.0	11.2	50.9	84.2	95.8	95.7	94.7	92.8	89.1	78.4	64.5	39.4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11.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실업자(주부, 학생제외).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2), KOSIS; 홍두승 외(1999).

년의 82.1%를 제외하고는 제일 낮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즉 2000년의 경우 65세 이상 남자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4%로 1995년의 40.5%보다 약간 더 낮게 나타난다.

〈표 10-1〉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고, 특히 20대 젊은 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지만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는 달리 여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1995년에 여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였다. 그러나 5년 후인 2000년의 여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로 10%의 증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표 10-2〉 참조).

여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특정 연령층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연령층에서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 전 연령층 가운데 1995년에 비해 2000년의 경우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연령층은 20대 전반의 연령층 뿐이다.

〈표 10-2〉 여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55~2000

(단위: %)

연도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1955	63.7	79.0	62.9	56.4	58.6	63.6	67.8	72.1	75.2	75.8	41.3	18.5
1960	28.0	25.4	30.7	26.6	29.0	32.9	34.8	35.2	32.8	29.3	16.8	9.2
1966	32.0	32.5	36.3	29.4	32.6	37.4	40.9	41.0	36.0	30.0	17.9	6.3
1970	38.4	40.3	43.9	31.7	36.3	43.1	47.2	48.6	45.2	39.1	26.9	10.6
1975	46.7	47.6	56.5	35.6	42.1	51.2	57.8	59.8	57.1	50.9	33.6	12.0
1980	39.5	34.0	53.0	30.2	33.5	43.0	49.0	51.3	49.0	43.2	31.3	13.0
1985	41.9	21.1	55.1	35.9	43.6	52.9	58.2	59.2	52.4	47.2	19.2	
1990	32.6	16.7	51.4	29.7	28.0	35.3	40.4	43.6	42.9	38.8	29.1	11.3
1995	38.9	11.0	61.3	42.7	35.8	42.4	47.2	46.8	46.2	43.1	36.8	16.8
2000 <sup>1)</sup>	48.9	12.1	59.2	57.6	50.3	59.9	64.4	65.8	56.0	50.6	45.4	23.1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11.

자료: 〈표 10-1〉과 동일.

여자 10대 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도 1995년의 11%에 비해 12.1%로 약간 증가했고, 20대 전반의 연령층에서 1995년 61.3%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9.2%로 약간 감소했지만, 이후의 연령층에서는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다. 즉 20대 후반의 경우 42.7%에서 57.6%로 15%가 증가했고, 30대 여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30~34세 연령층에서는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거의 15% 상승했고, 35~39세 연령층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18%나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남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낮아진 반면, 여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성별 직업분포의 변화

남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간 낮아진 반면, 여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면서 직업구성에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up>1)</sup> <표 10-3>을 보면, 2000년까지 지속된 직업구조의 변화의 특성을 전문직과 관리직의 지속적인 증가 및 농림수산업의 대폭적인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0-3〉 직업구성의 변화, 1955~2000

(단위: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문직	1.6	2.4	2.8	3.2	3.3	4.5	5.8	7.4	10.5	16.3
관리직	1.2	1.3	0.9	1.0	0.8	1.1	1.5	2.1	4.3	4.6
사무직	2.4	2.6	4.3	5.9	6.7	9.5	11.5	15.4	14.5	14.3
판매직	4.5	8.3	10.7	10.2	10.5	12.1	15.5	14.0	15.8	12.7
서비스직	2.1	5.2	5.4	6.7	6.5	7.1	10.8	8.8	11.8	9.7
생산직	8.7	13.4	19.2	21.8	23.0	28.1	30.3	31.6	27.0	28.8
농·림·수산업	79.5	66.7	56.8	51.2	49.2	37.6	24.6	20.7	16.1	13.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1) 직업구성의 변화는 2000년 표준직업분류체계의 변화에도 일부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변하고 있는 직업구성의 본질은 <표 10-3>에 그대로 반영된다.

먼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1990년에 7.4%, 1995년에 10.5%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2000년에는 16.3%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직의 비율도 증가하여 1990년에 2.1%였던 구성 비율이 1995년에 4.3%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에도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000년의 직업 구성에서 전문직과 관리직을 합하면 21%로 전체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전문직 또는 관리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990년에 21%에서 1995년에 16%로 감소한 이후 2000년에 다시 13.6%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의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1995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직은 2000년에 12.7%로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직도 1995년에 11.8%까지 증가했던 비율이 2000년에는 9.7%로 다시 전 직업 가운데 10%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에는 1990년에 31.6%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1995년에 27%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었는데 2000년에 다시 28.8%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직업구조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표 10-4>에서 2000년 현재 남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남자 취업자의 36%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남자가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전문직이다. 남자 취업자의 16%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리직에도 남자 취업자의 7%가 종사하고 있다. 남자 취업자가 가장 낮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서비스직이다. 남자 취업자의 6%만이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들의 경우 2000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전문직 및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남자 취업자의 경우 2000년 현재 4명 중 한 명 이상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취업하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 1990년에

〈표 10-4〉 남자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1955~2000

(단위: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문직	2.3	2.8	3.3	3.8	4.1	5.2	5.9	7.0	9.9	16.7
관리직	1.9	1.5	1.2	1.4	1.3	1.6	2.3	3.0	6.3	6.9
사무직	3.8	3.5	5.6	7.6	8.5	10.0	12.4	15.3	13.7	13.0
판매직	5.3	7.8	10.1	10.5	11.1	12.3	13.6	13.6	14.8	10.4
서비스직	1.8	3.4	3.4	4.5	4.6	5.4	6.9	6.4	8.5	5.8
생산직	12.5	15.9	21.6	25.7	27.4	32.9	36.0	37.0	33.9	35.9
농·림·수산업	72.4	65.2	54.7	46.3	43.0	32.5	22.7	17.5	13.0	1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37%의 정점을 지난 후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의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2000년에 다시 약간 상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판매직, 사무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자들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남자들의 비율도 역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에서도 전문직과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들의 직업에서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3%에서 1995년에 11.8%, 그리고 2000년에는 15.7%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자들이 관리직에 진출한 경우는 매우 미약하지만 2000년에는 전체 여자 취업자의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들이 생산직에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자들은 여러 직종에 골고루 취업하고 있다. 생산직에 17.2%, 농림수산업에 17%, 판매직에 16.7%, 사무직에 16.4%, 서비스직에 16.1% 등 여자 취업자는 여러 직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남자 취업자의 직업구성과 여자 취업자의 직업구성이 질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여자들은 여러 직종에 골고루 취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들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10-5〉를 보면, 1985년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비율이 27.6%로 198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

〈표 10-5〉 여자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1955~2000

(단위: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문직	0.6	1.5	1.8	2.1	2.1	3.5	5.3	8.3	11.8	15.7
관리직	0.1	0.8	0.0	0.0	0.0	0.0	0.1	0.2	0.6	0.9
사무직	0.4	0.5	1.5	2.8	4.0	8.6	10.2	15.5	16.0	16.4
판매직	3.2	9.7	11.8	9.6	9.5	11.6	18.3	14.6	17.7	16.7
서비스직	2.4	9.7	9.5	10.8	9.3	9.9	17.0	13.3	17.8	16.1
생산직	3.1	7.2	14.0	14.7	16.2	19.9	21.3	21.0	14.2	17.2
농·림·수산업	90.2	70.5	61.4	59.8	58.8	46.4	27.6	27.0	21.5	17.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후 1995년에는 21.5%로 감소하고, 2000년에는 다시 17%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들도 감소추세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1995년의 14.2%에 비해 2000년의 경우 17.2%로 증가하였지만, 1985년에 여자들이 생산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1.3%로 정점에 도달한 후 1995년에 14.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비율이 17.2%로 약간 증가했지만, 19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여자들의 생산직 종사비율의 감소추세가 다시 뒤바뀌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사무, 판매, 서비스직에서는 비록 2000년의 여자 취업자 종사비율이 1995년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사무, 판매, 서비스직에서 여자들의 취업자 구성비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겪고도 여자들 가운데 사무,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비율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여자들이 이 분야의 직업을 여성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어떤 직업이 남성의 직업인지, 아니면 여성의 직업인지는 각 직종별로 종사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비를 구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표 10-6〉은 직종별로 종사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남자에 비해 여자들의 절대 취업자 수가 더 많은 직업군은 서비스직이다. 서비스직에는 남자 100명당 여자 169명이 취업하고 있다. 나머지 직업군에는

〈표 10-6〉 직종별 여성비의 변화, 1955~2000

(단위: 여성비<sup>1)</sup>)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66.6	40.8	46.8	54.3	64.7	57.7	63.8	50.7	54.9	60.8
전문직	18.0	21.6	25.5	29.6	33.8	38.6	54.7	60.4	65.7	57.1
관리직	2.6	23.0	2.0	3.6	3.9	1.5	3.8	3.7	5.3	8.1
사무직	6.6	11.8	12.3	20.4	30.4	49.8	52.7	51.6	64.0	76.6
판매직	39.8	50.7	54.5	50.2	56.4	54.4	86.2	54.7	65.7	97.8
서비스직	84.8	116.4	128.8	131.5	132.8	105.1	157.5	105.5	115.1	169.3
생산직	16.6	18.4	30.2	31.5	38.8	35.0	37.9	29.0	23.0	29.2
농·림·수산업	83.1	43.9	52.5	70.8	89.6	82.2	77.6	78.7	92.3	90.5

주: 1) 여성비는 남자 100명당 여자의 수로 산출됨.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여자보다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취업하고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취업하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취업자 수의 차이가 가장 적은 직업군은 판매직과 농림수산업이다. 판매직의 경우 남자 100명당 여자 98명이 취업하고 있어 사실상 남자와 여자의 취업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 농림수산업 부문에서도 남자 100명당 여자 91명이 취업하고 있어 남자와 여자의 취업자 수가 비슷한 부문에 속한다.

이외에 사무직에도 남자 100명당 여자 77명이 취업하고 있어 비교적 여자들의 취업비율이 높은 직업군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 전문직의 경우에도 남자 2명당 여자 1명의 꼴로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에는 역시 남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남자 생산직 100명당 여자 생산직은 29명에 불과하다.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생산직에 종사하는 구성비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성비를 보아도 생산직은 남성의 직종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취업자 비율에서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직업군은 관리직이다. 〈표 10-6〉에서 2000년 현재 관리직에는 남자 100명당 여자는 8명에 불과하다. 여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도 과거와는 달리 남성들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직업군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관리직에 진출하고 있는 여자의 수는 소수임이 드러난다.

시계열적으로 직업군별 남녀 취업비를 살펴보면 몇 가지 사항이 눈에 띈다. 첫째는 농림수산업에서 여자들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비록 1995년의 92.3에 비해 2000년에 90.5로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농림수산업에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젊은층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에는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 있다. 농촌에 남은 노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농촌에서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전에는 농촌의 가정에 머물러 있었을 여자들도 지금은 일할 수밖에 없고, 이는 농림수산업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제 일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까지의 변화 추세 중 가장 일관성 있게 여자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군은 사무직과 판매직이다. 여자들은 사무직과 판매직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몇 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취업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와 감소의 진동을 거듭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취업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과 관리직에도 여자들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성비가 변하고 있다. 비록 전문직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전문직이나 관리직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남성들의 직업이었던 전문직이나 관리직은 더 이상 남성만의 직업이 아니고, 여성들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이 이 분야에서 넘어야 할 벽은 여전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 3. 연령별 직업분포의 변화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전체 인구가 조금씩 나이 먹은 인구구조로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첫 직장으로 이행하는 시기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첫 직장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이는 결국 각 직업군의 연령구조가 나이 든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의 직업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먼저, <표 10-7>을 통해 직업군별로 남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2000년 자료에서도 직업군별로 중위연령(median)을 구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각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들의 연령도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있다. 즉 1995년까지 취업하고 있는 남자들의 중위연령은 37세로 30대였지만 2000년에는 중위연령이 40세로 증가하였다. 불과 5년 사이에 중위연령이 크게 상승하여 남자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가장 고령화된 직업군은 역시 농림수산업이다. 지난 1995년까지 50세에 불과했던 중위연령이 2000년에는 57세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남자들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림직업군 다음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직업군은 관리직이다. <표 10-7>에서 2000년 현재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들의 평균연령은 43세이다. 그러나 2000년까지 평균연령의 변화추세를 보면 관리직 남자들의 평균연령은 별 다른 변화가 없다. 남자 관리직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1966년이래 42세부터 44세까지의 아주 좁은 연령대에서 진동하고 있다.

〈표 10-7〉 남자의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1955~2000

(단위: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35	-	34	34	34	35	36	37	37	40
전문직	32	-	35	35	36	36	36	36	36	37
관리직	31	-	42	42	42	42	44	43	43	43
사무직	27	-	36	34	34	33	34	35	35	35
판매직	37	-	37	36	36	36	38	42	42	39
서비스직	30	-	30	31	33	35	37	39	39	38
생산직	36	-	27	31	31	31	33	34	34	39
농·림·수산업	35	-	35	33	37	42	46	50	50	57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마찬가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자들의 연령분포도 큰 변화가 없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자들의 평균연령은 2000년 현재 37세로 1995년에 비해 한 살 정도 증가하였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자들의 평균연령은 1966년과 1970년에 35세였던 평균연령이 1975년에 36세로 증가했고, 이 평균연령은 1995년까지 동일하게 지속되었다. 그러다 2000년에 37세로 한 살 정도 증가한 것이다.

남자들의 직업군 가운데 농림수산업을 제외하고 고령화현상이 두드러지는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남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의 남자가 취업하고 있는 생산직은 1995년까지 34세에 머물렀던 평균연령이 2000년에 39세로 경층 뛰고 있다. 불과 5년 사이에 평균연령이 5세나 뛰었다면 매우 큰 고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남자의 평균연령이 5년 사이에 7살이나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들의 평균연령은 오히려 조금 낮아졌다. 판매직의 경우 1995년 42세까지 증가하던 평균연령이 2000년에는 39세로 3살이나 낮아졌다. 서비스직에는 1990년과 1995년에 39세까지 증가하던 연령구조가 2000년에는 38세로 한 풀 꺾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자들의 평균연령은 수십 년 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평균연령은 40세이다(〈표 10-8〉 참조). 남자들과

〈표 10-8〉 여자의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1955~2000

(단위: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33	-	33	33	33	34	36	35	37	39
전문직	23	-	26	26	26	27	27	27	28	29
관리직	30	-	39	35	42	42	42	39	35	41
사무직	22	-	23	22	22	22	22	23	24	27
판매직	37	-	39	38	37	37	38	36	36	39
서비스직	21	-	22	22	24	32	37	38	40	41
생산직	28	-	24	22	20	21	30	29	38	42
농·림·수산업	37	-	36	37	39	43	47	51	55	58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마찬가지로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직업군은 여자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업이다. 이 직업군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평균연령은 57세이다. 지난 1995년까지 평균 50세까지 상승했던 여자들의 평균연령이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에 57세로 급상승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가 얼마나 고령화하고 있는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들의 평균연령을 통해서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여자들의 평균연령이 두 번째로 높은 직종은 생산직이다. <표 10-8>에서 2000년 현재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들의 평균연령은 42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의 고령화는 1995년에 중위연령 38세에 비해서 2000년 현재 42세로 중위연령이 네 살이나 증가하여 생산직 여자의 고령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생산직 고령화현상은 1966년 이래의 추세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66년부터 1980년까지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0대 초반이었다. 그러나 1985년에 30세까지 증가했다가 1990년에 28세로 약간 낮아졌던 생산직 여자의 평균연령은 1995년에 38세로 급격히 뛰어오르고, 2000년에 다시 42세로 크게 뛰어 오른 것이다.

생산직 여자의 평균연령의 증가는 우리 나라 산업구조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를 시작한 후 값싼 여성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젊은 여자들이 생산직에 많이 취업했었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여자들이 필요한 제조업이 쇠퇴하고 그 결과 더 이상 젊은 여자들이 생산직에서 많이 일하지 않고, 대신 나이든 여자들이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직 다음으로 여자의 평균연령이 높은 직업군은 관리직과 서비스직이다. 이 두 직업군의 여자의 평균연령은 2000년 현재 41세이다. 관리직의 특성상 여자들의 평균연령도 높을 수밖에 없다. 즉 1975년부터 1985년까지 관리직 여자의 평균연령이 42세로 정점을 이루다 1990년에는 39세, 1995년에는 35세로 감소하였는데, 2000년에는 다시 41세로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직 여자들의 평균연령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66년에 22세였던 평균연령이 1980년에 32세로 크게 높아진다. 그 뒤 1985년에는 37세, 1990년에는 38세로 증가하고, 1995년에는 평균연령이 40대에 진입하게 된다.

그 결과 2000년에 41세까지 증가한 것이다.

전문직, 판매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평균연령은 큰 변화가 없다. 먼저 전문직의 경우 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6세부터 29세까지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 28세로 1995년에 비해 한 살 정도 평균연령이 높아졌다.

판매직의 경우 1966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연령이 36세부터 39세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지난 1990년과 1995년에 36세까지 내려갔던 여자들의 평균연령이 2000년에 다시 39세로 증가한 것인데 이 평균연령은 1966년의 여자들의 평균연령과 동일하다.

그에 반해 사무직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1995년까지 22세부터 24세까지 증가하던 평균연령이 2000년에는 27세로 평균 세 살이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5년까지는 큰 증가를 보이지 않던 사무직 여자의 평균연령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0-7〉과 〈표 10-8〉에 나타난 2000년도 남녀의 직종별 평균연령의 차이를 구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남자의 평균연령이 여자의 평균연령보다 한 살 더 많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심하다. 전문직의 경우 남자의 평균연령이 여자의 평균연령보다 무려 8살이나 더 높다. 또 사무직에서도 남자들의 평균연령이 여자의 평균연령보다 역시 8살이나 더 높다. 그러나 나머지 직종에서는 남녀의 평균연령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관리직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두 살이 더 많다.

판매직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평균연령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서비스직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평균연령보다 세 살 더 많고, 생산직에서도 여자들의 평균연령이 남자들보다 세 살 더 많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평균연령도 남자들보다 한 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비교적 직업위세가 높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은 남자들의 평균연령이 높고, 직업위세가 비교적 낮은 서비스직, 생산직, 농림수산업직에는 여자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 4. 교육수준별 직업구성의 변화

한국사회의 교육수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시 취업자의 고학력화로 이어지고 있다. <표 10-9>는 전체 취업자의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의 교육수준의 변화는 1990년에 들어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에 대학교육정책의 개편이 있었고, 대학교육의 문호가 대폭 개방된 이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 1990년대 취업자의 교육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자 가운데 2000년 현재 초급대(전문대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31%를 넘고 있다. 취업자 10명 중 3명은 초급대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표 10-9>에서 보는 것처럼 1995년에는 취업자 10명 중 2명이 초급대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고, 1990년에는 취업자의 18.8%가 초급대 이상의 학력소지자였다. 즉 1990년과 1995년의 고학력자 비율은 비슷하지만,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고학력자의 구성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취업자 가운데 초급대 이상의 고학력자의 구성비가 크게 늘면서 저학력자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학교에 진학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0년 현재 4%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12%, 중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도 12%에 그치고 있

〈표 10-9〉 취업자의 교육수준 변화추세, 1960~2000

(단위: %)

교육수준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불취학	44.7	32.8	23.8	19.1	14.8		6.4	4.6	4.0
초등학교	39.5	42.7	43.6	43.0	34.3	37.7	18.5	15.1	12.1
중학교	7.3	20.1	26.4	31.4	43.1	21.1	18.2	14.2	12.1
고등학교	6.2					30.9	38.1	41.5	40.1
초급대학							4.7	5.1	10.9
대학 이상	2.4	4.4	6.1	6.5	7.9	10.3	14.1	19.5	2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다.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고학력화는 모든 직종에 걸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각 직업별로 종사자의 학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10-10>은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교육수준은 대단히 높다.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000년 현재 57%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19%는 초급대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초급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전문관리직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이미 1990년대에 관찰되었던 비율이다. 그러다 1995년에 초급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관리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 다시 65%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비율도 22%에 달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전문관리직에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사무·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다음 <표 10-11>은 사무·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도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반면에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1990, 1995, 2000년에 걸쳐 비슷하게 약 49~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도 초급대와 대학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0년에 초급대와 대학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24%였고, 1995년에는 27%로 증가하며, 2000년에는 33%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사무·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소한 초급대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무·판매·서비스직도 고학력자 중심의 취업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표 10-10〉 전문·관리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2000

(단위: %)

교육수준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불취학	7.3	1.7	1.3	0.9	0.6		0.2	0.1	0.1
초등학교	19.0	6.8	7.4	5.7	2.4	4.3	1.3	0.9	1.0
중학교	12.3		39.3	34.1	31.3	5.3	3.0	2.3	2.1
고등학교	35.8	45.0				28.8	20.4	24.4	21.7
초급대학			52.0	59.2	65.7	61.6	11.9	10.5	18.5
대학 이상	25.7	46.5					63.2	61.9	5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표 10-11〉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2000

(단위: %)

교육수준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불취학	24.8	15.9	9.0	7.2	4.9		1.8	1.4	1.1
초등학교	41.7	38.1	35.0	31.1	22.8	24.1	10.4	9.1	6.5
중학교	12.9		43.5	49.0	60.7	19.0	14.5	12.7	10.3
고등학교	15.0	36.2				43.8	49.0	50.0	49.0
초급대학			12.5	12.8	11.6		6.5	6.0	13.7
대학 이상	5.6	9.8				13.0	17.9	20.9	19.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표 10-12〉 생산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2000

(단위: %)

교육수준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불취학	26.2	17.3	9.0	5.9	3.8		2.1	1.3	1.9
초등학교	53.9	50.6	48.1	44.9	34.6	32.4	16.1	13.6	12.8
중학교	11.6		39.9	46.3	59.3	33.6	28.9	22.4	19.9
고등학교	6.9	30.2				32.0	47.3	54.3	53.8
초급대학			3.0	2.8	2.2		2.8	3.4	6.4
대학 이상	1.1	1.8				2.1	2.9	4.9	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은 전문관리직이나 사무·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보다 낮다. <표 10-12>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생산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력은 고등학교 학력이다. 그리고 1985년에는 중학교 학력자와 고등학교 학력자가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비슷했다. 이후에는 점차 고등학교 학력자는 증가하고, 반면에 중학교 학력자가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중학교 학력소지자는 20%인 반면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54%로 대폭 늘어났다. 생산직에서 중학교 학력과 고등학교 학력을 합한 비율이 1985년에는 65.6%였지만, 2000년에는 73%로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직에서도 고학력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85년까지만 해도 초급대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0년에는 초급대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거의 6%로 증가하고, 1995년에는 8%로 증가하더니 2000년에는 다시 12%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직종의 고학력화 현상은 생산직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사실상 고학력이 별로 필요가 없는 생산직에서도 종사자의 1/2은 고등학교 학력소지자이고, 또 12%는 초급대 이상의 학력소지자라는 점에서 한국의 생산직은 매우 고학력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종사상의 지위구성의 변화

이 소절에서는 한국 직업의 특성을 종사상의 지위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한국인의 직업구조를 종사상의 지위의 측면에서 규정하면 임금·봉급·근로자의 증가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를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0-13>을 보자.

<표 10-13>을 보면 임금·봉급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980년까지만 해도 전체 취업자의 43%만이 임금·봉급근로자였다. 그러나 1985년에 임금·봉급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54%를 차지하여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90년에는

〈표 10-13〉 종사상의 지위 구성비의 변화, 1960~2000

(단위: %)

종사상의 지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고용주			1.8	2.8	4.0		5.4	7.3	6.8
자영업주	47.5	40.5	33.0	28.0	31.4	31.3	24.2	22.1	22.5
가족종사자	30.9	27.3	26.2	28.5	21.1	14.6	10.6	10.7	9.1
임금·봉급 근로자	21.6	32.2	39.0	40.7	43.4	54.1	59.7	59.9	6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60%의 취업자가 임금·봉급근로자였고, 1995년에도 60%, 그리고 2000년에는 62%의 취업자가 임금·봉급근로자이다.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는 1980년까지만 해도 2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연보(1985년의 경우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서 작성한 결과를 보면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감소한다. 이 비율이 1990년에는 11%로 다시 감소하고, 이후에는 2000년에 9%로 다시 감소한다.

자영업주의 비율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 〈표 10-13〉에서 1980년과 1985년에 31%를 점하던 자영업주의 비율이 1990년에는 24%로 크게 감소한다. 이후에 1995년에 다시 22%로 감소하지만 2000년에는 22.5%로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고용인을 둔 고용주의 비율은 1980년에 4%에 머물렀다. 이후 1990년에는 5.4%로 약간 증가하고, 1995년에 다시 7.3%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6.8%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의 지위 변화로 본 직업구성의 특성은 임금·봉급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꾸준한 감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비율과 고용주의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하면서 진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의 지위의 측면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모든 직업군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인가? 〈표 10-14〉는 각 직업별

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금·봉급근로자가 2000년 현재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61.6%이다. 직업군 가운데는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이상이고,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에서는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전문직을 보자. 전문직은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직업군의 하나이다. 전문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이래 84~86%를 차지하다 2000년에 가장 낮은 비율인 83.1%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시계열적으로도 이 비율의 변화가 크지 않다.

반면에 관리직은 전문직에 비해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의 변화가 크다. <표 10-14>에서 1975년에 39%, 1980년에 37%를 차지하였던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이 1985년에는 20%로 감소하고, 1990년에는 13%로 더 크게 감소한다. 이처럼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이 급감하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나 1995년에 관리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증가한다. 이는 1990년의 13%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불과 5년 사이에

〈표 10-14〉 직업별 임금·봉급근로자 비율의 변화, 1960~2000

(단위: %)

직업군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21.6	32.2	39.0	40.7	43.4	54.1	59.7	59.9	61.6
전문직	85.7	86.2	-	84.6	85.6	85.8	86.1	85.8	83.1
관리직	23.1	59.4	-	38.8	37.2	20.2	13.4	39.7	51.0
사무직	97.8	96.7	-	97.5	97.2	97.9	98.5	95.4	90.9
판매직	8.6	13.5	-	20.7	17.7	21.3	35.2	43.8	39.5
서비스직	86.5	78.9	-	66.8	58.3	56.0	55.3	54.5	50.4
생산직	57.3	74.1	-	96.2	78.6	85.6	86.2	79.4	77.2
농·림·수산업	6.6	9.2	-	8.8	3.1	10.8	3.3	3.6	4.1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홍두승 외(1999).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처럼 큰 것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의심스럽지만, 현재로서는 이 변화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말하기 힘들다.

관리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51%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1985년과 1990년에 관리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했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관리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무직의 대부분은 임금·봉급근로자이다. <표 10-14>를 보면, 1960년부터 1995년까지 사무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를 넘는다. 그리고 1990년에는 이 비율이 98.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사무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무직, 전문직에 이어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생산직의 77%의 종사자들이 2000년 현재 임금·봉급근로자이다. 그러나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직도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직업군으로 나타난다. 즉 1960년에 57%의 종사자만이 임금·봉급근로자였는데, 1966년에는 74%로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1975년에는 생산직의 96%가 임금·봉급근로자로 사무직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1980년에 생산직의 79% 수준으로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1985년과 1990년에 86%로 다시 증가하다가 1990년 이후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다시 돌아섰다. 즉 1990년에 생산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9%로 다시 감소하고, 2000년에는 77%로 더 감소하고 있다.

판매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판매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0-14>에서 1960년에 판매직에서 임금·봉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5년에는 21%를 차지하고, 1990년에는 이 비율이 35%에 달하고 있다. 임금·봉급근로자가 판매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

는 최고 44%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에는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여 판매직의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직은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직업군이다. 즉 1960년에 87%의 종사자가 임금·봉급근로자였는데, 1966년에는 79%로 감소하고, 1975년에는 다시 67%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에 58%로 감소한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은 이후에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985년에 56%로 감소하고, 2000년에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절반만이 임금·봉급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 Ⅵ.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0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동은 지난 수년 사이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통계청은 직업과 산업분류체계를 1995년 이후 다시 개정하였다. 이 절에서는 직업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2000년 1월에 이루어진 직업과 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른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의 분석은 2000년에 개정된 직업 및 산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95년의 분류도 2000년의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여 비교한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5.7%에서 8.9%로 3% 이상 증가하였다. 사무 종사자도 2.8%, 단순노무자도 2.1%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도 크기는 적지만 5년 사이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각각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한 직업군이다.

반면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노동자 직업군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 줄어들었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1%나 줄어들었다. 기술공 및 준전문가도 감소한 직업군에 속한다.

지난 1995년과 2000년 사이의 직업구조의 변화의 큰 특징은 고위직, 전문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과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표 10-15〉 직업구조의 변화, 1995~2000

(단위: %)

직업분류	1995	2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3	4.6
전문가	5.7	8.9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1.1	7.4
사무 종사자	11.5	14.3
서비스 종사자	8.6	9.7
판매 종사자	12.6	12.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6.0	1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7	10.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8	10.6
단순노무 종사자	5.5	7.6
합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있지만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기술공 및 준 전문가, 기능원 등의 인구는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10-16〉은 직업구조의 변화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00년을 기준으로 직업군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4.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기능공(13.6%), 사무직(13%), 농림어업(11.3%), 판매직(1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농림어업직(17.2%)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판매직(16.6%), 사무직(16.3%), 서비스직(16.1%)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들이 고위직에 6.9%나 분포하고 있는 반면, 여자들은 전체 여성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표 10-16〉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사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 증가하고 있다. 전문직도 2.6% 정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하층 직업군인 단순노무자도 2%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능직, 판매직, 농림어업직의 비율은 5년 사이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자들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전문직 종사비율이 3% 증가하고, 사무직에서도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서비스직에서도 1.3%의 증가량을

〈표 10-16〉 직업구조의 성별 변화, 1995~2000

(단위: %)

직업분류	남자		여자	
	1995	2000	1995	2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3	6.9	0.6	0.9
전문가	5.8	8.3	5.8	9.8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2.4	8.4	8.7	5.9
사무 종사자	9.7	13.1	14.8	16.3
서비스 종사자	5.2	5.8	14.8	16.1
판매 종사자	10.7	10.4	16.2	16.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2.9	11.3	21.7	17.2
기능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0	13.6	7.8	5.6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2	14.3	4.7	4.5
단순노무 종사자	5.8	7.9	4.9	7.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보여주고 단순노무직에서도 2%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에도 농림어업, 준전문직, 기능직 등에서는 5년 사이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직업을 택할 때 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업 선택에 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표 10-17〉 참조).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업군에서 남자가 절대적으로 우위인 직업군은 고위 관리직으로 성비가 1,283.8이다. 즉 여자 100명당 남자는 1,283명이 있다는 셈이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에도 여자 100명당 남자는 530명이 있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직업군이다. 반면에 판매직이나 농림업직에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직업군 가운데 여자가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직업군은 서비스직이다. 여자 100명당 남자는 59명에 불과하다. 서비스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성비의 불균형은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개선되고 있다. 고위관리직도 성비가 1,904에서 1,283으로 개선되고 있다. 뿐만

〈표 10-17〉 직업별 성비 변화, 1995~2000

직업분류	1995	2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04.4	1,283.8
전문가	176.9	139.4
기술공 및 준 전문가	259.3	231.7
사무 종사자	120.5	131.3
서비스 종사자	64.6	59.1
판매 종사자	120.9	102.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08.7	108.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99.5	397.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44.4	530.1
단순노무 종사자	215.7	183.7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아니라 전문직도 성비가 177에서 139로, 기술직도 259에서 232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성비가 120에서 131로 높아져 성비의 불균형이 더 심해진 직업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비의 불균형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남성의 직업 혹은 여성의 직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비가 극심한 직업이 존재한다. 〈표 10-18〉은 2000년 현재 남녀 한쪽 성으로 편중된 대표적인 직업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직업 중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은 간호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이다. 그 외에는 의료보조직, 교육보조직, 이미용업, 음식조리직, 방문판매직이 여성 직업이다. 단순노무직에서 가사보조직과 청소 및 세탁직도 여성의 직업이다.

반면에 고위 관리직은 거의 모두 남성의 직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다. 전문직이나 준전문직에서 공학 계열의 직업은 모두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남성의 전유물로 남아 있다. 서비스직 가운데는 경찰, 소방 및 보안업무직에 남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노무직에서는 경비직 등의 직업에서 여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모두 남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군에서 성비의 불균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2000년 현재에도 남성

〈표 10-18〉 성 편향 직업, 2000

직업군	여자	남자
의회의원,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기업 고위임원, 생산 및 운영부 서 관리자, 기타부서관리자
전문가	간호 및 조산 전문가,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관 전문가	건축, 토목, 전기, 전자, 기계,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의료진료 준전문가, 대학교육 조교 및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정규교육이외 교육준전문가	건축, 토목, 전기, 전자 및 기계 공학 종사자, 선박항공기조종사
사무종사자	안내 및 접수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 종사자, 음식조리 종사자, 음식서비스 관련종사자	경찰종사자, 소방 및 응급구조 종사자,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소매방문판매 및 이동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건물골조, 건물완성, 금속주형 및 용접, 운송기계 정비, 농공기계설치 및 정비, 전기전자장비 종사자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화학물가공장치, 동력생산, 자동차운전, 건설장비 운전
단순노무 종사자	가사 및 관련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건물관리경비, 광업 및 건설관련, 운수관련

주: 여성의 경우에는 성비 50 이하로 한정했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비 1,000 이상으로 한정했다.  
자료: 통계청(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의 직업, 여성의 직업이라 불리울 정도로 성비의 불균형이 심한 직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 직업군에서 성비의 불균형은 단기간에 바로잡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도 직업에 따라서는 남성의 직업, 여성의 직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극단적인 성비를 보이는 직업구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직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표 10-19〉는

〈표 10-19〉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0

(단위: %)

산업분류	1995	2000
농업 및 임업	15.6	13.1
어업	0.8	0.7
광업	0.2	0.1
제조업	23.4	20.7
전기, 가스, 수도사업	0.5	0.5
건설업	8.6	7.2
도매 및 소매업	16.9	15.7
숙박 및 음식점업	6.4	7.5
운수업	4.6	4.8
통신업	0.8	1.2
금융 및 보험업	3.6	3.7
부동산 및 임대업	1.5	1.7
사업서비스업	2.9	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	3.9
교육서비스업	5.3	6.0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1.7	2.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8	4.3
가사 서비스업	0.3	0.4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합계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000년에 개정된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1995년과 2000년 자료를 정리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1995년과 2000년 모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제조업으로 1995년에는 23.4%, 2000년에는 20.7%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16.9%, 15.7%가 종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 및 임업분야로 15.6%와 13.1%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7%나 감소하고 있고, 농업 및 임업은 2.5%,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은 1.2%가 감소하고 있다. 1, 2, 3차 산업의 대표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995년에 1.8%에서 4.3%로 2.5%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은 5년 사이에 1.4% 증가하고 있고, 교육서비스업도 0.7% 증가하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통신업 등에서도 0.4~0.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농림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1, 2, 3차 산업의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신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업이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구조에서도 성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표 10-20>은 산업구조의 성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1995년과 2000년에 걸쳐 남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제조업이고 그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이다. 농림업과 건설업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반면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다. 지난 1995년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농업 및 임업(21.6%)이고 제조업(19%), 도매 및 소매업(17.8%), 숙박 및 음식점업(11.3%)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17.8%)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이 농업 및 임업(17%), 제조업(16.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나 여자 모두 농업 및 임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서 여자들의 비율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녀를 막론하고 서비스업에서의 비율의 증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남자들은 5년 사이에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3%의 증가

(표 10-20) 산업구조의 성별변화, 1995~2000

(단위: %)

산업분류	남자		여자	
	1995	2000	1995	2000
농업 및 임업	12.4	10.7	21.6	17.1
어업	0.9	0.8	0.6	0.6
광업	0.3	0.2	0.1	0.0
제조업	25.9	23.3	19.0	16.5
전기, 가스, 수도사업	0.6	0.6	0.1	0.1
건설업	12.1	10.5	2.2	1.6
도매 및 소매업	16.4	14.5	17.8	17.8
숙박 및 음식점업	3.7	4.3	11.3	12.8
운수업	6.5	7.0	1.0	1.1
통신업	0.9	1.4	0.5	0.9
금융 및 보험업	2.8	2.9	5.1	5.0
부동산 및 임대업	1.8	2.2	0.9	1.0
사업서비스업	3.3	5.0	2.2	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9	5.0	1.9	2.0
교육서비스업	3.8	4.0	7.8	9.4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1.0	1.3	2.9	4.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1.9	1.2	1.6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3	4.3	2.8	4.3
가사 서비스업	0.0	0.0	0.9	1.0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1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서비스업에는 1.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여자들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의 산업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녀 모두 새로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비 분석을 통해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10-21>은 산업분야별 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의 성비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분야에서도 성비의 불균형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0-21>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산업별로 성비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업분야에서는 남성중심의 성비가 훨씬 더 높아져서 2000년에는 여자 100명당 남자 1,100명이 종사하고 있다. 건설업의 성비도 1,040에서 1,099로 더 높아졌다. 운수업의 경우는 성비가 1995년에 1,176에서 2000년에 1,032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의 하나는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995년에는 성비가 85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였지만 2000년에는 성비가 163.2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바뀐 점이

<표 10-21> 산업별 성비 변화, 1995~2000

(단위: %)

산업분류	1995	2000
농업 및 임업	104.9	103.8
어업	277.8	216.8
광업	811.4	1,095.0
제조업	250.1	234.1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98.5	786.4
건설업	1,040.4	1,098.5
도매 및 소매업	169.0	134.8
숙박 및 음식점업	60.3	55.1
운수업	1,175.7	1,032.4
통신업	345.7	258.8
금융 및 보험업	98.6	94.2
부동산 및 임대업	349.6	353.3
사업서비스업	274.9	265.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66.4	403.9
교육서비스업	89.7	71.0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63.1	52.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95.1	197.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85.2	163.2
가사 서비스업	10.2	9.5
국제 및 외국기관	321.2	281.4

자료: 통계청(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다. 남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비율에서도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는데, 종사하는 인구의 성비구조까지 바뀔 정도로 남자들이 이 산업분야에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많이 유입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가사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여성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 산업분포에서 남자들도 새로운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점이 관찰되고 있었지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새로운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이들 새로운 서비스업 분야는 여성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V. 맺는 말

한국사회는 지난 20세기 후반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적 성장을 이루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 혹은 지식정보사회로 숨가쁘게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성격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문의 하나가 직업 및 산업의 변화이다. 이미 196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표준직업분류체계가 2000년까지 다섯 차례나 개정을 거듭했고, 산업분류체계는 여덟 차례나 개정을 거듭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짧은 시간동안에 사회의 성격과 직업 및 산업의 구조가 변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1992년에 제4차 표준직업분류체계 개정이 이루어진 후 불과 8년 만인 2000년에 제5차 표준직업분류체계 개정이 이루어졌고, 산업분류체계는 1991, 1998, 2000년 등에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급격하고 본질적인 사회변동의 시기를 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장을 통해 한국의 직업구조가 성, 연령, 학력구조,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1995년과 2000년의 직업 및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직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직업구

조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성에 따라 남성의 직업, 여성의 직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직업군이 존재한다. 남자들은 생산직, 관리직에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자들은 반면에 서비스직에서 남자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종사하고 있다. 연령의 측면에서도 거의 모든 직업에서 종사자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업군별로 남자와 여자의 평균연령을 비교해보면 비교적 직업적 위세가 높은 직업군에는 남자들이 많이 몰려있고, 남자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반면, 직업적 위세가 낮은 직업군에는 여자들이 많이 몰려있고, 여자들의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모든 직업군에서 종사자들의 학력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가장 낮은 반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등 그 외의 모든 직업군에서는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사상의 지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을 직종별로 나누어보면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금·봉급근로자의 비율은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임금·봉급근로자들의 비율은 예상대로 가장 낮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의 직업 및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1995년과 2000년의 직업 및 산업구조를 살펴 본 결과, 직업과 산업 모두 전통적인 1, 2, 3차 산업의 비율이 줄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직업에서는 기술공, 기능직, 장치, 기계조립직 등 제조 및 생산직의 직업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산업부분에서도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퇴조가 뚜렷하고 대신 새로운 서비스업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직업과 산업구조는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하고도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2000년 인구센서스의 나타난 한국의 직업 및 산업구조는 불과 5년 후인 2005년이 되면 또 한번 질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상의 모든 사회는 산업의 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와 같은 사회 성격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일의 측면에서 직업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1992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직업들이 쇠퇴하고 있고,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새로운 직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직업이 더 나타날 것인지 아무도 정확히 예상을 할 수 없다. 직업구조의 변화는 사회 성격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질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통계관련자료

- 경제기획원. 1962.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한국통계월보』 9: 5-1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63. 『1960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64. 『1960년 인구국세조사평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68. 『1966 인구동태통계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69. 『1966 인구센서스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1. 『한국인의 생명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2. 『1970 총인구및주택조사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4. 『1970년 인구센서스평가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7. 『1975 총인구및주택조사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9. 『제2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2a. 『198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2b. 『1981 사망원인통계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2c. 『1978~79년 생명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3. 『1982 사망원인통계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4. 『제1차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87. 『1985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공보처. 1949. 『제1회 총인구조사결과속보』. 공보처 통계국.
- 내무부. 1955.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보고』. 전국편. 내무부 통계국.
- \_\_\_\_\_. 1958. “인구추계.” 『통계월보』 2: 25-37. 내무부 통계국.
- \_\_\_\_\_. 1959. 『1955 간이총인구조사보고』. 내무부 통계국.
- \_\_\_\_\_. 1961. “미래의 한국인구추계.” 『통계정보』 3(1): 66-89. 내무부 통계국.
- 보건복지부. 2000. 『1999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_\_\_\_\_. 2001. 『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조선총독부. 1926. 『1925 간이국세조사결과표』. 조선총독부.
- \_\_\_\_\_. 1934.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조선총독부.
- \_\_\_\_\_. 1936. 『1935 조선국세조사보고』. 조선총독부.
- \_\_\_\_\_. 1944. 『1940 조선국세조사보고』. 조선총독부.
- \_\_\_\_\_. 1945. 『1944 인구조사결과보고』. 조선총독부.
- 통계청. 1992a. 『한국통계발전사 I, II』. 통계청.
- \_\_\_\_\_. 1992b. 『1991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 1993. 『19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1995.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 \_\_\_\_\_. 199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_\_\_\_\_. 1997a. 『199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1997b. 『1995년 생명표』. 통계청.
- \_\_\_\_\_. 1997c. 『1971~1997년 생명표』. 인구분석과 내부자료. 통계청.
- \_\_\_\_\_. 1997d.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 제3회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움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1998. 『1997년 인구이동특별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1999a. 『인구추계』. 통계청.
- \_\_\_\_\_. 1999b. 『1971~97년 생명표』. 통계청.
- \_\_\_\_\_. 1999c. 『북한인구 추계결과』. 통계청.
- \_\_\_\_\_. 1999d.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_\_\_\_\_. 2000a. 『1999년 인구동태통계결과』. 인구분석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2000b. 『인구추계자료집 1, 2』. 통계청 인구분석과 업무자료. 통계청.
- \_\_\_\_\_. 2000c.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_\_\_\_\_. 2000d.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 통계청.
- \_\_\_\_\_. 2000e.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 통계청.
- \_\_\_\_\_. 2000f.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 통계청.
- \_\_\_\_\_. 2001a. 『2000 사회통계조사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2001b.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 통계청.
- \_\_\_\_\_. 2001c. 『장래인구추계: 2000~2050』. 통계청.
- \_\_\_\_\_. 2001d.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www.nso.go.kr. 서울: 통계청.
- \_\_\_\_\_. 2001e.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_\_\_\_\_. 2001f. 『1999년 생명표』. 통계청.
- \_\_\_\_\_. 2001g. 『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 \_\_\_\_\_. 2001h. 『2000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 \_\_\_\_\_. 2001i.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_\_\_\_\_. 2001j. 『2000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 \_\_\_\_\_. 2001k. 통계청 인구분석과 내부 통계자료. 통계청.
- \_\_\_\_\_. 2001l. 『2001년 정보화실태조사결과』. 통계청.
- \_\_\_\_\_. 2002a.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2002b. 『200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통계청.
- \_\_\_\_\_. 2002c. 『시도별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통계청. 2002d. 『2001년 출생, 사망통계결과』. 인구분석과 보도자료. 통계청.  
 ———. 2002e. 『2002 정보화실태조사결과』. 통계청.  
 ———. 2002f. 『2001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2002g.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 2002h. 『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 2002i. 『2001년 인구가동통계연보』. 통계청.  
 ———. 2002j.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CD. 통계청.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 관련문헌

- 강대기 · 홍동식. 1982. “대도시 주거환경과 근린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 123-140.  
 강명구. 1993. “자본주의적 공간 분화와 정치과정의 전개.” 『경제와 사회』 20: 230-252.  
 ———. 1997. “지방자치와 도시정치: 행위자 중심적 해석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1(3): 109-128.  
 ———. 1999. “1960년대 도시 발달의 유형과 특징: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 조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1963~1970』. 백산서당.  
 강인철. 1997. “한국 무종교인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52: 87-118. 문학과 지성사.  
 고갑석 · 김일현. 1964. “An Abridged Life Table for the Republic of Korea.” 『한국통계월보』 6(7-8): 12-2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고송무. 1990. 『소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고승재. 1973. 『한국 이민사 연구』. 장문사.  
 고응린 · 박홍래 · 이동우 · 최지훈. 1974. 『인구통계세미나』. 대한통계협회.  
 공보처. 1949. “제1회 총인구조사지방사무처리규칙.” 『통계월보』 2: 4-18. 공보처 통계국.  
 공세권 · 임종권 · 김미겸. 1983. 『한국의 사망력과 사망원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공선영. 2001.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변화정도, 대처전략 및 적응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1): 75-105.  
 교육부. 2000. 『국체교육백서』. 교육부.  
 구자순. 1992. “한국 사회노년학 연구의 이론적 발전.” 『한국노년학』 12(1): 97-116.  
 구해근 · 유의영. 1983. “한국인의 미국이민.”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국민일보. 2002. “미국 남성들 ‘결혼 급할 거 있나요’.” 2002년 8월 16일. 국민일보. [http://www.kinds.or.kr/genl\\_html](http://www.kinds.or.kr/genl_html).

- 국토개발연구원 편, 1996. 『국토 50년』, 국토개발연구원.
- \_\_\_\_\_. 1992. 『수도권 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권남훈, 2002. 『IT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조사』, 연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권용우, 2001. 『교외지역: 수도권 교외화의 이론과 실제』, 아카넷.
- 권이혁, 1968. “한국의 사망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회지』 11(12): 792-980.
- 권태환, 1980. “도시화와 인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론』, 민음사, pp. 203-234.
- \_\_\_\_\_. 1984. “한국사회학에 있어서의 도시연구.” 『한국사회학』 18: 3-26.
- \_\_\_\_\_. 1990. “일제 시대의 도시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11: 251-2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96. 『세계의 한민족: 중국』, 통일원.
- \_\_\_\_\_. 1997. “출산력변천의 과정과 의미.” 권태환 등,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서울: 일신사, pp. 13-56.
- 권태환·김두섭, 1989.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2. 『인구의 이해』, 개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김태현, 1990. 『한국인의 생명표: 1970~85년의 사망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김태현·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 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구조와 가족형태.” 권태환·김태현·최진호 공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pp. 239-365.
- 권태환·신용하, 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 시론.” 『동아문화』 14: 289-330,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 권태환·전광희, 1990. 『한국사회의 인구이동구조와 도시문제의 성격-생활사 자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 연구소.
- 권태환·전광희·은기수, 1997. 『서울의 전통 이해: 인구와 도시화』,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 김남일·최순·박우순·양기석, 1997.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인구특성 변화』, 통계청.
- 김대영·이효구, 1976.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 1965~70』, 한국개발연구원.
- 김동배, 1999. “노인과 경제생활: 노인도 경제생활의 주체이다.” 김익기 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pp. 259-316.
- 김두섭, 1987. “혼인력의 양상과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총』 6: 161-185, 한양대학교.
- \_\_\_\_\_. 1989. “한국의 인구정책: 1960~1985.” 『인간과 경험』 1: 95-118, 한양대학교.
- \_\_\_\_\_. 1990. “조선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24(여름): 7-24.
- \_\_\_\_\_. 1991. “한국의 인구성장과정과 출산력 변천, 1910~1990.” 『사회과학논총』 10: 117-140, 한양대학교.
- \_\_\_\_\_. 1993. “한반도의 인구변천, 1910~1990: 남북한의 비교.” 『통일문제연구』 5(4): 202-235, 통일원.

- 김두섭. 1997.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지역별 격차.” 권태환·김태현·김두섭·전광희·은기수 공저.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pp. 132-160.
- . 1999. “미군정기 남한인구 재구성.” 최영희 외.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 145-166.
-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90.
- 김두식. 1991. “제3세계의 과잉도시화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대구대 사회연구』 1: 67-80.
- 김민경. 1996. “인구의 경제활동상대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 19(1): 73-92.
- .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도서출판 글로벌.
- 김성천·윤혜미·류만희. 2001. “가족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방향: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 61-88.
- 김승권. 1992. “우리 나라 부인의 피임실패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논문집』 12(1): 119-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7. “출산력 저하와 가족정책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10: 20-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a. “제3장. 한국가족변화의 주요요인.”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b. “제5장. 가족구조의 변화.”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송인주. 2000a. “제2장. 가족관련 제 이론 및 연구동향.”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b. “제10장. 가족해체와 결손가족의 문제.”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c. “제11장. 다양한 가족의 출현.”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장경섭·이현승·정기선·조애저·송인주. 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오남. 1999.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아동학회지』 20(1): 99-114.
- 김유순·김정석. 2001.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 이영환 편.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과 사회문제』. 나눔의 집.
- 김 인. 1983. “한국의 도시 체계와 성장도시.” 『환경논총』 12: 134-165.
- 김 인·권용우 공편. 1988. 『수도권 지역 연구: 공간 인식과 대응 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일현·최봉호. 1988. “최근의 영아 사망률 수준의 추정.” 『한국인구학회지』 11(1): 76-85.
- 김정석. 2000.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구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pp. 151-186.

- 김정근·이광식·김동희. 1977. "1970년도 한국인 남자 간이 노동력 생명표." 『한국인구학회지』 1: 5-13.
- 김태현. 1990. "차별출산력의 변동과 그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3. "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 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지』 16(2): 1-23.
- . 1997a. "인구전망과 사회적 영향."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pp. 127-154.
- . 1997b. "인구총조사의 방법과 평가." 『한국인구학』 20(1): 27-46.
- . 2001.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5-40.
- 김한근. 1997. "대구·경북지방의 성비 불균형." 한국인구학회 1997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형석. 2002. "가구주올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1): 65-90.
- 김혜순. 1989. "노년에 관한 사회적 구성의 비판적 분석." 『한국노년학』 9: 44-63.
- 김혜영. 1992. "과잉교육화 문제." 임희섭·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pp. 391-412.
- 노치준. 1998.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울.
- 다나카 히로시. 2000. 『재일 외국인』. 김동혁·허수동 역.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 문석남. 1993. "한국의 도시화: 그 유형과 특성." 『전남대 지역개발연구』 29: 29-66.
- 문선화. 1999.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 213-233.
- 문소정. 1995.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문현상·한영자·전학석. 1992. 『도시화 문제와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현상·전학석. 1992. "수도권 인구 집중의 추이, 요인, 문제점." 문현상 외. 『도시화 문제와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현상·한영자. 1989. 『수도권인구집중과 생활권간 인구가동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박경숙. 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 141-168.
- 박경애. 1995. "한국인의 사망원인 구조, 1983~1993." 『한국인구학회지』 18(1): 167-193.
- . 200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1970~1995." 『한국인구학』 23(1): 5-29.
- 박광성. 1999. "개혁개방 공간의 중국 조선족 사회 재조직 과정연구." 연변대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박상태. 1999. "인구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한국인구학』 22(2): 5-45.
- 박세일. 1983. "학력별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과 변화과정분석." 『한국개발연구』 가을호: 32-49.
- 박수미. 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 박원란. 2001. "생명표에 의한 한국 남성의 노동기간 변화." 『통계분석연구』 6(1): 155-183.
- 박재빈. 1961. "한인의 사망률과 사인에 관한 통계학적 관찰." 『통계정보』 3(6-7): 1-35. 내무부

통계국.

- 박재욱. 1996. “대기업 주도형 도시정치의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_\_\_\_\_. 1999. “대기업 도시 울산시와 도요타(豊田)시의 기업권력과 지방정치.” 경남대학교 극  
동문제연구소 편. 『한국과 국제정치』 30: 97-129.
- 박준경·김정호. 1992.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방하남·안주엽·장지연·박은경·호정화·정혜경. 1999.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  
동연구원.
- 변화순. 1987. “한국의 이혼율 변동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찰.” 『한국인구학』 10(2): 1-16.
- \_\_\_\_\_. 1995. “가족해체와 재구성.”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변화순·원영애·김성경·김영란·김민정. 2000. 『최근 가족해체 및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  
성개발원.
- 변화순·백경희·김현주. 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  
성개발원.
- 성규탁. 1989.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9: 28-43.
- 성지미. 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130.
- 석현호. 1986. “한국의 도시화와 사회변동.” 『成大 사회과학』 25: 107-143.
- 석현호 편. 1997.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 손정복. 1996. 『일제 강점기 도시화 과정 연구』. 일지사.
- 송병탁. 1978. “경제성장과 지역경제계획.”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17(3): 413-453.
- \_\_\_\_\_. 1979. 『한국의 국토·도시·환경: 문제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송병탁·Edwin Mills. 1980. 『성장과 도시화 문제』. 한국개발연구원.
- 신광철. 2002. 『지식자원 유출현상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소.
- 심상완·김정석. 200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정보격차의 다원모형분석.” 『한국인구학』 24:  
235-253.
- 안병철. 1997. 『사회변동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 양금옥. 2001. “조선족의 사회문제: 인구감소 현황과 그 과제.” 이화여대 생활과학연구소. 『한민  
족 공동체 시각에서 본 연변조선족의 현실』.
- 여성신문. 2002. “가족법, 다양한 가족 수용해야.” 2002년 10월 4일. 여성신문.
- 염미경. 1996. “지방자치와 기업의 지배전략.” 『전남대 지역개발연구』 32: 183-211.
- \_\_\_\_\_. 1997. “기업도시의 선거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3): 563-594.
- 오승환. 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 77-107.
- 외교통상부. 2001. 『2001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 \_\_\_\_\_. 2002. 재외동포재단 내부자료.

- 원영희. 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유성호. 2000.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노인복지연구』 8: 169-175.
- 유지열. 2002. “우리나라의 정보격차에 관한 지수(Index)접근연구.” 『한국사회학』 36(1): 223-246.
- 윤덕중·김태헌. 1989. “사회·경제적 요인별 차별사망력의 변화, 1970~86: 사망신고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2(2): 1-21.
- 윤종주. 1975. 『서울시 인구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출판부.
- \_\_\_\_\_. 1985. “근세 한국의 민족이산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14: 7-69.
- \_\_\_\_\_. 1986. “해방 후 우리 나라 인구 변동의 사회사적 의의.” 인구문제연구소 편. 『인구문제 논문집』 27: 17-35.
- \_\_\_\_\_. 1991. “해방 후의 인구 이동과 도시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15: 1-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은기수. 1997a. “주야간활동인구 개념.” 『비전 중구 2000-상주인구회복과 인간위주 환경조성을 위한 장기발전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pp. 161-172.
- \_\_\_\_\_. 1997b. “지역, 교육 및 직업별 차별출산력.”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pp. 99-126.
- \_\_\_\_\_. 2000. “도심부의 인구문제.” 김창석 외. 『도시중심부연구』. 보성각. pp. 327-365.
- \_\_\_\_\_. 2001a.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 비교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41-65.
- \_\_\_\_\_. 2001b. “한국노인들의 경제생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pp. 271-332.
- \_\_\_\_\_. 2002a. “한국 가족의 종교정체성: 종교백화점?” 호산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위원회 엮음.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 박영사. pp. 34-58.
- \_\_\_\_\_. 2002b.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의 원인.” 제10차 여성정책포럼 [출산율 1.30 진단과 대안] 발표논문. 한국여성개발원.
- 이광규. 1983. 『재일 한국인』. 일조각.
- 이기석. 1998. “한국 근대도시의 공간적 이해.” 한국도시연구소 편. 『한국도시론』. 박영사.
- 이문웅. 1966. 『세계의 한민족: 일본』. 통일원.
- 이삼석. 1993. “한국인의 혼인 행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16(2): 4-110.
- 이성림·김민정. 2001. “여성가구주 가구의 인구학적 동향과 경제적 복지 상태.” 『소비자학연구』 12(1): 17-30.
- 이에재. 2000. “편부모가족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양부모가족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학연구』 1: 69~93.
- 이영분·양심영. 1999.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3: 117-148.
- 이인모. 1988. “한국인 남자의 간이노동력 생명표: 1980.” 서울대학교 석사논문(미간행).

- 이장영. 1992. “산업구조와 임금 불평등의 변화.” 임희섭·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pp. 215-236.
- . 1997. 『해외귀국 청소년의 국내적응 연구』. 집문당.
- 이정우. 1991.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이종각. 1995. 『교육사회학 신강』. 동문사.
- 이재원. 1996. “행정구역 개편의 정당화를 위한 조건.” 『공간과 사회』 7: 137-158.
- 이태영. 1968. 『한국의 이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 1981. 『한국의 이혼을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한순·이우리. 1983. “한국내 인구가동의 패턴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 1960~1980을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24: 123-143.
- 이흥탁. 1994. 『인구학』. 법문사.
- 임돈희·로저 L. 자넬리. 2002. “한국 가족 변화의 의미.” 『비교민속학』 22: 321-336.
- 임석희. 1996. “행정구역 개편의 공간적 논리와 쟁점.” 『공간과 사회』 7: 159-188.
- 임태빈. 1963. “장래인구추계의 요약.” 『한국통계월보』 11, 12호: 5-4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장경섭. 2000. “제4장. 가족가치관의 특성과 변화.”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세훈. 1998a.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민민: 서울시의 무허가정착지 철거정비정책을 중심으로.” 김형국·하성규(편). 『불량주택재개발론』. 나남. pp. 231-303.
- . 1998b. 『수도권 정비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현안분석 제170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 . 1998c. “수도권 정비정책의 쟁점과 향후과제.” 한국사회학회 인구도시연구회 1998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 요약집. pp. 53-77.
- . 1999. “도시화, 국가, 그리고 그린벨트.” 한국도시연구소 편. 『도시연구』 4: 33-69.
- 장영식·조남훈·문현상·변용찬·오영희. 1996. 『신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윤석. 1961a. “1960년도 인구조사개요-상.” 『통계정보』 3(3/4): 25-49. 내무부 통계국.
- . 1961b. “1960년도 인구조사개요-하.” 『통계정보』 3(6): 21-44. 내무부 통계국.
- 장지연·호정화. 2002. “취업자 평균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미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 전광희. 1997. “출산력 변화의 메카니즘.”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pp. 57-98.
- 전경수. 1996. 『세계의 한민족: 증남미』. 통일원.
- 전성표. 2001. “우리 사회 종교갈등의 실태와 잠재력: 1991~2000.” 한국사회학회 2001년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전영자. 2000. “가족의 변화와 가족학의 과제.” 『한국생활과학회지』 9(22): 177-187.

- 정경희 · 조애저 · 오영희 · 변재찬 · 변용찬 · 문현상.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신철. 1999.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 조남훈 · 서문희. 1994. 『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 · 이삼식. 2001. “장기인구전망과 인구정책 방향.” 한국인구학회 2001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남훈 · 홍문식 · 이상영. 1995.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석곤 · 오유석. 2001. “압축성장 전제조건인 형성: 1950년대.” 김진업 편. 『한국 자본주의 발전 모델의 형성과 해체』. 도서출판 나눔의 집. pp. 87-128.
- 조애저. 2000. “제7장. 가족형성 및 주기의 변화.”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진만. 1990. “우리 나라 노동생명표에 의한 노동력추이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3(2): 1-16.
- 조재희. 2000. “국내대학 외국 유학생 유치기반 부실.” 조선일보. 10월 29일.
- \_\_\_\_\_. 2002. “수능지원 67만명... 사상 최소.” 조선일보. 9월 11일.
- 조혜인. 1978. “한국 사회의 과잉도시화 여부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학연구』 2: 107-144.
- 최강식. 2000. “21세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인구학』 23(2): 113-141.
- 최인현. 1963. “대한민국 인구추계 1960~1980.” 『한국통계월보』 6, 7호: 5-5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_\_\_\_\_. 1971. “한국인구추계 자료에 대한 소고.” 『인구문제논집』 12: 5-57.
- 최인현 · 박재수. 1969. 『1966 특별인구조사결과 및 개요』.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연구총서 3호.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 최인현 · 윤종주 · 김수봉 · 정기원 · Huguet. 1996. “인구이동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5 인구및주택센서스 인구종합분석 보고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pp. 241-357.
- 최인현 · 정영일 · 변용찬 편. 1986. 『인구이동과 사회경제발전 - 인구이동특별조사 심층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최종철. 1996. “종교의 일상사회학.” 일상문화연구회 엮음. 『한국인의 일상문화』. 한울. pp. 157-190.
- 최협 · 박찬웅. 1996. 『세계의 한민족: 미국 · 캐나다』. 통일원.
- 최종현. 1991. “제3세계의 도시화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최진호. 1982. “우리 나라 인구이동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1: 116-131.
- \_\_\_\_\_. 1986. “인구분석 및 이동의 특성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9: 32-40.
- \_\_\_\_\_. 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분포의 원인』. 통계청.
- \_\_\_\_\_. 1994. “한국의 인구이동 패턴 변화와 수도권인구이동.” 『한국인구학회지』 17: 1-20.
- \_\_\_\_\_. 1995. “지역간 인구 분포.” 권태환 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pp. 127-235.
- \_\_\_\_\_. 1997. “인구이동패턴의 변화, 1960~1990.” 한국인구학회 편. 『인구변화와 삶의 질』. 일신사. pp. 63-89.

- 최진호·최병선. 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통계청.
-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1999. 『한국의 도시』. 법문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a. 『인구정책 3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1b.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정보사회통계조사 10년 자료집』. 한국정보문화센터.
- . 1999. 『'99 국민 생활 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 . 2000a. 『정보문화지수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센터.
- . 2000b. 『2000 국민생활정보화인식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
- . 2001. 『국민 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한국정보문화센터.
- 한국행정문화원. 각 연도. 『한국행정구역총람』. 한국행정문화원.
- 한남제. 1999. 『현대가족의 이해』. 일지사.
-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경희. 1979. 『한국 도시 연구』. 중화당.
- . 1986. “한국의 도시화: 인구 면으로 본 1970년대(1970~1980)의 도시화.” 『경북대 논문집』 42: 65-94.
- 홍두승·김병조·조동기. 1997.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분석』.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7-7). 통계청.
- .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현외성. 1988. “한일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7: 5-22.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2. 『人口統計資料集 2001/2002』. 東京.
- 金哲. 1965. 『韓國の人口と經濟』. 東京: 岩波書店.
- 南亮三郎 編. 1972. 『韓國人口の經濟分析』.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 大江守之. 1994. “世帯主のコーホト變化に着目した家族類型世帯數の推計手法-その2 世帯形成期の有配偶關係推計と家族類型別世帯主率推計.” 『人口問題研究』 49(4): 1-22.
- . 1993. “世帯主のコーホト變化に着目した家族類型世帯數の推計手法-その1 家族類型別純遷移率法の提案.” 『人口問題研究』 49(3): 39-46.
- 藤田峰三. 1995. 『新國勢調査論』. 大藏省 印刷局.
- 朴在一. 1957. 『在日韓國人に關する總合調査研究』. 東京: 新紀元社.
- 石南國. 1972. 『韓國の人口増加の分析』. 東京: 草書房.

- 統計局(日本國). 1985. 『國勢調査の話』(내부자료). 總務廳 統計局.
- . 1990. 『國勢調査の話』(내부자료). 日本統計協會.
-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5. 『日本の世帯數の將來推計: 全國推計/都道府縣別推計-1990年~2010年』. 東京.
- 楊家駱主編. 1983. 『洪北江詩文集上』. 中國學術名著第六集 第二十一冊. 臺北:世界書局 民國七十二年.
- 崔昌來·陳通河·朱成華. 1979. “延邊人口與計劃生育論.” 隋喜林 外(編) 『發展中延邊』.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Anderton, Douglas, Richard Barrett, and Donald Bogue. 1997.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The Free Press.

Anker, Richard. 1998. *Gender and Job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tonovsky, A. 1967 “Social Class, Life Expectancy and Overall Mortality.”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45(2): 31-73.

Atoh, Makoto, Vasantha Kandiah, and S. Ivanov. 2001.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Asia: Is It Similar to or Different from That in Western Europe?” Unpublished Paper.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apan.

Barringer, Herbert R. and Sung-Nam Cho. 1989.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 Fact Book*. Honolulu: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Behm, H. 1980.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Mortality in Latin America.” Pp. 140-164 in *Proceedings of the Meeting o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UN/WHO Seminar, Mexico City, WHO.

Bell, M. and J. Cooper. 1990. “Household Forecasting: Replacing the Headship Rate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Nation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19-21 November, Melbourne.

Bell, M. and J. Cooper and M. Les. 1995. *Household and Family Forecasting Models: A Review*.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Benjamin, B. 1965.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Mortality*. Paris: Mouton & Co.

Bennett, N. G. and S. Horiuchi. 1981. “Estimation of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in a Closed Population.” *Population Index* 47(2): 207-221.

———. 1984. “Mortality Estimation from Registered Death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Demography* 21: 217-233.

Bielby, William T. and Denise D. Bielby. 1992. “I Will Follow Him: Family Ties, Gender-Role Beliefs, and Reluctance to Relocate for a Better Job.”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97(5): 1241-1267.
- Bloom, D. E. and J. G. Williamson. 1997. "Demographic Transition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Working Paper 626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arvard University.
- Bongaarts, John. 1998. "Fertility and Reproductive Preferences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Working Paper No. 114. Population Council.
- . 2002.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ing World." Expert Group Meeting on Completing the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Secretariat, March 11-14, New York.
- Bongaarts, John and Robert G. Potter, Jr. 1983. *Fertility, Biology, and Behavior: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New York: Academic Press.
- Brown, S. P. 1951. "Analysis of a Hypothetical Stationary Population by Family Units: a Note on Some Experimental Calculations." *Population Studies* IV (4): 380-394. London.
- Bumpass, Larry L. and Minja Choe. 1999. "Attitudes Relating to Marriage and Family Life." Unpublished Paper.
- Byun, Wha-Soon. 1987. "Étude Comparative sur la Famille et le Divorce en Corée du Sud et en France." Thèse pour le Doctorat de 3<sup>ème</sup> Cycle, Université de Paris V.
- Caldwell, J. C. 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New York: Academic Press.
- Castells, Manuel.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Translated by A. Sheridan. London: Edward Arnold.
- . 1989. "The Information City: Information Technology." In *Economic Restructuring and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England: Blackwell.
- Chang, Edward Taehan. 1999. "The Post-Los Angeles Riot Korean American Community: Challenges and Prospect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0(1&2): 6-26.
- . 2000. "Korean Kaleidoscope: An Overview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2): U5-U20.
- Chang, Yunshik (ed.). 1980. *Korea: A Decade of Development*.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en, Pi-Chao. 1972. "Over-urbanization, Rustication of Urban Educated Youths, and Politics of Rur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China." *Comparative Politics* 4: 361-386.
- Cho, Lee-Jay, Fred Arnold, and Tai-Hwan Kwon. 1982.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ho, Nam-Hoon. 2001. "Issues and Policy Options for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UN Meeting, Malta.

- Cho, Nam-Hoon and Sam-Shik Lee. 2001. "Long-Term Population Prospects and the Direction of Population Policies." *Summary Reports*. Seoul: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 Choi, Jin Ho. 1984. "Urban to Rural Migration in Korea." Pp. 21-108 in *Rural Migration in Developing Nations*. Edited by Calvin Goldscheider.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Coale, A. J. 1974. "The Demographic Transition Reconsidered."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1973*. 1: 53-72. Liege, Belgium: IUSSP.
- Coale, A. and P. Demeny. 1983. *Regional Model Life Tables and Stable Popul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Comer, I. E. 1989. "Developing Centralised Household Projections for National and Sub-national Areas." In *Advances in Regional Demography: Information, Forecasts, Models*. Edited by P. Congdon and P. Batey. London: Belhaven Press.
- Das Gupta, Prithwis. 1978. "A General Method of Decomposing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into Several Components." *Demography* 15: 99-109.
- DaVanzo, Julie. 1976. "Differences Between Return and Nonreturn Migration: An Economic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0(1): 13-27.
- Davis, K. 1963.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29: 345-366.
- Davis, K. and H. Golden. 1955.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re-Industrial A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3): 6-26.
- Doherty, W. 1999. "Postmodernism and Family Theory." Pp. 205-218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Edited by M. Sussman, S. Steinmetz, and G. Peterson. New York: Plenum Press.
-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80. *Migration,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Bangkok: ESCAP.
- . 1996. *Population Aging and Development*.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140. New York: United Nations.
- Feldstein, P. J. 1979. *Health Care Economics*. New York: Wiley.
- Fox, A. J., P. O. Goldblatt and A. M. Adelstein. 1982. "Selection and Mortality Differential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36(2): 69-79.
- Friedlander, D. 1969. "Demographic Responses and Population Change." *Demography* 6: 359-381.
- Gilbert, R. 2001. *Asking Questions on 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pulation Census*. Working Paper No. 2001-1.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Glass, David. 1940. *Population Policies and Movements in Europe*. Oxford: Clarendon Press.

- Goldscheider, Calvin. 1971. *Population, Modernization, and Social Structure*. Boston: Little, Brown and Co.
- \_\_\_\_\_. 1981. "Social Change and Demographic Transitions: Selected Theoretical Issues and Research Strategies." Paper Prepared for the Chaire Quetelet, Belgium.
- Goldstein, Sidney and Penporn Tirasawat. 1977. "The Fertility of Migrants to Urban Places in Thailand." Reprint Number 43.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Honolulu, Hawaii.
- Gordon, Nancy M. 2002. "Census 2000: The Last Long Form." Paper Presented at the 20th Population Census Conference. Ulaanbaatar, Mongolia.
- Gove, W. R. 1973. "Sex,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45-67.
- Gubhaju, Bhakta, K. S. Seetharam, and Jerrold Huguet. 2001. "Demographic Dynamics in ESCAP Region."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6-1: 45-66.
- Hansluwka, H. 1968. "Some Considerations about Statistics on Mortality." In *World Views on Population Problems*. Budapest: Akadeiai Kiado.
- Hansluwka, H., A. Lopez, and L. Ruzicka. 1981. "Health Outlook for South and East Asia for the Year 2000." *World Health Statistics* 34(3): 168-195.
- Harbison, Sarah H. and Warren C. Robinson. 2002. "Policy Implications of the Next World Demographic Transition." *Studies in Family Planning* 33-1: 37-48.
- Hoem, Jan M. and Monica S. Fong. 1976. "A Markov Chain Model of Working Life Tables." Working Paper No. 2. Laboratory of Actuarial Mathematics.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1. *The Dilemma of the Informal Sector*. Report to the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Labor Office, 78th Session, Geneva: ILO.
- \_\_\_\_\_. 1993.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http://www.ilo.org>.
- \_\_\_\_\_. 2002. *Collection of Economic Characteristics in Population Censuses*. Technical Report: ST/ESA/STAT/119. Geneva: ILO.
- Jones, G. W. 1990. "Fertility Transitions among Malay Populations of Southeast Asia: Puzzles of Interpret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 507-537.
- Jun, Kwang-Hee. 1987. "The Reproductive Behavior of Rural-Urban Migrants in Korea: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Brown University.
- \_\_\_\_\_. 1999. "Rural-Urban Migration and the Fertility Behavior of Migrants in Korea: An Analysis of the Life History Matrix Data." A Paper Read at the 1999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f Sociology(APRCS). Cheju University, Cheju, Korea. February 4-6. 1999.

- Kashiwazaki, Chikako. 2000. "To Be Korean without Korean Nationality: Claim to Korean Identity by Japanese Nationality Holder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1): J48-J70.
- Kau, James and C. F. Sirmans. 1976. "New, Repeat and Return Migration: A Study of Migration Types." *Southern Economic Journal* 43(2): 1144-1148.
- \_\_\_\_\_. 1978. "New Repeat and Return Migration: Comment." *Southern Economic Journal* 44(3): 680-684.
- Keilman, N., A. Kuijsten, and A. Vossen (eds.). 1988. *Modelling Household Formation and Dissolution*. Oxford: Clarendon Press.
- Kent, R. 1992. "Household Formation by the Young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Economics* 24(10): 1129-1137.
- Ketkar, K. W. 1990. "A Log-linear Approach to Disaggregated Micro-level Population Forecast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6(2): 241-251.
- Keyfitz, N. 1972. "On Future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7(338): 347-363.
- Kiker, B. F. and Earle C. Traynham, Jr. 1976. "A Comment on Research on Internal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3): 885-888.
- Kim, Cheong-Seok and Ka-Oak Rhee. 1997. "Variations in Living Arrangements among Korean Elderly Par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2(2): 189-202.
- \_\_\_\_\_. 1999. "Living Arrangements in Old Age: Views of Korean Elderly and Middle Aged Adults."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2): 94-111.
- \_\_\_\_\_. 2000. "Correspondence between Actual Coresidence and Desire for Coresidence among the Elderly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2(1): 36-48.
- Kim, Dae Young and John Sloboda. 1981. "Migration and Korean Development." Pp. 36-138 in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dited by Repetto et al.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Doo-Sub. 1986. "Working Experience of Married Woman and Fertility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5: 19-30.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87. *Socioeconomic Status, Inequal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92.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Pp. 45-66 in *Fertility Transitions, Family Structure, and Population Policy*. Edited by C. Goldscheider. Brown University Studies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Kim, Hyung-Chan and W. Patterson. 1974. *The Koreans in America 1882~1974*.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 Kim, Hyung-seog. 2001. "A Demographic Implication of the Patterns of Working Life among Korean Women in 1999." 『통계분석연구』 6(1): 184-208.
- \_\_\_\_\_. 2002. "Household Projections for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20th Population Census Conference. June 19~21. Ulaanbaatar, Mongolia.
- Kim, Hyung-seog and Namsoo Jung. 2001. "Determinants of Entry into First Marriage in Korea." A Contributed Paper to the 53rd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August 22~29. Seoul, Korea.
- Kim, Luke. 1999. "The 1.5 Generation and Its Self-identity Development."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0(1/2): 27-41.
- Kim, Nam. Il. 1976. "Infant Mortality Rates in Korea: Its Biological and Sociological Correlates: A Field Study Report." Unpublished Paper.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 Kim, Shin and Kwang Jung Kim. 2000. "Korean Immigrant Churche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2): U53-U67.
- Kim, Tai-Hun. 1990.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tagawa, Evelyn. 1955.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0: 1168-94.
- \_\_\_\_\_. 1964. "Standardized Comparisons in Population Research." *Demography* 1: 298-311.
- Kitagawa, Evelyn. and P. M. Hauser. 1973. *Differential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A Study in Socioeconomic Epidemi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Kobayashi, K. 1984. "Morta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Population of Japan, Country Monograph Series, No. 11*, ESCAP, Bangkok. Pp. 43-60.
- Kono, Shigemi. 1987. "The Headship Rate Method for Projecting Households." Pp. 287-308 in *Family Demography*. Edited by John Bongaarts, Thomas Burch and Kenneth Wachter. Oxford University Press.
- Kreider, Rose M. and Jason M. Fields. 2001. "Number, Timing, and Duration of Marriages and Divorce: Fall 1996." *Current Population Reports* 70-80. Washington, D. C.: U.S. Census Bureau.
- Kwon, E. H. and T. R. Kim. 1968. "The Population of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7: 113-181.
- Kwon, Tai-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81.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Pp. 1-26 in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 of Korea. Edited by R. Repetto et a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Kwon, Tai-Hwan. 1986.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and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76,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ited Nations.
- \_\_\_\_\_. 1990. "The Trends and Patterns of Urbanward Migration in Korea, 1960~1985." Pp. 154-174 in *Urbanization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Edited by Bui Dang Ha Doan. CICRED Inter-Center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Survey Research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92. "Social Change and Family System in Korea." Pp. 167-184 in *Impact of Fertility Decline on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 Strategies*. Edi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Kwon, Tai-Hwan and Kwang-Hee Jun, 1999. "Demographic Change and Urbanization." Unpublished Paper.
- Kwon, Tai-Hwan, Kwang-Hee Jun, and Sung-Nam Cho. 1997. *Induced Abortion in Korea*. ISDPR Social Studies Series No. 2.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won, Tai-Hwan, Hae-Young Lee, Yunshik Chang, and Eui-Young Yu. 1975. *The Population of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Lavallette, Michael and Alan Pratt(eds.). 1997. *Social Policy: A Conceptual and Theoretical Introduc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Lazo, Lucita S. 1999. "Counting Paid and Unpaid Work: the State of the Art in the Asia-Pacific Region." Pp. 1-22 i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Selected Papers*. Edited by Margarita F. Guerrero. UNPD Regional Bureau for Asia and the Pacific,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Asia Office.
- Lee, D. W. 1973. "Construction of Life Tables from the Recent Korean Censuses."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6: 65-80. Seoul.
- Lie, John. 2000. "Imaginary Homeland and Diasporic Realization: Kikan Sanzenri, 1975~87."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1): J11-J26.
- Lee, Ki-Seuk. 1979. *A Social Geography of Greater Seoul*. Seoul: Pochinchai Printing Ltd.
- Lee, On Jook. 1978. *Urban to 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 B. 1980. "An Overview of Mortality in Korea." *Journal of Family Planning Studies* 7: 163-180, Seoul.
- Mason, A. 1987. *HOMES: A Household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Studies*. Hawaii: East-West Center.
- Mason, Karen O., and Noriko O. Tsuya. 1999. "View of Marriage Among Never-Married Young

Adult." Unpublished Paper.

- Mathis, E. S. 1969.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Deceased Persons." *Vital and Health Statistics* 22(9).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iller, Ann R. 1977. "Interstate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Some Socioeconomic Difference by Type of Move." *Demography* 14(1): 1-17.
- Min, Pyoung-Gap. 1995. "Kore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In *Thousand Oaks*. Edited by Pyoung-Gap Min. CA: Sage Publications.
- Mincer, J. 1978. "Family Migration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749-7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2000 Guidelines on Government Funding Services for Older Persons'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 Mosher, W. D. 1980a.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An Application to Puerto Rico, 1940 to 1970." *Population Studies* 34: 45-58.
- \_\_\_\_\_. 1980b. "Demographic Responses and Demographic Transitions: A Case Study of Sweden." *Demography* 17: 395-412.
- Nishioka, H., T. Suzuki, Y. Koyama, C. Yamamoto, and K. Kojima. 2000. "Household Projections for Japan, 1995~2020: Methods and Results."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 65-85.
- Noh, Hee-Bang. 1991. "The Spatial Pattern and Process of Migration in Korea, 1960~1985."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Notestein, F. 1953. "Economic Problems of Population Change." In *Proceedings of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Economists*. London, U.K.
- Oh, Kap-Hwan and Hae-Young Lee. 1980. "Urbanism in Korea: A New Way of Life?." Pp. 219-240 in *Korea: A Decade of Development*. Edited by Yunshik Chang.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Omran, A. 1971. "The Epidemiologic Transition."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49(4): 509-538.
- \_\_\_\_\_. 1977. "Epidemiologic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lletin* 32(2).
- Park, Chai-Bin. 1978. "The Fourth Korean Child: The Effect of Son Preference on Subsequent Fertilit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10: 95-106.
- Park, Chai-Bin and Nam Hoon Cho. 1995.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in L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1): 59-84.
- Pathak, K. and P. Murty. 1983. "Levels and Trends of Mortality in Some Selected Countries of Asia." Pp. 246-277 in *Dynamics of Population and Family Welfare 1983*. Bombay: Himalaya Publishing House.

- Preston, S. H. 1980. "Cause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Declin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Pp. 289-360 in *Population Economic Chang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Edited by R. A. Easterl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4. "Use of Direct and Indirect Techniques for Estimation of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Systems." Pp. 66-76 in *Data Bases for Mortality Measurement*.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ited Nations.
- Preston, S. H., H. Patrick and G. Michel. 2001. *Demography: Measuring and Modeling Population Processes*.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 Retherford, Robert D., Naohiro Ogawa, and Rikiya Matsukura. 2002. *Late Marriage and Less Marriage in Japan*. Tokyo: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 Ross, John and Thomas Frejka. 2001. "Paths to Sub-replacement Fertility: The Empirical Evide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213-254.
- Rutstein, S. D. 1983. *Infant and Child Mortality: Levels, Trends and Demographic Differentials*. WFS Comparative Studies, No. 24. World Fertility Survey.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Ruzicka, L. T. 1982. "Implications of Morta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in the ESCAP Region." Pp. 83-100 in *Third Asian and Pacific Population Conference*.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58. ESCAP, Bangkok.
- Ryang, Sonia. 2000. "New Dimensions of Hybrid and Diverse Communities: An Introduction."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1): J1-J10.
- \_\_\_\_\_. 2001. "Diaspora and Beyond: There is No Home for Koreans in Japa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55-86.
- Schoen, R. and K. Woodrow. 1980. "Labor Force Status Life Tables for the United States, 1972." *Demography* 17(3): 297-322.
- Schulz, James H., Allan Borowski, and William H. Crown. 1991. *Economics of Population Aging*. New York: Auburn House.
- Shihadeh, E. S. 1991. "The Prevalence of Husband-Centered Migration: Employment Consequences for Married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32-444.
- Shiller, Herbert I. 1996. *Information Inequality*. New York: Routledge.
- Shryock, Henry S., Jacob Siegel, and Associates. 1973.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Second Printing(revision). U.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_\_\_\_\_. 1980.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U. S. Department of Commerce.

- Sjaastad, Larry A. 1962. "The Cost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supplement) 70: 80-93.
- Srikantan, K. S. 1982. "Threshold Hypothesis." Pp. 266-268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pulation Vol 1*. Edited by J. A. Ross. New York: Free Press.
- Spengler, Joseph J. 1938. *France Faces Depopul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Statistics Canada. 2002. "The 2006 Census Context." [http://www.statcan.ca/english/2006/census\\_site/index.htm](http://www.statcan.ca/english/2006/census_site/index.htm).
- Statistics Denmark. 1995. *Principle Fram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opulation Statistics System*. Statistics Denmark.
- Suzuki, Toru. 1999. "Projection of Households in Japan with a Dynamic Macro- Simulation Model."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_\_\_\_\_. 2000. "Leaving the Parental Household in Contemporary Japan."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10: 23-35.
- Taeuber, Irene B. 1958. *The Population of Japa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 1958. *Multilingual Demographic Dictionary*. New York: UN.
- \_\_\_\_\_. 1973a.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UN.
- \_\_\_\_\_. 1973b. *Method of Projecting Households and Families*. Manuals on Methods of Estimating Population (Manual VII). New York: UN.
- \_\_\_\_\_. 1980. *Patterns of Urban and Rural Population Growth*.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UN.
- \_\_\_\_\_. 1982. *Model Life Tables for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Studies 77. New York: UN.
- \_\_\_\_\_. 1983. "Patterns of Sex Differentials in Mortality in Less Developed Countries." Pp. 7-32 in *Sex Differentials in Mortality*. Edited by A. Lopez and L. Ruzicka.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84.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16: 40-61. New York: UN.
- \_\_\_\_\_. 1988. *Improving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Women Using Household Survey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48. New York: UN.
- \_\_\_\_\_. 1989. *Projection Methods for Integrating Population Variables into Development* (Volume 1 Methods for Comprehensive Planning). New York: UN.
- \_\_\_\_\_. 1993a. *Methods of Measuring Women's Economic Activity*. Technical Report. New York: UN.
- \_\_\_\_\_. 1993b. *Population and Development Planning*. Proceedings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lanning. New York: UN.

- United Nations. 1993c. *System of National Accounts*. New York: UN.
- . 1998.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 1*.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67/Rev.1. New York: UN.
- . 2000.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ESA/P/WP. 160, New York: UN.
- . 200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0 Revision*. New York: UN.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2001.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50. *Tables of Working Life: Length of Working Life for Men*. Bulletin No. 100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S. Bureau of the Census. 1986. *Projections of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Families 1986~2000*. Washington, D.C.
- . 1992.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1990's." *Current Population Reports*. Pp. 23-18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 2001. "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www.census.gov/acs/www/AdvMeth/Papers/Papers1.htm>.
- Vanhove, N. and Leo Klaassen. 1980. *Regional Policy-A European Approach*. Saxon House.
- Ware, H. 1972.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Mortality and Fertility: Replacement and Insurance Effects." In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Vol. 1. Liege, Belgium: IUSSP.
- Webster, Frank. 1995. "Information and Reconstruction: Beyond Fordism." In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 Weeks, J. R. 198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4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Williamson, Jeffrey E. 1998. "Growth, Distribution, and Demography: Some Lessons from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5: 241-271.
-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 Yoon, In-Jin. 2001. "Korean American Experience: Ethnic Mobilization as a Mode of Incorpora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11-54.
- Yu, Eui-Young. 1974. "Internal Migration and Urbanization." Pp. 110-180 in *The Study of the Korean Population, 1996*. By Yunshik Chang et al.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 1975. "Population Distribution, Internal Migration and Urbanization." Pp. 62-78 in *The Population of Korea*. By Tai Hwan Kwon et al.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Yu, Eui-Young. 1977. "Koreans in America: An Emerging Ethnic Minority." *Amerasia Journal* 4: 117-131.
- . 1980. "Inter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Cities." Pp. 143-175 in *Korea- A Decade of Development*. Edited by Yunshik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 2001.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as Reflected in the Year 2000 U.S. Census." 한국인구학회 2001 후기 학술발표대회 발표문 요약집.

##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 연구위원회

### 위원장

권태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선주대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위원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윤주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과 교수)

윤형백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장)

권오술 (통계청 인구조사과장)

## 편집자

- 김 두 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박 상 태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은 기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집필진

- 김 민 경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김 두 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전 광 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김 태 현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과 교수)  
 권 태 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 남 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 화 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 정 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이 장 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은 기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민 경 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박 경 숙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최 진 호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장 세 훈 (국회 입법분석관)  
 최 순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김 동 회 (통계청 인구분석과 서기관)  
 김 형 석 (통계청 인구조사과 사무관)  
 박 상 태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한국의 인구 1

---

발행일 : 2002년 12월

발행인 : 오 종 남

발행처 : 통 계 청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

인쇄 : 도서출판 계영사

▶ 이 책자는 서점의 정부간행물코너에서 1질(2권) 당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379-01

# 한국의 인구

1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편



통계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